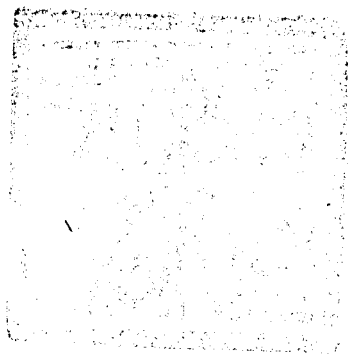


승공교양독본



국 토 통 일 원



박정희 대통령각하 근영

발 간 사



조국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일대 열원인 동시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상과업이다.

반만년 역사를 통해 한민족으로서 같은 문화와 전통을 형성해 왔고 화려한 삼천리 금수강산 한울타리 속에 살아온 우리민족은 국토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재통합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이룩해야할 사명을 감시라도 외면할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아직도 지구상에 그들의 이상주의를 실현한다는 허울 좋은 구호를 뇌까리고 있으며 우리 한반도에서 25년간

소위 사회주의 낙원건설이라는 허황된 연극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그 허구적인 이데올로기 실현을 위하여 폭력에 의한 혁명과 침략을 일삼아 왔고 가공하게도 이 지구상의 수억인구를 공산노예로 발을 묶어 놓았지만 이들에게 약속한 이상사회는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확실히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한낱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므로 그 역사적, 과학적, 윤리적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김일성 일당은 북한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붕괴될 위기 요소가 커져감에 따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실현보다는 김일성을 우상화 시키는데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일당독재정권유지에 광분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일당독재를 정치 철학의 주명제로 삼는 이유는 탈취한 정권을 유지하고 내부적 모순에 대한 저항으로 삼게하려는 음모인 것이다.

최근 이러한 추세가 북괴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바로 북괴 김일성 일당이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고 고립화 되고 있으며 내부적 저항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얼마전부터 동구 공산국가들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자유화 물결은 북한에도 언

젠가는 밀어닥칠 것이며, 내부의 저항의식이 점차 고조될 것이 예상되고 있어 그때가 오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제시한 모든 평화적인 통일방안과 노력은 기필코 실현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바로 공산주의 허구성과 김일성 일당이 제시한 여러가지 문제점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그들의 구체적 자료와 선전행동등을 분석하여 지적하고 그들의 그릇됨을 밝히고자 한다.

아무쪼록 본 자료가 관계전문가들은 물론 일반국민들에게까지 널리 보급되어 하루속히 우리국민의 사상적인 역량이 강화되고 국민의 정신적 단합을 이룩하는데에 다소의 기여를 할수 있다면 기쁘게 생각한다.

1971년 6월 일

국토통일원장관 김 영 선

머 리 말

지금 북괴는 위장된 평화통일론을 내세우면서 내면적으로는 무력적화통일 준비에 광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결정적 시기만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음모는 대외적인 조류에 편승하여 평화통일공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나 공산주의 전술인 전쟁불가피론에 따라 대한민국을 전복키 위해 폭력에 의한 공산혁명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북한주민의 긴장감을 조성시키는 무력도발 책동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동안 북괴는 대내외적으로 역사날조를 비롯하여 각종의 대남 악선전을 자행해 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이러한 사실들의 진부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한 서적이 출판되지 못했다.

따라서 당원에서는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여행중에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들로부터 북괴의 선전에 대한 질문을 받을때 보다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을가를 생각한 나머지 이책을 만들게 된것이다.

이책은 우선 공산주의 실체가 무엇이며 북한의 공산주의는 어떤것인가를 실감있게 설명하기 위하여 「실화편」을 두었고, 북괴 내부에 조작된 사실들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때와 북괴가 주장한 대남 악선전이 어떤점에서 허위적이고 기만적인가를 대답할 수 있도록 각각 「질문편」과 「해답편」을 두었다.

이러한 점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서는 남북한의 실정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편」을 두었으며, 이같은 사실들이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 이론의 모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믿어 공산주의 이론을 비판하기 위한 「비판편」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에 관한 새로운 용어를 해설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수정 및 변질된 새로운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가 당초의 의도에 얼마만큼 적중했는지는 현명한 독자들의 평가에 맡길수 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의도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믿고 당원에서는 계속 자료를 보강하고 내용을 수정하여 보다 알찬공산주의 비판의 지침서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

끝으로 이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애써주시고 지도해주신 전두열선생과 그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벗이여,
겨레 형제여.
우리들 이 가슴 속엔
진한 血潮가
눌리다 또 끓어올라 솟구치지 않느냐?
사랑은 미움보다
피는 물보다
오늘이 어제보다
내일이 오늘보다
영원이 그 순간보다 소중한 게 아니냐?
피가 그 理想을
자유가 그 죽음을 이겨,
그렇다, 진실로
오늘 우리 모두
十年을 五年을 百年을 더 앞내다보아
불멸의 不死의
不退轉의 그 의지
가다가 넘어져도
또 밀고 가자.
아, 北으로 뻗아가던
高句麗였다.

옛날에

四十년 그 隨의 침략

간악한 저 王亂 倭敵 처 물리치던

네 心臟이 내 心臟에

뛰는 이 핏줄,

아니랴? 비록 오늘 녹슬었어도

이 사랑 흐르는 江

크낙한 보람,

歷史는, 하늘은,

승리는 다 우리의 편.

오늘 우리가 우리의 祖國 못 統一하면

못 이룩하면,

어떻다 하리.

먼 後裔가 오늘의 우리를

어떻다 하리.

오늘 우리들 가슴에 다시

우리 모두

우리 모두

나 하나 그 흐름 속에 불늑혀 넣자.

또 한번 그 不死의 녀

하늘 솟치우자.

차 례

발 간 사

머 리 말

I. 실 화 편

1. 김일성의 석교상.....(15)
2. 김일성의 신년사.....(19)
3. 간판만 붙은 천도교(21)
4. 파벌투쟁의 한토막.....(24)
5. 5.30 결정.....(30)
6. 귀환포로의 처지.....(36)
7. 축산정책이 빚어낸 일(39)
8. 붉은 편지.....(44)
9. 변덕스러운 작물재배.....(48)
10. 인민재판(52)
11. 무용가의 말로.....(59)
12. 벌목장의 우공들.....(63)
13. 물고기과 노동자.....(64)
14. 술을마신 염소.....(68)
15. 자살이 뜻하는것.....(70)
16. 후회속에 살고있는 북송교포(73)
17. 「붉은기」중대(78)

II. 질 문 편

1. 역사의 날조.....(87)
2. 정 치(94)
3. 경 재(107)
4. 교육·문화·예술·방송(118)
5. 사회·노동·보건(130)
6. 군사·전략전술·통일문제·기타(140)

III. 해 답 편

- 해 설(1~31).....(157)

IV. 비 교 편

1. 정 치(249)
2. 경 제(254)
3. 사 회(255)
4. 교육·언론·문화·예술(261)
5. 군 사(263)

V. 비 판 편

1. 공산주의란 무엇인가.....(267)
2. 공산주의 철학과 그 비판.....(271)
3. 공산주의 경제학설과 그 비판.....(277)
4. 공산주의 정치이론과 그 비판.....(284)
5. 공산주의 전략전술론.....(290)
6. 최근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그 전망(296)
7. 결 론(301)

VI. 용 어 편

- 용어해설 (1~25)(307)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와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 통 령 박 정 희

I. 실 화 편

1. 김일성의 석고상

오늘날 북한 사회에서는 살아있는 김일성만이 무서운 존재인 것이 아니라, 그의 초상화나 동상, 석고상까지도 무서운 존재로 되어 있다. 평안북도 도청소재지인 신의주의 어느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북괴 공산당은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기 위하여 소위 「김일성원수연구실」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였다. 「김일성원수연구실」이라는 명칭은 후에 「조선노동당 역사연구실」 또는 「혁명전통 연구실」 등으로 불리우기도 하였으나 여하간 학교에 김일성을 연구한다는 데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연구실은 도시, 농촌, 직장 등 모든 곳에 설치하게 하였고, 건물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밝고 환경이 좋은 곳을 택하게 되어 있다.

연구실에는 김일성이 유년시부터 자라난 과정을 비롯하여 공산당 활동의 제반업적을 나열케 하고 누구나 하루 한번씩 이 김일성원수 연구실에 들어가서 자기의 각오를 다지며, 김일성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회의때마다 김일성원수연구실에 들어가 맹세하면서 떠난 어려운 일도 다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 「김일성원수연구실」을 누가 더 화려하고 깨끗하게 잘 꾸미는가에 따라 학교 책임자나 직장 책임자들의 당성(黨性)과 충성심의 척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잘 꾸미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 연구실을 잘 꾸미자면 혁명적인 열정이 풍기도록 반드시 새빨간 천으로 카테를 쳐야되는데 학교에 그러한 천이 있을리 만무한 것이다. 그래서 자학교에서는 학부형들을 동원하여 빨간 치마 회사 운동을 벌인 일까지 있었다.

신의주 중학교에서는 북한에서도 모범학교로서 알려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관계로 「김일성원수연구실」을 만드는 데도 교장으로서 열성을 부리지 않을 수 없어 교장이 열을 올리는 때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즉 모범학교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자기학교를 이 기회에 「수상연구실」을 유별나게 잘 꾸며 놓으므로 자신의 출세길을 잡아보자는 속셈이 있었다.

그러하여 교장 선생은 우선 연구실을 만들기 전에 북한에서 가장 우수하고 잘 꾸며졌다고 소문난 연구실을 찾아 다니며 견학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실 견

학을 끝내고 돌아와 자기 학교 연구실을 설계하게 되었다. 남과 달리 색다르게 만들기 위하여 연구실 중앙에는 김일성의 초상화 대신에 좀더 입체감과 실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의 석고상을 만들어 놓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석고상이라는 것을 신의주에서는 만드는 곳이 없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김일성의 석고상을 만들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평양에 가야만 만들 수가 있었다. 다른 석고상과는 달리 비용이 훨씬 더 들고 석고상만드는 사람도 무슨 출세나 한 것처럼 권세를 부리기가 일수였다.

교장은 「김일성원수 연구실」이 전교생 합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세울 목적으로 각 학생들로부터 헌납금 조로 금품 수집운동을 벌렸다. 무엇이냐 좋으니 돈이 될만한 물건이 있으면 1인당 1점씩 「수상님 연구실」에 헌납하라는 것이 었다.

이렇게 하여 모여진 돈을 가지고 교장 자신이 직접 평양으로 향했다. 그리 하여 계약을 하고 완성될 때 까지는 연구실의 환경을 꾸미도록 지시했다.

약속된 날 김일성의 석고상을 가지고 오기 위하여 모포 10여매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평북도당으로부터 자급 학교 교장회의를 개최한다는 긴급 지시가 하달되었다. 부득불 교장이 갈 수 없게 되자 대신 가장 신망이 있고 당성이 강한 학교 당책임 비서와 교무주임(교감)이 가기로 하였다. 평양으로 내려간 당책임 비서와 교무주임은 교장이 알려준 약도를 들고 석고상 만드는 곳을 찾았다.

간신히 위치를 알아내어 계약서를 제시하고 석고상 제작책임자를 만났다. 그러나 약속한 석고상은 며칠 전에 다른 상부기관에서 급한 일로 가져간 관계로 지금 막 완성된 석고상을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완전히 굳어진 후에 가져가라는 것이 었다.

신의주에 다시 돌아 갔다가 올 수도 없는 일이어서 할 수 없이 평양에서 2~3일 기다리기로 했다. 한편 학교에서는 하루가 지나도 소식이 없자, 혹시 무슨 변이라도 생기지 않았나 하고 걱정이 태산같았다. 당 비서와 교무주임은 약속한 날 석고상 제작소로 다시 찾아갔다. 아직 완전히 굳지도 않았지만 잘 싸가지고 가면 그런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믿었다.

당 비서와 교무주임은 교장의 말대로 가지고 간 모포 10여개로 김일성 석고상을 정성껏 싣후 당 책임비서와 교육주임이 번갈아 등에 업고 평양역까지 힘들여 운반했다. 자동차에 싣고 가다가 흔들려서 깨뜨리게 되면 큰 일이므로 사람이

등에 입고 조심 조심히 가는 편이 낫다는 생각에서 두 사람은 김일성 석고상을 업고 평양 거리를 확보한 것이었다.

기차에 태운 후 돌이서 석고상 양쪽을 맞잡고 신의주역까지 그럭저럭 무사히 도착했다. 「김일성 석고상」이었기 때문에 역원들의 특별한 보호와 안내를 받으며 역장실까지 운반 되었다. 그러나 역으로부터 학교까지의 운반하는 일이 문제였다. 우선 학교 교장에게 신의주역에 도착했다는 전화연락을 취했다.

교장은 반가운 목소리로 학교에서 트럭을 가지고 갈 터이니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얼마후에 교장이 직접 운전수 옆에 탄 트럭이 도착했다.

수고했다는 인사도 나눌 겨를도 없이 우선 김일성 석고상을 조심스럽게 차에 끌어 올린 후 두 사람이 양쪽에서 부축한 채 학교를 향해 출발했다. 혹시 트럭이 흔들려서 깨지나 않을까 하고 조심하면서 되도록 차를 천천히 물게했다.

그러나 포장이 되지 않은 길을 달리는 트럭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약 2킬로 쯤 달렸을까 할때 맞은 편에서 달려오는 자동차를 비키려는 찰라 트럭은 돌뿌리에 채이면서 덜컥하고 흔들렸다. 그 바람에 약간 공중에 떴다 떨어 내리 앉은 석고상의 모가지가 똑 부러지고 말았다. 트럭위에 타고 있던 두사람은 미친듯이 소리치면서 차를 정지 시켰다.

교장이 운전석에서 부리나케 밖으로 뛰어 나왔을 때 두 사람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린채 어쩔줄 모르고 있었다.

「어떻게 됐소?」. 이렇게 다급하게 묻는 교장의 말에 당황한 교무주임은 「수상님의 모가지가 그만…」하고 말 끝을 흐렸다.

「뭐요? 수상님의 모가지가? 아니 그럼?」

영문을 모르고 뛰어나온 운전수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세 사람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복귀에서는 집집마다 김일성의 초상화를 의무적으로 걸게 하고있다. 김일성 이외의 초상화는 일체 걸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 스탈린, 호지명의 초상화만은 특별히 허용된 곳에 한해서 걸 수 있게 되었으나 그것마저 김일성 초상화와 나란히 걸수 없게 되어 있다. 김일성의 초상화는 사무실이나 방의 중심부 위에 걸어야 하며, 다른 초상화는 옆벽에 걸게 되었다. 김일성 초상화가 걸린 벽에는 무슨 물건이건 부착되지 못하며 언제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했다. 김일성 초상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령님 모독죄」로 처형되기도 하였는데 몇 가지 사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황해도 청단군 일신면 차촌리의 차동허란 사람의 집에 걸려 있는 김일성의 초상화에 파리똥이 묻어있는 것을 이웃에 사는 노동당원 박모가 발견하여 김일성원수에 대한 충성심과 존경심이 부족해서 파리똥도 안닦고 방치해 두고 있다고 추궁했다.

그러나 사실은 충성심이니 존경심이니 하는 것도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나는 법인데 새벽부터 집단농장에 나갔다가 밤 늦게서야 돌아오는 고된 노동상황에 초상화를 제대로 바라 볼 겨를조차없는 지경인데 차동허는 잘못을 용서 받으려고 애썼으나 끝내 안전부 경찰에 고발되고 말았다. 김일성 초상화를 둘러싼 웃지못할 실화들은 수 없이 많다.

해주도자기공장(海州陶磁器工場)에서 일하는 양정숙의 집에 걸어 놓은 김일성 초상화에 먼지가 끼었고 초상화를 뒤에 신문지 편지 봉치통을 끼어 놓은 것을 같은 공장 위생검열관이 발견 이도 안전부에 고발되었다. 황해도 해주시, 광화동에 유준수라는 화가가 살고 있었다. 이는 중앙미술가동맹 지부장(中央美術家同盟支部長)과 황해도 미술연구소장직도 겸하고 있었다. 김일성초상화를 많이 그린 덕분에 출세를 하게된 유준수에게는 해주사범대학과 해주시멘트 공장으로부터 김일성초상화와 입상(立像)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유준수는 성심성의껏 그림을 그렸으나 엉뚱한 평을 받았다. 즉 해당 직장 당 비서가 그림을 보고 초상화가 인자한 인상이 아니라 눈에 독기가 서려있고, 농부와 악수하는 내용의 입상(立像)은 지도자다운 풍모가 아니라 표독한 눈초리와 거만스러운 자세를 하고 있어서 전형적인 관료주의자의 상이 되어버렸다 라고 평을 하면서 이러한 그림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평소에 김일성에 대한 불손한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유준수를 사상적으로 추구하면서 경찰에 고발하고 말았다. 중앙미술가동맹 조각분과위원장(中央美術家同盟彫刻分科委員長) 문섭호는 이름난 조각가로서 김일성의 초상을 수 없이 만든 사람이었다. 문섭호는 해주 신남산 청년회관 앞의 김일성 동상과 해주공산대학 회의실의 김일성의 석고상 조각을 위탁받았다. 그런데 조각된 동상은 어린티가 날 뿐 혁명가다운 「이미지」가 풍기지 않고 석고상도 한쪽 눈이 작고 목이 짧아서 답답한 느낌을 줄 뿐 위풍이 없어 보인다는등의 악평 때문에 해주시에서 농촌으로 추방되었고, 그의 딸이 평양 미술대학 3학년에 다니는데, 그 딸마저 은율군 집단 농장으로

추방되고 말았다.

2. 김일성의 신년사

김일성이 행하는 신년사는 시간적으로 매년 통일되어 있었다. 즉 해가 바뀌는 12시의 폐종(掛鐘)이 울리고 난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새해를 축하한다는 전배를 그의 측근자들과 들고 난후 신년사라는 것을 낭독하게 되어 있었다. 이때 서로 부딪치는 전배의 잔소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 나온다. 이 김일성의 신년사는 북한 주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듣게 되어있다. 집에서 라디오를 듣는 게 아니라 각 직장 단위 또는 동(洞)단위로 듣게 한다.

1962년의 신년사도 예년과 같이 집단으로 듣게 하였다. 평양시 당위원회에서는 예년보다 철저하게 청취케 하기 위하여 평양시에 깔려있는 선전원을 총 동원하여 이를 집행케 하였다. 각동마다 수명씩 있는 선전원들은 시 당위원회의 지시대로 실수없이 일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수일전부터 인민반 반장들을 동원해 전주민들에게 김일성의 신년사가 있을 31일 밤에는 모두 동민주선전실(洞民主宣傳室)에 집합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한편 인민반의 명부를 확인하여 미리부터 동원될 인원수를 확인하기에 바빴다. 준비는 제법 만족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12월 31일 밤 10시 부터 동민들을 동민주선전실(洞民主宣傳室)의 「마이크」앞에 집합시키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날 밤은 유난히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이었다. 동민들은 자던 잠을 깨어 선전원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추위에서 견디기 위해 모두 모포를 머리에서 부터 뒤집어쓰고 있었으나 그래도 야밤의 추위에 부들 부들 떨고 있었다.

해가 가고 달이 바뀌건 아무런 흥미가 있을 리 없는 주민들에게는 귀찮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선전원들에게는 직업상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것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누가 열성적이며 누가 소극적인가를 가려낼 수도 있는 계기가 될런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민주선전실 앞은 모포를 뒤집어 쓰고 서 있는 동민들로 꽉 찼다. 선전원들은 모여든 군중 속에 군데 군데 끼어 들었다.

모여든 군중들은 누구 하나 잡담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윽고 자정이 가까워짐을 라디오의 아나운서가 알렸다.

선전원들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자정을 알리는 라디오의 신호가 울리고 김일성의 목소리가 들려 나오기가 무섭게 전기 불이 딱 꺼져 버리는게 아닌가! 전기 불만이 꺼진 게 아니라 라디오방송도 그 순간 중단되어 버린 것이다.

선전원들은 몹시 당황하였다. 달도 없는 그야말로 암흑의 세계가 되어 버린 것이다. 성냥 불로 전화기를 붙들고 딴 지역으로 연락 한 바 그곳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알았다. 즉각 불순분자의 계획적 소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올라 전기 기술자를 부르는 한편, 분주소장(分駐所長)과 의논해 비상 경비망을 뒀다. 선전원들도 사방으로 흩어져 부산스럽게 뛰어 다녔다.

모여있는 군중들은 그저 제 자리에서 발을 구르며 떨기만 할뿐 여전히 말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선전원들은 군중들에게 정전임을 밝히고 지시가 있을 때 까지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된다고 명령했다.

20~30분이 지났을 무렵 전공이 도착했고 그는 전기줄에 이상이 없는 가를 먼저 점검했다. 전기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는 다시 배전소로 달려갔다. 배전소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원인 규명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와 같이 원인을 규명하는 동안 한시간 이상을 소비해 신년사건 워전 모두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할 수 없이 한 시간 이상을 떨며 서있는 군중들을 두시가 지나자 해산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주민들을 돌려 보내고 난 후 분주소장, 동당위원장, 전공을 중심으로 회의가 열렸다.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상부에 그 전말을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공에 의한 기술적인 사고의 원인 설명은 이제는 불필요한 것이었다. 만약에 변압기가 과열로 고장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고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만일 변압기의 고장이라면 이 동만이 아니고 다른 동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나와 할 텐데 다른 곳에는 무사하였으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공도 그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던 이러한 사건이라면 언제나 일단 의심을 두게되는 반혁명분자의 소행으로 돌려 볼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면 우선 당위원장과 분주소장이 골머리를 앓게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동 당위원장을 비롯한 선전원 분주소장들은 정전 원인이 분명히 김일성 신년

사를 못듣게 하기 위해 반동분자들의 고의적인 해독 행위로 단정하고 반동분자색출에 나섰다.

그러나 그후 10여일 간이나 조사를 해 보았으나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하고 선전원들만 당으로부터 심한 심판을 받았다.

3. 간판만 붙은 천도교

1958년 8월~9월을 통해 개인상공업자(個人商工業者)가 소탕된 후 이 때까지 연합전선을 편다는 구실로 청우당(靑友黨)에 배정했던 이름만의 감투마저 모조리 빼앗고, 그들을 완전히 김일성 권력의 주변에서 축출해 버렸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축출만으로 청우당이 무사할 수는 없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습성이 그들을 무사하게 놔 둘리는 없는 것이다.

1946년 초에 창당된 청우당은 민주주의 지도자의 거성(巨星)이었던 조만식(曹晩植)선생이 영도하던 북조선민주당(北朝鮮民主黨)처럼 초창기부터 탄압과 통제를 받지는 않았다.

북조선 민주당에는 민주주의 사상이 강한 사람들이 뭉였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 신자들이 많았다. 공산당에 있어서는 친미사상(親美思想)이 농후한 적대계급(敵對階級)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실상 조만식 선생이 차지하고 있었던 국민들에 대한 위치는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 점령군과 김일성 일당은 민주당의 초창기부터 파괴공작을 계획하고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최용건(崔庸健)이란 자를 은건파(穩健派)로 가장시켜 조만식 선생과 제휴케 하고 민주당 부위원장의 자리를 획득시켰었다.

그 후 신탁통치를 반대한다는 죄목으로 소련군이 조만식 선생을 계획적으로 연금시키자 민주당에 대한 탄압과 숙청을 본격화 하고 최용건이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에 격분한 하부조직(下部組織)의 민주당원들은 대거(大舉) 자유대한으로 월남해 왔으며, 일부는 탈당했다.

그러나 청우당의 경우는 달랐다. 청우당은 천도교(天道敎)에서 교인들을 중

십으로 하여 정치에 참가하기 위해 조직한 정당이 있으며, 청우당의 사상은 천도교의 사상인 동학(東學)이 있다. 동학사상의 유래(由來)로 보아 그 근원은 외래적인 것이 아니요, 민족적인 것이다. 외세에의 의존을 배격하는 정신이 철두철미했다. 따라서 민주당처럼 천미주의적인 경향이 적었다. 뿐만 아니라 청우당 당원들의 대부분이 농민이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면으로 보아 공산당은 청우당에 대한 정책이 민주당에 대한 것과는 좀 달랐다. 회유정책(懷柔政策)과 와해공작(互解工作)이란 양면정책을 썼다. 지도층의 인사에 대해서는 사탕발림으로 권리를 주어 꺾이는 회유정책을 썼다.

회유정책만을 쓴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강력한 협박도 했다. 이러한 그들의 수단으로 청우당의 지도자인 김달현(金達鉉)은 완전한 공산당의 앞잡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지도층의 인물을 손아귀에 넣는 공작을 계속하는 동안 하부당원들에 대해서는 탈당 공작을 병행했다. 그러나 반공사상을 간직하고 있었던 일부 청우당원들은 계속해서 불만스러우나마 당 생활을 계속했다.

6·25남침을 도발했던 김일성이가 국군과 유엔군의 공격을 받고 패주했을 때 억울한 생활을 하던 청우당 당원중 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치안대(治安隊)를 조직하고 국군에 협력했다.

그들은 그동안 그들을 괴롭혀 온 공산당원들 중 악질분자들을 골라 보복을 가했고 또한 군 기관에 이첩했다. 이것은 당연한 처사였다.

그후 중공군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북숨을 건졌던 김일성이가 평양에 되돌아 왔을 때 그는 청우당들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더욱 흥분시켰던 일은 청우당들이 거의 농민들이었다는 사실이다. 농민들이라면 소위 그들이 믿어야 하는 기본군중(基本群衆)이 아닌가. 이러한 기본성분을 가진 기본군중이 국군에 협력하여 공산당원을 매려 잡았다는 사실은 공산당의 망신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것이 었다면 그런대로 당적인 차이에서 오는 문제라고 보아 참을 수도 있었으나 이러한 청우당원들의 행동에 청우당원이 아니었던 일당농민들이 전폭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이야말로 김일성 일당에 대한 결정타요, 최대의 모욕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들의 기본군중이라고 하는 농민들을 모두 몰아 세운다는 것은 누워 침 뱉는 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궁한 입장에서 그들이 벗어 날 수 있는 길이란 모든 죄를 청우당에 뒤집어 씌우는 일이다. 즉 반동적(反動的)인 청우당원들이 유엔군 진격당시 선량한 농민들을 그릇 선동시켜 죄를 범하게 했다고 선전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말단에 있는 청우당원들을 모조리 심사하고 총살 또는 처형해버렸다. 이와같은 무시무시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청우당에 그대로 남아 있을 사람이 없었다. 청우당이란 간판(看板)만이 매달려 있을 뿐 당원은 한사람도 없는 절름발이 당이 되고 만 것이다.

평양이나 큰 도시를 제외 하고는 모두 지방의 청우당이 하나같이 이런 꼴이 되었다.

김일성은 1958년 10월~11월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평양과 큰 도시에 남아 있던 지도층에 대한 숙청을 강행하기로 했다. 청우당의 영도자 김달현은 그동안 김일성에게 있는 충성을 다바쳐왔다. 그래도 김일성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살려 두는 것보다 죽이는 것이 정치적 형편상 보다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농민들이 공산당을 배반했던 쓰라린 상처에 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김달현에게 뒤집어 씌워 그 사건을 아주 매듭짓고 싶었던 것이다.

결국 김달현(천도교청우당 위원장), 김병제(동 부위원장)등 청우당 지도층은 사회안전성(社會安全省)의 안전국원들에 의해 구속되었고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김달현은 복귀 노동상(勞働相)을 지내다 간첩의 죄명으로 총살된 바 있는 김원봉(金元鳳)과 접선하고 있었다는 역시 간첩의 죄명이 씌워졌다.

이렇게 해서 평양에 있는 청우당 중앙당부의 간부들은 이슬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박신태이라는 공산당원의 청우당 간판만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최용전이란 소련군 장교출신의 공산당 비밀당원이 민주당 간판을 지키고 있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이러한 간판이라도 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훌륭한 이용 가치가 있다.

시끄럽고 의심스러운 자들을 감시하며 이용해야 할 필요성도 없었다. 대의적인 이용가치는 이미 숙청당할 자들이 세워 놓은 터이니까 이제 필요한 것은 간판 뿐이오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4. 파벌투쟁의 한토막

「제1차 북괴 노동당 대표자 대회」는 「김일성」이가 소위 8월종파(八月宗派)의 숙청을 종결짓기 위해 소집한 모임이었다. 이 “8월종파”사건이란 1956년 8월에 소집되었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단되었다. 이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초 김일성이가 그동안 동구라파 공산국가들을 방문한 결과에 대한 보고겸 「인민보건사업을 개선하는 데 대하여」라는 안건(案件)을 가지고 소집되었었다.

김일성의 보고는 아무일 없이 잘 끝났다. 그러나 문제는 보건사업문제 토의에서 일어났다. 연안파(延安派)의 부두목 격인 내각부수상 최창익과 상업상(商業相)윤공흠, 지업총동맹 위원장인 서휘(徐輝)등 일파가 전후(戰後)에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김일성 일파의 중공업우위정책을 공박하고 나섰다.

최창익은 전쟁 도발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택시설 복구와, 불만에 찬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서는 생활필수품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항상 주장해 왔었다. 결국 중공업 우위정책은 당분간 포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설사 이 주장이 옳다고 해도 서로 다른 꿈을 안고 속으로는 적대시 하고 있는 김일성 일파가 중요정책문제에 그들의 주장을 받아 드릴리 만무하다. 만일 이러한 문제에 김일성파가 연안파의 주장에 순순히 따르게 되면 정치적 위치가 뒤바뀌게 될 위험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이런 때에는 순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도 서슴치 않고 펴낸다. 김일성 원수의 지도노선(指導路線)을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용서 할 수도 없다고 대들었다.

양파의 논쟁이 점차 격화되어 절정에 이르자 김일성파에서는 연안파를 향해 「반동분자다」라는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연안파의 지업총동맹 위원장 서휘와 상업상 윤공흠은 발언 도중 이러한 공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멱살을 잡히며 끌려내키는 모욕을 당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그들은 그대로 회의장을 박차고 퇴장하여 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김일성 일파에게 있어서 연안파는 그들 최후의 숙청대상으로 언제든지 기회만을 노리고 있던 참이었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의 세력이 남로당(南勞黨)계열에 비해 훨씬 강하고 뿌리가 깊었을 뿐 아니라 중공계열이 있음으로 전쟁중 중공군이 참전해준 덕택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김

일성 일파로서는 증공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날자를 끌고 있었던 것이었다.

원래 중앙위원회는 그 인원 구성에 있어 김일성 일파가 항상 다수를 점하고 있었던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었다. 요는 숙청의 기회가 문제였던 것이다.

연안파가 자기의 무덤을 파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은 연안파를 분쇄하기로 결정했다. 서휘와 윤공흠이 퇴장한 것을 계기로 김일성 일파는 다수의 힘을 몰아 연안파들을 반당분자(反黨分子)로 출당(出黨) 철회(撤職)의 처벌을 결의하고야 말았다.

이날 회의에서 출당·철회의 처벌을 당한 연안파중 거물급 만으로도 부수상 최창익, 상업상 윤공흠, 직업총동맹 위원장 서휘, 내각사무국장 양계, 내무성 부상을 역임한 바 있는 이필규 등이 있었다.

이날 중앙위원회의 결의가 끝나자 그날 밤으로 최창익을 위시하여 출당파자들의 일제 검거 선봉이 불게 된 것은 공산당들의 당연한 투쟁 생리임으로 놀랄 일은 못된다. 놀랄 것이 있다면 상업상 윤공흠과 직업동맹 총위원장 서휘가 체포되지 않고 교묘히 증공으로 도망쳤다는 사실이다.

1956년은 소련수상 「후르시초프」가 죽은 「스탈린」의 죄상을 들추어 그를 격하(格下)시키고 개인숭배 타파와 일인독재를 배격하기 위해 집단지도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산권 내부에 커다란 충격과 하나의 전환기를 마련한 해였다.

실은 연안파도 이와 같은 대세에 힘을 입고 또한 증공의 세력을 배경으로 그들의 주장을 대담하게 펴보았던 것이었다. 이와 같이 연안파의 숙청이 8월의 중앙위원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8월 종파사건”이라고 이름 짓게 되었다.

그러나 몇일이 지나 9월에 들어서자 증공의 「팽덕회」와 소련의 「미교양」이 돌연 평양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에게 정책상의 의견 대립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니 연안파 동무들을 모두 다시 당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압력을 가했다.

이 8월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중앙당으로부터 이미 각 지방당에 하달되었으며 이를 반복한다는 것은 김일성으로서는 정말 그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었음을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산대국들의 권고를 거부한다면 어떠한 영향이 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는 하는 수 없이 8월하순 다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8월의 결정은 무효라고 번의(翻意)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갈광 질광하는 중앙당의 허점(虛點)을 틈타 지방에서도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방 도당(道黨)에서는 9월결정만을 군당(郡黨)에 하달한 도가 있는가 하면 8월결정만을 하달하고 9월결정은 하달하지 않는 도가 있는 등 큰 반발이 일어난 것이다. 즉 평안북도 당과 강원도 당에서는 8월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9월회의 결정만을 널리 선전하면서 최창익파에 대한 공공연한 지지를 표명했을 뿐 아니라 도내 주민들에게 김 일성의 초상화를 걸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김일성의 초상화를 불살라버린 일까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양도에서는 두드러진 반발이 나타났던 것이 었다.

그러나 8월결정이 9월결정으로 반복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어태까지나 “미코안”과 “팽덕회”의 압력으로 부득이한 눈가림의 연극을 한 것에 불과하다. 최창익은 구속된 그대로였을뿐 아니라 김일성은 그들 세력이 자칫 잘못하면 소련과 중공의 힘을 입어 더욱 커질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자 그는 암암리에 본격적인 숙청작업을 서두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반종파투쟁(反宗派鬪爭)을 위한 중앙당 집중지도라는 명칭하에 수백명의 그의 심복당원들을 동원하여 당과 군부의 말단에서부터 연안파 계통을 고문하기 시작했다 사건을 꾸미는 것이다. 또한 사건을 꾸미는데 있어 박헌영일파에게 뒤집어씌웠던 것 처럼 미국의 고용간첩이라는 것은 부적당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려고 했다는 「쿠데타」음모죄를 적용하였다. 이 죄목을 말단 연안파들로 부터 자인받기 시작하면서 숙청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숙청작업이란 언제나 잔인하고 집요하고 철저한 것이 특색이다.

이와 같이 진행된 8월 종파 숙청은 연안파의 총두령인 김두봉에게 손이 이르기까지 2년이란 세월이 걸린다. 그 동안 김두봉의 일급 참모들은 8월 숙청의 제1차 선봉에 뒤이어 전설상(建設相) 김승하, 중앙도서관장 한빈, 소련주재 북괴대사 이상조를 비롯하여 군부에서 중요한 직위에있던 제4군단장 장평산, 전쟁중 전선사령관으로 있던 김웅 등이 차례로 숙청되어 자취를 감추었다.

이와같이 이 잡듯이 군부, 당, 내각등을 살살이 뒤지며 연안파의 씨를 없애 버리게 되자 끝으로 남은 것은 힘 못쓰는 김두봉 뿐이었다. 김두봉은 제2차때 전중 연안에서 중국 공산당의 품에서 자랐다. 해방이되자 그는 그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귀국했다. 소련에서 소련군 소좌(소령)로 귀국한 김일성이가 소련군의 후원하에 공산당을 조직하고 있을 때 김두봉은 신민당을 조직했다. 그때만

해도 국문학자요, 역사학도 공부했다는 김두봉은 온건주의자로 평이 돌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공산당에는 가기 싫고 우익의 민족주의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던 기회주의적인 일부 「인텔리」층의 사람들은 모두 신민당으로 옮겨 들게 되었다. 그후 김두봉의 신민당과 김일성의 공산당은 소련점령군의 권유와 중개로 1946년 8월 북조선 노동당이라는 명칭하에 합당이 되었다. 당초 소련군의 반강제적인 지시로 합당을 하였으며, 또한 그들의 후원아래 당의 실권이 김일성에게로 돌아가자 김일성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투쟁 경험이나 이론면에서도 월등하다고 자부했던 김두봉이 처음부터 불만이 있었음은 당연했다.

끈적지고 질저한 숙청 작업 끝에 연안파의 마지막 존재로 남아 있는 것은 다만 늙고 무력해진 김두봉 뿐이었다. 이제 그에 대한 손질만 가하면 연안파 문제도 일단락 짓게 되는 것이다. 이 마지막 손질을 가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일당은 평양시당 열성자회의를 거쳐 노동당 창설이래 처음으로 개최되는 당대표자대회라는 것을 소집하기로 결정지었다. 뭐니 뭐니해도 김두봉은 그때까지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란 높은 지위(職位)에 앉고 있었다. 이 위치는 실권은 없다고 하지만,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대통령과 맞먹는 높은 상징적 지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해방후부터 김일성과 어깨를 겨누면서 북한땅에 정치세력을 닦아 왔기 때문에 민중의 지지도 상당히 받고 있었다. 북한에 아무런 발판도 없던 박헌영일파에 대한 숙청과는 그 본질이 달랐다.

김일성은 이미 1956년 8월에 연안파에 대한 숙청을 일단 결의했다가 9월에 다시 이 결정을 번복했던 굴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이 때문에 당 내부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게되었던 깊은 상처도 받았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얽힌 사정들을 한 칼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당적(全黨的)인 운동을 전개시켜야 할 필요성이 간절했다.

1957년 12월에 소집된 소위 북괴 노동당 평양시당 열성자회의는 김일성의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개최되었다. 이러한 김일성의 계획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던 김두봉은 이회의에 보낼 측사까지 마련해 가지고 귀빈석에 앉아 자기 차베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식순이 무시된 채 난데없이 평양시당 위원장이 엄숙히 등장했다. 그리고는 긴급 보고가 있다고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여기에 참석한 반당분자를 놓아 둔 채 어떻게 이 성스러운 회의를 진행시킬 수 있는가” 하면서 그는 김두봉을 향해

계획된 공격의 화살을 쏘기 시작했다. “김두봉 등무는 「도롯도」춤을 좋아하여 어디를 가나 「댄스 파티」를 열었으며, 젊은 여자들을 껴안고 추태를 부려 여성동무들을 괴롭혀 왔오. 이것은 당의 위신을 추락시킨 해당행위(害黨行爲)가 아니고 무엇이요? 사무실에서는 여비서로 하여금 보고서나 책을 읽게하고 자기는 듣기만 하였으니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까지도 남에게 시킨 노동착취적 행위를 범한 것이요, 또한 그는 개성에 갔을 때 인민군이나 중공군 전사의 묘지에는 들리지도 않고 기생 황진이(黃眞伊)의 묘를 찾아가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며 술을 먹었으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봉건적이며 퇴폐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오. 그 뿐만 아니라 김두봉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과학원장 백남운(白南雲) 등무의 주장대로 원시사회에서 노예사회시대를 거쳐 봉건사회로 이행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 발전이 노예시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원시사회에서 봉건사회로 이행했다는 그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 백남운에게 압력을 가하였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마치 기형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같이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 했습니다”

이와 같은 김두봉에 대한 인신 공격이 계속되는 동안 이미 장내는 「옳소 반동이요」하는 대표자들의 함성이 들끓기 시작하였다. 시당 위원장은 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김두봉의 정치적 과오는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외치면서 말을 계속하였다.

김두봉은 참다 못하여 퇴장하고 말았다. 더욱 신이난 시당위원장은 “김두봉은 언제나 상임위원회를 당보다 우위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을 모욕했오. 심지어는 사회주의 건설을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중공업 우위정책도 반대하면서 당의 노선에 복종치 않았고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수상의 지도를 거부했소” 다시 소란해진 장내를 향해 그는 김두봉의 숙청계획의 마지막 대사(臺詞)에 힘을 주었다.

「그의 죄상은 이것 뿐이 아니요, 이것 뿐이라면 당의 위대한 아량을 베풀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즐거들인 8월중과일당을 동원하여 무력 「구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인민의 손으로 부터 빼앗으려는 흉악한 음모를 꾸밈으로써 셋지 못할 죄를 범하였오」 이렇게 되자 “축출하라” “그들의 음모와 관련자들에게 대한 전모를 발표하자”는 요구가 일어났다.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대본은 다시 엮어져 내려왔다.

김두봉이가 비판을 받았었던 사건중에서 황진이 묘를 참배 하였다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송도대학 문학부 이수봉교수는 옛 송도 명기 황진이에 대한 논문을 썼다. 황진은 당시 양반계급을 야유하고 서민적인 시조를 쓴 뛰어난 여류 작가이니 그를 기념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것이 었다. 다행히도 이 교수의 논문은 당의 승인을 받았다. 이 교수와 학생문학 씨클 일동은 개성 시민위원회의 후원을 얻어 황진이의 묘를 만들기로 했다. 송도 개성의 옛이름의 삼절(三節) 하면 박연폭포와 서화담(徐花潭, 이조 중종 때의 학자)과 황진이를 말한다. 서화담을 기념하는 서화정은 송악산의 동쪽 줄기의 낮은 산위에 자리잡고 있다. 이 서화정에서 약 십오리 떨어져 박연폭포가 있다. 이 교수와 학생들은 박연폭포와 서화정을 이은 직선상 남쪽으로 같은 거리인 십오리쯤 떨어진 곳에 황진이의 묘를 만들기로 했다. 그 위치가 바로 판문점 뒷쪽이 되었다. 황진이의 묘라해서 그의 뼈가 묻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무덤처럼 흙더미를 쌓고 잔디를 입히는 것 뿐이 었다. 그리고는 흑색 대리석 비의 전면에 송도명기 황진이의 묘라고 새겼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는 그녀의 절짜시조의 하나인

「동짓달 지나긴 밤에 한허리를 둘러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 서리 넣었다
가 어른님 오시는 밤 이들랑 구비 구비 퍼리라」

왼쪽옆에도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 간들 어머리」

이 두 시조를 새겨 비석을 새웠다.

이로부터 2년 후인 1955년 김두봉은 서기장인 강량욱을 대동하고 개성으로와 송도대학에 들린 일이 있었다. 문학부 이 교수는 김두봉이가 원래 국문학에 밝은 사람이 었으므로 그의 환심도 살 겸 그가 만들어 놓은 황진이의 묘를 한번 구경하고 가기를 권유하였다. 원래 풍류도 즐겨 온 그가 거절할 리 없었다. 김두봉은 가는 길에 소주 몇병과 안주 몇점을 국영 식료품점에 들러서 차에 실었다. 황진이의 묘앞에 선 김은 이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감회가 깊은 듯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한참동안 묵묵히 서 있었다. 이윽고 좌석이 마련되고 술잔이 오갔다. 술이 들어 감에 따라 상기된 그는 북어 매가리 하나를 묘앞에 놓고 시조를 읊었다.

「청초 옥어진 곶에 자는다 누웠는다. 흥안은 어디두고 백골만 묻혔는가. 잔

잡고 권할 이 없으니 그를 설위하노라」

이조 선조때의 학자 조식(曹植)이 송도 황진이이 묘를 찾아와 술잔을 놓고 그의 죽음을 애타게 슬퍼하며 지은 유명한 시조를 감개무량하게 읊은 것이 었다. 확실히 그 때의 김두봉의 인간상은 풍류인 그대로의 정취가 있었다. 이교수와 김두봉 그리고 서기장, 학생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

이것이 결국은 봉건적이고 퇴폐적인 사건으로 당의 비판을 받았다. 만일 이것이 사실상 퇴폐적인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나 이교수 학생등 모두가 같이 당해야 하는 것이 이치가 아니겠는가. 결국 미우면 당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김일성 일당이 그들의 독재 권좌를 더욱 튼튼히 하고 연안과 속청을 형식적으로나마 합법화시키려는 계획은 성공하였다.

김두봉은 1958년 초에 있었던 대표자 대회의 결정에 따라 출당·철지 강제노동의 처벌을 받기 위해 순천농목장(順天農牧場)으로 보내졌다.

중국연안에서 중국공산당의 보살핌을 받으며 시작한 그의 공산주의 운동은 독립동맹 위원장으로 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신민당 위원장, 초대 노동당 위원장 최고회의상임위원회의장 등 언제나 찬란한 직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젠 모든 것이 꿈인양 그가 일생을 믿고 또 꿈, 바쳐온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배신자로 낙인 찍혀 처참한 말로를 걷게 된 것이다.

5. 5.30 결정

북한 주민들은 크게 두 개의 「구름」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나는 소위 「신임(信任)구름」 또 하나는 「불신임(不信任)구름」이다. 불신임구름은 8·15해방이후 계속적증대되었으며 수 백만에 달하게 되었음으로 김일성은 매우 불안하였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고 처리하지 않고서는 안되게 되었다.

때문에 1957년 5월 30일 소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른바 5.30결정이란 것을 채택하였다.

5.30결정이란 북한 주민중 불신임층에 대한 규정과 처리 기준인 것이다.

이러한 처리 기준을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약 2년간에 걸쳐 「중앙당 집중지도」라는 심사를 통해 수 백만의 북한 주민은 억울한 누명을 입고 처형, 투옥

강제노동, 감시등 온갖 박해를 당하였다. 악명 높은 5.30결정에 규정된 불신입제층과 그의 처리기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월남가족(越南家族)에 대한 취급

1945년 8월 15일부터 전쟁중에 이르기까지 북한 주민들의 집단 월남자의 수는 수백만에 달하였다. 그들이 발표하는 공개적인 숫자에서만도 2백만이라고 한다.

5.30결정에서는 이러한 월남자들의 가족들을 3개부류로 분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계급적 성분이 노동자나 빈농(貧農)의 출신으로서 아무런 범죄도 없이 타인의 권고나 자기 안전을 위해 월남한 사람의 가족은 제1부류에 속한다. 제1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차별, 감시, 불신임의 압력을 늦춰 주고 자녀들에게 진학(進學)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줌으로써 아방(我方)에 일단 포섭하라는 것이다.

전시에 북한에서 치안대(治安隊)나 기타의 단체에서 국군에 협력하였으나 그 활동이 피동적이었으며 기본성분으로 보아 적대계급(敵對階級)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월남한 자의 가족들은 제2부류에 속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가족도 제1부류에 속하는 월남자 가족들과 거의 동등한 처리를 하게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들에게는 그들의 죄과(罪過)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소위 김일성의 관대정책(寬大政策)에 의해 포섭되는 것이니 만큼 당이 요구하는 혁명과업에 충성을 다 한다는 서약을 받아야 한다.

계급적 성분으로 보아 적대계급에 속한다거나 전쟁시기에 치안대나 반공단체(反共團體)에 간부 직위로 있다가 월남한 자들의 가족은 제3부류에 속한다. 이 제3부류에 속하는 월남자 가족들은 대중(大衆)으로 부터 고립시키는 정책을 쓴다. 즉 군중회의를 열어 월남한 사람의 죄상을 성토(聲討)케 한후 부락민들로 하여금 그 가족들과의 접촉을 금지시키는 한편, 대중감시에 붙여 놓는다. 자녀들에게 진학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은 물론 부락에서 중노동에 종사하게 한다. 만일 불성실하다던가 불평불만이 엮보이면 처형(處刑)하던가 즉시 산간벽지로 강제이주(強制移住)시킨다.

② 치안대 반공단체에 가담한자에 대한 취급

국군과 유엔군이 복진했을 때 수복지구(收復地區)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치안대를 조직하여 국군과 유엔군에 협력했다.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국군과 유엔군의 철수와 동시에 월남하였다. 그러나 미처 뒤따라 월남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 이 사람들은 이미 1951년에서부터 1952년 사이에 대부분이 사형이나 강제유배(強制流配)의 형을 받았다. 남아 있는 사람들이란 죄과가 경미하여 두문벌(杜門罰)이란 것을 받은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이미 그 죄목으로 인해 일단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다. 두문벌이란 집안에다 연금시키고 외부인과의 접촉이나 외출도 금지시키고 노동도 개별적으로 부과한다. 그리고 그의 집 문에는 빨간 종이에다 「두문」이라고 쓴 딱지가 붙는다.

이와같이 이미 6개월이나 1년간에 걸친 두문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5·30 결정은 다시 이 사람들을 재심(再審)에 붙이라고 했다. 즉 재심을 하여가지고 성분에 따라 처단해 버리라는 것이다.

③ 종교인(宗敎人) 및 그 가족에 대한 취급

종교와 공산주의는 원래 그 출발부터 상반(相反)되는 것으로 서로 용인(容認)될 수 없는 존재다. 공산주의자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그들을 반대할 세력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느 공산국가던 그들의 헌법(憲法)에는 뚜렷이 「신앙(信仰)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다. 복괴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이른바 헌법 제14조에도 「공민(公民)은 신앙 및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혀 놓았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허울좋은 글자나열(羅列)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어디를 가나 교회란 찾아 볼 수가 없다. 해방전만 해도 북한에는 2천여개의 교회당이 있었다. 그러나 복괴는 이 기독교의 교회당들을 모두 몰수(沒收)하여 공산당원들의 회의장소나 협동농장의 현물세창고(現物稅倉庫)로 사용하고 있으며 파괴해 버린 것도 많다.

불교의 사찰도 마찬가지의 입장에 놓여 있다. 단지 유명한 사찰들만 역사적인 유물로 보존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역사적 유물로 남아있는 절간에도 승녀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에서 파견된 관리인이 관리하

고 있다. 이와 같이 종교인들이 뭉여 그들이 믿는 신에게 예배할 수 있는 집회장소인 교회나 불당을 송두리체 빼앗기고 말았다. 때문에 북한에 있는 종교인들이란 그들의 집에서 개별적으로 남몰래 예배하고 기도하는 부자유스러운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5.30결정은 이러한 종교인들을 조사해 사소한 혐의라도 있으면 용서없이 처단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종교를 안 믿어도 과거에 종교와 인연을 맺었던 자라면 언제 어떠한 종교를 어느 때까지 신봉(信奉)했으며 왜 이탈했는가를 명확히 밝히고 현재의 동향을 엄중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④ 과거 지주 및 그의 가족에 대한 취급

북한에서 토지를 약탈 당한 지주들은 거의 월남해 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지주출신의 사람들이란 극히 적은 숫자다. 또한 이들은 모두 산간벽지로 이동되어 10여년간이나 줄곧 강제노동에 종사해 오고 있다. 그렇지만 5.30결정에 의하면 이들이 아무리 10여년간 노동에 종사하여 왔다 해도 그들의 성분개조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중공이 무자비하게 지주를 숙청한 예를 들어 자기들의 지주청산정책은 소극적이며, 피를 덜 흘렸다고 했다. 그러니 이제라도 과거의 지주들을 들추어 무자비하게 처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⑤ 상공업자 출신 및 그 가족에 대한 취급

지난 8, 9월 두 달간에 걸친 개인상공업자의 완전 소탕으로 인해 북한 천지에는 상인이란 한 명도 없다. 그들은 모두 생산협동조합이나 편의협동조합(便宜協同組合)에 소속되어 노동자의 생활을 하고 있다. 원래 북한 공산도배들은 개인상공업자에 대한 제한(制限), 이용(利用), 개조(改造)라는 기본정책을 적용하고 있었다.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있은 후 레닌은 한 때 신경제정책(新經濟政策)을 쓴 일이 있었다. 즉 자유시장을 허용 함으로써 자본주의와 경쟁하여 사회주의가 승리토록 하자는 것이다.

김일성도 이와 같은 레닌의 경험을 살려 제한, 이용, 개조라는 정책을 북한

에 적용했다. 그는 사회주의 상업이 개인상업을 필경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예견대로 평양시의 자유시장은 줄어 들기는 커녕 확대되기만 했다. 말하자면 사회주의 상업이 도리어 개인상업에게 압도 당하고만 것이다.

당황한 김일성 일당들은 할 수 없이 독재의 칼을 휘둘러 자유상공업자들의 생산수단(生産手段)과 상품들을 강제로 빼앗고 말았다. 공상당은 본래의 성격상 자유상공업이란 착취행위로 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어느 때진 자유상공업자들은 숙청 당할 운명에 놓여 있었지만 잠시 이용해 보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5.30결정에 의하면 이들에 대한 처리기준은 지주들에 대한 것 보다는 약간 관대하게 취급하지만 엄중감시를 해야한다고 했다.

⑥ 종파관련자(宗派關聯者) 및 그 가족에 대한 취급

새로운 적대계급(敵對階級)으로 등장한 종파계층이란 1952년에서 55년 사이에 단행된 남로당 계열에 대한 숙청사업에서 비롯하여 '56년에서 '58년에 이르는 연안파와 일부 소련파의 숙청으로 급격히 증대 되었다. 또한 이 종파 계층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큰 불안거리의 하나였다.

종파주의자라고 낙인이 찍힌 장본인들은 이미 처단되었고, 여기에서 지적되는 사람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된 사람들을 말한다.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는 극히 애매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그 범위란 해석하기 나름으로 함축성(含蓄性)이 깊은 것이다.

8월 종파사건 때 중앙당 재정경리부장도 관련자로 숙청 당했다. 그가 숙청되자 재정경리부 직원 전원이 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별목 노동자로 추방된 것은 물론 종파라는 용어조차 모르는 목수쟁이, 청소부 이발사까지 내쫓았다.

이런 식으로 종파 관련자를 규정짓고 있는만큼 그 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는 추측 할 수도 없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리 기준은 매우 엄격했다. 사소한 관련이 발각되면 출당, 철직시켜 산간벽지로 이주시켜 버렸다. 가족도 동시에 추방되어야 하고 대중감시에 붙여 강제노동에 종사 당하였다.

⑦ 전직관계자(前職關係者) 및 그의 가족에 대한 취급

전직관계자라고 함은 해방전 일제통치하에서 관직에 있던 사람들을 말한다. 현재 북한에 남아 있는 전직자들이란 군서기, 면서기 아니면 금융조합서기등을 일제시대 때 지낸 사람들 정도다.

공산당은 그들의 행정기술이 써먹을때가 있어 초기에는 그들을 이용했다. 얼마안가 그들의 이용가치가 없어지자 추방하고 중노동에 종사시켰다. 5.30결정은 이들중 일제시대에 경찰이나 권력기관에 종사한 일이 있는 자들은 모두 범죄를 구성해 처단하고 그들의 가족들도 거주제한(居住制限)과 동시에 대중감시에 붙이라고 했다. 자녀들의 진학도 제한 한 것은 물론이다.

⑧ 복역자(服役者)의 가족에 대한 취급

여기서 말하는 복역자란 경제적 범죄를 범하고 교화소(교도소를 말함)에서 형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북한에 경제생활이 궁핍해짐에 따라 절도범이 당연히 늘어 나게 되었다. 특히 북송되어온 재일교포들의 소지품이 도난 당하는 일이 수 없이 일어났다. 그들의 물건은 북한에서 살 수 없는 귀중품들이 많았다. 「트렌지스타·라디오」란 것도 북송교포에 의해 처음으로 북한주민이 구경할 정도였다.

또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자들은 자물쇠를 두개 이상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절도와 강도등의 경제범이 늘어 나는데 당황한 공산당은 북송교포의 소지품을 절취한 자는 총살형에 처한다고 특별공시까지 냈다.

5.30결정은 이와 같은 잡범(雜犯)들의 증가를 막기위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범죄자의 가족까지도 처벌한다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방책까지도 포함하였다. 즉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잡범들의 가족은 정치사상범(政治思想犯)의 가족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산간벽지로 이주시켜 강제노동에 종사시키라고 했다.

그외의 잡범들의 가족은 죄질에 따라 처벌하되 경미한 자의 가족은 대중감

시에 붙인다고 했다.

⑨ 출소자(出所者) 및 그 가족에 대한 취급

형기(刑期)를 마치고 출감했다고 해도 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출감하자 다시 중노동장에서 일해야 한다.

해방후 가장 큰 규모의 반공의거사건(反共義舉事件)의 하나였던 신의주학생사건에 가담했던 죄로 1년간 구속, 취조를 받고 출감한 한 학생은 15년이 된 지금에도 함경남도 고원탄광(高原炭鑛)에서 탄차를 미는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출소자의 기록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주제한과 대중감시를 시키고 자녀들에게도 제한을 가한다.

⑩ 귀환포로에 대한 취급

전쟁중 국군이나 유엔군에 의해 포로되었다가 복송된 귀환포로들은 10만에 달하는 상당한 수였다. 복귀는 처음에는 이들을 환영하느라라고 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들이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었다. 왜냐하면 귀환포로들이란 제한된 장소에서나마 자유주의 사회의 생활을 보고 겪었기 때문에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핍박이 그칠사이 없는 생활에 점차 회의(懷疑)를 품게 되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활 태도도 달랐지만 공산당이 요구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다. 5·30결정은 귀환포로들을 일제히 등록시키고 그들 전부를 일단 간첩의 혐의를 두고 심사하라고 했다. 포로수용소에서 간부직위에 있던 자들의 당적(黨籍)을 박탈하고 범죄를 만들어 체포 구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6. 귀환포로의 처치

휴전(休戰)이 성립되고 판문점을 통해 포로 송환(送還)이 실시되었다.

대한민국에 그대로 남아 자유스러운 생활을 선택한 반공포로도 많았지만 북송된 포로도 근 10만에 달하는 많은 숫자였다.

이 때 김일성 일당은 귀환되어 온 포로들을 개성에서 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베풀어 맞아 들었다. 특히 박사현(朴士賢)이란 자에게는 그들 중에서도 영웅적인 대접을 해주었다. 그것은 유엔 관할하에서 포로생활을 하는 동안 영웅적인 투쟁을 하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김일성은 「모든 승리의 조직자」인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 용감히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적인 투쟁을 하고 돌아왔다고 선전했다.

박사현이란 자는 6.25동란전 황해도당(黃海道黨)부위원장으로서 있다가 김일성이 칙략전을 일으킨 후 피뢰군의 고급장교(高級將校)로 출전하였다가 「유엔군」에 포로가 되었었다. 박사현은 포로수용소에 도착하자 「유엔군」의 포로에 대한 인도적(人道的)인 대우를 꺼꾸로 이용했다. 그는 수용소 내에서의 공산당조직을 강화하여 반공사상으로 기울어져 가는 동료 포로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이로써 수용소 내에서의 반공포로와 친공(親共) 포로간의 피나는 투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는 수시로 살인, 방화(放火)등으로 폭동을 일으켜 경비하는 「유엔」군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거제도 포로수용소장 「돛드」준장을 납치하는 일까지 일으켰다.

박사현의 밑에서 그를 도와 수용소 내의 조직을 만들어 온 자들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자는 조중근과 전재경이 있다. 조중근과 전재경은 문화 예술단체(文化藝術團體)총연맹에서 같이 소설 작가로 활약했다는 데 공통점이 있었다. 전재경은 소설을 쓰는 일방 평양방송국장이란 요직까지 역임한 바 있었다.

조중근은 1948년에 전 가악과 함께 고향인 충청남도를 떠나 월북했던 자이며 6.25남침시에는 자기고향인 충청남도 인민위원회 교육부장이라는 자리를 얻어 남으로 내려왔다가 미처 후퇴를 못해 포로가 된 자이다. 그는 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會議)충청남도 대의원(代議員)의 자격도 갖고 있었다.

김일성의 직접지도아래 귀환 포로들을 환영하는 군중대회는 각지에서 열렸고 박사현의 투쟁을 과장하여 꾸며낸 연극(演劇)도 각지에서 공연되었다.

이렇게 박사현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웅화(英雄化)되어 있었다.

귀환포로들은 박사현의 추천장만 가지면 어디나 원하는 직장에서 대접을 받으며 일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은 건설성(建設省) 건설국장이란 자리를 박사현에게 맡겼다.

당시 전쟁으로 황폐화된 이북의 도시들을 재건한다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일

이었으므로 그의 건설국장이란 자리는 결코 작은 감투가 아니었다.

조중곤은 문화예술단체 총연맹 소설분과위원장이란 지위에 올랐다.

전재경은 문학가동맹에서 작가 생활을 계속하며 그의 포로수용소 생활수기를 발표하여 당지도층의 칭찬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일성은 박사현이로 하여금 귀환포로들로 구성된 건설여단(建設旅團)이란 것을 조직해 평양시의 재건사업을 직접 담당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전투에서 전사하지 않고 포로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 인민들에게 사과하는 뜻에서 자진 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고 하였던 것이다.

박사현이가 건설국장이란 감투를 내놓게 된 것도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결국 일정한 시기가 지나자 김일성의 귀환포로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박사현은 귀환포로들의 일부를 규합해 건설여단을 조직해 가지고 평양시내 아파트 공사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나 이 때가 그때도 그들에 있어서는 호화스런 때였다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알게 되었다.

건설사업이 끝나게 되자 그들에 대한 김일성의 태도는 또 다시 일변했다. 박사현 일당은 간첩이라는 것이 었다.

처음에는 영웅이며 두번째는 전쟁터에서 죽지않고 살아서 포로가 된 불명예스런 자라고 하더니 이제 마지막으로는 간첩이란 죄명이 씌워진 것이다.

김일성의 말인 즉 박사현 일당은 소위 미제국주의자(美帝國主義者)들과 공모(共謀)하여 수용소내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흉내를 내며 많은 진실한 혁명분자들을 고의로 죽였으며 귀환 후에도 간첩행위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박사현을 필두로 해서 수용소내에서 간부급에 속하는 사람들도 모두 잡아들였다. 따라서 조중곤과 전재경이 체포된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김일성의 수법은 과거 남로당(南勞黨)의 박헌영과 이승엽 일당을 숙청할 때 쓴 수법과 같자 한자 안틀리는 동일한 수법인 것이다.

박사현과 귀환포로 간부급들은 한명도 빼놓지 않고 체포되어 비밀리에 총살당하고 말았다. 그 수가 어느 정도였는가는 누구도 알고 있지 못하며 다만 수용소 내에서 대대장급 이상을 지낸 자들은 모두 처형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을 뿐이다.

건설단에 동원되었던 자들중 처형 당한 자 외에는 모두 아오지(阿翳地)탄광

으로 이동되어 계속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 때 조중근의 아들은 김일성 종합대학 4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간첩으로 몰린 후 곧 함경남도 고원탄광의 청년갱(靑年坑)에서 굴진공(掘進工)으로 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김일성이기 이와 같이 박사현과 귀환포로들을 숙청하기 시작한 이유는 간단한 것이다. 박사현이가 너무 영웅화되었을 뿐 아니라 거의 10만에 육박하는 그들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김일성 외에는 어떠한 집단적인 정치세력의 존재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남노당계와 연안파(延安派)계의 숙청에서도 나타난바와 같다.

차라리 전쟁터에서 죽었으면 그의 가족들은 전사자(戰死者)가족이라고 사회적인 우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을 살아서 돌아간 것이 죄가 되어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불신당하고 만 것이다.

이는 비단 귀환포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8. 15해방전 일제에 항거해서 투쟁한 항일투사 중에서 일제의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었다면 체포된 그 자체를 큰 범죄로 보며 변절자로서 취급당하고 숙청되는 것이다. 즉 싸워서 죽으라는 것이다.

7. 축산정책이 빚어낸 일

북한에서 축산정책 「풀과 고기를 바꾸라는 것이 있다. 북한에서 부식물중에서 가장 귀하고 구하기 힘든 것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위시한 소위 육류이다. 고기라고만 하면 배급받기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얼마 안되는 닭 등 자유판매의 것은 비싸기 이를 데 없다. 북한에는 오래전부터 개를 구경하기가 힘들게 되어있다. 워낙 고기류의 부족으로 영양부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개를 그냥 두어 두지 않고 잡아먹고야 만다. 아마도 개 한마리가 이북돈으로 40원~50원이나 한다면 가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군직원 주사급의 월급이 39원)그러나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도 살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워낙 먹이가 없어 개를 기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먹고 남는 것이 있어야 개도 기르고 닭도 기를 수 있다.

「풀과 고기와 바꾸라」는 축산정책은 이러한 곤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 김일성 일당이 창안해낸 구호였다. 그 의미는 풀만 먹는 가축을 길러 그 고기를 먹

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토끼같은 가축을 기르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의하여 여러 직장과 학교에서는 아카시아 나뭇잎이 돌아나기 전부터 토끼집을 만들어 토끼를 기를 준비에 분망했다. 강제시내 서산인민학교에서도 각학년 별로 전아동들이 동원되었다. 수업이 끝나면 각반별로 지정된 장소에 토끼집을 짓기 위해 뒷산에서 흙을 날라다 벚짚을 섞어 자기들의 머리카기만큼씩 뭉쳐서 쌓는다. 각 반별로 흙을 파는 곳이 물론 다르다. 이러한 작업이 3~4일 계속되어 거의 끝나게 될 무렵이다. 4학년반 꼬마들이 흙을 파던 구멍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이 틈에 흙파리 들어갔던 두 꼬마가 그만 생매장이 되어 버렸다. 빨리 손을 썼으면 또 살릴 수 있었을 는지도 몰랐다. 소위 선생님들은 이 흙파는 장소에 한명도 없었고 토끼 집을 빨리 만들겠다는 욕심에 토끼집을 짓는 현장에 몰려 있었다. 허둥대는 어린이들의 연락을 받고 달려가 묻힌 아이들을 파냈을 때는 이미 둘다 숨져 있었다. 묻혔대야 그리 깊이 묻힌 것은 아니었다. 현장에 감독선생님만 있었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요는 너무나 작업량의 경쟁의식에만 정신이 집중되어 아동들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해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데 그원인이 있는 것이다. 결국 토끼집을 지어 토끼를 키우고 키운다음 그동안의 풀과 고기를 바꾸어 먹기도 전에 토끼가 먼저 사람을 잡은 셈이었다.

이러한 참변이 벌어진 후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강제 시당위원회에서는 자칫 잘못하다간 이 사건으로 풀과 고기를 바꾸는 사업에 지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김일성의 지시를 충실히 실천할 뿐 아니라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계속 인민학교아동들을 이 사업에 동원하여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재회를 계속 강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된 학부형들과 아동들의 작업공포증을 먼저 해소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1주일이 지난후 강제 시내에 있는 교사 약 5백명이 서산인민학교 운동장에 집합되었다. 그리고 공개재판이 진행되었다. 참사가 난 4학년 담임 여교사만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으며 다른 반 선생님들은 물론 교장까지도 참관인석에 앉아 있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법률에 의해 진행되는 정상적인 재판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더욱 공개재판에 이르면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이 공개재판이란 의례 공산주의자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욕망을 더욱 강력하게 밀고 나가려고 할때 민중들을 그들이 목적인 방향으로 채찍질 하는데 쓰여지는 하

나의 정치적 연극인 것이다.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인민학교(국민학교를 북한에서는 이렇게 부른다)에서 교장의 총지휘 아래 학교 전체가 동원되어 진행하던 작업중에 아동들이 사고를 일으켰다면 담임선생과 함께 교장선생도 동일하게 도의적으로 형사적 책임으로 문책당하게 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와같이 이 학교의 교장은 어찌된 일인지 참관인속에 끼여 마치 다른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의 재판을 구경하듯 시원한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 재판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는 이미 짐작이 가는 것이다.

5백명의 시선을 한몸에 집중시키고 있는 처녀의 몸인 여교사는 창백한 얼굴을 치마속에 파묻듯이 숙이고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판사의 심문이 계속되는 동안도 여교사는 고개를 떨군채 서서 모두 체념한듯 말을 하지 않았다. 판사는 피고가 시인할 하든 안하든 개의함이 없이 그대로 심문을 종결지었다. 이윽고 검사가 일어서서 목소리로 논고를 시작했다. 장황스러운 검사의 논고요지를 들어보면 이 여교사는 「풀과 고기를 바꾸라」고 한 기일성의 축산정책에 대해 처음부터 불만을 품어오다가 학교에서 토끼를 기르기 위해 토끼집을 짓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당의 정책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흙파는 토굴을 무너지게 만들어 아동들을 희생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논고를 듣고 있던 여교사는 계획적으로 아동들을 죽였다는 대목에 이르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채 억울함에 못이겨 엉엉 통곡하듯 울었다. 이 애절한 울음 소리에 장내는 일시에 숙연해지고 동료 교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떨구고 더이상 이 딱한 사정을 볼 수 없다는 듯이 외면하고 말았다. 판사도 민망한듯 잠시 착잡한 표정이 감도는듯 보였으나 그는 즉시 당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깨달은 듯 다시 얼음장같이 차거운 태도로 되돌아가 징역 10년에 노동교화소(勞動敎化所)복역을 언도했다.

노동교화소에서의 복역이란 강제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뜻한다. 이같이 재판이란 이름의 탈을 쓴 정치적 연극이 목적하고 있었던 것은 작업중에 매몰사고로 죽은 아동들이 여교사의 계획적인 살인 행위에 의한 것이며 토끼집을 짓는다는 그 작업자체는 절대로 인민학교 아동들에게 부담이 크거나 위험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의 진상이 이러쿵 저러쿵 하며 순리를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교장도 문책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토끼집을 짓는 작업이 아동들에게 도대체 무리한 일

이 아니었는가 하는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다간 토기를 길러야 한다고 지시한 당이 이 책임을 져야하고 결국은 인민학교에 대하여는 그들의 축산정책을 포기하여야만 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만일 이러한 정당한 논법이 그대로 성립된다면 처음부터 공산주의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여교사 하나 째 징역을 보내 희생되던 말진 인민학교 아동들에게 계속 토기를 키우도록 하여 「풀과 고기를 바꾸라」는 당의 정책을 밀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은 태평할 수 있었고 여교사는 그들의 정치음모의 제물로 희생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래도 지식 수준이 높다고 할 교원들이 그들의 속셈을 모를리 없다. 교원들의 무거운 가슴속엔 여교사에 대한 동정이 가슴을 메우고 있었다. 단지 말로서 표현할 용기가 없을 뿐이었다.

이 「풀과 고기를 바꾸자」는 궁한 끝에 생각해낸 축산정책에 의해 또 하나의 엉뚱한 사건이 일어나 중앙당을 당황하게 했다.

강원도 김화군 근로농업협동농장관리위원장인 김모씨는 이 축산정책을 색다른 방향으로 실천함으로써 출세의 기회를 터 보겠다는 야심을 품게 되었다. 그의 기발한 생각이란 다름아니라 협동조합에 있는 소들을 별로 일이 많지 않은 7·8월 두달 동안 풀만 먹여 길러 사람도 얻어 먹기 힘든 아까운 콩을 아껴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도 식량이 부족해 굶고 있는 북한에서 소에게 주는 콩의 양이라는 것은 소가 죽지 않고 근근히 일할 수 있는 최소의 양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영양실조가 되어 있는 소의 형편을 공산당 우두머리 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들에게 영양을 보충시켜 주기 위해 언제나 제철만 되면 개구리와 뱀을 소에게 잡아 먹이라고 시끄럽게 외치는 것이다. 그렇지만 관리위원장 김씨의 생각으로는 소를 산에서 방목하면 스스로 풀도 뜯어 먹겠거니와 뱀도 잡아 먹게 될터이니 사람이 일 손도 덜어주고 콩도 아끼고 소는 소대로 편할 것이니 여러가지로 덕을 보게 되는 묘책이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는 자기 책임하에 있는 여덟마리의 소중에서 세 마리만을 농장에 놓아두고 다섯마리는 물고 읍에서 30리 떨어져 있는 당현리(堂峴里)의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당현리의 협동농장 사람에게 책임을 지고 보아 달라고 부탁했다. 7월 한달이 지나고 8월에 들어 쉴 때 돌던 소들이 병들었다는 전갈이 당현리에서 왔다. 갑작놀란 그는 어쩔 일인가 하고 허둥지둥 달려갔다. 그는 놀라움에 눈이 둥글해질 수 밖에 없었다. 자기가 생각했던 바와는 정반대

로 하나같이 피골이 상접하여 병든채 누워 있었다. 책임을 맡겼던 마을의 농장 직원에게 어찌된 일이나고 불이나게 캐어 물었으나 그는 지시대로 매일 아침 소를 산에다 풀어 주고 저녁에는 물고 돌아오는 일을 틀림 없이 계속 했다는 것이다. 김화군 근로 농업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김씨는 외양간 앞에 턱쉬 주저앉아 꺼지는듯 한숨을 쉬면서 뒷산을 쳐다 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뒷산에는 풀이 하나도 없었다. 그가 처음 이곳에 찾아 왔을 때에는 틀림없이 산에는 풀이 무성해 있었다. 그렇게 많던 풀을 다 먹어 버렸으면 저런 물골이 될 리가 없다. 그러나 그는 다음 순간 앓차 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외양간 뒤에 잘라 싸놓은 풀더미를 본 것이다. 그가 7월 초(初)에 이곳에 왔을 때 본 그 무성하던 풀들은 소들이 먹어 치워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동리 사람들이 그들에게 할당된 퇴비용 풀을 모우기 위해 몽땅 잘라가 버린 것이다. 그는 실망 끝에 현기증이 나는듯 했으나 이제 우리가 지나간 일이며 빨리 뒷처리를 해야 겠다고 일어섰다. 그는 소들을 일으켜 세워 당장에 끌고 가려고 했으나 그들은 마치 파업(罷業)이나 하는 것 처럼 통 일어서려고 들지를 않았다. 원래 영양부족에 걸려있던 소들에게 낮에는 풀을 먹어도 저녁에는 배급된 제양대로 여물을 끓여 주어도 몸이 지탱될까 말까 할 정도였는데 개구리나 뱀은 커녕 꼬박 한달 이상을 풀도 제대로 못먹었으니 굶어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씨는 밤 늦도록 30리 길을 정신없이 되돌아 왔다. 그는 돌아 오는 길에서도 줄곧 시름시름하고 있는 두놈이 숨지거나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머리에 짝 차 있었다. 만일 그놈들이 그곳에서 죽고 말면 처벌을 피할 방도가 전혀 없게 된다. 농장에 도착한 그는 피곤하기 이룰데 없었지만 쉬지도 못하고 농장에 남겨 두었던 세마리의 소에다 달구지를 매우고 아껴두었던 얼마간의 콩을 실고는 다시 당현리로 향했다. 새벽에 당현리에 도착한 그는 우선 콩을 섞어 여물을 끓였다. 그리고는 정성껏 소들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워낙 중태에 빠져있는 두놈은 별로 먹지도 못하고 헛떡 거리기만 했다. 나머지 세놈은 그런대로 오후에는 좀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그는 동리사람 십여명을 동원해 끌고간 세대의 달구지에 우선 중태에 빠져 있는 두놈과 또 한 마리를 실고 자기가 관리하는 협동농장으로 돌아 왔다. 그리고 나머지 두놈도 그 이튿날 같은 방법으로 신주 모시듯 달구지로 모셔왔다. 다섯마리 모두가 살이찌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한달 반전의 꿈은 산산히 부숩히고 소를 달구지에 실고 와야 된 그의 처량한 모습은 말이

아니었음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일이 무사히 끝날 수는 없었다.

돌아온지 이틀만에 중태에 있던 두놈이 그만 죽고 말았다. 그는 적당히 병사했다고 꾸며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평소부터 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농장원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즉시로 이 사실은 도당에 고발 하였으며 도당에서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도당은 사실을 시인하자 그를 출당(出堂), 철직(撤職)의 처분을 내리고 노동자로 내려버렸다. 도당의 이러한 보고를 받은 중앙당은 하도 사건이 엉뚱한데 놀라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여서는 안 되겠다고 각도당에 긴급 지시를 하달하고는 소에게 뱀과 개구리를 더 많이 잡아먹이라고 호통을 치게 되었다.

8. 붉은 편지

1958년 9월 중순에 「붉은 편지」라는 것이 지시문 형식으로 중앙당으로부터 자급 당단체를 통해 모든 당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 편지내용이 심상치 않은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그 편지의 특이한 명칭을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하나나 다를가 소위 기술 「인텔리」(고등교육을 받은 기술자를 가리키는 말)들에 대하여 모두 자기비판을 시키고 심사하여 성분을 개조하라는 명령이었다.

김일성 일당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제1차 5개년 계획 1957년부터 시작한 것을 단축시켜 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있어 가장 큰 압적인 존재가 기술자들과라고 단정했다. 「노동자들이란 그들의 단축계획대로 체계적으로 몰아 세워서도 부족시킬 수 있는 기계적 존재에 불과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술자란 도대체 말이 많다. 계획을 단축시키려면 지시한 대로 단축시키면 될 것이지 알아 듣기도 힘든 기술적인 문제를 들고 나와 어찌구 저찌구 반대를 일삼는 것이 일수다. 그것뿐이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 까지도 그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기술적 풀이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마치 무슨 신비주의(神秘主義)에 노동자들이 말려드는 것 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 일당은 이러한 기술자들의 신비주의를 노동자들 앞에서 하루 빨리

타파해 버리지 않는다면 노동자들 까지도 그들의 무리한 계획을 알아차리고 반대의 깃발을 들고 나설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일성이 내린 「붉은 편지」의 내용에서 모든 직장의 기술자들을 노동자 앞에 내세워 그들은 5개년계획을 단축시킬 수 있음에도 고의로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 반대해 왔다는 자백을 시키도록하여 그들의 권위와 신비주의를 타파해 버리고 노동자들에게 신념을 주는 동시에 기술자들의 성분을 개조시키는 방도를 취하라고 세부적인 지시까지 포함했다.

공산주의자들은 본래 「인텔리」를 두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즉 「낡은 인텔리」와 「새로운 형의 인텔리」란 것이다.

「낡은 인텔리」란 것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 다른 정치형태의 나라에서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일이 있는 사람이면 그의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이 「낡은 인텔리」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아무리 노동자 출신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일본에서 중등교육을 받고 그의 부모를 따라 북송되어온 재일교포의 자녀들은 이미 「낡은 인텔리」인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세계와 다른 사회조직 속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공산주의 사회와 다른 정치형태의 사회를 비교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때문에 순수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그가 옛 추억을 더듬어 어린시절의 생활을 그리워 할런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성분을 가린다는 일은 이와 같이 철저하고 뿌리깊은 작업의 하나다. 또한 한번 그들이 구분한 성분 「카드」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며 일생동안 그를 괴롭히는 것이다.

김일성 일당이 말하는 「새로운 인텔리」에는 그들 나름의 조건이 많이 붙는다. 첫째로 그는 순수한 육체노동자(肉體勞動者)나 소작농(小作農)집안 출신의 자식이 아니면 안된다. 아무리 일제시대 부터 공산주의 지하운동(地下運動)에 종사해 왔고 또한 북한에서 계속 김일성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가 고향(苦學)을 했건 또는 집에서 학비를 받아 공부를 했건 일제하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자의 자식은 이 부류에 속하지 못한다. 둘째로 그는 북한에서 김일성이 정권을 잡은 후에 인민학교를 거쳐 그들이 제정한 고등교육과정을 거쳐 나온 자라야 한다. 세째는 그의 모든 생활이 김일성이 지시하는 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공산주의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김일성의 정책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요구하는 「인텔리」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형의 인텔리」중에서도 특히 기술 「인텔리」들이란 이제야 겨우 배출되기 시작하는데 불과하며 그 숫자 또한 손 꼽을 정도에 지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일당은 「새로운 형의 인텔리」들이 요구되는 수량만큼 성장되는 시기까지의 공백기를 배우는 동안 「낡은 인텔리」들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이러한 「낡은 인텔리」들이란 일제시대에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 대부분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5개년계획을 단축시키는데 있어서 눈의 가시처럼 생각된 「낡은 인텔리」들을 죽쳐 버리겠다는 결심을 「붉은 편지」속에 담아 전당에 엄중 지시한 김일성은 그 다음 본보기를 보이는데 지방당원들을 놀라게 했다. 즉 그는 아오지(阿吾地)탄광에서 굴진공(掘進工)으로 일하면서 노력영웅(勞力英雄)이란 칭호를 받은 바 있는 김적현이란 무식한 노동자를 일약(一躍) 석탄공업성 부상(차관)급에 임명한 것이 었다. 이쯤되면 이 「붉은 편지」에 대한 그의 결의가 얼마만한 것인가는 당원이라면 누구도 느끼고 남음이 있었다.

강계시 건설 「트러스트」(건설조합)의 기사장(技士長)인 김씨(金氏)는 일제시대 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한 후 줄곧 50명생을 건설사업에 바쳐온 노장이었다. 그런데 이 김 기사장은 얼마전 노동자 몇 사람이 그들의 건축 경험을 토대로 전혀 철근을 쓰지 않고 순전히 「시멘트」만을 가지고 날개식 지붕을 가진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주장을 거부한 일이 있었다. 김기사장의 이론은 위험성과 항구성(恒久性)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건설 「트러스트」의 당조직(黨組織)에 호소했다. 이들의 말을 들은 당간부들의 귀는 솔깃 해졌다. 왜냐하면 이 설계가 성공되기만 한다면 철근이 절약된다. 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에서도 처음일런지도 모르는 이 건축방식은 김일성 원수의 칭찬을 받을런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출세는 결정적인 것이다.

결국 당 간부들은 김 기사장의 반대도 물리치고 당의 결정사항으로 밀고 나갔다. 그들은 곧 공사에 착수하여 시험주택 한 채를 세웠다. 이와 같이 세운 집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이상이 생긴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지 세운 직후부터 이상이 있을리는 만무한 것이다. 요는 철근을 안쓰고 「시멘트」만으로 새의 날개 모양으로 지붕을 씌워 그냥 굳혀버린 것이니 최소한 한해 겨울은 지나보고 지붕에 금이 간다면 다른 결함이 생기지 않는가를 검토하

지 않으면 안된다. 50년을 보장한다고 세운 집이 만일 일년이나 삼년도 못가 결합이 생긴다면 결국 그 설계나 계획은 채택할 수 없는 것임에 틀림없다.

1957년의 붉은 이 말썽이 붉은 날개식 지붕을 가진 주택의 첫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만일 김 기사장의 의견이 옳았다면 무리로 감행한 당조직의 간부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기술분야에 있어 기사장의 이론을 따를 수 없는 간부들은 공명심에서 우선 집을 지어 놓기는 했으나 내년 붉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섭도록 싫은 일이 었다. 이와같이 당 간부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 마치 구원의 손길이 내리는 것처럼 「붉은 편지」가 온 것이다. 더 이상 어떠한 고민도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그 날밤으로 김 기사장을 초급당 위원회(初級黨委員會)의 비판대에 올려 세웠다. 김 기사장은 「자기는 일제하에 보수주의(保守主義)가정에서 태어나 일제시대에 식민지 교육을 받은 자로서 그간 당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고 억지로 자기비판을 나열했다. 그러나 당간부들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기사장으로서는 그 이상의 말을 보태서라도 자기비판을 해보려고 애썼지만 적당한 생각이 안났다. 참다 못해 일어난 당위원장은 「내가 고발하오, 동무는 신비주의자요 독선주의자란 말이요, 마치 자기의 기술을 무슨 신비스러운 무기처럼 휘둘러 내며 노동자들을 현혹시켰단 말이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창의성(創意性)을 무시한 독선주의자란 말이요, 그래도 동무가 사회주의 건설에 범한 죄를 모른단 말이요」.

김 기사장은 신비주의자란 말에 어리둥절했었으나 곧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었고, 사건이 단순치 않음도 직감 할 수 있었다. 도대체 이때까지 듣지도 못했던 신비주의자란 용어가 자기의 머리위에 씌워졌으나 이런 일은 한 개 전설「트러스트」의 당조직에서는 도저히 창조해 낼 수 없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김 기사장은 자기 비판회에서 호된 집중공격의 화살을 받은 후 출당, 강직(降職)의 처벌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길로 그의 성분을 개조하기 위해 만포제재공장(滿浦製材工場)의 노동자로 강제노동을 받기 위해 출발하자는 지지도 아울러 받았다.

이 김 기사장의 사건은 「붉은 편지」가 자강도내에 도착한 후 제일 첫번째로 강행된 기술「인텔리」 숙청사업의 신호탄(信號彈)과 같은 것이 었다.

이 「붉은 편지」가 하달된 후 북한에서 모든 직장에 널리 퍼져 일하던 기술

자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봉변을 당했다. 또한 이 봉변은 기술「인텔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지목(指目)을 당했던 모든 「인텔리」에 파급되었다.

그 환예로서 자강도 방송위원회 기자로 근무하던 박성일씨는 일제배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 하나때문에 「노동계급사상이 부족하니 자진해서 도내의 전천탄광으로 가 노동에 종사함으로써 성분을 개조하라」는 당의 지시를 받고 부득불 노동장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바로 이 「붉은 편지」사건 때 북한 주민이면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평양방송국 1급「아나운서」인 이상벽이도 지주(地主)성분이 있다고 지적되어 「아오지」탄광으로 추방되어 노동에 종사했다. 그러나 이상벽은 워낙 유창한 아나운서였고 그의 역할을 대신 할만한 인물이 없었던 탓으로 6개월후 다시 평양으로 송환되는 행운을 맞이했다.

이러한 이상벽과 같은 예는 극히 드문 일이 있으며 거의 모두가 박성일이나 김 기사장 처럼 그대로 완전히 노동자로 강직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이때 기술자란 호칭을 받고 있던 사람의 70퍼센트가 희생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근무하던 「인텔리」들 중에서도 일제배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비로 쓸듯 숙청당하였다.

이 「붉은 편지」소동은 김일성이가 숙청사업의 효과를 백「프로」올리기 위해 한토막의 연극으로 일개의 탄광 노동자를 석탄공업성 부상으로 발탁 기용(拔擢起用)했던 김지현을 다시 「아오지」탄광으로 돌려 보냈을 때 비로소 비극의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

9. 번덕스러운 작물재배(作物栽培)

북한은 대부분이 산악지대임으로 밭이 압도적 면적을 점하고 있으며 벼를 심을 수 있는 논이란 극히 적다. 어테서나 그렇듯이 산악지대의 주민들에게 밭곡식이 식생활의 주곡물이 되는 것은 매 한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밭들은 같은 동리에서라도 산밭에 있는 밭과 산중턱에 놓여 있는 밭이 온도의 차이로 작기 구분되어 경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앙으로부터 하달된 영농정책에 의하면 함북도, 평북도 같은 산악지대는 옥

수수를 심으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함북도 내의 모든 농촌에서는 중앙당에서 하달된 「옥수수는 반곡식의 왕이다」라는 구호가 도처에 나부끼게 되었다.

즉 지형에 따라 작물을 심는 것 보다는 당지시대로 무조건 옥수수를 심으라는 것이 었다.

함북도의 여름은 짧다. 9월 중순에 들어서면 벌써 철 이른 서리가 내려 농부들의 가슴을 조일 때가 많다. 특히 금년은 이 서리가 빨리 내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만 며칠이라도 늦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곡물의 수확에 커다란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평지에는 옥수수를 심고 높은지대에는 감자를 심는 재래식의 평범한 파종을 했더라면 이해의 가을처럼 일기변화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기변화에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있던 사람들은 농민이나 도당(道黨)의 간부들만이 아니오 중앙당의 간부들도 매 한가지 었다.

그들은 옥수수에 욕심이 생겨 처음으로 산악지대의 전 경작지에다 옥수수를 심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이의 성공 여부에 초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9월 중순 어느날 중앙당에서 오는 긴급전화벨이 울렸다. 오늘 밤 함북도 내의 일부산악 지방에 서리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대의 예보가 있으니 시급히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였다.

즉시 도당에서는 간부회의가 소집되고 소위 서리로 인한 냉해(冷害)를 방지해야겠다는 대책을 연구했으나 묘한수가 나오지 않았다. 하늘에다 천막을 칠 수도 없는 일이니 어떠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현지사정에 알맞는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으니 우선 현지에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자는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말하자면 중앙당의 지시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일이 었다.

이와 같은 연락을 받은 현지의 농업협동조합에서는 일단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모른체 하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었다.

어떤 곳에서는 밭에다 기둥을 꽂고 새끼줄을 치고 그 위에다 동원할 수 있는 대로 홑이불, 천같은 것을 전부 동원하여 자라는데 까지 걸쳐놓고 밤을 세웠다. 그야말로 천막을 칠려고 덤벼든 것이 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장작이나 나무들을 굵어 모아 밭 둘레에다 쌓아놓고 밤새 불을 피워냈다.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해서 대자연의 위력이 막아 질리는 없다. 그러나 말단

농부들이 빨리 알면서도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다. 만약 어쩔 수 없다고 수수방관(袖手傍觀)만 하는데 다른 한 곳에서라도 이런 수선을 피워 옥수수의 한쪽이라도 보호했다는 일이 생기면 큰일이 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같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해나갈 수 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다.

첫 서리를 계기로 서리는 계속해서 내렸고 더이상 어리석은 광태(狂態)를 지속할 수가 없었다. 결국 만사는 엉망으로 끝난 셈이었다. 높은 지대의 옥수수는 여물기도 전에 서리에 녹아나 모두 가축의 사료로 변화시킬 수 밖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간신히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낮은 지대에 심은 것 뿐이었다. 이 무모한 중앙당의 영농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함북도의 곡물 수확고는 목표량에서 2만 톤이나 미달되는 한심스러운 사태에 놓이게 되었다.

양강도(兩江道)도 물론 함북도와 같은 운명이 었다. 이로 말미암아 중앙당 내부에서는 영농정책의 실패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고 숙청이 뒤따랐지만 이런 것으로 농민의 피해가 보상될리는 없는 것이다.

함북도만 해도 60년도에 소요되는 양곡의 절대량(絕對量)에서 부족되는 최소한 1만5천톤의 양곡을 중앙으로 부터 대여(貸與) 받지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이 대여 받은 양곡은 농민들이 다시 중앙에 상환(償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60년도에는 계획량을 초과 달성하여 여분을 내어 꾸어먹은 양곡을 갚아야 한다. 농민들의 부담이 이만 저만이 아닌 것이다. 농민들이 심을 곡물의 파종까지 일일이 지시한 사람은 따로 있었지만 그 결과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은 지시한 사람이 아닌 바로 죄없는 농민이 된다. 마치 춤은 곰이 추고 돈은 누가 받는다는 속담이상으로 우수광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그렇다고 농민들은 조그만 불평이라도 할 권한이 없다.

60년도도 마찬가지였거니와 61년도 또 그다음 해도 그저 중앙당이 지시하는 대로 파종에 순응해야 할 뿐인 것이다. 그러나 이해의 비참한 실패로 중앙당도 할 수 없이 그들의 주장을 꺾어야 했다. 즉 「옥수수는 밭곡식의 왕이다」가 아니라 「밭 곡식의 왕은 감자다」로 변경된 것이다. 각 농업협동조합 구석구석에 붙어있던 「옥수수는 밭곡식의 왕이다」란 구호는 삼시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농민들로서는 보기만 하여도 이맛살이 찌프러지는 구호였기에 더욱 빨리 자취를 감추게 되었을는지 모른다.

밭 곡식의 왕이 옥수수에서 감자로 바뀐 것 외에도 곡물재배정책(穀物栽培政策)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다.

1958년 7월 초순 자강도의 65호 공장을 시찰하기 위해 김일성 일행은 신의주에서 압록강 연변(沿邊)을 타고 위원(渭源)으로 자강도에 들어섰다. 위원군부터 자강도에 속하므로 자강도당 위원장, 인민위원회 위원장등을 비롯하여 위원군당 위원장등 자강도의 모든 고위층이 총동원되어 김일성 일행을 맞이했다.

위원읍에 도착했을 때 김일성은 돌연 그의 차를 세우고 위원은 옛날부터 모밀이 유명한 곳인데 모밀 국수나 먹고 가겠다고 나섰다.

김일성은 무척이나 냉면을 좋아한다. 그러나 이렇게 줄지에 냉면을 먹겠다고 할 줄은 누구도 예기하지 못했다. 우선 그를 군당 위원장 사무실로 안내해 놓고 난 다음 도당과 군당 위원장은 죽을상이 되었다. 과연 모밀을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하여간 군당직원을 사방으로 풀어 구해 볼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모밀이란 다수확작물(多收穫作物)이 아니라고 중앙당이 그 재배를 금지시킨지 오래였다. 그러나 워낙 모밀국수를 좋아했고 또한 식량 배급도 충분하지 못하므로 농부들은 집울타리 부근에다 조금씩 심어 먹곤했다. 급작스럽게 집을 뒤흔듯이 찾아다니며 구한다고 해도 농민들이 선뜻 내놓을가 하는 것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직원들을 내 보내놓고 서도 안절부절하던 군당위원장은 도저히 앉아 있을수가 없어 자기도 차를 몰고 농장으로 달렸다. 거의 한 시간을 헤멘 끝에 겨우 두되를 구했다. 그래서 달려와 국수를 눌러 부랴 부랴 냉면을 만들었으나 20명이 넘는 수행원들 까지 돌아 갈 양이 되지 못했다. 또한 김일성은 대식가(大食家)로 냉면이라면 곱배기로 서너그릇쯤 보통 먹어 치운다.

하는 수 없이 김일성과 경공업상(輕工業相) 문만옥, 전기상(電氣相) 김두삼 그리고 경호책임자에게만 냉면을 대접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밥을 줄 수 밖에 없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김일성은 왜 냉면을 좋아 할텐데 밥들을 먹느냐고 도당 위원장한테 물었다. 할 수 없이 도당위원장은 모밀 재배가 금지된지 이미 오래된다고 사실을 설명했다. 김일성은 또다시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냉면을 먹어야지 좀 심도록 합시다」

간단한 한마디를 남겼다. 수확이 적다는데서 재배를 금지시켰던 배밀재배를 전체협동농장에 유희지(遊休地)를 이용하여 모밀을 약간씩 심게 하였다.

오늘날 평양시민들이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냉면 맛을 볼 수 있게 된것은 위원군의 냉면사건 덕택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처럼 독재자의 횡포와 선심(善心)이란 주었다 뺏었다 하는 농간을 자기 편의대로 떡먹듯이 하는 것이다.

10. 인민재판

1958년 말부터 1960년까지의 기간에 북한에서는 「중앙당집중지도」라는 명목으로 소위 반동분자의 대숙청 작업이 전개되었다. 먼저 평양시민으로부터 시작하여 황해도 개성시 강원도등 전지역에 걸쳐 진행되었다. 평양시에 동원된 「지도성원」만도 약 7,000명이나 되었다. 평양시의 모든 동마다 50~60명 이상이나 지도성원이 배당되었다. 이러한 「집중지도」에서 소위 반동분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개적인 인민재판을 수없이 벌였는데 그당시 실시된 인민재판의 광경은 그야말로 잔인하고 비참했다.

평양시와 개성시에서 있었던 공개재판의 실례를 몇가지 들어보기로 하겠다.

1959년 4월 20일 하오 한시를 기해 평양시 간북동에 있는 뒷산에서 공개투쟁(公開鬪爭)이 있으니 자동의 지도성원들은 가능한한 많은 인원을 동원하라는 지역성원으로부터 연락이 내렸다. 그때까지의 조사시간을 통해 거의 평양시민들의 성분을 가려낸 터이라 이제부터 공개적인 협박을 통해 집중지도사업을 고도화시키자는 데 공개투쟁의 목적이 있었다. 또한 군중을 동원하라는 지시 속에는 특히 성분이 나쁘다고 인정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가하도록 권유하고 참가하는가 안하는가에 대해 예의 감시하라는 조항이 덧붙여져 있었다.

20일 오후 12시가 넘자 평양 시가는 통행인의 수가 부쩍 늘었다. 모두가 한 곳으로 향하는 걸음이었으며 간북동 입구는 일대 혼잡을 이루었다. 삼시간에 간북동 뒷산은 인파로 뒤덮였다.

10여만은 족히 넘는 인원이 었다. 이렇게 모인 이 군중의 성분은 간단히 두 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 평양시민 전체가 단 두 부류로 구분되는 것과 같은것이다. 즉 이들 군중 속에는 공산당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핵심분자와 다른편은 반혁명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적대 분자로 낙인찍힌 불순분자라는 것이다.

간북동 뒷산을 뒤덮은 군중은 너무나도 말없고 조용하기만 했다. 이러한 유

구무언(有口無言)의 현상은 북한 사회의 어떤 모임이든지 공통된 현상이다. 그들이 입을 열 때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이미 수십번에 달하는 집회에서 경험해 온 것이기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누구나 또한 언제나 서로 서로 감시되어 살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 몸에 배여있기 때문이다.

이 10여만의 군중 속에는 집중지도 구루빠들이 섞여 있었는가 하면 당에서 동원되어 온 자도 끼여 있었다. 공개투쟁을 하는 동안 자기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안색과 말과 동태와 투쟁의 열성도를 일일이 감시한다. 불순분자가 있으면 즉시 적발하는 것은 물론 공개투쟁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협박조로 동원된 불순분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이러한 감시 속에 그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것이지만 불의불식간에 실수를 범해 불행한 결과를 일으키는 일이 간혹 생기곤 했다.

평양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산중턱엔 송판(松板)으로 지어진 임시무대가 있었고 그 뒷편에는 역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겠끔 세계의 말뚝이 서 있었다.

보나마나 너무도 뻔한 일이 생길 것을 짐작하게 했다. 이윽고 군중속에 섞여 있던 당의 선동분자에 의해 구호 소리가 일어난다.

「반혁명분자를 적발하라!」

「숙청하라!」

「죽여라!」

「김일성 수상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

언제나 부르짖는 똑같은 구호가 되풀이 되었다.

이와같이 광적인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자 4명의 사나이가 단 위로 올라섰다. 그러자 박수와 환호 소리가 군중으로부터 일어났다. 이들 4명이란 재판관과 검사였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 임시재판소 앞에 있던 트럭에서 4명의 죄수가 결박된 채로 나와 판사 앞에 섰다. 군중들은 일시에 물을 끼얹은듯 조용해졌다. 4명의 죄수들이란 60이 넘어 보이는 환상의 노부부(老夫婦)와 역시 부부로 보이는 30대의 남녀였다.

판사가 일어나 개회 선언을 했다. 다시 한번 장내는 박수 소리가 일어났다. 검사가 일어나서 논고를 시작하자 다시금 조용해졌다.

먼저 주범인듯한 중년 남자에 대한 논고가 시작됐다. 논고의 요지를 보면 이 젊은 남자는 1950년 인민군이 후퇴할 당시 인민군에서 도망하여 집에 은신

하고 있다가 국군과 유엔군이 진주해 오자 부락에서 치안대를 조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대장에 취임하였고 부락에 숨어있던 공산당원 4명을 처단했으며 국군이 물러간 후로는 부락에서 도망쳐서 평양에 있는 부모 집에 토굴을 파고 이때까지 숨어 있다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그의 부친으로 밝혀진 노인에 대한 논고가 계속되었다. 노인은 해방전에 지주로 있다가 토지개혁때 농토를 빼앗겨 북조선에 대해 언제나 불만을 품어 왔으며 자식놈이 치안대장을 하였고 공산당원을 처단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손으로 직접 지하실을 파 숨겨 두었을 뿐 아니라 외부와의 연락을 해주었으며 신고할 의사는 추호도 없었고, 도리어 국군과 유엔군이 반드시 복진해 아들을 구출해 줄 것이라고 믿고 9년이란 세월을 보낸 자라는 것이다.

주범의 어머니인 노파에게도 마찬가지로 죄목이 나열되었다.

끝으로 주범인 젊은이의 부인에 대한 논고가 있었다. 그녀는 숨어있는 남편과 9년간이나 숨기찬 지하실에서 지루하게 부부생활을 계속해 왔으나 더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또한 이번 집중지도 성원들이 자수하면 관대히 처분한다는 선전을 듣고 보니 양심의 가책을 더이상 참을 수 없어 신고만 하면 자기는 물론 남편도 구원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수했다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검사의 논고가 끝났다. 장내는 또다시 「반동분자 죽여라!」하는 고탈소리가 요란스레 울렸으며, 이 고탈이 조용해지자 판사는 일어서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사형을, 어머니에게는 은익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며느리에게는 무죄를 각각 언도했다.

판사의 언도가 끝나자 옆에 대기하고 있던 내무서원이 두자에게 달려들어 수건으로 입을 줄라 맺다.

예전에 이와같이 입을 줄라매는 일이 없었으나 한번 경을 치르고 난후 부터는 공개재판에서 사형에 처해지면 미리 계획된 정치범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게 언도가 있는 직후에 입을 줄라매는 망측하고 잔인한 습관이 생긴 것이다.

왜냐하면 사형에 처해지게 된 정치범이 자주 김일성에게 욕을 퍼붓고 대한민국민세를 부르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부자는 입을 틀어 막힌 채 뒷쪽에 세워진 말뚝으로 끌려가 천으로 눈을 가리킨 채 6명의 내무서원의 총에 맞아 9년간의 고생을 헛되이 아깝게 죽어갔다.

이 공개투쟁은 집중지도가 시작후후 처음으로 거행된 것이며 피를 보여 군중을 공포속에 몰아넣고 자수를 강요하려는 무서운 수단이 었다.

개성시 중앙병원 소아과 의사 이점옥(54세)여인은 진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남편은 6·25시 국군을 따라 남하했다. 즉 월남자 가족이었다. 그러나 이점옥여인이 다른 월남자가족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오랫동안 개성에서 살아온 소아과 의사였다는 점이다. 개성시가 공산당의 수중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파괴되었던 병원을 자기 손으로 고쳐 어린이들의 치료사업에 꾸준히 종사하여 왔다. 그것은 이 여인의 말대로 자기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어느 사회제도하에서건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게을리 할 수 없다는 신념때문이였다. 그러므로 이 여의사에 대한 개성 시민의 신망은 더욱 커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이러한 여의사의 성분과 행동은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적대계급적인 것으로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었다.

집중지도 개성유지전담반(開城有志專擔班)에서는 이점옥 여인을 희생물로 공개투쟁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결정이 내려지자 그녀에게 뒤집어 씌울 구체적인 죄목이 필요하게 되었다. 월남자 가족이라는 것으로 공개투쟁을 붙이자면 개성시민들 중에는 월남자 가족이 너무나 많으므로 공포심과 반항심만을 조장할 뿐 역효과밖에 나올 것이 없다. 또한 기독교 신자라는 죄목도 명분이 서질 않을 뿐더러 국제적으로 공산당의 반종교적 잔악성만을 보여줄 뿐 역효과다. 이 궁리 저 궁리 끝에 드디어 묘책을 연구해 냈다. 그리고는 즉시 개성시당에 지시를 내렸다. 지시 내용이란 당원 중에서 이점옥여인의 병원에서 자녀를 치료하다 죽은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고하라는 것이였다.

그것은 소아과 하면 이점옥 여인을 연상했기 때문에 모든 당원들이 한번 짚은 다 들렸을 것이고 그중에 사고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더우기 변변한 의약품이 없는 북한 실정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조사 결과 개성시 당간부들의 자녀들 중에서 이점옥 여인의 손으로 치료를 받다 죽은 유아가 휴전후부터 헤아려 4~5명 됐다. 이것으로 여의사를 처단할 충분한 자료가 되었다.

이 여인에 대한 가혹한 집중지도는 곧 착수되었다. 이 여인의 예는 개성시 유지 숙청이라는 정책에서 나온 것이였으므로 죄의 여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작한 각본대로만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요는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 대한 집중지도는 처음부터 가혹했다. 이 여인에 대하여 처음부터 가혹하게 취급한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유명인사인만큼 자살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개투쟁이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죽여서는 안된다.

유지전담반이 묶고있는 여관방의 구석에 여의사를 감금시켰고 그리고는 24시간 쉬지 않는 취조와 감시가 행해졌으며 심지어는 대 소변도 방에서 보는 말 할수 없는 제약을 가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견딜 수 없는 모든 고통을 당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오히려 지도성원들에게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설교를 하며 기도드리기만 일삼았다. 공산당이 조작한 독살(毒殺)이라는데 이여인이 굴할리 없었다. 이때까지 취조대상자가 걸리기만 하면 요절이 났었다. 그러나 이 여의사의 경우 오히려 지도성원들이 손을 들 형편이 었다. 그렇다고 포기할 그들이 아니다. 자인하건 말건 공개투쟁에 붙이기로 했다.

7월 하순 드디어 공개투쟁의 막은 올랐다. 개성시 자남산에 가설무대까지 준비했다. 으레히 「적매계급」에 속하는 주민들이 동원되었으며 그들 중에는 군데 군데 당원 및 지도성원들이 끼여 감시의 눈을 번득이고 있었다.

이날 동원된 인원은 약 4만에 달했다. 오후 한시반 열성분자들이 외치는 판에 박은 박수, 구호소리가 떠들석한 가운데 판사와 검사가 등단하자 이여인도 결박을 당한채 단 위에 올랐다. 물론 양쪽에서 내무서원이 이 여인의 팔을 잡고 있었다.

이윽고 검사의 논고가 시작됐다. 이 여인은 어릴때부터 기독교 신자였고 남편은 국군을 따라 월남한 반동가임으로 언제나 김일성수상과 당에 불만을 품어 오던 자이며, 휴전후 의사의 직업을 기화로 개성시 공산당 간부들의 자녀들을 치료해 준다는 미명아래 치료는 커녕 독살시켜 왔다는 이미 작성된 자신의 낭독이 었다.

이 장황스런 논고가 끝나자 판사는 예정된 대로 사형을 언도했다.

죽여라! 타도하라! 열성당원들의 구호가 터진것도 자본중의 하나다.

그러나 이 여의사의 경우 즉석에서 사형은 집행하지 않았다. 그것은 개성시 소위 그들이 말하는 신해방지구(新解放地區)에 해당하는 곳이었으므로 주민들에 피를 보여 지나치게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개성의 경우는 너무 급격한 투쟁은 역효

과라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일도 있었다. 개성시 보선동(옛 德岩里)에 살고있던 진정현(陳正鉉)이라면 개성시민들중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그는 순전히 자기의 힘으로 근면히 일을 하여 돈을 뽐은 농민이였으며, 돈을 벌 후에는 자선사업을 경영하여 존경을 받고있는 사람중의 하나였다.

개성이 북괴 치하에 놓여진후 공산당이 유지들을 포섭하여 이용한다는 이제까지의 제1단계 정책에서 진정현은 특히 우대를 받은 대상인물이였다. 진도할수 없이 이미 대세가 기운지라 공산당에 자진 협력해 왔었다.

초기에 있어 공산당들은 그를 모범농민이라고 추켜세워 군중대회가 있을 적마다 단위의 주석단(主席團)석에 앉혔다. 진정현도 군중들에게 공산당의 시책을 받들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진정현의 자녀들에게는 진학의 길이 열려 장남은 원산농업대학에, 장녀는 송도정치경제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진정현에게도 최후가 오고야 말았다. 이때까지 그를 치켜 이용해 먹었던 만큼 숙청도 합리적이어야 했다. 지도성원들은 5개월 이상을 소비하여 그의 있을 수 있는 조그만 비행과 흠을 들추고 사전을 조작하기에 바빴다. 그가 사는 부락민들을 매일밤 회의라는 명목으로 집합시켜 놓고는 「왜 진정현과 같은 사람은 존경해서는 안되는가?」하는 교양사업도 2~3개월간에 걸쳐 실시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농민들이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비식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했다. 이러한 1단계 공작이 끝나자 이번엔 진정현에 대해 무엇이든지 비행사실을 밀고하라고 한 사람씩 위협을 가했다.

그러는 한편 진정현에 대한 집중지도가 실행됐다. 그에 대한 지도는 간첩이니 비행사실을 자백하라는 것이였다. 물론 진정현이 강력히 부인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는 보다 지능적인 공개투쟁에 붙여졌다.

집중 지도성원들은 그가 살고 있는 부락에서 진정현을 필두로 모든 농민을 동원한 후 반혁명분자색출 군중대회를 개최했다. 지도성원들의 선동연설이 있던 후 자본에 의해 열성분자들의 후속(後續)강연이 있었다.

한참 군중들의 열을 돋우고 구호가 외쳐진 후 진정현과 가까운 사이에 있던 김모라는 농민이 손을 들고 발언을 요구했다. 이 김모라는 자야 말로 지도성원이 사전에 매수하여 교육시킨 자였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는 지시받은 그대로 진정현을 규탄했다.

첫째로, 진정현은 6.25남침전 이승만에게 충성을 다했고, 국군이 송악산에 군사 시설을 할 때 자금을 헌납하여 반동적인 행위를 했으며,

둘째, 휴전후 개성이 북괴의 수중에 있을때도 미계간첩 박현영과 이승업을 집으로 초청 우대하면서 접선했고,

셋째로, 그는 1957년까지도 고용농민들을 두고 노동을 착취하면서 돈을 벌었다.

넷째로, 전 개성시당위원장이었던 유철목(俞哲穆)에게 자기의 장녀를 바쳐 미인계를 써 죄를 은폐하고 신임을 얻었다.

이렇게 네가지에 걸쳐 진정현을 성토하자 「오소! 죽여라!」고 하는 고탐소리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것은 사전에 매수당한 자들과 당원들의 고탐뿐이었으며 대부분의 농민들은 정신없이 풀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개성사람들은 확실히 개성이 강하였다.

그러나 반응이 문제가 아니다. 진정현은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되었고 대기하고 있던 내무서원들이 차에 싣고 사라져 버렸다. 진정현의 일생은 이리하여 끝이 난 것이다.

진정현이 사라지자 그의 모든 재산엔 빨간 딱지가 붙여졌다. 그것은 고용농민에 의한 노동착취의 불미스런 재산이라는 것이었다. 그의 재산을 몰수하는 구실이 되었음은 말할 나위없다.

전 재산을 몰수한 후 학교에 다니던 그의 자녀들을 위시한 가족은 단벌옷에 강제노동장으로 분산 이주됐다.

중앙당 집중지도가 진정현의 숙청시에 전 개성시당위원장 유철목을 끌고 들어간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때만 해도 유는 수산상(水産相)으로 있었다. 그러니 유는 이미 김일성의 눈밖에 났으며 특히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金英柱)와는 더욱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풍문이 있었다.

미인계에 유가 유혹되었다는 보고는 즉시 그를 집중지도로 끌어 들이는 구실이 되었다. 우선 수산상의 지위에서 쫓겨났다. 지도원들은 그에게 개성시당 위원장으로 있을 때 당을 배반한 사실을 모두 자백하라고 강요했다.

개성시의 유지를 우대했던 정책은 물론 김일성의 지시하에 유가 실시했던 고탐 정책이 있었음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 제 1단계 정책이 끝난 지금 유지들만 죽치고 「유」를 가만 둔다는 것은 어색한 점이 있었는 것이다. 과거 유지우대정책은 당의 방침이 아니었으며 유의 개인이 유지들에 말려들어 실시했다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유가 그 정책 실시 과정에서도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견디다 못한 유철목은 자기는 유지들에 말려들어 부패한 생활을 해왔다고 지도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인하고 말았다. 이로서 그도 강제노동장으로 추방되었으며 출당·철지의 처분을 아울러 받았다.

이처럼 유철목은 김일성의 정책을 충실히 받들다가 그 자신조차도 김일성이 파놓은 함정에 말려들어 책임을 대신해서 지고 사라져 가야만 했다.

이점옥 여사와 진정현에 대한 공개투쟁을 계기로 유지들에 대한 숙청사업은 본격화되어 갔다. 무려 20여명이 이러한 유지숙청사업에 걸려 일생을 망치고 말았다.

북괴가 대남공작을 실시하기 위해 무역상사로 가장시켜 놓은 명목만이 무역상사가 개성시에만도 10여개소가 되었다. 이러한 상사들은 북괴 내무성과 인민군경찰국에서 직접 관장하여 공작을 지휘했다. 물물교환이란 형식으로 개풍군과 강화도를 연하는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역을 표면으로 내세우고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 물물교환사업에 개성유지들을 동원하고 있었다.

휴전후부터 유지들을 앞장세워 첩보공작을 계속해오던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이용가치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되자 그들을 모조리 이중간첩이란 죄명을 씌워 집중지도 기간중에 숙청하고 말았다.

이와같이 억울하기 짝이없는 숙청을 당한 개성유지 중에는 조영환(曹榮煥) 김동원(金東元) 제씨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숙청당한 유지들의 가족은 빼놓지 않고 강제노동장이나 산간 벽지로 거주이동을 시켜 버렸다.

11. 무용가의 말로

북한에서 인민배우(人民俳優)라는 것은 김일성이가 내려주는 배우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로운 호칭이다. 이 인민배우의 호칭을 제일먼저 받은 자는 무용가 최승희와 연극배우 황철과 배용 세사람이며, 이들은 준상(準相)(장관에 준하는)대우를 받는다.

무용가 최승희는 인민배우의 지위를 받고 무용가동맹의 위원장과 무용학교 교장등의 높은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그의 남편 안막은 문화선전성 문학·예술담당 부상(副相)의 자리에 있었다. 이 처럼 부부가 모두 높은 지위에

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생활에도 파란은 닥쳐오고야 말았다.

최승희의 남편 안택은 1958년 여름 철에 먼저 간첩혐의자란 죄목으로 그의 직위를 박탈 당하고 구속되었다. 최승희의 권세의 일각(一角)이 이처럼 무너져 나가자 이번에는 무용학교 초급당에서 최승희마저 매장시키겠다고 들고 일어섰다.

초급당위원회는 근 1개월을 끝면서 최승희에 대한 공격을 퍼부어 대고 자기 비판을 강요했다. 최승희에 대한 비판의 종목은 다섯 가지에 걸쳐있었다.

첫째로, 교만하다. 그는 옛날의 낡은 무용가들이 일삼는 선생-제자의 관습을 가지고 학생동무들에게 손톱을 깎으라느니, 목욕을 할 때는 등을 밀라느니 「맛사지」를 시키는등 교만한 태도로 학생들을 대했다.

둘째는, 상스러운 욕설을 항상 사용한다. 학생들의 무용을 지도할 때면 「고르조아」적 신경질을 폭발시켜 '이년 저년'하고 심지어 '개같은 년'이란 욕설을 퍼붓는 야비한 독선적 행동을 취했다.

세째는, 입학시험 때는 수험생들의 성분보고 뽑지 않고 몸매와 용모만을 보고 이쁜 얼굴을 가진 자만을 입학시켰다. 이러한 불공평한 처사로 수험생들을 괴롭혔을 뿐 아니라, 이러한 그녀의 편견(偏見)은 그의 딸 안성희마저 어머니에 대해 반기(反旗)를 들게 한일까지 있었다.

네째, 그는 그의 묘기(妙技)를 자기 딸 안성희에게만 가르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배워주려고도 하지 않는다.

다섯째, 학교 초급당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 최승희는 당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학교 초급당에서 가입하라고 요구하면 그녀는 자기는 중앙당에나 가입하지 학교 초급당에는 가입하지 않겠다는 교만스러운 태도를 취했을 뿐 아니라 초급당의 지시사항도 무시하고 중앙당의 지시만 받겠다고 거절을 해왔다.

이렇게 장황스러운 죄목에 걸쳐 최승희는 혹독한 자기비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철직과 강제노동형이 중앙당에 상신되었다. 그러나 최승희로서 다행이었던 일은 그 당시 복송되었던 재일교포들이 하나같이 최승희가 보고싶다고 찾는 일이었다. 김일성은 아직도 최승희는 더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을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승희에 대한 김일성의 지시는 그녀를 모든 공직에서 철직시키고 노동에 종사시키되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는 것만은 면제시

켜준다는 것이다.

무용학교 초급당은 최승희를 어떠한 방법으로 노동에 종사시키느냐 하는 것을 결정지어야 했다. 강제노동수용소에 보내는 것만은 면제해 주라는 김일성의 지시를 연구한 결과 결국 학교내에서 노동에 종사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학교안에서 노동에 종사시킨다면 제일 천한 노동이란 청소부다. 그중에서도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청소는 변소 청소다.

그들은 학생들의 교실은 물론 학교와 기숙사의 변소라는 변소는 모두 최승희의 청소구역으로 배정시켰다. 그 날부터 최승희는 교장실에서 쫓겨나 청소부실로 옮겨져 비와 쓰레받기를 들고 교실과 변소를 드나드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한편 중앙당 문화선전부에서는 최승희의 숙청을 전당적(全黨的)으로 종결지을 준비를 서둘렀다.

무용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최승희가 길러낸 제자들은 각도 예술단체인 무용가 동맹에서까지 위원장이나 간부의 자리를 거의 모두 차지하고 있었다. 비대한지 최승희의 세력을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중앙당은 자 도당 선전부에서 문화담당 간부들을 소집하여 3일간에 걸쳐 「최승희의 여독(餘毒)을 청산 할 때에 대하여」라는 제하(題下)에 협의회를 열었다.

이 협의회의 요지(要旨)는 이때까지 무용하던 최승희를 연상하는 식의 최승희에 대한 무조건 숭배사상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된 도당 간부들은 복귀(復歸)하자 즉시로 선전부회와의 도당·초급당 회의에서 자세히 최승희 사건의 전말을 보고했다. 보고를 접수한 선전부는 중앙에서 하달된 협의 내용을 토대로 각도의 무용가 동맹을 비롯해 각종 예술단체 간부들을 소집하여 그들에 대한 집중교육을 시작했다. 이 교육을 받는 간부들은 다시 자기 소속의 조직내에서 일반당원들을 상대로 최승희의 여독을 청산하는 회의를 계속했다.

특히 무용가 동맹의 협의회는 최승희의 지도를 받고 자라온 위원장이나 간부들의 자기비판으로 부터 막을 열었다.

그들은 마치 징그러운 썩기벌레라도 자기 몸에 붙은 듯 치를 떨며 최승희의 지도를 받은 자기 자신의 과거에서 최승희의 그림자를 말살하기 위해 악을 쓰고 있었다. 그녀들은 마땅히 당원들을 향해 자기비판을 해야 했지만 감독자 회의 감독차 회의실에 들어서기만 하면 언제나 마치 감독자를 향해 자기 비판

을 하고 있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손을 휘젓고 몸을 비틀며 열을 올렸다.

무용가들의 자기 비판은 불만도 하다고 코침이 흐를 지경이다. 그녀들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만일 「동무는 최승희의 여독이 아직 덜 빠졌오」라고 한마디라도 지적 당하면 끝장을 당하게 될테니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위월장이나 간부의 자리를 호시탐탐이 노리고 있는 만만치 않은 적수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들의 감독자에 대한 태도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태접이라야 쓴 업차 한 잔이지만 감독자가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낼 정도로 굽실거리고 아양을 쏜다.

기회만 있으면 감독자에게로 접근해 보려는 눈치들로 주위가 팍차 있는 기분에 견딜 수가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무용가동맹인란 원래 말썽 많기로 유명하다. 중앙에서도 상급(相=장관급)에 속하는 인물들의 「펜스 파티」를 열면 그들의 파트너들은 으레히 무용가동맹이나 무용학교에서 선발해 간다. 최승희가 무용학교 학생들을 선발 할 때, 무용가적인 소질을 중요시하지 않고 몸매나 얼굴의 생김새에 치중했다는 때에는 그 만한 이유가 있었다. 최승희로서는 김일성에게 계속 사랑을 받고 싶었다. 50줄을 넘으신 자기로서는 더이상 김일성의 애무를 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여자문제에 한해서는 그를 계속 자기의 손아귀에 묶어 두고 싶었던 것이다. 김일성뿐 아니라 상급(相級)의 인간들을 모조리 이런식으로 수중에 넣어 자기의 지위와 권세를 계속 유지 하고 싶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승희는 이자들이 군침을 흘릴만한 예쁜 학생들을 고르려고 애썼다. 무용가로서의 소질따위가 문제될 리 없었다.

최승희의 계획은 들어 맞았다. 자기가 선발한 학교학생들이 상진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다. 「파티」가 열릴 때마다 무용가학교 학생들만이 불려가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최승희는 점찍어 놓은 학생들을 전부 기숙사에 몰아 넣고 일체의 행동은 자기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통제를 가했다. 학생들이 자랑거리로 함부로 지껄여 소문을 퍼뜨릴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기도 했지만, 최승희의 진짜 속셈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학생들을 좋아하는 높은자들과 엄격한 거리를 두어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함부로 접촉할 수 없게끔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자기의 주가를 확보해야 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높은 자들이 자기들의 좋지못한 비밀을 날날이 알고 있는 그녀를 오래도록 남겨 둘리는 만무하다. 최승희와 그의 남편 안막은 바로 이러한 독재자들의 생리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최와 안 두 부처의 예술 생활도 종말이 닥치

고 말았던 것이다.

12. 벌목장(伐木場)의 우공(牛公)들

자강도 화평군의 임업소(林業所)는 북한에서도 손꼽히는 큰 벌목장으로 유명하거나 강직자(降職者)들이 강제노동에 종사하는 곳으로도 이름이 나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 화평군 임업소의 벌목장에서 뉘니 뉘니해도 제일 유명한 것은 빨없는 우공(牛公)들일 것이다.

몇 아름이나 되는 거대한 침엽수(針葉樹)들이 울창하게 들어찬 험준한 산속에서의 벌목작업은 실로 힘든 노동이기도 하거나와 짙은 나무들을 다듬고 하산(下山)시키는 작업 또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옆에서 구경하기에는 실로 장관이라 하겠지만 많은 목숨을 앗아 가는 위험한 작업의 연속이다.

급경사가 된 비탈에서는 “통송(桶送)”이라고 하여 길을 뉘니 눈이 있을 때는 그대로 눈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물을 뿌려 얼려가지고 경사가 완만한 곳까지 이 통로를 타고 나무들이 미끄러져 내려 오게 된다. 수백미터나 되는 이 통로로 나뭇뎠가 요란한 소리와 함께 굴러내려오는 실로 장관이다. 만일 굴러내려오는 나무에 다치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장이 나고 만다. 이렇게 급경사를 타고 굴러 내려진 나무는 다시 묶여 완만한 경사지대를 소들이 운반하게 된다. 완만한 경사라고는 하나 다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단숨에 나무를 굴러 보낼 수 없을 뿐이지 급경사 지대도 많은 것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작업에 복피의 지도자들은 언제나 힘에 겨운 작업량을 할당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임업소의 책임자는 책임자대로 책임량을 완수 또는 초과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공명심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우공들이다.

이렇게 내려진 나무들은 뗏목처럼 묶여지고 우공들의 멍에에 연결된 썰매에 묶여서 줄줄 끌려가게 된다. 이것이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는 소들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경사가 갑자기 심하여 지는 데서 생긴다. 얼마쯤 전진하다 뒤에서 통나무더미의 압력이 증가되면 소는 앞발을 빨리 이 압력에 밀려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된다.

만일 이러한 급경사를 미리 짐작하고 짐의 중량을 조절해 두었다면 소들은

수난(受難)을 당할리 없다. 그러나 힘겨운 목표량의 초과달성이라는 욕망은 이런 것을 아랑곳 하지 않는다. 소는 드디어 힘에 겨워 넘어지고 마는 것이 심중할구다. 통나무 묶음은 사정없이 내리닥쳐 넘어진 소를 깔아 죽이거나 스쳐서 앞질러 내리간다. 이렇게 되면 멩에가 뒤엎어 지면서 순식간에 소의 뿔은 깨끗이 빠져나가고 마는 것이다.

이 화평군의 벌목장에서 저녁에 일을 끝내고 모여든 백마리에 가까운 소중에 뿔이 제대로 박혀 있는 놈은 거의 없다. 거의 모두가 완전히 뿔이 뽑혔고 몇마리만이 뿔이 한쪽만 박혀 있다.

참으로 피이할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소란 뿔이 빠지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소측의 말인즉 그렇지 않다. 그곳에서 일하는 소는 뿔이 빠져야 제격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벽찬 작업 할당량을 달성하자면 많은 짐을 지워야 하고, 많은 짐을 지게되면 자연 사고를 당하게 마련이니 뿔이 안 빠지면 결국 걸려 죽게 되고 말게 될 것이기 때문에 뿔 빠진 놈이 제격이라는 말이다. 제격인지, 제격이 아닌지는 우공에게 말을 시켜 보아야 아는 일이겠지만 공산주의 생산 방식하에서 일해야 하는 우공(牛公)들이 뿔이 빠질만도 한 것임은 틀림 없다. 이처럼 복피는 우공에 까지 무자비한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13. 물고기와 노동자

일본제국주의자(日本帝國主義者)들이 우리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침략하고 있을 때 그들은 압록강(鴨綠江)에 거대한 수풍수력발전소(水豐水力發電所)를 건설하여 270만「킬로와트」의 출력(出力)을 확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때문에 수풍외에 다섯개의 발전소를 더 세우는 것이다. 이 계획된 다섯개의 수력발전소중의 하나가 운봉(雲峰) 댐이 있다.

이 자성군(慈城郡) 운봉댐은 일본이 제2차대전에 패망할 무렵에 이미 가로막이 공사까지 끝내고 나머지 공사를 목전에 두고 있었던 댐공사의 하나였다. 일본 침략자들은 이 공사를 진행시킬 때 우선 지도의 판도(版圖)를 약간 변경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한국 땅인 운봉에서 중국땅인 대안(對岸)까지 댐을 연결시키는 것은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운봉댐은 수풍처럼 댐을 이용해 발전기를 설치하고 전력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 아니다. 만주 삼강(三江)쪽에 있는 높은 벼랑을 이용해 발전하게 되어 있었다. 즉 운봉댐을 완성하고 만주쪽에서 삼강 사이에 이르는 약 20~30리 사이에 큰 철관으로 수로(水路)를 내어 삼강의 벼랑까지 물을 유도한다. 이 삼강의 벼랑은 150미터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물의 낙차(落差)가 150미터가 되는 것이다.

이 벼랑 밑에 발전기 시설을 하면 배수로(排水路)에서 무서운 낙차의 힘으로 떨어지는 물로 「터빈」이 돌아가 발전을 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수로와 발전시설 등 중요한 부분이 만주쪽에 붙게 된다. 대부분의 시설물자들이 만주쪽으로 날라져야 한다. 아무리 일본 침략자들이 한국과 만주를 모두 빼앗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과 만주 사이는 각각 통치법률(統治法律)이 달랐다. 물자가 왕래하는 데도 관세가 붙었다. 이러한 번잡스런 일을 피하기 위해 일본침략자들은 아예 자성군쪽으로 휘어 들어온 삼강지방의 사람 발목처럼 구부러져 나온 부분을 잘라 한국땅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지도상의 판도의 일부를 변경시키고 공사에 착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패망한 후 그대로 버려둔 채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중공이 삼강지방을 다 차지하게 되었으니 그들과 타협이 새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1958년 초부터 중공과 북괴간에 이 운봉댐을 완성시킬 회담이 진행되었다. 당초에는 60만 킬로와트의 출력을 내게끔 계획을 세워 합의를 보았다. 댐 공사를 북괴가 담당하고 만주쪽의 수로공사와 발전시설은 중공이 담당하게 되었다. 60만 킬로와트의 출력을 보도록 댐을 높이 쌓자면 자성읍까지 수몰(水沒) 지구에 들어 간다. 그러므로 자성군의 인민위원회 소재지가 변경되어야 한다. 이 소문이 퍼지자 자성읍의 주민들은 물론 수몰지구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공포에 떨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떠나면 어떠한 생활을 어디서 어떻게 맞이하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김일성 일당에게는 아무런 부담도 없다. 자유주의 국가(自由主義國家)에서 처럼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해 줄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도로확장공사를 하나 해도 개인의 토지나 건물이 침해될 경우엔 개인의 소유물에 대해 하나 하나 국가에서 보상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말 한마디면 그만이다. 모든 것이 공산당

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상이니 뭐니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퇴거령(退去令)이 내리던 지정된 지방의 합숙소로 이동해 가야만 한다. 이처럼 자성읍 주민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중공이 선심(善心)아닌 선심을 베푸는 통에 그들은 살아 날 수가 있었다.

60만 킬로와트의 출력을 계획하고 있던 중공이 삼강지역을 자세히 살펴 보니 그곳에 철광(鐵鑛)이 하나 있었다. 이 철광이 수장(水葬)당하게 되었다. 이 철광의 생산량을 조사해 보니 전기에서 얻는 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60만 킬로와트건 뭐건 안될 말이다. 중공은 즉시 그들의 계획 변경을 북괴에 통고했다. 40만 킬로와트로 줄이자는 것이다. 북괴는 두말 없이 중공의 제의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이 변경 때문에 구출된 것은 자성읍의 주민들이었다. 김일성 동무 아닌 모택동 동무의 신세를 진 것이다.

이러한 최종 결정이 내리자 곧 공사 착수의 준비가 진행되었다. 수풍발전소에 있는 댐 보수공 약 1천명이 운봉으로 이동되었다. 또한 평양지방에서 성분이 좋지 못하다고 지목되었던 장정 백여명도 강제노동에 종사시킨다는 명목으로 이동되어 왔다.

자강도당엔 또 하나의 큰 두통꺼리가 생기게 된 것이다. 10월 하순 내각부수상(內閣副首相) 정일룡(鄭日龍)이가 현지 시찰차 온다는 것이다. 현지타야 공사가 착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볼 것이 없었다.

올해 하반기(下半年期)의 가뭄 때문에 강물이 줄어 일제시대에 공사한 흔적이 나타나 보였고 물이 말라 사람의 무릎을 약간 넘을 정도의 깊이 밖에 안된 것이었다.

자성군 당위원장은 그 동안 댐 밑의 얇은 부분에서 붕어와 잉어등 육십가마를 잡아 1천5백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부식물로 공급했다는 자랑거리를 늘어놓았다. 그리고는 부수상께서 모처럼 오셨으니 고기잡는 것을 한번 구경도 하시고 또 잉어 매운탕의 별미를 맛 보시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의를 했다. 정일룡이도 반대할 리 만무하다. 군당 위원장은 노동책임자에게 턱을 한번 흔들어서 지시를 내렸다. 군당 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노동책임자는 언제나 하는 것처럼 전주(電柱)에서 두 가닥의 전기 줄을 20미터 가량의 거리를 두고 두 사람이 각각 한 가닥씩 강 기슭으로 나르게 했다. 추운 날씨인데도 「랜즈」만 입을 노동자 셋이 떨며 고기를 전지기 위해, 역시 강기슭에 대기하고 있었다. 정일룡과 그의 경호원 그리고 도당, 군당의 간부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집중

하였다. 내각부수상이라는 하늘의 별처럼 높은 사람 앞에 서 있는 노동자들은 몹시 흥분되어 팔·다리가 굳어져 제대로 움직여 지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윽고 두 가닥 전깃줄이 물속으로 들어갔다.

들어 가기가 무섭게 수면이 흔들릴 정도로 두자 석자가 되는 잉어와 붕어들 이 하얀 배를 들어내고 떠 올랐다. 이와 동시에 긴장 속에 쌓여있던 노동자 한명이 물에 풍덩 뛰어들었다. 두번 채의 노동자도 뛰어들었다. 간신히 뒤쪽하면서 몸을 지탱했다. 먼저 뛰어든 노동자가 “옥!”하는 비명과 함께 감전사(感電死)했기 때문이다. 고기를 건지려고 대기하고 있던 이 노동자들은 너무 긴장해 떠오르는 물고기의 하얀 배가 경련으로 꿈틀거리는 것을 보자 그대로 뛰어든 것이다. 전깃줄을 물속에서 빼내기도 전에 그만 불의의 참변을 일으키고 말았다.

군 당위원장은 사색(死色)이 되었다. 정 일룡은 아무런 말없이 그대로 뒤돌아서 걸기 시작했다. 모두 그의 뒤를 따랐다. 그래도 잉어 매운탕은 구미를 들기에 충분했다. 과실주의 안주삼아 연방 냄비가 비워졌다. 앞으로 이 운봉댁 공사를 완성하려면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희생될 것은 뻔한 일이다. 한 사람쯤 앞당겨 희생되었기로서니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는가.

정일룡은 처벌이라도 떨어질가봐 절절매고 있는 군당 위원장에게 아무런 격정 말라고 도리어 위로해 주었다. 그런데 이 운봉댁 공사를 위해 겨울철에 급격히 이동해 온 노동자들은 막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우선 합숙소란 곳이 역망이었다. 일제시대에 이 공사를 위해 지어 놓은 노동자합숙소는 만주쪽에 있었고 운봉쪽에는 댁 관리사무원용 사택 몇 동(棟)뿐이었다. 별로 공사도 진행시킬 수 없는 겨울철에 아무런 준비가 없이 천여명을 이동시켜 놓고 가막사(假幕舍)를 짓는다고 소동을 벌리고 있었으니 말이 아니었다. 침구(寢具)도 불충분 했다. 뿐만 아니라 식량도 제대로 수용되지 못했고 부식물이란 강에 잠은 물고기라도 있었기 망정이지 소금을 빨아야 할 지경에 놓여 있었다. 노동중에서도 댁 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은 항상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작업이 계속된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성격이 사납다. 배를 굶고 가만히 앉아만 있을 그들이 아니다. 그들은 밤이 되면 떼를 지어 물이 알아진 댁밀을 건너 만주 땅으로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식량을 약탈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다.

이런 약탈행위가 자자짐에 따라 강 건너 중공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

다. 중공 주민들도 밤에 떼지어 기다리다 다시 밤을 타고 넘어온 북한 노동자들과 집단 난투극(亂鬪劇)을 벌렸다. 쌍방간에 부상자가 났고 국경선을 넘어갔던 북한 노동자들은 간신히 목숨만을 구하고 도망쳐 왔다.

이 사건이 있는 후부터 노동자들이 압록강을 넘어서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강이 얼어 붙으면 중공 땅에 들어서는 일은 더욱 용이하게 됨으로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다. 부수상 정일용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면 곤란하니 필요하다면 본보기로 몇사람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도 다시 돌아 갈 때 사로잡아서 「드림」통속에 넣어두었던 잉어 세마리를 김일성에게 바칠 선물로 갖고 가는 것을 잊지 않았다.

14. 술을 마신 염소

북한에서 기차를 타면 으레히 모자(母子)칸이란 것이 따로 있다. 젖먹이거나 제대로 대변이나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어린애들을 데리고 여행하는 어머니와 애들이 함께 타는 칸이다.

부부가 동행이라도 남자는 이 칸을 이용 할 수 없다. 모자 칸이라고 별다른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린애를 가진 어머니들을 격리시켜 젖을 먹이거나 애들이 보채거나 해도 다른 여객에게 미안한 감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련식을 본따 취해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단(北端)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는 함경북도 남양이란 작은 마을에서 40에서 50대(代)에 걸친 세명의 농부 차림의 부인들이 어린애들을 업고 「모자 칸」으로 들어와 적당히 갈라져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들이 탔을 때는 깊은 밤중이라 모두 곤히 잠들고 있었다.

그녀들이 탄지 두 시간쯤 지나자 셋이 약속이나 한 듯이 교대로 변소를 드나들었다. 변소에 가면 으레히 5분 이상이 걸렸다. 요란스런 기적소리가 날 때면 어린애를 푹들러 썩은 포대기가 꿈틀 거리곤 했다. 기차가 아오지(阿吾地)탄광쪽을 지날 무렵 날이 밝아 왔다.

「모자 칸」에는 잠자던 어린애들이 깨어나 어머니의 젖을 찾으려 울기 시작하자 요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젖을 물리는 여인, 기저귀를 갈아채우는 사람들의 동작이 연쇄적(連鎖的)으로 일어났다.

짜가지고 다니는 도시락을 펼쳐 놓고 아침 식사도 거이 끝났다. 그런데도 세 여자는 꼼짝을 앓고 자기만 했다. 아니, 자는 흥내를 내고 있었을런지도 몰랐다. 남들이 어린애들에게 젖을 먹이고 아침 도시락을 다 먹고 난 후에도 좀처럼 이 세 여인의 얘기들은 움직이는 기색조차 없었다. 그러더니 한 연자가 벌떡 일어나 변소로 갔다. 먼저 들어간 여자가 나오기도 전에 또 한 여자가 일어서서 변소에 가더니 변소문앞에서 대기하고 서 있다가 교대로 들어갔다. 결국 세여인이 꼭 같은 동작으로 변소일을 끝냈다.

변소 일만 끝났을 뿐이지 어린 애들에게 젖먹일 기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자는 이 세여인의 행동이 점점 수상쩍게 생각되기 시작했다. 열차가 청학을 지나 홍의(洪儀)에 거의 이르렀을 때는 이미 열두시가 가까웠다. 그래도 이 세여인은 하나 같이 어린애에게 젖을 물리지 않았다. 그저 전과 같이 변소가기만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불길한 의심이 왈카 솟아오른 옆자리의 여인은 송장이라도 업고가는것만 같은 생각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다. 벌떡 일어나 다른 자리로 옮겨 갈 기세였다. 그러다가 좀 망서리듯 하더니 「모자 칸」밖으로 사라졌다.

이 세 여인이 만일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자의 이러한 행동을 빨리 눈치 채고 곧 당게 될 다음 정거장에서 도중 하차라도 했으면 무사했고 그들의 목적도 충분히 달성 했을 것이다. 그만 잠자는 흥내만 내고 있다가 그 여자의 이상스런 행동마저 놓치고 만 것이다. 사오분 지나자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철도 안전원이 모자칸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잠자는 흥내를 계속 내고 있는 세 여인을 불러 세우고 안전원실로 끌고 갔다. 공민증을 조사하자 그녀들은 당원증도 내놓았다. 의젓한 당원인 것이다. 업고 있는 것은 어린애라고 했다. 안전원은 어린애가 수상하니 좀 풀어 보자고 했다. 버티다 못한 여인들은 할 수 없이 포대기의 띠를 풀기 시작했다. 풀러 보니 업혀 있는 것은 놀랍게도 염소였다. 그리고 염소의 주둥이에서 술 냄새가 물큰하고 코를 짚었다. 염소들은 술에 취해 눈도 못뜨고 그대로 씹씩거리며 잠만 자고 있었다.

세 여인 들이 변소를 규칙적으로 드나든 것은 염소가 술에서 깰만 하면 다시 술을 먹이기 위해서였다. 술을 두홑 가량 마시면 염소는 두시간쯤 소리없이 취해서 잔다.

포대기 속에는 소주가 들어 있는 소주병 두개씩이 간직되어 있었고 한병 반

을 이미 염소가 마셔 버렸다.

1958년 10월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이(里)단위로의 확대(擴大)로」라는 당 방침 때문에 염소나 닭도 조합의 소유물로 되었다.

개인이 염소를 가지고 왔다 갔다하는 것 부터가 위법에 속한다. 결국 세 여인이 업고 있는 염소는 협동농장에서 훔치거나 협동농장에 바치지 않고 숨겨 둔 것이 었든가 들중의 하나다.

홍의(洪儀)에서 하차되어 본격적인 신문을 당한후 세 여인은 염소의 출처(出處)와 용도를 자백하고야 말았다.

염소를 협동조합에 바치지 않고 집에서 키워 왔으며 소련으로 밀수출(密輸出)하기 위해 업고 왔다는 것이다.

용현 동쪽에서 얼어붙은 두만강을 타고 소련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소련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염소를 사겠다고 했다. 염소 한 마리면 라디오, 양복감, 시계, 만년필등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귀중품에 굶주린 북한의 실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15. 자살이 뜻하는 것

범죄가 확실하지 않은 소위 피의자를 조사가관이 취조하는 단계에서 피의자가 자살한다면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민주국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 났다면 심문에 무리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로 조사가관이 조사를 받게 되거나 신병보호(身柄保護)를 소홀히 했다는 문제만으로도 이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중범죄자도 마찬가지이지만 범죄가 절도범 따위의 경범죄에 속할 경우 피의자가 조사가관의 취조가 지나쳐 자살했다면 더욱 문제가 커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죄가 미운 것이지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는 인권존중의 사상이 민주국가의 법률정신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산도당들이 보는 자살에 대한 견해는 아주 정반대이다. 취조중에 피의자가 자살하면 그것으로 사건이 끝나고 만다.

그들의 주장을 빌리던 피의자가 자살한다는 것은 취조상의 고문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살을 택할만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단정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너무도 억울한 범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취조원들의 지나친 행동에 분통이 터져 자살할 수 있다는 사람의 심리현상(心理現象)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죄가 있으니 자살했다는 그들의 주장대로 모든 것을 합법화시키고 시침을 댄다.

이남에서 애인을 데리고 L-19비행기를 타고 월북했던 옥흠(玉欽)대위가 자살한 것은 1955년초였다.

1955년 2월 옥흠 대위가 애인인 부미순 여인과 월북했던 때에는 그야말로 성대한 환영을 베풀어 주었다. 말하자면 최대의 선전자료로 이용해 먹었다. 옥흠과 부미순의 결혼식도 성대하게 돌봐주었다. 1년이 넘자 공산주의자들의 옥흠에 대한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군에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그의 요구는 완전히 거절되고 인민경제대학(人民經濟大學)에 가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 인민경제대학이라는 곳은 집단주의사상(集團主義思想)을 고취시킨다고 하여 입학하는 날로부터 기숙사에서 침식을 해야 하는 곳이다. 그는 부인인 부미순과 헤어져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둘이 헤어져 있다는 것 뿐이 아니다. 그들은 그의 부인이 남한의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었으니 성분을 개조하기 위해 지방협동농장에서 노동에 종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1년간의 동서생활을 끝으로 헤어져야만 했다. 1958년 말에 인민경제대학에서는 전학생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었다. 이때의 심사는 소위 불순분자를 적발하는 심사였다.

당에서 나온 심사원들은 제일 먼저 옥흠을 심사대상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옥흠은 월북후 북한사회에 환멸을 느껴 때때로 불평을 한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심사원들은 새삼스럽게 옥흠의 월북 동기를 따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큰 범죄자로 몰기 위한 것이 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옥흠이 진술한 월북동기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 었다. 그만한 동기를 가지고는 비행기를 몰고 월북할리 없으며 아무래도 간첩의 임무를 띄고 월북해 온 것이 틀림없다고 마구 따지고 주졌다.

옥흠은 계속 자기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심사원들에게 그것이 통할리 없다. 그들은 마이동풍격으로 다시 심사방법의 차원(次元)을 높일 뿐이었다. 드디어

심사원들은 옥흠을 독방에 간금시키고 밤낮으로 신문이 계속됐다. 12월초부터 시작된 이러한 심사는 3개월간을 끌었다.

옥흠은 지칠대로 지쳤다. 월복해 온 것을 한탄했으나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그는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부인인 부미순을 한번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는 애원을 지도 「구루빠」에게 요청했으나 허사에 지나지 않았다.

2월말 어느날 밤 그는 용하게도 기숙사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탈출하는 그길로 달려가 평양에서 양덕방면으로 가는 기차에 뛰어 들어 자살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심사원들은 “그것보라, 그가 틀림없는 간첩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살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와 같이 자살이란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 시켜주는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의 취조방법이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하는 일말(一沫)의 반성쯤도 있을 법한 일이지만 도리어 그들의 주장만을 합리화 시키는 데만 정신을 쏟은 뿐 다른 생각은 일체히 하지 않는 것이다.

6·25때 공산당들에게 납북되어간 저명인사들이 많다. 그분들은 모두 세뇌교육(洗腦教育)이니 뭐니 하며 공산도당들의 말할 수 없는 구속 속에서 시달렸다. 뿐만 아니라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在北平和統一促進協議會)란 어용단체(御用團體)에 강제로 가입되어 그들의 정치적인 허수아비 도구로 이용되었다.

방송에 동원되어 자기의 본의도 아닌 그들의 써놓은 원고를 읽어야 했다. 또한 일본에 있는 교포들의 북송공작이 시작되자 재일교포들을 현혹하는 거짓 말편지를 써야하는 소위 편지공작에도 가담해야 했다. 이러한 그들의 요구에 불응하면 그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은 판한 것이다.

죽지 못해 살아 가는 한스러운 목숨인 것이다. 더욱이 산전수전 다 겪으며 정치생활을 해 온 일부 인사들에게는 민족의 장래를 위해 더 이상 참을수 없는 곤욕이 아닐 수 없었다.

조소양(趙素昂)씨는 드디어 대동강(大同江)에 투신 자살함으로써 한많은 그의 생애를 끝내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김일성 일당은 조소양은 그동안 그들이 베푼 꾸준한 교양사업(教養事業)에 따라 오지 않고 탄팜만 꾸어 왔다고 했다. 그러므로 그는 투신자살 했다는 것이다. 조소양씨 사건때 엄항섭씨도 자살을 하기로 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미수로 그치고 말았다. 그렇다고 이러한 자살소동이 신문이나 방송으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당의에는 비밀로 그것도 제한된 당원에게만 알리게 되어 있다.

16. 후회속에 살고있는 북송교포

일본에서 살던 우리동포중에 공산당의 앞잡이인 조총련(朝總聯)의 허위선전과 그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북한땅으로 송환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일명 북송교포라고 한다. 이들 북송교포들의 생활이 어떠한지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제98차 북송선편으로 일본에서 살던 교포 김덕근(金德根)은 북송된지 2개월 만에 서야 원산화학공장(元山化學工場)의 노동자로 배치되었다.

그가 2개월씩이나 직장을 배치받지 못하고 늦어진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 김덕근은 일본에 있을 때 녀적지 못한 가정형편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전기공장에서 직공으로 일했었다.

학비관계로 대학으로의 진학의 꿈을 포기했었으나 항상 대학에 다녀보았으면 하는 생각뿐이 었다.

그러한 김덕근의 처지를 잘 아는 조총련의 한 간부가 그에게 손을 뻗치게 된 것이다. 그는 김덕근에게 생활상의 애로가 많겠다고 위로하는 척하면서 「진학의 꿈」을 이루어 보고 싶은 생각은 없느냐 북한에 가면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고 유혹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김덕근은 조총련계의 선전을 몇번이고 들어온 터였다. 점차 마음의 동요가 시작되었고 조총련 선전에 반신 반의하면서도 대학교에 못갈 바야 한번 속는 셈치고 북한으로 가 보자 하고 마침내 김덕근은 북송할 것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하여 가사를 정리하고 북송준비를 서둘렀으며 시계, 라디오, 카메라, 옷, 신발, 자전거, 내의류등을 모두 새것으로 갖추었다.

이렇게 하여 98차 북송선으로 북한땅을 밟게 된 것이다. 98차선에서 내린 북송교포들은 귀국동포 합숙소라는 임시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이 합숙소에서 개 개인의 심사를 한다음 직장을 배치하는 것이다.

본인들의 희망을 들어줄리 만무한 것이다. 여기서 2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보

낸 다음 마침내 트럭에 실려 원산화학공장의 노동자로 배치된 것이다.

김덕근은 북한 공산치하의 생활에 어리둥절 하기만 했다. 공장일이 끝나도 매일같이 회의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다.

여기서 김덕근은 일본에서 생활하던 일들을 즉 아무런 감시도 없이 자유롭게 일하며 하루일이 끝나면 자기 마음대로 자유시간을 갖던 일을 생각하게 된 것이 었다. 어느날 처음 도착해서 묵고 있었던 귀국동포합숙소에 두고온 물건이 이곳 공장 사무실에 도착했다는 통고를 받아 황급히 공장사무실에 물건을 찾으러 가본즉 이리저리 둘러서 망가진 물건들이 포장이 풀린채 도착해 있었다.

자전거와 라디오, 그리고 그밖에 몇가지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의류와 카메라가 눈에 띄지않았다. 김덕근은 놈들의 소행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도리가 없었다. 실상 자기에게 돌아온 물건들을 가지고 있어도 별수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아침에 느뜨기가 무섭게 공장에 나가 노동을 해야 하고 노동이 끝난후에는 학습회니 뭐니 하면서 지루한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일요일도 학습회 노농적위대(勞農赤衛隊)훈련, 대피훈련등을 해야 함으로 자전거 같은 것은 타볼 때야 타볼 시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북송교포들은 가지고 온 물건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기 때문에 헐 값으로 팔아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물건을 소위 수매상점(收買商店)이라는데서 아주 헐값으로 사게 되어 있다. 버리는 것보다는 엽가락라도 팔아먹는 것이 나으니까 대부분 팔게 된다. 김일성일당은 북송교포의 물건을 이러한 수매상점을 통해서 수탈하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김덕근의 진학의 꿈을 비롯해서 모든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것이다.

마치 기계처럼 하루종일 일만 해야하는 직장생활도 싫증이 났지만, 날이 갈수록 적인 취급을 받는 것이 견딜수 없었다. 몇천번이나 마음속으로 북송선을 탄 것을 후회해 보았으나 이제는 돌이킬수 없는 일이다. 김덕근은 북한에 도착한 후 자기를 선동하던 조총련 간부를 하루도 원망해 보지 않은 날이 없었다. 만날 수만 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찢터 죽이고 싶었던 심정이 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를 면회하러 왔던 친구를 배웅하고 원산역전에서 공장합숙소로 힘없이 걸어 오다가 충청동 입구에서 뜻하지 않게 옛날 그 조총련계 간부였던 권귀남(權貴男)을 만났다. 정말 그를 이런 곳에서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하지 못했던 김덕근은 그를 본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아 올랐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도 김덕근을 보자 깜짝 놀라면서 접근해 왔으나, 김덕근은 재빨리 그를 골목길로 끌고가 네놈의 말에 속아 이모양 이꼴이 되었다고 악을 쓰면서 권귀남의 목을 졸랐다.

권귀남은 당황하여 「나도 조총련 고위간부들이 그렇다고 선전하기에 그런줄만 알고 106차 북송선편으로 이곳에 와서 원산철도공장에서 노동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처지에 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그러나 권귀남의 애원도 김덕근의 귀에 들어올리 만무했으며, 김은 주먹으로 안면을 힘껏 갈겼더니 권귀남은 땅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더이상 때리지는 못했다. 사회안전부(社會安全部)에서 김덕근을 그냥 들리 없었다. 즉각적으로 구속되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권귀남은 뇌진탕으로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김덕근은 살인죄로 구속된 셈이다.

사람을 죽인 김덕근에게는 이미 살인죄가 내려져 있었음으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사형임은 뻔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북송교포였기때문에 북괴는 엉뚱한 죄목을 들추어 냈다. 즉 김덕근에게 미국정보기관의 임무를 띄고 북송된 간첩이라는 엉뚱한 죄목을 씌워 공개 처형하였다.

이렇게 해서 김덕근을 핑계로 북송교포들은 여차하면 간첩으로 몰리게되는 바람에 불평불만 한마디 못하고 한많은 북한생활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다음 편지는 북송교포의 생활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편지가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어 북한생활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수신인은 가나가와젠 요고스카시 요시가와 시즈코(神奈川縣 横須賀市 吉川静子)이며 발신인은 함남 이모(咸南李某)로 되어 있다. 이 편지를 원문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일에 드린 편지 받아 보셨을 줄 압니다. 가내 여러분도 변함없이 지내시겠지요. 이번 겨울에 적힌 곳으로 주소가 바뀌어 이를 알립과 더불어 부탁할 일이 있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바쁘신 여러분에게 너무 제멋대로의 부탁이고 귀찮은 일임을 잘 알면서도 염치없이 부탁드리는 점을 아무쪼록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번 편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귀국(북송)할 때에는 이쪽 사정등을 전혀 모르고서 겨우 일상용품만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게다가 아기가 이곳에 들

아은 뒤로 부쩍 자라서 입는 옷이 모두 작아 입을 수 없게 되어 제 것을 고쳐 입히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내가 입을 것이 없어 매우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기무라」씨에게 여러번 여러가지 물건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부탁해 보았으나 지금껏 하나도 보내주시지 않고 있는 걸 보니 보내주실 마음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어린애와 들어서 11개월 가까이 이번 배에나 올라 다음 배에나 올라 하고 매일 목을 길게 빼고 기다렸습니다. 나로서도 달리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고 “기무라”씨에게 부탁하면 우리들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의 딱한 입장을 도와주실 줄 믿고 부탁했었습니다.

제가 “기무라”씨를 도와드렸던 일을 내세워서 무리한 일을 부탁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기무라”씨에게 점포를 팔았을 때 12만원 받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떠날 때 손에 가진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을 부장이 알고 “기무라”씨에게 얘기하여 2만원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10만원을 받지 않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기무라”씨에게 말씀드려서 돈을 받아 우리들에게 물품들을 사서 보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기무라”씨가 생각하기는 이제부터 내내 우리들이 어려우면 언제나 무엇이든 사달라고 신세를 지지 않을까 하여 불안해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제가 받을 몫만 받고서 앞으로는 죽는 한이 있어도 더이상 의지하지 않을 결심입니다.

저는 귀국(북송)후 줄곧 건강이 나빠서 집에서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상태에 있지만, 무슨 일을 해서든지 아이가 성인이 될때 까지 살아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 한사람의 고생이나 아쉬움이라면 참을 수도 있으나 아이가 허덕이는 것을 보면 민망스러워서 저 혼자 있으면 우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당신에겐 폐스러운 일이지만 저희들 모자를 살려 주시는 셈치고 아무쪼록 이 염치없는 부탁을 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지금 어떤 것이 절실히 필요한지 여기에 쓸터이니 돈을 받아서 꼭 사서 되도록 하루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애 내의·속옷들 : 판티, 슈미즈, 셔츠, 반양말, 장갑, 비니루구두

4.5켜베(칫수 9분반) 반오바.

△ 학용품류 : 가방, 색연필, 도화용지, 수통, 그림물감, 콤팩스, 계산기,

보스톤백, 수영복, 펜촉, 드롭프스, 연필, 양복은 여학생이 입을 만한 것으로 싸구려 특가품도 좋으니 가지수를 많이 해주십시오. 「잠바스카트」를 한벌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잠바스카트」와 싸구려 「부라우수」류도 넣어 주십시오 3천원 정도의 값싼 시계 하나와 자전거 한대를 꼭 부탁드립니다.

병원에 저의 약을 가지러 가는 데 멀어서 왕복 두시간이 걸립니다. 그밖의 곳에 심부름 가는 데도 차편이 없어 매우 불편하오니 자전거를 싸구려라도 좋으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저에게 「미싱」한대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귀국 북송이래 줄곧 건강이 좋지 못해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수업이 없으니 「미싱」이라도 있으면 집에서 몸이 좀 나올 때 내직을 할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될것이기 때문에 싸구려도 괜찮으니 부디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저에게 이것도 모두 싸구려 특가품도 좋으니 가지수를 많이 해주십시오. 속옷류, 양말, 비니루구두(9문7분) 비로도천을 검정색으로, 푸른색 천 자 10미터 가량, 싸구려 잠옷 3개, 용 10미터, 「스카트」 두세개, 그외 값싼 천들을 적당히 사주십시오. 그밖에 비누, 술, 삼품, 휴지, 재봉실, 타올 통조림등.

굉장히 많은 필요품을 늘어놔서 정말 죄송하기 짝이 없지만 아무래도 필요에 딸리는 것 뿐이오니 나쁘게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보내주시기 전에 반드시 무슨 배편 누구에게 전했다고 알려주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이사한 집은 역전(합흥)귀국자초대소 바로 앞입니다. 돈이 남거든 값싼 중고 「올겐」을 알아봐 주십시오. 아이가 「피아노」 연습을 하려해도 할수 없습니다. 장래 음악 방면으로 나갈 것을 본인도 희망하고 있으니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겐이라도 있으면 집에서 연습할 수도 있기에 부탁드립니다. 돈이 모자랄 경우엔 귀국자에게 부탁해 주시면 이곳에서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염치없이 부탁드립니다. 거들 염치없는 일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딱한 형편입니다. 달리 의지할 사람이 라곤 없기 때문에 무리한 말씀 올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얘기만하고서 「펜」을 놓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끝으로 부인께서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틈 나시면 가족 여러분의 근황등을 알려주십시오. 날씨가 차가워진 요즘 가족 여러분들 아무쪼록 몸 조심 하도록 「난문난필 용서하십시오」

17. 「붉은기중대」 운동

제9사단 제3연대 제2중대는 「붉은기중대」 운동에 등록되어 1년간의 실적에 따라 「붉은기동대」의 칭호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여 정치부중대장(政治副中隊長)을 중대장실에서 무엇인가 토의하고 있었다.

중대장은 지휘계통(指揮系統)으로 보아서는 정치부중대장보다 높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黨)적으로 보아서는 낮은 것이다. 즉 정치부중대장은 비록 부중대장(副中隊長)이 지방 당조직에 있어서 세포비서(細胞秘書)를 겸하고 있으며 중대장은 세포부비서(細胞副秘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군은 당의 군대인만큼 당책임자의 발언이 크며 항상 당적인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중대는 「붉은기중대」 칭호를 수여받기 위해 1966년초에 결의목표를 세워 그를 실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으며 반드시 심사에서 합격되어 년말에는 「영예로운」 「붉은기중대」 칭호를 받게 될 것이 틀림없었다.

2중대가 결의목표를 내 세운 것은 1962년 9월 1일 「인민군당위원회」가 비준한 「인민군대내 붉은기중대운동에 관한 사업규정」에 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붉은기중대칭호 수여 평가기준인

- ① 공산당과 김일성의 사상으로 무장하며 공산주의 혁명정신 함양
- ② 공산주의 승리에 대한 신념
- ③ 수정주의(修正主義) 사대주의(事大主義) 교조주의(教條主義) 반대
- ④ 상하간의 동지단결(同志團結) 강화
- ⑤ 이기주의(利己主義)功名주의(功名主義) 자유주의 등 일체 사사잔재 극복
- ⑥ 전투준비 및 동원태세 강화
- ⑦ 전투·정치훈련에 적극 참가하여 (後)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70% 이상 성원의 「우」의 성적쟁취
- ⑧ 군사기술수준으로 3분의2 이상이 한등급 높은 직무 담당할 수 있는 능력 소유
- ⑨ 상관명령의 무조건 이행 관철
- ⑩ 군사비밀의 누설·사고 및 규률 위반 현상의 일소

- ⑪ 군대 재산의 애호·절약
- ⑫ 군부대가 소요되는 춘하기용 소채 100%, 동기용소채 50%, 육류는 대개 인 25g이상 자체 해결
- ⑬ 위생규칙의 준수로 한 명의 환자도 발생되지 않을 것.
- ⑭ 사회질서와 군중도덕의 자각적 준수
- ⑮ 전체성과의 체력검정 합격

등등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중대원 전체 회의에서 심의 통과시켰던 것이다.

만약에 금년에도 「붉은기중대」 칭호를 수여받지 못하면 중대장, 정치부중대장은 상부로부터 불신당하며 진급의 길은 완전히 막히고 마는 것이다.

특히 1중대는 이에 「붉은기중대」로 되었으며 3중대와 경쟁이 붙은 것이다. 실행목표에서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은 그런데로 숙일수도 있으나 물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부분은 어쩔수가 없는 것이다. 즉 야채, 고기, 생산자 인명사고 등이 바로 그러하다.

2중대장실에서 정치부 중대장과 중대장과의 토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부분인 것이었다.

김장용 무우·배추가 싹이트지 않아 김장용 야채 50% 확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금년은 예년에 비해 일찍부터 밭을 갈고 비료도 많이주고 판리도 철저히 했는데도 싹이 트지않는 것이 었다. 1중대, 3중대는 벌써 싹이 나와 이엽기(二葉期)에 들어갔다.

규정에는 동기용 야채도 50%이상 야채 확보는 되어있으나 2중대는 결의 목표에서 70%확보를 내세웠던 것이다. 이제는 싹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밭을 갈아 없어 새로 무·배추씨를 뿌려야만하였다. 그러나 중대세포(細胞)에서는 가을 채소가 발아하지 않은 원인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취급하게 되면 상부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그렇게 되면 「붉은기중대」 칭호수여에 지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중대 특무상사가 가을 채소심는 문제로 중대주둔지역 이(里) 협동농장을 찾아가서 가장 좋다는 배추·무씨를 얻어 왔다. 이는 타의 협동농장에서 분여(分與)해달라는 것도 거절하고 남겨둔 것인데 그 중대가 「붉은기중대」의 명에칭호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종자뿐만 아니라 노력까지도 협조해 주겠다고 관리위원장은 친절하게 대해준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협동농장 채소밭에서도 싹이 나오

지 않아 가을 김장울 실패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 협동농장에서는 즉시 뿌린 씨를 거둬서 군 안전부에 보고하여 조사하였다. 즉 농장원중에서 공상당의 농업정책을 반대하기 위하여 그 해독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 단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주재하고 있는 안전원(安全員)이 군안전부(군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당위원회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무우, 배추씨가 증기로 찢었다는 것이 었다. 증기를 입었기 때문에 씨가 죽었으며, 발아하지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기름을 짜야될 씨를 받아시킨것과 같은 결과가 되고만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북한 농촌에서는 간혹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1958년부터 1960년에 걸치는 「중당당집중지도」에서도 수10건이나 적발된 것이다. 이는 협동농장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발한 형태로서 휴전선일대의 농촌에서 더욱 심할 것이다. 즉 아무리 농사를 잘지어도 농민에게 돌아가는 목에는 별다른 차가 없으며 자기농사가 아닌데다 각종 중세기적인 경쟁운동에 시달리는 농민이기때문에 공산당의 농업정책을 고분고분 받아들리 만무한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발각되지 않는 방법으로 각종「사보다쥬」를 하는 것이다. 소에다가 못·철사·바늘을 먹여 죽이게 하는 것, 모판에 비료를 지나치게 주어 말라죽게 하는 것, 농기구파괴 곡물창고, 종자창고에 방화하는것, 돼지에 농약을 먹여 죽이게하는것 등 각종형태로서 반항하고 있는 것이다. 종자를 동기증기로 찢서 심게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반항의 한 형태이다. 즉 무우·배추씨 같은 것을 시루에 찢서 감쪽같이 말려 놓으면 이를 모르고 파종한다. 일단 시루에 찢졌기 때문에 발아할리가 없는 것이다. 몇년전에 강원도 세포(洗浦) 농장에서도 그러한 사고가 있었다. 세포농장이라 하면 무우가 북한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서 「인민군」의 김장용 무우는 이곳 농장에서 대부분 충당하게 된다.

이렇게된 종자를 특무상사가 얻어다가 심는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아하지않는것이 당연하였다.

이사실을 알게 된 정치부중대장은 특무상사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가하는 한편 사실대로 보고하면 「영예칭호」 받기에 지장이 있음으로 다른 이유를 부칠 도리밖에 없었다. 즉 중대장하고 토의하고 무우·배추씨를 깊이 뿌린데다가 산사태로 인하여 모래흙이 덮였기때문에 발아가 늦어진다고 그 이유를 부치고 새로갈아 씨를 뿌리게 하였다. 특무상사를 혹독하게 비판한것은 사단에서 공급해준 봄배추씨를 버리고 인접관리위원들에게 부탁하여 구(求)한 것인데 으는 다

른 중대보다 월등히 좋은 배추·무 농사를 해보겠다는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다. 이는 특무상사 독단으로 한 것도 아니요, 중대장의 허락을 받은것은 사실이 없다. 새로 심은 것은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적기를 놓쳤기 때문에 잘될리가 없다. 밤낮으로 물을 주며 관리를 하였다. 이는 중대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되었다.

또한가지 문제는 중대의 돼지막사에 있는 돼지 한마리가 없어진 사고이다. 이런 돼지는 간혹 산짐승들에 의해 잡혀가는 일이 있지만 큰돼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나 아무런 흔적도 없이 큰돼지가 없어졌다. 중대원들은 「붉은기중대」 칭호를 수여받기 위해 돼지를 많이 사육하여 「국가」에서 고기공급이 없더라는 자체를 해결하겠다고 결의를 가지고 길른 돼지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돼지사료가 따로 공급되지는 않는다. 「풀과 고기를 바꾸라」는 것은 농민뿐만 아니라 군대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특무상사의 통제하에 중대원들에게 공급되는 주부식의 일부와 잔반(殘飯)들을 모두 거더다가 돼지관리하는 당번을 통하여 먹이게한 것이다. 그밖에 중대 뒤산에다가 칩을심고 똑감자를 심어 먹이기도 할것이다. 이처럼 중대원이 먹을 것도 절약해가면서 길러낸 돼지가 한마리 없어졌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붉은기중대」 칭호를 탈 수 없게 되는것이다.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다. 그러나 으레히 각 중대간의 경쟁이 체결됨으로서 부족한 것은 다른 중대 또는 먼곳의 중대에 가서 공작(흙치는 것을 공작이라함)을 해다 충당시키는 것이 일수인 것이다. 돼지는 이러한 공작에 걸린것이다. 먼저 손쓴 그것이 상수인것이다.

그 중대에서는 또하나의 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즉 퇴비생산하다가 사병이 폭사한 사건인 것이다.

중대에서 재배하는 야채밭은 고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배추를 뽑는 다음에는 매년 봄 채소를 심기위해 밭을 정리하는 한편 그에 필요한 비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돼지울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물론이며 산에서 나무잎이 썩은 부식물등을 긁어다주며 또한 겨울에는 소토작업을 하는 것이다. 소토작업(燒土作業)이라함은 흙을 굶는 것인데 이러한 소토는 야채재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소토작업하는 데는 시설이 필요한데 대체로 빈도람통을 펴서 솟처럼 장치하고 밑에 불을 때며 흙을 굶는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들며 노력이 많이 든다. 구어진 흙은 일정한 곳에 싸아 두어야한다. 이러한 소토작업은 중대

병사(兵舍)에서 떠러진 곳에서 하게되는 데 하루는 「팡!」하고 폭탄터지는 소리가 났다. 소총소리도 아닌 폭음입으로 중대장을 비롯한 중대원 전체가 놀랐으며, 폭음난 곳으로 달려가 본바 다름아닌 소토작업장에서였다. 이 작업장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곳에서 불태던 사병은 즉사하고 또 하나의 사병은 심한 부상으로 출혈이 심하였다.

이는 소토장 부근에 있던 포탄이 폭발한 것이다. 전쟁당시에 떨어진 포탄이 불발된 것이 심한 열을 받자 터진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에 매몰되었던 지뢰가 폭발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는 큰 사고로 취급되는 것이다.

부상당한 사병은 즉시 대대군의소로 그곳에서 응급치료를받고 사단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끝내는 지나친 출혈로 사망하였다. 그자리에서 즉사한 사병은 평안북도 용천군 출신으로서 북괴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최용건의 먼 친척이 었다.

이러한 겹치는 사고 때문에 이처리문제로 정치부중대장은 중대장과 심의끝에 대대장에게 전의를 했다. 즉 「붉은기중대」 영예칭호를 따지못하던 영영 출세할 길이 없으며 대대장 역시 그러한 운명에 있었다. 단 중대에서도 모두 칭호를 따고 중대를 벗어나 대대 「붉은기대대」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1966년을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이다. 대대장에게 전의한 것은 연대장, 사단장에게 통과되어 결국은 「붉은기동대」의 칭호를 받게되었다.

즉 애국·무는 인접중대로부터 보충받았으며 돼지는 다른대대에 건너 소위 공작(工作)으로서 1마리더 흠뻑다. 계획량을 초과했으며 소토작업으로 좋은 사병에 대하여는 다른 이유와 빙명을 부쳐 버리도록 하였던 것이다.

특히 배추·무씨사건에 있어서는 인접 농업협동조합위원회로부터 얻었다는 것과 그것이 농자원의 「해독행위」(害毒行爲)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케 하고 그러나 그 씨를 증기로 쥘 소위 「반동분자」를 중대 특무상사가 잡아내는 데 큰공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고한것이다. 즉 배추·무씨를 통해 잠입해있는 반동분자(간첩)를 적발한것으로 협동농장관리위원장과 결탁하여 꾸민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인민군대」는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는 군대요 인민의 군대인 만큼 협동농장을 해치려는 반혁명분자를 적발했으니 그이상 큰공이 없는것이다. 이렇게 날조하게됨으로 기타 약간의 부족함점이 있었으나 「붉은기중대」의 영예칭호는 무난하게 받을 수 있었다.

이 「붉은기중대」 운동이란 도시와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리마작업반운

동과 같은것이다. 다만 군대에서도 군대의 실정맞게 이름을 부친것이다.

이운동이 나오게 된것은 처음에는 「모범중대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다가 1959년 2월 8일 제105탱크사단에서 있는 북괴군창군 11주년 기념행
 사에서 김일성은 「종래에 실시하던 모범중대운동을 강화하여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는 혁명적 기풍을 발양하고 군대전체가 하나의 의지로
 굳게 단결된 혁명집단으로 꾸리기 위하여 「붉은기중대운동」을 제기한다」고 연
 설하였는데 이에따라 시작된 것이다.

이운동은 1962년부터 더욱 심해졌으며 「붉은기중대」 칭호를 수여받기 위해서
 는 먼저 「실행목표」를 중대가 세우고 이를 등록시키는 것이다. 6개월~1년간의
 실행실적을 상부로부터 검열하고 합격이되면 사단을 거쳐 총정치국(總政治局)
 에 보고한다. 그러면 여기서 비준받게 되고 그것을 집단군 사령관의 명령으로
 영에 칭호가 하달된다.

이운동은 노동자 농민속에 전개되고 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 처럼 군인들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짜내자는데 있다.

특히 인구 1,300만에 약 50만에 가까운 정규군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복무
 연한이 5~7년이 된다. 최근에는 전쟁준비강화 때문에 7년이상 군복무하며 제
 대라는것이 거이없다 한다. 이러한 장기복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평
 불만과 권태증을 무마시키는 방법으로서 나온것이 「영예칭호」 운동인 것이다.

Ⅱ. 질 문 편

1. 역 사 날 조

<질 문 1>

북괴가 교재용으로 발행한 「조선역사」라는 국사의 개설서에서 그들은 우리나라 역사 발전 과정이 남달리 평화 애호의 전통위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살벌을 극한 계급투쟁과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진행된양 기록하고 있음은 역사적 사실을 날조한 증거가 아닌가?

<해 설>

북괴가 발행한 「조선역사」는 국사의 시대구분을 유물사관에 입각한 도식에 비추어 고대 노예소유제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로 단정함으로써 우리 국사 발전과정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맹목적인 독단을 내림으로써 처음부터 사실을 왜곡 조작했다.

또, 그 서술 내용을 보면 「투쟁」과 「폭동」과 「격화」로 질게 물들여져 있다는 점이 다. 우리 국사상에 있어서 외세의 침공을 격퇴한 민족의 항전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대외전을 제외하고는 우리 국사의 발전 과정을 철저한 계급투쟁에 의해서 진행해 온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국내에 있어서의 투쟁폭동을 취급한 것이 총 46절 가운데 12개절이나 된다. 전쟁사가 아닌 국사의 개설서로서 이와 같이 살벌을 극한 투쟁과 항전을 크게 취급하고 있는 실상은 무엇일까. 그 국내 투쟁은 전부가 사회, 경제 형편의 격화에 따라 폭발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사는 이러한 격화와 폭동의 연속으로 일관되고 말아 버린 느낌이다. 우리 민족은 남달리 평화를 애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만을 의식적으로 크게 부각시켜 대서 특필하는 것은 역사의 발전이 마치 철두철미 계급 투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조작하기 때문이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책이 지표하고 있는 「김일성 동지와 우리 당 중앙위원회의 사상」으로 자체를 더욱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자는 투쟁적 전사를 양성하기 위한 속셈에 틀림 없다.

대체 역사의 발전이 계급 투쟁에 의해서만 진행 된다고 하는 사관은 이미 일방으로만 통용된 낡은 독단론에 불과한 것이요, 나아가 「투쟁적인 전사의 양성을 지표하고 있는」 역사서라면 결국 교훈적인 사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편파적인 가치 밖에 설정되지 못할 것이다. 역사의 사실을 왜곡 조작한 실

례를 들면 이 책은 실학자들의 사상을 논하는 가운데서 실학자들의 전체를 들어 모두가 유물론적 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무신론적 견해를 가지고 일체의 종교·진비설·미신 등을 배격했다고 억지를 부린다.

「조선역사」가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국사상의 사실을 그들의 유물사관에 어거지로 들어 맞추려는 의식적인 의도하에서 씌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특정사관을 그대로 준용하여 국사상의 사실과 결부시킨 도식성에 역매어 있는 한, 수준 이하의 해설서라기 보다는 마르크스·레닌 주의를 광신하는 교조주의자들의 이른바 「복음서」같은 역할이나 기능을 다 하도록 꾸며진 것임에 틀림 없다.

<질 문 2>

북괴가 발행한 「조선역사」는 계급투쟁이론의 타당성과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하여 제 1차세계 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월슨의 민족자결 원칙에 자극된 국내의 애국인사들이 일으킨 3·1운동마저 러시아혁명과 김일성의 영향 아래서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함은 완전히 역사적 사실을 날조한 증거가 아닌가?

<해 설>

북괴가 날조한 「조선역사」라는 국사책에 의하면 공산당의 괴수인 일 개인의 교시가 국사 해설서의 본문에 자리 잡고, 그나마 격정적 선전적인 역할을 다 하도록 꾸며졌으니 이것은 역사서라기 보다는 선전서라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더우기 이 책은 19세기 후반기의 최근세사를 다루는데 이르러 미국으로부터의 영향을 고의로 말살하기 위하여 「독립협회」와 「독립신문」과 「독립문」은 소개하되, 서재필 박사와 이 승만 박사 등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아니하였고, 신민회 운동이나 105인 사건등에 대해서도 전연 묵살하고 말았다. 따라서 3.1 운동을 서술함에 있어서도 33인의 민족 대표는 전연 언급도 없이 그저 「부르조아 민족주의자들이 민족 대표」의 이름으로 참가하였으나 잘못이 더 많다는 식으로 헐뜯기만 하였고, 3.1 운동도 러시아의 10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 노동자 농민들이 주도한 것으로 강조하기에 열중하였다.

더우기 3.1 운동 전후의 민족운동의 대부분이 러시아 혁명과 김 일성의 영

항 아래서 이루어진 것처럼 억지로 날조한데 이르러서는 그들의 역사관의 맹점을 폭로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 중에서도 극좌 김 일성 일당의 어용사가가 김 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하여 씌어진 선전용 책자인 본색을 만천하에 폭로한 것이라 하겠다.

<질 문 3>

북괴의 「과학원 역사 연구소」에서 발행한 「조선통사」는 허다한 허위사실을 선전적으로 꾸민 가운데에서도 특히 6.25 남침을 감행하고도 대북침공을 했다고 정반대의 기록을 합은 역사적 사실을 날조한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해 설>

북괴 「과학원 역사 연구소」에서 편찬 발행한 「조선통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하여 유물사관적으로 씌여진 것은 물론이며, 사회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계급투쟁과 그 분석, 그리고 대외적인 민족의 항쟁에 주안을 두고 있는 것이다.

역사가의 사명은 어디까지나 역사적 사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는 당파성이 배격되어야 하며, 당파성 자체의 분석도 역사연구에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은 역사를 과학으로 높인 근대 학문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에 이 통사는 북괴의 정책적인 선전서이며, 사회주의 사회의 정당함을 찬양하기 위함이며, 하권 제2장 「위대한 소련군대에 의한 조선해방」이라는 제목에서부터 그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과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악의 권화같이 증오에 가득찬 비난을 퍼부며, 그 반대로 공산주의제국, 특히 소련과 중공을 위대한 존재로 높이 우러러보는 입장의 서술이니, 이것은 북괴의 계몽과 선전서라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특히 6.25남침에 대하여는 제28장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이라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그 제1절은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의 개시 조선인민군의 반격전, 광대한 남반부지역 등의 해방」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첫 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미제와 이승만 역도들의 불의의 무

력침공, 조선인민군의 반공격, 수도서울의 해방”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허위 기록하고 있다.

“미제의 지시에 따라 그 주구들은 1950년 6월 25일 이른 새벽에 괴뢰(국방군)을 동원하여 공화국 북반부를 침공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조국을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동족상쟁의 내란도발로써 대답하였다.

남조선 괴뢰군의 불의의 침공으로 조성된 위급한 사태에 대처하여 공화국 정부는 남조선당국에 범죄적 군사행동을 엄중히 규탄하고 중지할 것을 경고하였다. 그러나 공격을 계속 확대하므로 부득이 같은 6.25 인민군대에게 반공격으로 넘어갈 것을 명령하였다”.

월문을 보아 거짓 기록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6.25 이른 새벽에 남한에서 불의의 대북침공을 한데 대하여 어느틈에 남한정부에 대하여 엄중히 규탄하고, 그 중지를 경고하였으며, 그것이 보람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어 같은 1950년 6월 25일 인민군이 반격을 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간적 경과면에 있어서도 생각할 수 없는 수수께끼라 아니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실에 있어서 1950년 6.25 당일은 남한에서는 일요일로 모든 군인이 휴무하였고, 남침정보에 접하자 군수뇌는 비로소 상호연락하는 등 대혼란을 일으킨 사실만으로도 대북침공이 아니었으며, 더우기 3일만에 수도서울이 괴뢰군에 함락했다는 것도 불의의 남침을 당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며, 그 후 유엔군 복진시에 김일성의 남침자전 명령서의 입수로서 명백히 들어난 사실인 것이다.

<질 문 4>

북괴가 발행한 「조선통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미국은 서울대학 도서관에 있던 「이조실록」을 비롯한 국보적 유물 7,800여점의 한국문화재를 약탈, 파괴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은 전연 없으며 오늘날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북괴의 역사서란 사실을 날조하는 어용 선전서라는 증거가 아닌가?

<해설>

북괴의 「조선통사」의 마지막장인 「제30장 해방후 인민교육 및 과학·문학·예술의 발전」에 있어서는 북한의 모든 문화육성이 잘 되었고, 그 반대로 남한의 것을 비방하고 있는 것은 고사하고 사실과 정반대인 다음 일설만 소개합니다.

“전후에 미제와 그 주구인 매국도당의 범죄적인 문화계 약탈·파괴행위는 더욱 극심하였다. 이미 전쟁전에 허다한 국보적 유물을 약탈한 미제는 전쟁시기에도 야수적인 폭격으로 막대한 문화유물을 파괴한 외에 서울대학 도서관에 있던 「이조실록」 및 1402년에 우리 선조들이 주조한 동할자 등 국보적인 유물을 비롯한 7,800여점을 약탈·파괴하였다. …「문화해제의 전시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문화유물들을 이제는 공공연하게 미제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사실과 어긋난 거짓말이다. 서울대학 도서관에 있던 「이조실록」을 비롯한 7,800여점을 약탈·파괴하였던 사실은 전연 없으며, 동란중에도 규장각(奎章閣)도서는 한권도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보관되어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문화해제의 전시에 관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 미국 각지에서 전시한 후 구라파 각국에까지 순회전시를 하여 우리나라 옛 문화재의 훌륭함을 각국에 인식시키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단 한점도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온 것은 일반이다 아는 바이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공공연하게 미제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다”고 한것은 완전히 사실을 왜곡 날조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이 처음부터 사실을 왜곡, 날조하여 역사를 꾸민다는 것은 20세기에 있어서 야만적 행위이며 김일성 일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질문 5>

북괴가 1959년 5월~1962년 1월 사이에 발행한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전 6권)란, 김일성 일당의 「혁명전통」을 조작하기 위하여 평균 하루에 28회의 전투를 10년간 그것도 백전백승했다는 허위의 투쟁사실을 실화적인 효과를 노려 수기의 형식으로 조작, 창작한 허위문서 중에서도 허위 문서가 아닌가?

<해 답>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는 김일성이 제멋대로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가 따라 다니던 중국공산당이 1930년대에 동만지방에 조직하였던 유격대 산하 조선인부대의 영웅화를 위하여 그 대원들의 수기의 형식을 빌어 조작해 낸 복괴의 수 많은 거짓찬 문서 중의 하나이다.

이나영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나 복괴 「과학원 역사연구소 근세 및 최근세사 연구실」편 「조선근대혁명운동사」에 의하여 종합하여 보면 「항일빨치산」의 업적은 실로 초인적인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20세의 김일성의 밑에는 6천여 명의 대원이 있어 15년간에 걸친 왜적과 무려 10여만회의 전투를 하여 한번도 패전한 일이 없고, 적을 살상하기 5만여명, 포로만도 수만명에 달하였으며, 이 유격대의 의각단체인 「조국광복회」의 비밀조직원은 국내외에 걸쳐 20만명이 넘었다는 것이다. 허황한 숫자의 나열이다.

김일성의 소위 「항일빨치산」이 실제로 활동한 것은 김일성이 중국공산당원으로 동만지구에 조직한 중국공산당의 한 유격대에 들어간 1932년부터 그들이 일제 관동군의 대토벌작전에 쫓기어 소련영내로 피해 간 1941년까지 약 10년간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의 말대로 10년간에 10만여회 전투를 하였다면 평균 1년에 1만여회 매일 28회, 즉 매시간 1회 이상의 전투를 10년간 계속한 것으로 된다. 그것도 백전백승했다면서 적 살상은 겨우 5만여명이라 한다. 수만명의 포로는 다 어떻게 되었으며, 1천명의 대원은 다 어떻게 되고 실제로는 2백명도 안 남았는가? 일제가 광란하던 말기에 20만명이나 넘던 비밀결사(조국광복회)원들은 다 어디로 가고 해방후 「나는 조국광복 회원이었다」하고 나타난 사람은 열명도 안 되는가? ... 너무나 우상화나 영웅화작업에 다급한 나머지 억지로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이러한 「항일빨치산 투쟁사」를 내 놓고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수 많은 예술작품을 창작하게 하다가, 그것으로도 신빙성이 적다하여 실화적 효과를 노려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이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인 것이다.

이 회상기 조작사업은 소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지속 당역사 연구소」의 중요한 사업으로 피어 창작, 아니 조작기술이 능숙한 작가·문인들을 총동원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토막 회상들을 취재하여 그것을 감동적으로 윤색 집필하

게 해서 참가자 자신이 쓴양 한 책에 23편씩을 수록하여 1959년 5월 제1권을 발행한 이후, 순차로 권을 거듭하여 1962년 1월에 제6권까지를 발간하였다. 발행 부수는 300만부 내지 500만부로 추측된다. 억지로 의무적으로 북한국민에게 읽히는 것이다.

<질 문 6>

애국자 김일성으로 둔갑한 북괴 김일성 (본명 金成柱)은 중국공산당제 소위 「마적」출신이며, 그의 「혁명전통」이란 동만지구 중국공산당의 뒤를 따라 다니던 소위 마적단들이 민간인의 재산약탈과 양민학살을 일삼던 그 전통을 마치 애국항일 전통인양 꾸민 것은 거짓 전통이 아닌가?

<해 설>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이고, 그는 평안남도 대동군 용산면 하리 만경대에서 출생하여 그의 부친을 따라 만주에 가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1926년 그의 부친이 사망하자 길림(吉林)에 있는 중국공산당제 중학교에 입학했다가 그해 8월에 중국공산 청년동맹 소년부에 가입했다. 이때가 만 14세이다. 그후 1931년 10월에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였으며, 그 다음해인 32년 4월에 중국공산당이 조직한 동만지구의 항일유격대의 한 소부대의 대장이 되었다.

“동만지역에서 김일성 동지는 공칭 동만특별구 비서로서 활동하면서 1931년 10월 공산당에 입당하였다”(조선근대 혁명운동사 p. 289)

「조선근대 혁명운동사」라는 북괴의 간행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공산당에 김일성이 입당했음은 의심할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1932년 4월에 만주에서 조직했다는 유격대가 중국공산당의 지령에 의하지 않고 순전히 그 자신의 창의에 의하여 창설되었다는 것은 거짓인 것이다.

사실 김일성은 그때 중국공산당이 만주에 조직한 항일연군(抗日聯軍)의 한 날 소대장으로 출발하여 가장 승진하였을 때가 중공중앙에서 파견된 사령관 청우→참모 주모중→그리고 제3군장 왕덕태 밑의→제6사장 병력 100~300명(내외)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41년 일제 관동군의 대토벌작전에 쫓겨 중국 연안까지 갈 형편도 못되어 소련으로 뛰어 들어갔던 자들이, 바로 김일성 일당이 그렇듯 내 세우며 자랑하고 거창하게 회상하는 항일빨치산의 정체란 것

이다.

김일성 일당은 중공의 재만항일연군의 뒤를 따라다닌 그 사실은 숨겨 놓고 오로지 조선민족 해방을 위하여 유격대도 자기 창의로 창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제 반일세력과의 연합전선 결성도, 그 정책·노선의 수립도 실천도 모두 오직 김일성이가 천재적으로 영리하게 해 치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중공계 마적단에 속하여 있으면서 재만동포의 재산약탈과 양민을 학살하는 등 허다한 비적행위를 한것이 바로 김일성 일당인 것이다.

2. 정 치

<질 문 7>

북괴의 법이 괴뢰당의 「당의 노선」과 「혁명의 이익」을 옹호·수호하고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정치권력의 무기라면 법은 정적(政敵)을 숙청하는 무기이자 양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무기로 된 것이 아닌가?

<해 설>

「북한에서 오늘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법은 어떤 법인가」를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적 경제제도하에서 살고 있으며, 노동자·농민 기타 광범한 근로인민이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주·자본가들의 반혁명적 반항을 진압하는 인민정권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법은 무기로 되어야 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로 되어야 할 것은 명백합니다”.

이 말은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고, 우리의 노력에 대해 외면하며 프롤레타리아독재에 해독을 끼치는 모든 행위는 처벌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치적 제도 및 그 제도를 굳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정치적 성과와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위협을 갖어올만한 행위, 다시 말해서 사회에 위협을 갖어올만한 행위는 비록 그것이 조그마한 행위일지라도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북괴의 형사정책의 근본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북괴가 규정하는 사회적 위협성이란 소위

「당의 노선」과 「혁명의 이익」에 해독을 끼치는 것과 직결되고 있으므로 이불 수호·옹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면, 그것은 어떠한 행위일지라도 사회적 위험성이 없고, 따라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법은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관권이 계재하여 마음대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정책은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말살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선량한 북한 주민의 기본 인권을 유린하고 나아가서 침묵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실제적 작용을 하게 되니, 북한은 법이란 있을 수 없고, 완전히 무법천지로 되고 만 것이다.

<질 문 8>

북괴 헌법에 의하면 판사는 재판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법령에만 복종하는 것(제88조)으로 되어 있고, 최고재판소장의 선거와 검찰총장의 임명은 최고인민회의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되어 (제37조) 있으나, 김일성은 이를 정식 부정하고 사법일꾼들이 정치사업을 우선해야 한다함은 완전히 헌법과 사법권 독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해 설>

북괴 사법기관의 사법지침을 보면, 법을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 전취물을 지키는 무기로 삼고 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이기에 그 법을 운영·집행하는 사법기관은 고도의 정치성을 갖어야 하는 것이 큰 특징으로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치를 떠나서는 법을 알 수 없고 법을 집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판사 및 검사가 법에만 복종하지 말고 소위 초헌법적 권력체인 당의 지도와 통제 밑에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북괴 헌법에 의하면, 판사는 재판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오직 법령에만 복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제88조), 최고재판소장의 선거와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가최고권력을 행사」하는 최고인민회의의 전속적 권한으로 되고 있다. (제37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김일성은 이것을 부정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법에만 복종한다 하면서 당도 소용없고 정권도 다 필요치 않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투쟁해야 합니다. 이진 최고재판소 소장으로 있던

황세환이 같은 자는 마지막 시기에 와서는 당에도 오지 않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두봉한테만 찾아 갔습니다. 그는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 회의에서 선거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인민회의에만 속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인민들은 누가 지도하고 그 인민회의는 누가 영도하고 있는가. 이것은 모두 다 우리당이 영도하는 당입니다”.

북괴의 소위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김일성의 이 말은 그의 다음 말에서 더욱 뚜렷해 진다.

“우리 나라의 법은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입니다. 우리 국가의 정책은 우리당의 정책입니다. 우리 당의 정치노선과 정책을 모르고는 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법률을 집행하는 일꾼들은 우리 당의 정책과 국가의 모든 방침을 실행하는 하나의 정치 일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이 혼자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정치의 표현이기 때문에 정치에 복종되어야 하며 그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모든 조직이 다 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원칙입니다. ”

여기에서 판사·검사 및 배심원을 포함하는 모든 사법기관원들은 그들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법에만 복종하는 실무주의자가 되지 못하도록 통제를 받게 되며, 당정책을 옹호하는 정치일꾼이 되어 정치사업을 선행하도록 강제 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일꾼들은 그때마다 제기되는 괴뢰당의 기본 정책을 옹호 내지 관철하는 무기의 작용을 행할 뿐이다.

그러므로 북한에 있어서는 형법이나 민법 같은 것만이 법이 아니고, 인민경제 계획도 법령으로 규제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경제계획 수행상황에 일반 감시의 칼날을 휘두른다는 것은 주민을 법의 위력으로 노동지옥으로 몰아 넣으며, 또 한편 경제계획의 미달시에는 「인민의적」 「반혁명분자」로 조작해 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질 문 9>

북한에서는 범죄가 생기면 으레히 소위 성분나쁜자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범죄자에 대한 형의 선고는 중형을 가하면 가할수록 당에 충성하는 표현으로 된다면 법 이론이나 법 조문은 이미 사문서화 한것이 아닌가?

<해 설>

북한에서는 어떤 범죄가 생기면 그들은 반드시 비계급적 이색분자 또는 그

들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자들의 소행으로 규정한다. 김일성은 “토지를 빼앗긴 지주의 사상은 죽어야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주들의 사상잔재가 낙후한 일부인민들과 농민들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기본계급 출신으로 당의 노선에 충실히 추종하고 있는 자들은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당의 노선에 열성적으로 따르지 않는 비계급적 출신자들은 범죄행위의 요소가 있는자, 즉 범죄형 인간으로 규정하고, 나아가서 그들의 행위는 과실행위 일지라도 고의에 의한 행위로 단정된다. 이 방법을 통해서 사법기관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범죄행위의 목적과 동기 등을 조작하여 신속히 처리해 버리는 것이다. 범죄자에 대한 형의 선고는 중형을 가하면 가할수록 당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으로 된다. 이때에 범죄의 정상이나 사법 검찰관들의 법 이론은 중요시되지 않는다. 즉 적당한 명분을 찾아 정벌과 제재를 중하게 가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질 문 10>

스탈린이 죽은후 소련을 비롯하여 공산주의 나라들에서는 수정주의와 자유화로 점차 마르크스·레닌주의란 광신교에서 탈피하고 있는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북한은 광신교도 붕괴할 날이 닥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

<해 설>

본시 공산주의란 한 종교에 불과하다고 말한 학자도 있지만, 이것은 아직 공산주의를 많이 봐준 말이다. 공산주의란 그 자체로써 광신교이다. 그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반박되었고, 모순 투성이가 들어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정당한 진리라고 맹신케 하는 교리면에 있어서 그러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수단이나 비인간적 방법도 옳다는 행동면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특히 당수를 교주로 철저히 우상화하여 그의 명령에 절대 복종케 하는 계율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20세기도 후반기에 들어선 오늘, 그러한 비과학적(자기네는 가장 과학적이라고 억지를 쓰지만)광신교가 통용될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스탈린이 죽은 후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국들에서 일어난 수정주의며 자유화라는 것이 다름 아닌 이 광신교에서 부터 점진적으로 탈피하기 위한 몸부림의 한 모습인 것이다.

그런데 유독 김일성만은(모택동도 그 비슷하지만) 이 광신교 정책을 의식적, 계획적으로 내 세우고, 김일성 광신교를 북한의 국교로 만들고 전주민을 빠짐 없이 이 광신교도로 만들기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 교리에 김일성 교시라는 것까지 첨가하여 전 북한주민들에게 이것만 맹신하고 그가 가르치는 대로만 하면 지상 낙원이 곧 실현된다고 몽매한 사람들을 속여 넘겨서 칠리마 교역을 강요하여 자기의 붉은 야망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모든 사람을 공산 광신교도로 만드는 방법을 여러가지로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한 마디로 공산주의를 무조건 믿고, 또 김일성의 가르치는 대로만 하면 곧 “지상 낙원이 실현된다는 광신교주적인 말을 하고 있으며, 그는 또 불과 수년이면 쌀 더미를 쌓아놓고 제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할 수 있도록 물자가 풍부한 공산 낙원이 실현된다고, 곧 탄로가 날 거짓말을 늘어 놓았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공산주의는 먼 장래 일이 아니고 가까운 장래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계속 1~2년간 더 악전 고투하면 7~8년내에 이미 말한 과업들이 실행된다면 우리는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알곡을 500~700만톤 생산한다면 식량은 대단히 풍부해 질 것이다. 입쌀 더미를 잔뜩 쌓아 놓고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곧 공산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허풍을 떠는 때로부터 1~2년은 고사하고 10여년이 지나 갔으나, 지금 북한에서는 입쌀 더미를 잔뜩 쌓아놓고 마음대로 가져가라기는 고사하고 성인 노동자에게 700g씩 주던 잡곡 섞인 식량배급조차 오히려 50g씩 줄여서 650g을 주어 세 끼 죽도 못 쑤어 먹게 하는 실정인 것이다. 그래도 김일성은 계속 거짓으로 광신교 정책을 추구한다. 아니 더 강화한다. 이것이 바로 자멸의 날을 재촉하는 자기 광란의 몸부림인 것이다.

<질 문 11>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북한의 공산광신교도들은 물건처럼 억지로 만들어져야 하며 풍랑을 만나서도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읽고 김일성에게 구원을 빌었더니 풍랑이 멎었다는 기적설과 자본주의의 자유, 민주주의사회 특히 남한이 지옥이라는 지옥설은 하나에서 열까지 허위가 아니면 꾸며진 조작극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해 설>

김일성은 소위 「사회주의 개조완성」과 더불어 「천리마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공산주의 인간개조운동」을 대대적으로 펴게 하였다. 즉 전북한주민을 「공산주의 인간」으로 개조한다는 것인데 「공산주의 인간」이란 어떤 인간이냐에 대하여 김일성은 “공산주의 인간이란 공산주의적으로 배우고 공산주의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명확한 규정을 지었다. 공산주의적으로 배우는 것은 김일성당(黨)이 배워주는 공산주의 교리만을 맹목적으로 배우고 따르는 것은 배울 생각도 말라는 것이고, 공산주의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김일성 일당이 시키는 대로 천리마고역을 실새 없이 다구치라는 것이고, 공산주의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과중히 험벗고 굶주리면서도 아무 불평은 고사하고 이것이 김일성 교주가 베풀어 준 낙원이라고 즐거히 살라는 것이다. 보통 인간으로서야 생각조차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나 그러기에 모든 사람을 그럴 수 있는 공산주의 인간, 즉 김일성식 광신교도로 어떤 억지로 하던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산 광신교도를 만드는 것을 공산주의 교양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김일성을 교주로 우상화하는 소위 「혁명전통」을 조작한다. 이 혁명전통이란,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전통이라는 것으로, 김일성은 “아무리 곤란한 난국에 처해서도 하면 되고 싸우면 이긴다”는 엉터리 영웅으로 우상화해 가지고 그대로만 본 받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라는 허황한 책자들「전 6권」을 조작해 가지고 이것을 김일성교의 경전으로 삼아 수백만부를 북한 주민 사이에 강제 배포해서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전부 이를 암송케 하고 있다. 중공의 「모택동 어록」 소란의 선배격이다. 그래서 아무리 난관에 부딪쳐도 이것만 위우고 있으면 자연히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 한 예로써 1963년 3월에 북한의 민청호어선 두 척이 고기잡이 하던 중 배가 뒤집힐 듯한 풍랑을 만나게 되자, 전 선원이 풍랑과의 싸움 대신 김일성의 초상화를 모신 선장실에 뚫어 앉아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몇 회 나열독하여 김일성수령에게 구원을 빌었더니, 과연 광란하던 풍랑은 잔잔히 가라 앉고, 어선과 더불어 전원이 구출되는 기적이 나타났다고 북한 신문들은 이것을 대서 특필하고, 심지어 일본 동경에서 출판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1963년 3월16일부)조차 이것을 전재하는 희극을 벌였다. 광신교에는 기적 조작이 따르게 마련이

지만, 20세기도 후반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정말인 듯 선전되고 있으니 이것이 광신교가 아니고서야 생각이나 해낼 일인가! 그러나 오늘 북한에서 이러한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조작되고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한 때 김일성에 관련해서 수령이 숨 쉬는 대로 숨 쉬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자는 구호가 북한을 휩쓸었는데 일찍이 숨 쉬는 것 까지 교주 쉬는대로 쉬라고 명령한 광신교주나 독재자는 역사상 없었던 것이다.

또 광신교에는 가지가지의 거짓과 특히 허황한 지옥설이 따르게 마련인데 김일성 일당에게 있어서 지옥은 자본주의 자유, 민주주의 사회요, 그 중에서도 남한이라는 것이다. 남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영양실조로 쓸어저가는 생지옥이니, 일제시대 이상의 식민지니 하면서 악선전을 퍼뜨리고 있다.

<질 문 12>

김일성의 경력은 첫째는 중국공산당에 속 하였고, 둘째는 소련군 출신이므로 제아무리 「자주노선」을 떠버려야 소련과 중공의 두 상전의 틈바구니에 헤어날 도리가 없는 실정이고 보면, 김일성의 「자주노선」이란 북한주민을 기만하고 자기를 영웅화하려는 속셈에서 나온 구호에 지나지 않는 관계가 아닌가?

<해 설>

「매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은 무엇보다도 그나라 자체의 힘에 의하여 수행한다. 그런데 지금 일부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력갱생과 자립경제 노선을 극력 반대하며 방해하고 있다. 그들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에 대하여 「민족주의적 편향」이요, 「폐쇄적인 경제」라고 딱지를 부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위협하며 경제적으로 유해로운」노선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무슨 「생산전통」이니 「수익성」이니 하면서—오직 큰 나라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자유요, 민주주의요, 준법성이요, 인도주의요 하면서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상적 혼란을 조성하며 계급투쟁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 현재의 논쟁은 결국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수정주의 간의 투쟁이다.

“우리당은 국제공산주의 운동내에서 의견 상이가 발생한 첫날부터 시종일관 단결의 원칙을 수호하여 왔다”라고 하였다. (1963년 10월 28일자 노동신문 사

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국제공산주의 내부에서 사상 논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이미 하나의 사상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마르크스·레닌주의로서는 세계공산화 운동의 이념이 될 수 없다는 증거이며 각기 사회주의 국가내에서의 독자 노선을 밟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북괴는 1965년 2월 코시킨이 북평을 거쳐 평양방문 이후로는 침묵을 지키던 것이 그해 8월 세레핀이 평양에 도착하자 원산에서 대대적인 환영대회를 벌였고 모든 매스·미디어는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 경제군사 원조체결을 맺으므로서 친중공 노선에서 친소 노선으로 변모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해인 66년 10월 공산당 대표자대회에서 재차 자주노선을 선포 재천명 했다. 이리하여 「자주성을 옹호하자」의 내용을 보면 중공 모택동의 문화정풍과 소련수정주의 튼바귀에서 이미 북한에 실천된 스탈린적 독재체제 즉 김일성체제를 고수·강화하자는 속셈에서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것은 한낱 북한주민을 기만하고 마치 어떤 큰 나라에도 예측되지 않고 자주적이고 민족주의적 애국영웅인양 가장하기 위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질 문 13>

김일성은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는 그 누구든지 언제 어디에서나 숙청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데 그것이 바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무기라면, 이 김일성의 무기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인만큼 김일성이야말로 수정주의자나 그렇지 않으면 교조주의자가 아닌가?

<해 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교시나 담화는 모두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말로 통한다. 김일성은 창조적이라는 말로 교조주의를 때리고 적용이라는 말로 수정주의를 짜르는데 적용하고 있다.

여하튼 김일성은 자기의 옛 동료들 어느때는 수정주의 어느때는 교조주의로 아무렇게나 모라칠 수 있는 말이 「창조적 적용」이란 말로 되어 있는 것이다.

김일성 일당은 그들이 이용하던 박헌영, 이승협을 간첩 또는 진화적 발전의

사상을 가진 반혁명본자라 하여 숙청하였고, 최창익, 박창옥을 혁명만 아는 무정부주의자 인권옹호니, 준법정신이니, 민주주의니, 자유니하는 우경 기회주의자로 규정하고 당위에 직책을 놓으려는 수정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이처럼 최창익이나 박창옥이 가장 악랄한 수정주의자의 표본으로 거듭하여 자주 인용되는가 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둘도 없는 교조주의자로 등장시킨다.

“지난날 최창익을 비롯한 엠·엘(M·L)종파 분자들은 우리나라 혁명발전의 역사적 단계에 대한 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해방후부터 사회주의 혁명을 떠벌리었다. 그리하여 놈들은 당을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고 혁명을 망쳐먹으려고 시도 하였다.

최창익 박창옥을 비롯한 반당 반혁명 종파도당들은 민족문화 유산에 대하여 허무주의적 태도를 취하였다.”(북괴 철학교과서 변증법적 및 역사적 유물론)

북괴가 발행한 철학교과서에 의하면 결국 특수성만 아는 수정주의자라고 몰렸던 최창익 일파는 특수성을 부인한 교조주의자라는 울개미를 쓰게 된다. 이것이 소위 김일성의 「창조적 적용」이란 말이다. 아무튼 김일성의 말은 「창조적 적용」인 만큼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다른 점을 주장하는 것이니 수정주의 일수 밖에 없고, 남의 것을 적용하는 것이니 틀림 없는 교조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질 문 14>

북괴는 공산당 이외에 다른 당이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헌법에는 “정당·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 놓고 이미 조직된 「조민당」과 「청우당」마저 중앙당 간판과 당수만이 있는 이용·유명정당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대체 김일성 일당은 다른 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인지 부정하는 것인지 그 어느 쪽인가?

<해 설>

소련은 제2차대전 후에 그들의 점령지역인 공산위성 국가들에 대하여 다수당제(多數黨制)를 실시하도록 종용하였다.

그들은 공산당의 기반이 약한 이들 국가에 처음부터 공산당독재 정치를 내세우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반항심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 대중의 의사를 대표하는 양 다수당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일당독재를 원칙으로 하는 공산당 치하에서는, 우당(友黨)이란 “공산당의 정책과 노선을 그대로 순종하는 당”이라는 결론밖에 나올것이 없었던 것이다.

해방후 김일성 역시 소련의 앞잡이로서 북한에 들어와서 소위 우당정책을 내세워 「인민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조만식을 당수로하는 「북조선민주당」(1945. 11. 3 창당)과, 김달현을 당수로하는 「천도교 청우당」(1946. 2. 5 창당)을 창당하는데 협력 하였다.

북괴는 소련의 조종하에 우당이라 하여 「북조선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을 만들게 하고, “정당들의 통일전선적 토대 위에”라는 명목 밑에,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위원장으로 괴수 김일성을 임명하였다.

김일성은 그해 3월 26일 소위 20개정강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그 정강 제3항에는 “전체 인민에게 언론·출판·집회 및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것, 민주주의적인 정당·노동조합·농민조합 및 제 민주주의적 산하단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자유를 보장할 것...” 이라고 명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후 새로운 정당 결사의 조직은 고사하고, 종래부터 있던 소위 민주제 정당조차 그 활동의 자유가 억제되어 갈 뿐이었다.

이러한 억제는 소위 북괴정권이 세워진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북괴 헌법에만 정당 결사의 자유를 명기했고, 제13조에는 “공민은 언론·출판·결사·집회·군중대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공민은 민주주의 정당·직업동맹·협동단체·체육·문화·기술·과학·기타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해 놓았을 뿐이다.

이것이 거짓말 문구의 나열임은 오늘날 북한의 모든 현실이 입증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민주정당 조직의 자유란 공문(空文)중의 공문이다.

북한에는 북괴 소위 노동당 외에 「조민당」과 「청우당」이 있지만 그것은 다만 북괴당에 대하여 맹종과 아부만을 일삼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959년부터 1960년 사이에 「조민당」과 「청우당」은 그 하부조직 「군·시당 이하는 물론 도당에 이르기까지」은 모조리 해체 당하고 중앙당의 간부 몇 사람만 남겨 놓았으니, 결국 대표자 한 사람에 당의 간판만을 걸어 놓게 하고 있는 셈이다.

<질 문 15>

북한에서의 우당(友黨)이란 북괴당수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돌리리 정당으로서 북괴의 정책과 지시를 전적으로 지지·철폐하는 정당이며 그것도 도당이하 하부조직이 없는 중앙당 당수 한 사람과 간판만이 있을 뿐이니, 이것은 완전히 어용·유령정당이 아닌가?

<해 설>

북괴당 제 4 차대회 때 제 1 우당 대표로서 「북조선민주당」당수 강양옥은 그 축하 연설에서 “우리 전체 조선민주 당원들은 김일성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위원회」와 「공화국정부」 주위에 굳게 뭉치어 수령이 부르시는 길로 다함께 전진할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외쳤다. 이것이 바로 북한에서의 우당 당수의 자제요, 이른바 민주정당의 상징적인 목소리인 것이다.

즉, 우당이란 북괴의 필요에 따라, 북한에도 공산당 외에 다른 정당이 있다는 구실과 조각극에 필요한 때만 등장시킬 수 있는 편리한 유령당이다. 이 점에 대하여 김일성은 1958년 11월 당 선전 선동 일꾼들 앞에서 한 연설가운데서 “노동당원이나 비당원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노동당에 충실해야 한다. 노동당은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보장해 주는 조선인민의 지도역량이다”라고 잘라 말한 일이 있다.

김일성의 말과 같이 북괴치하에서는 노동당이나, 비당이나 할 것 없이 다같이 충성해야 한다면, 도대체 노동당 이외에 다른 정당이 존재할 가치가 없으며, 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말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에 참고로 「조선민주당」이 어떻게 변질 몰락하였는가를 살펴보면, 1946년 1월 신탁통치를 반대한다 하여 창당자 조만식을 감금하고 그해 2월 5일 소련군정 지시 하에 최용건일당으로 하여금 소위 「북조선민주당 열성자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하고, 조만식당수를 친일파라고까지 중상·규탄하고, 공산당 쿠락치를 대거 입당시켜 당임원을 전면 개편하고 임시 당수로 강양옥을 선출했다. 그러나, 20일도 채 지나지 않은 그 해 2월 24일에 새로 선임된 자도 대표 190명을 소집해 가지고 민주당 제1차전당 대회를 개최하고 처음 프로그램대로 당시 공산당 비밀당원으로 아지도 민주주의자 행세를 하던 최용건을 당수로 선출하였다. 이때부터 북조선민주당은 사실상 공산화하여 공산당의 분가 노릇

을 하게 되어, 1947년 4월에 제 2차전당 대회를 열어 강령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김일성의 소위 20개정강을 본판 강령으로 되었던 것이다.

그 후 최용진은 1956년 4월 북괴당 제 3차대회에서는 북조선민주당의 당수인 채 북괴당인 본가(本家)로 돌아가서 그 부위원장이 되어 버렸고, 북조선 민주당에서는 대회도 열지 않고 어느 사이에 강양육이가 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당수)으로서 행세를 하게 되었으며, 1958년 이후는 지방조직이 없는 당수와 간판만이 남아있는 꼴이 되었다.

이것이 북괴치하에서의 우당이라는 「민주정당」의 모습이다.

그러기에 근년에 북괴가 발행하는 그들의 유일한 관제년감인 「조선중앙년감」의 정당·사회단체란을 보면 북괴당에 대하여는 수만자씩 나열하여 대서특필하면서도 그 이외의 정당에 대하여는 심지어 제 1우당이라는 「조선민주당」에 대해서조차 오직 당명과 창당년. 월. 일, 당수 이름 세줄 밖에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다른 당들을 그만큼 무시한다는 증좌인 동시에 그 실은 중앙당 간부조차 없는 그대로의 사실기록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질 문 16>

김일성은 자기의 일인독재를 구축하기 위하여 소련의 비호하에 해방직후 민족주의자 조만식의 숙청에서 시작하여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 갑산파 등 급기야 자기의 심복마저 불안과 공포에서 숙청하였으니, 북한 25년사란 김일성 일당의 정적(政敵) 숙청사가 아닌가?

<해 설>

북괴 김일성 일당은 소련군의 비호밑에 북한에 들어오자 해방 이듬해인 46년 1월 5일 민족주의자이며 조선민주당의 당수인 조만식을 감금하고, 정적(政敵)의 숙청에 들어갔다. 우선 국내파의 숙청으로 판서공산주의자인 현준혁과 판북공산주의자인 주영하, 오기섭 등을 숙청했고, 6.25사변중에는 패전의 책임을 군부에 돌려 연안파 군부의 실력자인 무정에게 전가하여 숙청했고, 이어 김열·김한중 등 군부숙청과 당관료파이자 소련 2세인 허가이(당조직 책)를 숙청하였다.

6.25 사변중 남노당원의 대거입북과 패전의 결과 박헌영을 중심으로의 세력이 팽창되자 1953년 휴전을 전후하여 미국의 간첩이란 누명을 씌워 남노당파

인 박헌영, 이강국, 이승엽, 임화등을 숙청했고, 1956년 4월 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연안파와 소련 2세파의 실권을 거세하면서 소위 갑산파라는 자기실복들을 동용시킴으로써 자기의 권력기반을 강화하였다.

1956년 6월 1일부터 김일성은 5개년계획에 소요되는 자금과 물자를 구결하기 위하여 소련을 비롯한 동구제국 순방길에 올랐는데 이를 기해서 반김일성투쟁 모의가 성숙되고 동년 8월 29일 김일성의 귀환 보고를 위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마련되자 이 자리에서 그들은 김일성의 스탈린식 개인 독재정책을 신랄히 비난함으로써 다수의 호응을 기대하면서 당내 주도권을 장악하고 김일성 일당을 타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8월 반김일성 투쟁은 비밀누설과 당중앙위원들의 반격에 의하여 미수에 그쳤으며, 김일성은 이를 계기로 연안파, 소련파의 완전 제거를 획책했으나 소련과 중공의 두 상건의 압력에 의해서 이를 즉각 단행치 못하고 1957년 8월경부터 최창익, 박창욱 등을 위시하여 반김일성 투쟁에 가담했던 자를 모조리 북괴식 인민재판에 의해서 처단해 버렸다.

1958년에는 연안파출신이며 비교적 온건파로 알려진 김두봉마저 숙청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이나 「재북평화통일 위원회」에 속했던 유명·무명의 인사들(조소양, 엄창섭, 오화영 등)이 모조리 처형 당함으로써 당내외의 김일성의 정적은 모두 숙청 당하고 말았다.

1961년 9월 괴뢰당 제 4 차대회와 1962년 10월 제 3 차 내각조직에서 김일성은 갑산파라는 자파세력과 해방후 자기가 양성한 줄개들로 모든 요직을 독점시킨 후에는 비수를 갑산파내에 돌려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자를 무자비 하게 숙청했다.

60년대 북괴의 권력투쟁은 김일성 자파끼리의 싸움이며 통일방안을 둘러싼 권력투쟁으로 특징지어 지고 있다.

북괴가 친중공노선에서 친소노선으로 전환하면서 대소비난의 책임을 김창만(민족보위상)에 전가하여 1965년 초에 그를 숙청한 후 1967년 12월 제4차 김일성내각을 위하여 박금철, 이효순(대남지하공작파)등 지하공작파의 숙청을 단행했다.

그후 1969년 「조선인민군」 제 4 기 4차전원 회의에서는 김창봉(민족보위상), 허봉학(대남총국장), 최광(총참모장), 최만철(제 1 집단군 사령관), 정병갑(제 3 집단군 사령관), 김양춘(제 7 집단군 사령관), 유창권(해군 사령관), 김정태

(민보성 경찰국), 조동철(생산유격대대 당책임비서), 김창기(김창봉의 형), 김창덕(김창봉의 제)등 그가 심복으로 끌고 다니던 10여명의 군고위 수뇌급을 모조리 제거했는데 이들은 김일성의 군사노선에 따르지 않고 전쟁준비를 소홀히 하였다는 등 10여항목의 죄상을 열거했던 것이다.

김일성의 숙청방법이란 국내파를 숙청할 때에는 국외파인 연안파, 소련파를 이용하여 가세케 하고, 연안파, 소련파의 숙청에는 자파를 등장시키고, 즉 당료파를 숙청할 때에는 군부의 힘을 빌고, 그 뒤를 이어 군부를 숙청한 오늘, 김일성 지계는 강동정치학원 등 해방 후 김일성이 양성한 세력들이 대부분이다.

이제 숙청의 비수는 어디로 돌려질 것인가? 정녕 김일성은 자기의 수족을 다 잘랐으니, 결국 자기의 무덤을 판 셈인 것이다.

3. 경 제

<질 문 17>

북한주민들은 하루 15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도 복귀의 법에 정한 8시간 외의 노동시간에 대한 노임을 못 받고 있다면, 이것은 노동력착취와 임금착취가 아닌가?

<해 설>

북괴의 노동법령을 보면 제 1 조에서 노동자·사무원에게 8시간 노동일을 정하고, 유해노동·지하노동자에게는 7시간, 14~16세의 소년에게는 6시간 노동일을 정하여 놓고, 이어 제 4 조에서는 14세 미만의 소년노동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제 5 조에서는 시간외 노동은 1년 250시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 시간외 노동·휴일의 노동은 보통 노동임금의 1.5배를 계산하도록 돼 있다. 그 밖의 조항들은 차치하고, 이 몇 가지 조항만으로도 오늘날 북괴가 북한 주민들로부터 착취하는 노동량은, 현재 북한주민들이 받고 있는 보수만큼 착취 당하고 있다는 계산이 된다.

즉 하루 15시간 노동을 한다면 그 중에서 휴식시간, 점심시간 등을 빼고 14시간을 잡으면, 14시간에서 8시간을 빼면 6시간의 시간외 노동을 하는 셈이 된다.

이 6시간 중에서 회의·학습회 등 시간을 1시간쯤 빼어도 5시간이 나온다. 이 5시간의 시간의 노동을 1.5배 하면 7시간 반이라는 계산이 되므로 노동보수는 7.5시간분이 더 나와야 할 것이다.

그 뿐인가, 휴일인 일요일도 계속 노동하고 있으니 그것만도 년 50여시간이 되고, 1년 2주일의 소위 「사회보험제」에 의한 휴가도 계산에 넣지 않으니, 하루 평균 8시간도 넘는 시간의 보수를 받아야 마땅하나, 복피는 이것을 자발적인 애국노동이니, 사회주의 경쟁운동이니 하는 구실하에 전체주민의 노동 대가를 송두리채 착취하고 있으니 이것은 분명히 전북한주민의 노동력 착취, 노임 착취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헌법을 유폐하는 무법사회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질 문 18>

북한주민들은 자기들이 만든 물품도 대개 사정가격의 5배 이상의 비싼 값으로 구입한다면, 결국 북한주민들은 「가격착취」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착취경제 운동에 휘말려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해 설>

복피는 북한 근로자들의 손에 의하여 생산된 모든 생산품과 상품은 생산 원가에 수수료·세금·운반비 그리고 정당한 이윤을 가산하여 팔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 북한의 경제를 장악하고 마음대로 가격을 사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화로 몇 배의 비싼가격을 정함으로써 상품을 통한 가격착취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대체로 4~5배의 가격착취를 당하고 있다.

심지어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일 경우에는 10배 이상의 이익을 붙인다고 하니 국가권력과 사회주의 경제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착취를 마음대로 하는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붙이는 이윤을 그들은 격차금이라고 말한다. 이 격차금은 주민의 고혈(노동력착취·가격착취)로 이루어진 피투성이 돈이다. 그들은 이 돈으로 공산주의 최종 목표인 남한까지 적화통일 하기 위한 동족상잔의 무력증강과 파괴공작과 허무한 선전에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피의 간부들은 특별배급 제도가 있어 싼 가격으로 어떠한 물건이던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만이 사용하는 10호 상점이라는

것이 평양에는 있어서 부상금 이상 가족만이 자유로이 출입하여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실례를 들면, 오바지 한벌에 특매 가격은 1,000원(화폐개혁전)인데, 정찰가격은 13,000원이라 한다.

노력착취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주민들은 가뜩이나 기준량에 비하여 싼 임금, 「세계에서도 최저의 기아임금」을 받고 일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고도 자발적이니 애국노동이니 하면서 법에 명시된 보통노임의 1.5배의 노임을 받지 못하고, 더욱 더 노동강도만을 높이도록 강요될 뿐이고, 자기들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일용품마저 비싼값으로 구입해야하는 가격착취를 당하고 있으니 북한주민은 「노동력착취, 임금착취, 가격착취」라는 3중의 착취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질 문 19>

김일성 일당은 그들의 헌법에는 “토지는 발같이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개인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등 명시하고는 협동화(인민화)의 이름으로 개인 소유란 일체 인정치 않고 모조리 수탈 착취함은 자기 헌법에 위배되고 인민들을 속인 배반 행위가 아닌가?

<해 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고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할 때 대한 역사적인 혁명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였다...” 전후시기에 전면적으로 전개된 농업·수공업 및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1958년에 와서 거의 동시에 완성 되었다.

이와같은 김일성의 말은, 북한의 도시와 농촌의 모든 경제를 사회주의화라는 명목으로 완전 수탈하여 독점해 버렸다는 말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개인의 것이라고는 구멍가게 하나 없고, 개인농민 한 사람도 없게 됐다는 자랑이다. 물론 그들은 국유화니 협동화니 하며, 인민의 소유는 공동(협동)소유가 될 듯이 자랑 선전한다. 그러나 그것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되었는가? 무릇, 어떤 경제(재화나 기업이나 그 생산물이나)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은, 실제로 누가 그것을 틀어쥐고 마음대로 처리·처분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오늘 북한에서는 그것을 제 손에 틀어쥐고 마음대로 처리·처

분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것은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공산당 일당 밖에 없는 것이다.

그들은 누구의 의사도 묻지 않고 누구와 협의하는 일조차 없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에 있어 그것은 사회주의화가 아니라 「공산당화」, 더 정확히 말하면 김일성 일당화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정치의 독재와 경제의 독점이 완전히 일체로 혼합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협동 조합에서는 경농(耕農)뿐 아니라, 그 지방산업, 상업, 금융, 교육, 문화, 그리고 행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관리케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와 경제의 완전한 혼합이다. 통치자가 기업주요, 지주도 된 것이다. 정치 행정을 하는 자가 모든 경제관리도 도맡아 하는 것이다. 그것을 공산당들은 가장 발전된 생산관계인 사회형태라고 자랑하면서 억지로 실현시켜 놓은 것이다. 전복한 범위에서 이 전제통치권까지를 틀어 쥔 단일적 내지주 그것이 바로 김일성주인 것이다. 그리고 농민은 모조리 소작인 보다도 못한 농노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그들은 협동생산을 한다고 하나, 그것은 노동생산을 강화할 위한 집단노동을 할 뿐, 그들이 생산한 수확은 모두 공동관리의 명목으로 공산 피뢰들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만다.

김일성 일당은 해방이 되자마자 46년 3월에 토지개혁을 강행하여, 토지는 발같이 하는 자에게만 준다고 하며 가난한 농민들을 회유하더니, 그로부터 불과 10여년에 그것을 모조리 협동소유의 구실로 다시 수탈해 버리고 농민들을 농노로 전락시킨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는 그 명목적 협동소유나마 폐지하고 완전히 국유화(인민화), 즉 김일성 일당 화해 버릴 것을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보다 효율적인 착취를 노리는 김일성 일당의 종국적 목표요, 그 밑의 모든 농민의 필연적 운명인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노동자들을 모두 “일군”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말은 곧 공산당의 지배하의 “일군”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질 문 20>

「사회주의 개조」라는 간판을 내걸고, 북한에서는 농토의 수탈과 마찬가지로 산업부문에서도 국유화하여 협동화한다는 구호밑에 김일성 일당이 모든 산업을 독점하고 수탈·착취를 자행한다면 이는 일대 착취왕국이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해 설>

북한에서는 수공업자 및 자본주의적 상공업자의 사회주의 개조라는 것도 역시 농업의 협동화와 마찬가지로다.

김일성 일당은 큰 자본이 든 상공업은 물론이고, 자그마한 구멍가게에서 가족끼리 소소한 것을 만드는 가내공업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것이라고는 모조리 협동조합화의 구실로 수탈해 버리고, 그들을 한 날 노동자로 전락시켜 마음껏 착취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에 있어서의 모든 경제의 이러한 공산화가 즉 북한전주민에 대한 혹독한 경제수탈과 그 독점이 순조로이 진행되었을 리는 만무한 것이다. 공산중주국인 소련의 전례로 보더라도 불세비키들이 농업의 집단화와 공업의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자기국민을 얼마나 무참히 희생시켰는가 하는 것은 소비에트인 자신들조차 부인하지 못하는 바다.

제2차대전이 끝나기 직전 포스담거두 회담때 환담의 자리에서 처칠경이 스탈린에게 이번 대전에서 소련사람이 많이 전사한데 대해 인사를 하였더니, 스탈린이 하는 소리가 “그까짓것 우리 나라의 농업집단화 때 농민이 이래저래 죽은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집단화예의 희생이 얼마나 컸었는지 가히 알만하지 않는가!

중공 역시 그러하였다. 어제 북한에서만이 그러한 급조개변의 수탈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는 공산당식 조직적 강압수법과 그들이 말하는 치열한 계급투쟁이 있었음은 이미 잘 아는 바이다.

이리하여 북한내의 모든 공장, 광산은 물론, 금융·운수, 심지어 전농토까지 모든 경제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완전 독점하여 38이북은 한개의 종합기업체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그 기업주노릇을 하면서 범국민적으로 집단착취하는 거창한 독재·독점자본가가 나타난 것이다. 김일성 일당이 바로 그 독점

• 종합기업주라는 것이다.

김일성은 이 개조와 건설의 속도가 유례없이 빨랐다고 자랑한 것은, 요컨대 그 역지와 무리가 또한 그만큼 크고 가속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북한동포들에 대한 폭학과 수탈이 그만큼 가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착취가 없어졌다고 자랑하는 북한의 실정이며 김일성 일당이 독판을 치는 착취왕국이라는 것이다.

<질 문 21>

북한주민들에게 허황한 전망을 심어 주고, 하염없는 희망속에 살도록 속이며 실제로는 더욱 혹독한 채적으로 강제노동에 다구치는 김일성식 사회주의 경제 밑에서는 영원히의 •식•주에 허덕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새 착취형태인 「사회주의 경제」의 산물이 아닌가?

<해 설>

공산독재자들의 경제 숫자란 공산총주국 소련의 레닌·스탈린시대 이후로, 허황한 숫자를 늘어 놓기를 좋아하는 것은, 자랑선전 때문임은 물론이러니와, 그러한 목표를 내 세우고 이것만 달성하면 이번이야 말로 잘 살 수 있다고 자기 통치하의 사람들을 하염없는 희망속에 살도록 속이며 또 한층 더 혹사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김일성 일당이 이러한 숫자 진열을 좋아하는 것은 오늘 남북이 분열되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독재주의의 진열장경쟁을 하고 있는 현실하에서 내외에 대한, 특히 남북한에 대한 선전적 효과를 노려보자는데 있다.

“...또 천도 그 동안에 5억미터를 생산한다면 1인당 50미터씩 차례가 되는 데 이것은 과연 굉장한 숫자입니다... 어제의 공상은 오늘에는 이상으로 변하고, 이 이상은 내일에는 현실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4~5년 후 또는 좀 더 빨리 3~4년 후이면 우리의 이상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1958년 11월) 라고 김일성은 언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한가? 그 때로부터 이미 2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나가고, 오늘에는 10여년이 지나갔다. 그런데 모든 것은 여전히 허황한 전망으로 남아 있다. 1960년에 알곡의 생산량은 3백 80만 3천톤, 천은 1억9천미터에 불과 하였다. 따라서 소위 7개년계획이 [완수되어야만 1967년에 가서 알곡이

6~7백만톤, 천은 4~5억미터로 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공상(空想)은 공상으로 남을 뿐이다. 7개년계획은 실패하고 다시 3년을 연장하였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비록 유족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자기들의 의·식·주에 대하여서는 근심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라고 김일성은 말하였다.

북한주민들이 의·식·주에 대해서 근심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쌀 소두 한 말에 4원, 옥수수 2원, 광목 1미터에 3~4원 양복 한 벌에 150원 내외, 고무신 한 켤레, 4~5원 냉면·런치 1인분 1원 40전~50전 하는 곳에서 평균 3~40원 월급밖에 못 받는 북한 노동자·사무원들이 어떻게 의·식·주에 근심 걱정이 없이 살아간단 말인가?

그러나 김일성과 그 일당이 가장 큰 거짓말의 하나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개조의 완성으로 착취가 근절되었고, 그래서 인민의 생활이 더욱 향상 되었다”는 잠꼬대이다. 김일성은 자기 보고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사회주의 개조의 완성으로 공업·농촌 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각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고, 온갖 형태의 착취가 근절됨으로써 인민들의 물자·문화생활은 더욱 개선 되었습니다.”

이야말로 정 반대의 거짓말이다. 사실에 있어서는 바로 그 소위 사회주의 개조라는 것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개선이 아니라, 더욱 악화되어 못 살게 된 것이다. 전 북한 주민을 그들이 즐겨 쓰는 말 그대로 무자비하게 착취·수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오늘 북한에서는 구식 형태의 착취가 근절된 그 대신에 모든 공장 기업에서 농·어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를 한 기업체로 만들어, 그것을 독점해 가지고 전 국민을 범 국민적으로 착취하는 공산 독점자본가 겸, 독점지주 김일성의 흑독한 새 착취 형태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질 문 22>

북괴는 경제,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던 중, 농업부면에서의 「천리마농장」을 조작하기 위하여 청산리협동농장을 김일성이 현지 지도한 결과 사업작풍이 일신하여 북한에서 제일가는 모범협동농장이 되었다고 선전하여 모든 부문에서 이와같이 노동할 것을 지시한것을 「청산리교시」 또는 「청산리정신」이라 하는데 이것은 조작극이 아닌가?

<해 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 운동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으로 됩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더욱 광범히 더욱 전면적으로 전개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산업 부문 뿐만 아니라 농업·건설·운수·상업·교육·보건·과학·문학·예술 등 경제와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 중앙년감 1961년판 p.1~5)라고 김일성은 「전국 천리마 작업반운동 선구자 대회」에서 말했다.

이 대회가 끝난 후 전 북한은 모든 분야에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대대적으로 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운동을 합리화하고 또 가장 영예스러운 운동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전 북한의 공장·기업소·농어촌·학교 할 것 없이 전 분야에 걸쳐서 경축대회 혹은 발족 기념식 등으로 수 일간을 주연으로서 소란을 피우게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협동농장에 대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잇달아 각급 학교 병원에서 「천리마 경쟁 운동」이 치열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천리마 운동」이 진행되는 와중에 김일성은 현지 지도라는 명목에서 1960년 2월에 발전성이 풍부한 평남 강서군 청산리 농업협동 조합에 수 십여명의 고위 간부들을 인솔하고 15일간을 유숙하면서 (그실은 자동차로 출퇴근 하였음) 수리공사, 정지공사, 개간사업, 주택공사, 문화사업, 미화공사 등등을 기일을 정하여 완공할 것을 명령 하였던 바 전 농민과 간부들이 불철주야 노동함으로 기일내에 완공하여 북한내의 제 1급 모범협동 조합이 되었다고 선전하여 다른 협동조합도 이에 준하여 노동할 것을 다짐하였고 특히 김일성의 지도 작풍과 지시를 다른 분야에서도 광범히 이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것을 북한에서는 「청산리 교시」 또는 「청산리 정신」이라 하여 교과서, 회의 보고서 토론 등에 반드시 「청산리 정신」이란 어구를 삽입하게 되었다.

이 작업반 운동과 병행하여 직장운동, 나아가서는 가장 높은 단계인 공장, 기업소 운동으로 발전할 것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북녘 주민의 생활 자체가 가혹한 노동 광장의 노예 노동자로 전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호감시 속에 노동은 독려되고 낙오분자는 질책 또는 추방당하는 엄한 규율 속에 온갖 정력을 계획 초과 달성과 기술 기능의 향상에만 집중

시켜야 살아날 수 있는 노동자의 생활상태란 긴장과 공포분위기 속에서 죽을 때야 죽을 수도 없는 참상인 것이다.

<질 문 23>

「청산리 교시」는 북한주민을 천리마운동에 채찍하는 조작된 교시일 뿐만 아니라 피수를 우상화하고 기적을 날조하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청산리협동농장 경리책임자를 처형 하듯이 양민을 학살하면서 기적을 날조하라는 교시나 정신이 아닌가?

<해 설>

이 「청산리 정신」은 실지 어떻게 조작 되었는가?

어쨌든, 15일간의 김일성의 현지 지도가 끝난 후 「청산리 정신」을 조작하기 위하여 수많은 인적, 물적 동원이 청산리 농장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지원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김일성의 현지 지도가 끝났으니 이 농장에서는 반드시 그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야 했다. 따라서 예년에 비하여 훨씬 많은 수확고를 내야 한다는 조건이 뒤 따르게 됐다.

수확의 기적을 조작하기 위하여 청산리 농장에서는 일년 동안 모든 부문에서 집중적인 지원을 했고, 복귀의 모든 매스콤은 청산리 기적을 자랑스럽게 예언했다. 내외 기자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청산리를 주시하고 있었다.

가을이 오고 수확기가 왔다. 1년 간의 노력을 결산하는 결산분배의 날이 왔다. 그 동안 김일성 자신도 기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시찰하려고 여러 번 왔다 갔다. 기적이 일어 날 수 있도록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힘을 다한 셈이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떤 눈에서는 예년의 수확고 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곳도 있었다. 이 사실은 외국 기자에게도 알려지고 김일성의 귀에도 들어갔다. 실무자들은 철창 신세를 면할 길이 없었다.

실무자들이 밤을 새면서 묘책을 강구한 것이 청산리 농장 간부 한 사람을 희생시키자는 것이었다. 그 결과 희생의 대상은 청산리 농장관리위원회 부기장 권모 노인이었다. 즉 권모를 남한에서 파견한 간첩과 접선되어 포섭 당한 간첩으로 만들고 이 간첩이 농장 관리위원회의 중요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적이 일어났으나, 장부상 오기, 창고 관리의 고의적 혼란, 파괴 공작

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수확고의 저하를 가져왔다는 것으로 조작했다.

몇몇 농장 간부들 외에는 비밀로 한 채, 이 사실은 김일성에게 보고되고, 김일성의 명령에 의하여 총살되었다.

그리고는 한편으로 「성대한 결산분배의 축전」이 벌어지고, 인접 협동조합에서 부족량 만큼 미리 변동 해 놓고, 당초의 계획량을 달성하여 기적이 일어났다고 조작했다.

1천여명의 축하객이 모인 자리에서 김일성은 “청산리 방법은 사회주의 건설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당의 또 하나의 승리이며 자랑이다”라고 자찬했다.

이 자축의 흥겨운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농장 농민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어둡기만 하였다. 이것이 천인 공노할 김일성 일당들의 잔인한 수법이요, 이렇게 하여 조작된 것이 소위 「청산리 정신」인 것이다.

<질 문 24>

북괴의 「천리마작업반운동」과 「이중천리마 작업반운동」은 전체 북한주민을 완전히 노동노예로 전락시키고, 엄한 규율과 한 없는 노동경쟁으로 채적하는 노력동원의 최대의 돌격경쟁 운동이 아닌가?

<해 설>

북괴는 1957년부터 실시되는 1차 5개년계획의 결정과 1956년 말에 끝난 3개년계획을 총화하는 1956년 12월 확대전원 회의의 결정에서는 더욱 방대한 5개년 계획의 강행과 이에 따르는 노동생산성의 강화, 노력조직 문제, 소극분자 및 소위 반동분자의 해독문제 등을 제기하여 전북한 주민들을 완전히 노예상태에 몰아 넣게 하는 노동의 강요를 시사하였다.

그리하여 인민경제의 전 부분에서 집단적 혁신운동이 확대되고 집단상호간의 경쟁운동이 강요되었다. 특히 청년이란 명칭을 붙인 돌격운동이 일어나서 1950년 보다 1957년은 현저한 성장을 보았으며 57년 보다 58년도는 35% 상승 예상이라고 선전했다.

이 과장된 선전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저열, 노력조직의 불합리, 노동자 사무원들의 김일성 독재에 대한 불평 등이 얼키어 중요한 중공업 부분에 대한 계획의 미달과 생산성의 취약점들이 나타나 김일성 일파로 하여금 5개년계획을 변경 조정까지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1958년 9월에 소위 「전국 생산 혁신자대회」를 열고 김일성은 “집단의 힘과 지혜에 의한 혁신운동을 더욱 광범히 전개하여 양양된 혁신적 고조를 가일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적토마와 같이 더 빨리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증산 또 증산으로 질주하라고 지령하였다. 이리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한개 작업반 전원이 천리마 칭호를 받으면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받게 된다. 「천리마 작업반」칭호를 받은 후에는 다시 「이중천리마 작업반」칭호를 받기 위한 노력을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이중 천리마 작업반」칭호를 받기 위해서는 처음 작업반 칭호를 받을 당시의 초과 계획량을 기준으로 하여 이 보다 더 높은 계획량을 초과 달성해야 하므로 이중 천리마가 되려면 계획량의 초과 완수는 물론이며, 이 보다도 매개 작업반원들의 사상교양과 기술향상, 상호간의 협조정신과 소위 반동분자의 잠복여부 등등 그 기준이 너무나 잡다하여 실로 「이중천리마」칭호를 받기에는 많은 난관과 갖가지 애로조건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아무튼 북괴는 엄격한 규율하에서 유례없는 노예노동의 강화운동을 전개하여 전북한의 노동자·농민할 것 없이 모든 주민을 천리마로 만들어 노동액의 최후의 한방울마저 착취함으로써 최대한의 노동생산성을 올리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질 문 25>

김일성 일당이 「대안전기 공장」을 현지 지도한 결과 지도작풍이 잘되어 대안전기 공장을 일약 천리마공장이 되었다고 꾸미고, 이 사업작풍을 전북한의 모든 부문에 적용시킨 「대안의 체계」란 바로 「청산리정신」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의 노동력이 한계점까지 착취를 강요하고 김일성을 우상화한 조작극이 아닌가?

<해 설>

1961년 말 북괴는 전북한의 공장·기업소의 노동자들에게 노력의 무한대의 착취와 자각적 분발심을 발휘하게 할 목적으로 「천리마공장」조작에 부심한 끝에 「천리마공장」으로 우선 많은 노동자와 기계화된 공장인 「대안전기공장」을 선택하여 「청산리교시」때와 같이 김일성이 1961년 12월에 「대안공장」에 현지 지도란 명목하에 수십여명의 고위간부를 인솔하고 이곳에 유숙하면서 노동자

의 기술향상 문제, 노동자와 간부간의 융화 단결 문제, 공장 당위원회에 지도 작풍 문제 등을 지도한 결과, 「대안공장」은 단시일 안에 과거의 칙체한 생활기풍이 제거되고, 작업반 상호간 또는 직장 상호간에 서로 진심으로 협력하여 동지적 입장에서 서로 협조하며 낙후한 기술과 낙후한 사상을 설득과 우애로써 없애게 하는 등, 공장 전체의 생활작풍이 일신되었으며 수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서로 신임하며 전에 없었던 창발력과 열의를 발휘함으로써 계획달성에 기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스스로 찬양하였다.

특히 이러한 「대안의 체제」가 확립됨에 따라서 모든 난관을 쉽게 극복하여 작업반 단위를 넘어서 전 직장, 전 공장의 범위에서 동시에 이 「대안의 체제」를 적용했음으로써 전 공장의 노동자 사이의 신뢰심과 창발력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공장내의 전 노동자가 주인이 되어 공장의 관리운영에 직접 자발적으로 참가함으로써 공장내의 계획 달성은 물론 모든 것에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고 하였다. 이렇게 김일성에 의하여 조작된 「대안의 체제」확립은 단시일내에 「대안전기 공장」을 「철리마공장」으로 만들어 냈으며 북한산의 생산력 발전에 있어서 경의적인 기적을 나타냈다고 선전하였다.

이 철리마공장이 나타난 후 김일성이 지도한 소위 「대안의 체제」는 북한의 철리마운동 진전에 있어서 「청산리교시」와 함께 절대적 진리로서 혹은 공산주의자들의 귀감으로서 등장되고 모든 매스컴은 이 선전사업에 광분하였으며 각급학교 교재 각종 회의 때의 보고 지시문에 까지 이 어구를 사용하였다.

즉 「대안의 체제」 「청산리교시」니 하는 이 김일성의 지도이념은 공장·농촌에서부터 전 북한 각 분야에까지 적용하여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데, 다시 등장하였던 것이다.

4. 교육·문화·예술·방송

<질 문 26>

북괴는 1930년대에 김일성 일당이 소위 항일투쟁시기에 애국적이고 민족적인 독립정신과 난관을 극복하는 불요불굴의 강인성 등으로 무장했다는 전통을 내세워 모든 북한 주민에게 그 본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소위 혁명전통 교양이란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김일성을 영웅화하려는 날조된 전통이 아닌가?

<해설>

오늘날 복귀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혁명전통교양」이다. 「혁명전통교양」이라 함은 그들의 말대로 하면 1930년대 부터 시작된 항일유격투쟁시기에 우리 선열들이 발휘한 애국심,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는 강인성, 옳은 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원칙성, 동지·우애심, 국제주의 사상등으로 자신을 정신무장한다는 말이다.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애국적이고 민족적인 독립을 위한 항일투쟁을 김일성 일당들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이 문제를 끄집어 내어 북한 청소년·학생들과 북한 주민들을 설득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 마디로 이와 같은 항일운동이 김일성 일당에 의해서 수행되었다고 날조함으로써, 우선 자기들의 과거 경력(중국 공산당계 동만지역 유격대, 즉 마적단의 출신)을 은폐하고 김일성의 일당 독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김성주가 김일성으로 둔갑하여 민족의 영웅처럼 그를 우상화하는 동시에, 북괴당의 현 고위층은 이렇게 독립을 위한 항일투쟁에 고생하였기 때문에 현재 북한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것은 당연하며, 그들이 주체세력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북괴당의 모든 정책은 정당하며 북괴당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길이라는 것을 믿게 하자는데 있는 것이다.

<질문 27>

북한의 각급학교·공장·기업소 및 모든 직장에서는 당원·비당원 할 것 없이 매주 1회 이상 「혁명전통 연구의 날」을 정하여 「혁명전통 연구실」이라는 일종의 도서실에서 집단적으로 학습 및 발표회를 갖도록 제도화하고 그 실천사항을 『붉은 수첩』에 기입토록 함은 김일성을 신격화하려는 공산당식 강제 세뇌교육이 아닌가?

<해설>

북한에서는 각급학교·공장과 기업소·농어촌 할 것 없이 소위 「혁명전통 연구실」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고는,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방을 선택하여 정면에는 김일성의 동상이나 초상화를 걸어 놓고, 그 양쪽벽에는 공산당의 강령과 규약 및 항일투쟁 당시의 거짓 전적을 붉은 고급천에 정성들어 모필로

씨 붙이고, 이 시기의 거짓 사실들을 기록한 「스크래프」북과 서적들이 가득찬 서고를 비치하고, 방 안에는 붉은 책상보로 덮인 테이블을 회의장소처럼 꾸며 놓고 누구라도 거기에 앉아서 책과 참고자료를 끄집어 내어 항일역사(날조된 기록서)를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일종의 도서실인데, 그 장치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 속에 들어가면 자연히 붉은 정신으로 물들여지게끔 엄숙한 분위기로 꾸며 놓았다.

공장·기업소에서는 북괴당원은 물론이고 비당원들까지도 매주 한번 이상은 여기에 와서 학습하고 연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매학급마다 매주 한번, 소위 「혁명전통 연구의 날」을 정하여 이 방에 와서 집단적으로 학습 및 발표회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소위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라는 것을 500만부 이상 발행하여 청소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읽게 하는 동시에, 여기에 준해서 일상생활을 할 것을 강요하고, 그대로 실천했는가를 매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위 「붉은 수첩」에 기록케 하고 있다.

이밖에도 문학작품과 영화 및 연극은 물론이고, 음악·미술에 이르기까지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것들이 아니면 작품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다. 이리하여 북한의 청소년들과 주민들의 정신자세의 표본을 「항일빨치산 참가자」에 두고, 그들을 본 받아 그들처럼 원수를 미워하고, 곤란을 참을 줄 알며, 투쟁과 격화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그들처럼 개인보다 전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알며, 당에 무한한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1천만이 넘는 북한주민들의 대다수는 이른 새벽부터 저녁늦게까지는 천리마 고역에 노동역의 최후 한 방울까지 착취당하고, 밤에는 사상 검토회에 나와 비판대에 올라서서 혁명전통으로 무장못했다는 죄로 자아비판을 해야 하니 이 「혁명전통교양」이라는 붉은 용광로에 1천만이 넘는 북한주민들은 이미 질식하고 있는 것이다.

<질 문 28>

북한에서의 「사상교양사업」이란 북한 주민을 김일성에게 충직하고 헌신성을 발휘케 하여 김일성의 유일사상체제로 무장시켜, 소위 인민경제계획초과달성에 채찍하는 교양이며, 계급사상과 적개심을 고취하여 잔인한 혁명일꾼을 만들어 끝내는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억지 교양이 아닌가?

<해 설>

북괴치하 공산 전제주의 제도하에서는 사상계몽, 또는 사상 교양이라 하면 으레 정치사상에 직결되며 정치사상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을 말한다. 따라서 사상교양하면 전 북한 주민에게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교양함을 말하며 그 목적은 공산당과 그 수령에 충직하고 헌신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 또는 공산주의적 건설자로 만들기 위함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괴의 사상교양사업이란 본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것과는 구별되며 어디까지나 공산당 일당독재의 전제적 통제하에서 소위 당의 혁명목적에 부합되며 당에 쓸모 있고 김일성의 충복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간형을 최종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상교양 자체가 대상자 본인의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자기 의사에서가 아니라, 당의 필요에 의하여 모든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인정한 과목과 자료·내용에 의하여 일률적인 사상계몽 즉 계급 의식과 적개심 등을 고취하는 교양운동으로 전개된다.

한 마디로 북괴의 교양사업이란 공산당과 수령이 요구하고 지시하는 방향에서 충실하고 사상성이 강한 이른바 혁명일꾼으로 모든 북한 주민을 교양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북괴 공산치하에서는 특히 김일성 일인독재가 작용하는 환경 밑에서 독재자의 사상과 정책 노선이 곧 공산당의 사상 정책 노선인 까닭에 그것이 그대로 모든 주민의 사상교양으로 습관화되고 관습화하여 그러한 인간형을 만들어 내자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상교양 사업에서는 소위 항일 빨치산의 혁명전통 사업을 심오하게 연구시킬뿐만 아니라 이 학습을 통하여 이것을 일상 생활화하고 실천하여 그 사상을 본받아 김일성과 당에 무한한 충성을 강요함으로써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사상을 배양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판과 자아비판을 통하여 누가 더 김일성에게 충직하며 당에 대하여 절대 충성과 복종을 다하는가를 서로 경쟁시켜 한 사람의 낙오분자도 없이 모든 북한주민의 사상을 공포와 회유 온갖 방법으로 통일시켜 김일성의 신격화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질 문 29>

북괴의 학교교육은 「붉은 인간 개조교육」이 목적이고, 그 내용은 사상교육·생산교육·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천리마 운동」과 「학생사회의 무노동」이 강요되는 괴뢰당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 집단훈련소이자 병영이 아닌가?

<해 설>

1956년 4월 괴뢰당 3차 대회에서 교육 부문에 제시된 주요 과업으로, 학교 교육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성을 확립하라고 밝혔다. 이에 근거하여 북한에서는 교육부에서 낡은 「인텔리」를 숙청하고 공산치하에서 교육된 새로운 「인텔리」로 교체하였다. 뿐만 아니라 반동·종파분자로 숙청된 자들이 집필한 서적과 문헌을 전부 회수하여 소각하였다. 이리하여 1958년 11월에 「선동원 열성자 회의」에서 「공산주의 교양에 관하여」라는 김일성의 연설은 북괴의 사상교육의 교전으로 되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첫째,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와 자본주의 멸망의 필연성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확신하도록 주입시키며

둘째, 노동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노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셋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을 고취하라는 것이다.

김일성의 이 연설에 의하면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의 운영과 조직까지도 이 방침에 의하여 재편성되었다.

이리하여 괴뢰당 제 4차 당대회에서는 학교 교육의 근본 목적은 자라나는 세대들을 “다방면으로 발전된 새로운 형의 인간”으로 육성하며 공산주의적 인간형성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론과 실천이 결부된 교육을 하여 교육과 생산을 연결시켜야 하며, 기술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사상교육에서는 혁명전통 교양을 강화하여 젊은 세대들을 공산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집단주의 정신에 투철한 인간으로 교양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교육 부문에서의 천리마 운동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키며 「학생사회의 무노동제」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학교시설과 교육적 환경을 자체의 힘으로 정비·확장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더 나아가 인민경제 계획에

학생들을 동원시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학원에 대한 공산당의 지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교직원 및 학생들의 당성(黨性)을 높이게 하는 것이다.

<질 문 30>

북한에서는 학교관리의 책임자는 교장이고, 실권은 당위원회가 장악하고, 또 방학후는 사회단체의 지도·감독을 받음으로써 실제 교육 받고 있는 학생들은 세 명령계통의 통제와 지도를 감수해야 하니 이것은 학생을 위한 교육제도로서는 모순된 것이 아닌가?

<해 설>

북한에서는 학교관리의 책임자는 형식상으로는 교장이지만, 그 실제 권한은 자급학교에 지급되어 있는 학교 「초급당위원회」에서 틀어쥐고 있다. 학교장은 「당위원회」의 집행위원의 한 사람이지만, 피퇴당의 책임자는 대개 교무주임 또는 「당 지도교원」이 되기 때문에, 교장은 행정체계상으로는 자기의 부하인 「당위원장」으로부터 당적인 제반 지시 명령을 받게 되어 있다. 북괴당은 이와 같이 학교관리에 있어서까지 교장과 교무주임(또는 당 지도교원)이 서로 견제하고 대립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대학에 있어서는 학장(김일성 대학은 총장)과 부학장 1~3명, 그 밑에 행정 부서와 학부장들이 있고, 학부는 여러개의 강좌가 있어 강좌장(주임교수에 해당)의 책임 밑에 모든 교수내용이 다루어진다.

그러나 북괴의 대학에서는 북괴당이 파견한 전임 당책임비서가 있어 이 자가 사실상 대학의 실지 권한을 가진 자다. 「대학당위원회」, 「학부당위원회」 등을 통하여 대학의 관리·운영과 교수교양의 내용 전반에 걸쳐 당적 통제를 실시한다.

북괴에서는 만 9세부터 13세까지는 소년단에, 만 14세부터 27세까지는 「사노청」(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의 약칭)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데, 북괴의 자급학교 내에서도 이 「사노청」의 하부조직들이 구성되어 있다. 대학 및 고등기술학교·고등학교에는 전임 「사노청」위원장이 중앙 「사노청」에서 파견되며, 그 이하의 학교에는 「당지도 교원」이 수업을 담당하면서 소년단을 지도한다. 북괴 학생들의 방과후의 행사는 일체 이 학원내 사

회단체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와같이 북한의 학생들은 학교·당·사회단체의 세 명령계통에 의하여 학원에 생활을 하게 되니, 이것은 학생을 위한 교육일 수 없고, 따라서 감수성이 강한 청소년들의 회의와 불만은 높아만 갈 것이다.

<질 문 31>

북한에서는 1959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수업료가 면제되었다고 하나, 같은 해에 「학생사회 의무노동제」를 실시하여 그 실은 학생에게까지 노동을 강요하고, 노력착취를 제도화한 것이 바로 「학생사회 의무노동제」가 아닌가?

<해 설>

북괴는 1959년 3월 2일 소위 「내각결정 제18호에 의하여 북한의 중학교이상의 전체학교에서는 이른바 「학생사회 의무노동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공포했다.

즉 대학에서는 연간 10주간의 학교 밖에서의 사회노동에 참가해야 되는 데, 그 내역을 보면, 공업노동 4주간, 건설노동 4주간 농업노동 2주간으로 되어있다. 이 밖에 대학 자체에서 조직하는 노동(학교시설 확장과 공장운영 등)을 합치면 연간 12주간(인문계) 내지 14주간(기술계)을 전연 수업을 받지 않고 노동만 하게 된다. 이것은 대학 두 달반 내지 석달이 되는 셈이다.

이러하여 북한의 모든 중요시설 중에서 학생들의 피와 땀이 숨어 있지 아니한 곳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북괴당은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강제노동을 시키는 대가로 1959년 4월 1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수업료 징수를 폐지하였고, 기본교체의 무상배부와 장학금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

기술계 대학 및 사범계 대학에서는 전체 학생에게, 인문계는 재학생의 80%의 범위내에서(중전에는 60%) 월 15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을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바, 장학금으로 매월 평균 숙식비 10원 내외를 지불하고 신간서적 몇권을 구입할 수 있다. 즉 장학금으로 부형의 학비원조 없이 최저한도의 대학생생활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수업료 폐지와 장학금제도의 실시는 학생들의 「의무노동」에서 얻어지는 수입의 3분의 1도 지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형이 공부시켜 주는 것

이 아니라, 공산당이 공부를 시켜 주니까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하는 식의 관념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이리하여 북괴당에 대한 맹종심을 부식시키며, 강제노동을 통하여 공산주의적인 세뇌교육의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북괴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바로 이 「학생사회 의무노동제」의 숨은 목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학생사회 의무노동」은 북한 학생들에게는 다시없는 가장 큰 고역중의 하나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인민학교(국민학교) 어린이는 규정된 노동일수는 없으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동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내기 돕기», 「물뿌기 운동», 「식목작업」, 때로는 한 달씩 논밭에 나가는 등 최소한 2~4주간 동원된다. 고등학교는 8주간, 고등기술학교는 연간 10주간의 의무노동에 종사하게 된다.

그런데 북괴는 대학생과 고등기술학교 학생의 경우 노동기간의 작업 실적을 일반 노동자의 2배 이상으로 높일 것을 강요한다. 이른바 “당과 정부의 두터운 배려에 의해서 공부하는 영예감”을 노동 과정을 통해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다는 것이다. 즉 기술 등급이 대학생의 경우, 일반 노동자들 보다 훨씬 높고, 집단적인 작업 조직과 경쟁 등으로 젊은이들의 공명심과 명예욕을 자극시키면, 작업 후에는 병들어 누울지 언정 그와 같은 작업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북한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일반 노동자들이 하는 거의 같은 양의 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따라서 북한의 대학생과 고등기술학교 학생들은 전월 장학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매월 약 80원을 북괴당에 착취당하면서 공부하는 결과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괴당은 마치도 공짜로 공부시키고 있는 것처럼 허풍을 떨고 있으니, 그들의 언동은 철면피 아니면 공산당 특유의 인간을 학대하고 자라나는 새싹들을 짓밟는 잔인성임에 틀림없다.

<질 문 32>

북한에서는 문학·예술창작 활동에서 민족문화발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은 괴뢰당의 시책에 따라 당에서 제시한 계급투쟁 내용의 작품을 기일 안에 완수하는 생산성·계획성만이 부과된 사항에서는 개인의 창작활동의 자유나 창조적 예술성등은 찾아 볼 수 없는 예술의 불모지대가 아닌가?

<해 설>

북괴의 문학·예술 정책에 대하여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민족적 문화 유산을 계승하며 외국의 선진문화의 성과를 섭취하면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우리 민족의 생활과 감정을 반영하는 새로운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계속하여 문예부문의 당면 과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민족 주제성의 원칙을 견지하여 북한 사회의 낡은 잔재를 개조하고, 근로자를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여 새로운 미적 정서와 문화성을 제고할 것이며,

둘째, 민족적 특성과 사회주의적 내용을 결부하기 위하여 민족문화에서 진보적, 선진적, 인민적인 것을 발굴하여 계승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민족 허무주의와 복고주의를 배격한다는 것이며,

셋째, 현 시기 문학·예술의 주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 당의 찬양과 1930년대 김일성의 항일빨치산의 투쟁을 영웅화·우상화하는 것.

(2) 대한민국 내의 제반 사정의 악선전과 미국에 대한 적개심의 유발.

(3) 해방후 북괴의 업적과 6.25동란 시기의 인민군의 영웅적 투쟁과 미군의 만행을 과장한 것.

(4) 해방 전 항일 독립운동을 공산주의자만이 한 것처럼 가장 조작한 것.

(5) 오늘날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강화되어 가는 것처럼 조작한 것 등이라는 것이다.

네째, 북괴의 창작방법의 원칙을 보면,

(1) 전 생애를 공산주의 운동에 헌신한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형상화되 주인공의 활동분야가 전 시대와 전 사회를 포괄하도록 할 것이며, 공산주의자의 사상과 성격형성을 역사적으로 논증하도록 하는 소위 혁명적 대작을 역지로 꾸며 창작할 것이며,

(2) 남한 문제를 주제로 삼을 때는 노동자 농민출신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투사가 북괴와의 연계하에 남한의 전체 계급과 계층을 영도하여 반제, 반봉건 민주혁명을 승리적으로 능숙하게 수행하는 방향으로 조작 구성 할 것이며,

(3) 모든 것을 군중화 한다는 방향과 방침을 견지하고 그 방면의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근로자의 전형을 형상하도록 하고 방방 곡곡에서 「씨클」을 조직하여 문학·예술을 군중화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건설 투쟁을 광범위하게 취급하여 노력의 무한대의 착취를 기도하며,

다섯째, 낡은 습관·풍습·전통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사회에 상응한 문화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 사회만이 가장 옳은 것처럼 창작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미관도 계급적이어야 하며 당성에 부합되어야 아름다우며, 인간성마저도 계급투쟁과 혁명 문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범 인류적 사랑같은 것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보며, 공산주의자만이 진정한 인간성을 소유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성은 순수한 인정이 아니라 계급적인 것이며, 초계급적인 인류애는 혁명가와 인연이 없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서 인간성에 대한 보편적 개념을 번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북괴의 제반 문화 정책은 “전체 인민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재고하여 전 사회를 혁명화” 하는데 근본 목표를 두며, 이러한 문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가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완전히 떠나서 공산주의 혁명을 위하여 괴뢰당에 절대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다.

<질 문 33>

북괴방송은 대내적으로는 당의 정책 지시의 전달에 충실하고, 대외적으로는 반미·대남한 악선전에 광분하며 민간방송의 존재나 개인적 일로 보도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완전히 괴뢰당의 통제와 검열 속에 방송의 독자성이나 편제에 티끌만한 자유도 없다는 증거가 아닌가?

<해 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방송에 있어서도, 그것이 대내, 대외적으로 뉴우스를 보도하는 홍보기관으로 활용되고, 대중의 일상 생활면을 문화적으로 향상시키며, 명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문화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강요하며, 지령을 전달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데 특히 북괴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즉, 김일성 일당은 북녘 땅을 강점한 그때부터 김일성 일개인을 위하여, 그

를 선전하고 우상화하기 위해 방송을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으며, 지금은 완전히 북괴의 모든 언론·출판등 온갖 보도수단을 총 동원하여 김일성 개인숭배와 그 우상화를 위해 미쳐 날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북괴의 방송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들의 그것과는 전연 다르다. 우선 민영방송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으며, 상업방송이나 기타 사사로운 일로 보도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북괴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공산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북괴는 대외방송을 통하여 자기들의 위신을 높이려 꾀하고 있으며, 특히 남한에 대한 심리전에도 크게 이용하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에 비추어 괴뢰당에서 모든 방송사업을 직접 장악하고 지시 감독하며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방송의 거의 모든 방송시간이 대남·반미 선전·선동이므로, 그 중계 방송국으로서도 휴전선에 가까운 개성, 해주, 평강 등 세곳에 방송국을 두어 평양 방송국 제 2 방송을 중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출력은 한국 방송들 보다 훨씬 높다. 얼마나 선전에 치중하는 가를 알 수 있다.

북괴가 방송자료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보도 가치가 높은 것이라던가, 대중이 환영하고 기대하며 즐기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김일성 우상화, 공산주의 선전, 남한 악선전, 소위 미국에 대한 악선전 등이 방송되며, 청취자의 기호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내용은 북괴당 정책의 해설자로서 효과 있는 것만이 대상이 되고 있다.

<질 문 34>

북괴방송은 허위와 가공선전은 물론 주민의 알 권리의 박탈, 더욱이 흑색방송 등을 주로 한다는 데 이것은 방송기관이 아니라 완전히 괴뢰당의 전략·전술의 어용 도구로 화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해 설>

북괴의 대내방송의 예를 들어 본다면 그들은 방송을 통하여, “북녘 땅이 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이며, 남한은 생지옥으로서 도저히 사람 살 곳이 못된다”는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작하여 작품으로 만들어 방송한다던가, “○○○동무는 김일성의 명령을 따라 열성적으로 일하여, 기일을 앞당겨 책임량을 180% 초과 달성하고, 병을 앓고 있는 탄사람 뭍까지 해 냈다”는 등

그런 것들 뿐이다.

지방에 있어서의 유선방송은 노동시간, 즉 낮에는 일체 방송되지 않으며, 밤에도 12시 넘어서는 절대로 중계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스포츠」 소식만 하더라도 외국과의 대전에서 지면 아예 방송도 하지 않고, 이기면 방송한다. 따라서 일반대중은 어느 나라와 무슨 시합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가 이겼다는 방송을 듣고 비로소 알게 된다. 설령 대중이 알고 있는 경기일지라도 자기네가 지면 절대로 방송하지 않는다. 그래서 방송이 없으면, 그 경기에서 졌다는 것을 짐작할 정도이다.

대의방송은 주로 대남한 방송이며, 반미 선전이 대부분이다. 21시간 방송의 70%가 넘는 15시간을 대남 심리전을 위한 방송을 하고 있으니, 그 내용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중에는 소위 「마크스·레닌」주의 방송대학』이라는 가공적인 방송으로 남한의 학도들에게 공산주의 강의를 하고 있는 「년센스」도 꾸미고 있다.

그리고 휴전선 일대에 고성능 확성기를 가설하고 거기에서 일선에 배치된 국군과 미군에게 월복을 권유하고,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며, 국군의 파월을 반대하고 나서며, 무장폭동 등을 선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단과 방법을 대해서도 그들의 목적인 바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그들은 최종적으로 가장 야비하고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도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흑색방송까지 하고 있다. 즉 1967년 3월 15일을 기하여 북괴는 남한의 정치적인 교란과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킬 목적으로, 간첩을 밀파하여 온갖 일들을 조작하고, 그것이 마치 남한 자체내에서 일어난 일인양 선전하고 있다.

1967년도에 일어났던 철도폭파사건을 비롯하여, 283군 부대 및 124군 부대의 대량 무장공비 남침으로 인하여 양민학살·시설파괴·요인암살 등 갖은 악랄한 수단을 다하여, 그것들을 남한에서 일어난 반정부·반미 반란인양 선전 방송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괴일당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의 광신이론 그대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는 허위와 날조극으로 대중을 속이려 들며, 그 허위와 비진리성이 들어나면, 다시 그것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더욱 얕은 술수를 꾀하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광분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거짓은 도리어 빨리 밝혀지게 된다.

이리하여 비진리는 진리 앞에 암흑은 광명앞에 빛을 잃게 되고, 허위는 사실 앞에 정체를 들어 내게 되는 것이다.

5. 사회·노동·보건

<질 문 35>

북한에서의 「5호 담당제」란 열성당원(지도원) 한 사람이 5호씩 담당하고 「붉은 가정」을 창조한다는 명목하에 전 북한 주민을 붉은 눈초리로 감시하는 것을 제도화한 것은 우리 민족 고유의 가족제도를 파괴하고 미풍·양속을 말살하고 더 나아가 불신 사회로 전락시킨 것이 아닌가?

<해 설>

「5호 담당제」는 1958년 말 경에 시작된 규제인데, 북한의 전 세대를 5호씩 나누어서 열성당원 1명을 배치하여 부부간의 애정문제를 포함한 가정생활 일체를 지도한다는 구실 밑에 간섭하며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5호 담당제」는 1958년 7월 초 김일성이 평북 창성군 약수리 「민주선전실」을 찾아가 당 간부 한 사람이 5호씩만 책임지고 교양사업과 경제과업 등 일체를 지도하도록 해서 이(里)사업을 추켜세우며, 이당(里黨)위원회에서 그들을 모아 놓고 과업을 주고 그 집행정형(執行定型)을 총화하면 일이 잘 된다”고 명령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 생긴 것이라고 한다(1967. 9. 13 노동신문 2면)

「5호 담당제」에서는 책임 지도자들이 5호 내외의 적은 세대들을 분담하는 만큼 매 개인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하여 그들의 지식·소질·취미·희망·사상 동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도하게 된다. ……5호 담당제 지도사업은 생산에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성인으로부터 아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을 포괄한다”고 강조 되고 있다.(근로자 1962. 11월 하기호)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5호 담당제는 「노동 적위대」조직이 확대되고 이른바 「전국 요새화」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강화되면서 「붉은가정 창조운동」이라는 미명하에 「5호 담당제」는 우리 민족 고유의 가족제도를 완전히 파괴하고 말았다.

즉 「5호 담당관」의 입석하에 가족회의를 열게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비판하고, 아내가 남편을 공격하는 것이 마치 「붉은 가정」을 꾸리는 지름길인 양 교양지도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인민반」이라는 것이 있어서 반장이 또한 각 가정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심지어 편지까지도 본인에게 직접 배달되지 않고, 일단 반장이 본 다음, 의심이 가지 않을 때 비로소 본인에게 전해진다. 이처럼 철저한 당의 통제 아래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사생활까지 억제되어 있다.

<질 문 36>

북괴는 1958년 12월부터 60년 12월까지 만 2년동안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이란 명목하에 전 북한 주민을 사상검열한 결과 북한 주민의 3분 2의 이상이 적성분자 내지 중간층으로 처벌 또는 요감시 대상이 되었다면, 이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이란 잔인한 대숙청 사업의 대명사가 아닌가?

<해 설>

1956년부터 근 2년에 걸쳐 반대파(연안파·소련파)의 대숙청을 끝낸 후, 피수 김일성은 자기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북한땅을 「붉은 대가정」으로 한다고 떠버리면서 1958년 12월부터 60년 12월까지 전 북한 주민을 상대로 사상검열을 실시하고 모든 북한 주민의 성분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 또는 요감시자로 만들었다. 이 검열사업의 목적은 당내 및 당외에 비 기본계급 즉 중농·부농·소시민 계급들이 있으며 일부 지주 및 소자본가 계급이 있다는 점, 「박헌영·이승협 일파와 최창익, 박창욱, 일파를 숙청한 후 그의 영향자들과 김두봉, 박일우, 박의완, 오기섭 등을 비롯한 반당·종파분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6.25로 인해 주민 구성이 복잡해졌다는 점, 즉 월남가족, 전사자가족, 반동단체 가담자, 치안대 가담자, 등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식별 구분하여 정치교양 내지 처단하자는 것이었는 데 이는 58년 5월30일 피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의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은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하여」란 결정서에 의해 실시되었다. 여기에 따라 중앙당간부(약7천명이 중앙지도원으로 훈련 받고)가 직접 각 지방에 파견되어 인민학교 아동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집중심사(취조)하여 그들의

소위 반당성 반동성을 가려내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자기비판(자백)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근 2년의 시일이 걸렸다. 그 결과 나타난 소위 과거 지주, 치안대가담자, 친일파, 반혁명분자, 중파분자 등을 요감시자로 하고 공민중에 149호란 표시를 했으며 내각 결정 149호에 의하여 거주지 제한을 실시했는데 휴전선에서 2십「킬로미터」, 해안선에서 평양·개성에서 50「킬로미터」 내에는 거주할 수 없게 강제 이주 시켰다.

이 무자비한 숙청에 있어서 그 심사과정에 견디다 못하여 자살한 자가 중앙당 학교 교장 허익을 비롯하여 많았다는 것이다. 한 두가지 예를 들면

소정자가 쓴 「내가 반역자냐」 251면에 의하면 “허갑(중앙당학교 당투쟁사 강좌장)도 중앙당 조사실에서 고통을 받다가 면도날로 자기 동맥을 끊고 자살하였으며 그의 부인 진옥출(그 여운형 4촌 처제)도 건설대학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살한 후 그 사실을 폭로시켰다는 이유로 또 행방불명되고 말았다.

인민경제 대학은 또 총장이 교체되었다. 8월 전원회의를 전달 보고한 유성훈 총장은 김일성대학 총장으로 영전했다가 노동자로 전락되고 9월 전원 회의를 전달 보고한 총장은 벽촌 소비조합 점원으로 떨어졌다는 소문이 퍼졌다. ……새로운 총장은 노동신문사 주필이라는 소문이였으나 불과 3개월 남짓해서 또 새 총장이 없어지고 교무부총장이 총장대리를 보게 되었다. 듣기 좋은 노래도 한 두번이었는데 대학에는 매일같이 당 정책학습이란 명목으로 어제의 동지며 당의 지도간부며 내각 부수상이었던 그들을 “각두에 목을 찢아 죽일놈”이니 하고 증오하라니 인간의 양심으로서서는 차마 괴로워서 듣기 거북하였다.”

“이집 식구들은 어른이고 애들이고 뱃기하나 없이 모두 배가고파 눈동자가 허엿다……가난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실히 말해준다. 결국 그들은 1959년 봄에 굶주리는 것도 서러운데다가 사상검토까지 받게되자 5남매를 남겨두고 부부 자결하고 말았다……”

이와같이 하여 전 주민의 3분의1 이상이 소위 적성분자(敵性分子)로 규정되어 숙청 또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질 문 37>

북괴는 전 북한주민의 3분의1 이상의 적대 요소와 중간층 속에 포위되어 있는데 그후 4차에 걸친 「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때에 유권자 100%선거

에 참가하여 100% 찬성 투표를 했다하니 이것은 허위의 통계숫자와 조작선거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해설>

북괴는 중앙당집중 지도사업의 결과 그들의 발표에 의하면 소위 반혁명 요소(적대분자) 320만명, 핵심「혁명」분자 320만명, 기타 중간층이라 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것처럼 공산주의 인간교육을 강요하고 천리마운동을 전개하여도 북한주민은 붉은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공산주의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뚜렷한 증거가 아닌가.

뿐만 아니라 주민재등록사업은 아직 계속되고 있으며, 전체인민이 당주위에 굳게 뭉쳐...라는 그들의 상투어와는 반대로 사실은 그들 자신이 적대요소와 중간층 속에 포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후 4차에 걸친 북괴 「최고인민회의」대의원 선거 때는 유권자 100% 선거에 참가하여 100% 찬성투표를 하였다니 엉뚱한 숫자 조작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북한 전인구의 3분의1 이상 즉 300만 이상의 적대분자가 있는데 100% 찬성투표가 나올 수 있는가? 이 대숙청선풍에서 수십만명의 북한주민이 숙청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그들의 선거에서 100% 찬성이란 허위임이 명백하다. 더우기 7천명의 지도원에게 절대권한을 주어 심판해도 무색하리만큼 심판하여 숙청하였으니 그 잔인함과 야만적 행위는 형언할 수 없으며, 이것을 「사회주의 낙원」이라고 자화자찬한다니 그들의 「사회주의 낙원」에는 마지막에는 인간의 허울을 쓴 기계만이 남아 살 것이 아닌가.

<질문 38>

북한사회는 「노동자 위주의 사회가 돼야 한다」는 북괴의 「노동계급 독재」라는 선전과는 정반대로 북한의 노동자는 대부분 소위 성분나쁜자(반동월남가족 종교인가족 죄수의 가족 귀환포로 및 그 가족등)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노동자의 이름을 팔아먹는 김일성 일당 위주의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해설>

공산주의자 프롤레타리아독재라고 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농민이 주인이요, 그들 노동계급의 노동력이 집단주의적 경제체제에 절대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는데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노동계급이 마땅히 독재해야 하고 노동계급의 총의에 따라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등 모든 활동이 전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한낱 이론에 그칠 뿐 공산주의를 낳은 소련을 비롯하여 오늘날 이 지구상에 명맥을 유지하는 모든 공산권 국가들이 「노동계급의 독재」라는 간판 아래 몇몇 독재자들이 유혈의 숙청을 유일한 무기로 강압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괴의 경우 「노동계급의 독재」는 숙청의 명수인 피수 김일성의 일인 독재로 완전히 변모함으로써, 공산주의 본연의 의도와는 동떨어진 이질적인 착취사회가 된 것이다.

김일성 일당은 북한에 있는 대다수의 노동계급을 「노동계급의 독재」를 위해서 우위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자기중심의 독재체제를 하루라도 더 연장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노동계급의 독재를 표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북괴 치하의 사회는 “노동자 위주의 사회가 돼야 한다”는 북괴의 선전과는 정반대인 “노동자의 이름을 팔아먹는 일부특권층 위주의 사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서 북괴 치하의 노동자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공산정치를 반대하여 추방되었거나 산간지대에 거주제한을 당한자들 아니면 반동으로 몰려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물론 그 밖의 노동자들도 거의 모두가 성분이 나쁜 사람이나 월남자 가족, 종교인 가족, 형무소에 갇힌 죄수의 가족, 그리고 휴전 후 북한에 되돌아 간 귀환포로와 그 가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노동자들은 인간생활의 기본요건이 되는 의·식·주 생활에서까지 그 전제자들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노동당의 전위대」라는 미명하에 강제노동으로 채적 당하면서 소위 천리마작업반 운동에 동원되고 청산리방법, 대안의 체계 등 교묘한 수단에 넘어가 최대한의 노력을 착취 당하고 있다.

<질 문 39>

북괴의 「직업동맹」은 괴뢰당의 정책 지시를 앞장서서 맹원들에게 주지 시키고 합리화시키며 심지어 맹원들의 생활태도에까지 간섭 감독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를 「노동자, 사무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라고 선전하는 북괴의 말과는 정반대로 거대한 착취를 뒷 받침하는 감시 감독기관이 아닌가?

<해 설>

1946년 6월 24일에 발표한 북괴의 노동법령을 보면, 분명히 8시간 노동제로 되어 있고 시간의 노동에 대해서는 그 보수를 지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북괴는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 주민 어느 한사람에게도 시간의 노동(노동법에는 시간의 노동은 1년에 2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을 강요 하고서도 노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 일이 없다.

그들은 이 엄연한 불합리성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시간의 노동은 당의 강요가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결의에 의한 애국노동이다”라고 돌려부치고 있다.

여기서 사회단체인 지맹(북조선직업 총동맹)을 예를 들면 지맹은 북괴당에, 대하여 전위적 역할을 하는 주요한 단체이다. 북괴당이 내세우는 각종 정책을 이 단체가 앞장서서 맹원들에게 주지시키고 합리화시키려 든다. 그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노동경쟁 운동을 비롯한 모든 노동제도와 노동질서, 심지어 노동자, 사무원들의 생활태도에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무서운 감독기관이다.

“북괴는 지맹을 가리켜 노동자 사무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와는 180도 각도를 달리하여, “지맹은 가능한 노력의 열출을 꾀하여 당에 충성하는 단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지맹은 노동자, 사무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급수사정권, 휴양 휴가의 결정권, 작업의 결정권, 작업반, 배치권 등 노동평가에 대한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사무원들은 권익 보장을 주장하기에 앞서 지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노동자들은 자본가와의 자유로운 노동계약에 의하여 한정된 노동력을 한정된 시간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써 그

에 상당하는 노동임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노동보수 제도는 고용주 측이 도리어 까다로운 법령조항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가차없는 노동쟁의를 각오해야 할 만큼 노사간의 보수제도도 민주주의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괴의 경우 소련의 노동규제를 본따 노동기준량이라는 착취성 책임 제도를 떠 말기도 그 보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임금제도를 적용시키고 있다. 즉 북괴가 지급하는 노동보수는 외국인들이 평하듯이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아임금”이다.

<질 문 40>

북한에 있어서 탁아소 유치원제도는 부녀자의 노동력을 남자와 같이 착취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들쭉는 어릴때부터 공산주의 인간으로 길들이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부모, 자녀, 형제를 분리시킴으로써 고유의 가족제도를 파괴시켜 비정의 사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해 설>

최근 몇 해 동안 북한에서는 탁아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여성들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어릴때부터 공산당에 맹종하는 이른바 공산주의 인간으로 길들이기 위한 세뇌교육에도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966년 10월 20일 통계에 의하면 북한에는 탁아소가 23,251개소에 약877,000명의 어린이들이 수용되고 있다 한다. 만 네살까지는 탁아소에 맡길 수 있는데 위 숫자는 북한의 탁아소 연령기의 어린이들의 70%에 가깝다고 한다.

탁아소에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첫째 조건은 그의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야만 되게 되어 있다. 탁아소는 소위 국영 또는 협동단체 경영으로 되어 있으며 시설이란 보잘 것 없고 탁아소의 보육원은 북괴가 파견하는 자들이다.

이 보육원은 중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교육기간(대개 3개월간)을 보육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에 배치된다. 탁아소의 종류로는 1일 탁아소, 주일 탁아소(1961년경부터 실시), 월탁아소(1965년경부터 실시)등이 있다.

1일 탁아소는 아침에 맡기고 저녁에 찾아가는 탁아소로서, 학교 교원이나 농

장 농장원들이 그날 일을 마치고 데리고 가는 탁아소인데, 이 탁아소는 시설이란 없고 지장의 어느 방 하나를 이용하여 보육원 한사람이 15~16명꼴 데리고 관리한다.

주일탁아소와 월탁아소는 1주일 또는 1개월간 탁아소에 어린것들을 맡겨 두었다가 찾아 와서 1~2일 집에서 놀리다가 다시 맡겨 두는 그러한 탁아소를 말한다. 오래간만에 어머니를 만나서 기뻐하다가 또다시 탁아소에 맡겨질 때 떨어지지 않겠다고 달라붙는 어린이를 떼어놓고 나오는 북한 어머니들은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참아야 한다. 탁아소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은 몰라도 김 일성이란 말을 알도록 어린이들을 가르친다.

북괴당의 어린이들에 대한 기본정책은 1966년 10월 20일 「전국 보육원 교양대회」에서 버릇이 불기 쉽고, 품성의 기초가 닦아지는 탁아소 유치원시기에 교양을 잘주면 장차 강인한 혁명투사로 새 사회의 믿음직한 건설자로 자랄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리하여 북괴의 부녀자 및 청소년에 대한 기본정책은 철두철미한 세뇌교육으로 공산당에 맹종하도록 하며 남성 및 장정과 동일하게 노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하여 어머니의 정을 모르고 자라나는 북한 어린이들은 근본적으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질 문 41>

의료부문에 있어서의 북괴의 「무료치료제」란 말 뿐이고 실은 대개인에게서 기본임금의 10%를 공과금으로 선납하는 속에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무료치료제」가 아니고, 더우기 부양가족들은 약값을 내야 하므로 무료치료란 거짓이고, 도리어 건강한 사람에게서까지 공과금을 징수하고 있으니 결국은 교묘한 착취제도가 아닌가?

<해 설>

북괴는 1959년도부터 이른바 「무료치료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병이 나도 돈 환푼 들이지 않고 고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는 북한의 실패는 과연 그러한가?

표면상으로 볼 때는 직장에 나가고 있는 노동자와 가무원들은 병원 또는 진

료소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가져다 먹어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산당사회에서는 그럴 수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당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공산당과 그 두복을 위해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해야 하지만 그 대가는 겨우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임금 밖에 주지않기 때문에 치료비나 약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루에 15~16시간이란 노동에 혹사하고는 그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병이 났을 때 무료로 치료해 준다는 것은 아무런 자랑거리도 되지 못한다. 8시의 노동의 대가는 어찌되었으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치료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복피는 사실상 치료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무료치료라고 선전하지만 그 내막은 다르다.

그 실 겨우 식생활 밖에 유지할 수 없는 기아임금을 주면서 그 월급에서 미리 「사회보장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기본임금의 1퍼센트씩을 선납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매달 여러가지 명목의 공과금으로서 기본임금의 10퍼센트 이상이 공제되고 있는데, 그중에 치료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복피가 선전하고 있는 무료치료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노동자 및 사무원의 부양가족으로써 직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약값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치료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또 농민들이 도회지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는 치료비를 지불해야만 치료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즉 부양가족이나 도시로 이송된 농민은 의료대금을 도시에 선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한다는 것이다.

농촌지역의 간이진료소 또는 진료소에서도 그 담당구역 이외의 주민들을 치료했을 때는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복피가 선전하는 무료치료제는 사실과 다른 거짓이고, 오히려 건강한 사람에게서 까지도 치료비를 징수하는 착취행위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 무료치료제의 결과는 북한 주민들에게 물질적으로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렸을 때에 천대를 받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치료를 받을 때 의사와 간호원들은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약 한봉지 주는 것도 공짜로 주는 것처럼 인색하다. 사실은 이미 대금을 내고 치료를 받는데도 치료비를 받을 가망이 없는 환자를 다루듯 불친절하게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북한의 의료제도의 실정이다.

한편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자기가 열심으로 치료한다 해도 자기에

게로 돌아오는 수입은 월급이외엔 한푼도 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불친절해지고 귀찮아지게 마련이다. 소위 무료치료제라는 간판 밑에 이와 같이 지능적이고 혹독한 착취가 행해지고, 거기에 더하여 천대와 부당한 처우를 받는것이 북한 주민들의 실정이다.

<질 문 42>

북한에서의 의사의 성적을 평가하기 위한 의사 담당구역제와 치료부문에서의 천리마운동은 의사들을 혹사하자는데서 시작한 제도로서 결과적으로는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인간의 생명을 한갓 노동력의 공급원천으로 생각하는 큰 잘못이 아닌가?

<해 설>

소위 무료치료제의 미명하에 북한 주민들을 이중착취하고 있는 북괴는, 다시 의사들에게 담당구역제를 실시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이중 삼중으로 괴롭히고 있다. 즉 의사들로 하여금 어느 구역을 담당케 하여 거기에서의 성적을 평가해 보자는 속셈에서 생긴 제도로, 이것 역시 의사들을 혹사하자는데서 시작된 일이지만 그 결과는 노동자 농민을 더욱 괴롭히게만 하였다.

북괴가 1957년부터 시작한 천리마운동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제부문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부문에까지 확대시켰다. 이 천리마운동이 인간을 교육하는 교육부와 환자를 치료하는 보건부문에까지 강요된 결과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었다.

생산부문에서는 천리마운동의 성적평가는 제품의 양과 질을 기준으로 하여 쉽게 측정할 수 있지만, 산 인간을 취급하는 교육과 보건부문에선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북괴는 보건부문에서도 환자의 치료수와 담당구역내의 환자 발생수를 위주로 성적의 우열을 따졌기 때문에, 그 피해는 자연히 의사와 의사의 혜택을 절실히 요구하는 중환자와 장기성 질환에 걸린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왜냐하면, 쉽게 고칠 수 있는 경환자는 치료 진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중환자는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의술은 인술”이라고 하였는데 의사 담당구역제와 천리마운동은 인

술로서의 의학이 아니라,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근무성적을 높이기 위한 자료로서 환자를 취급하게 만들었다. 사실 공산당의 입장으로 볼 때, 중환자를 오랜 기간 힘들여 고치는 것 보다 경환자를 빨리 고쳐 노동을 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타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기본적인 판단은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인간의 생명을 한갓 노동력의 공급원천으로 생각하는 데서 오는 큰 잘못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복괴는 치료를 하기 보다는 예방의학을 내세워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소위 위생교육이라 하여 의사·준의사·간호원들이 동·리·자 기업소·직장 등을 찾아 다니면서 위생에 대한 강연과 청소 등을 시킨다.

그리고는 병에 걸리면 그 강연을 열심히 듣지 않고 또 그 강연에서 지시한 대로 하지 않아 그렇다고 하면서 문책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주민들은 병이나 도 진료소에 알리지 않고, 그대로 참고 직장에 나가는 일이 많다. 그 결과로 중환자가 되어 그대로 잘못 되는 일이 많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범위생군 창조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하여 노동에 지칠대로 지친 북한주민들을 위생교육 또는 위생사업이라 하여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청소와 강연 등으로 몰아치고 있다. 그리고는 이중 모범위생군이 몇개 지역이요, 모범 위생군이 몇개 구역이라고 발표하면서 이것 역시 천리마운동식으로 몰아치고 있는 실정이다.

6. 군사·전략전술 통일문제·기타

<질 문 43>

소위 김일성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한 북괴군은, 우선 조작된 민족반역의 전통위에서 출발했고, 양민을 학살하는 잔인성을 이어 받은 김일성 일당의 사병이며 전국 적화통일을 위한 무력남침의 침략군이자 민족반역의 무리가 아닌가?

<해 설>

북괴군 창건 20주년에 행한 김일성의 연설관 김 창봉의 보고는 판에 박은듯

이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 계승자로서 탄생한 조선 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하였다”라고 재강조 함으로서 김일성의 소위 혁명전통을 이어 받았다고 떠벌린다. 과연 그렇다.

그들의 문헌이 입증하듯이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운동이란 중국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 1932년대에 동만 지역에 조직된 중공계 항일 유격대의 일개 소부대(제6사 부하 200명 내외)의 장의 위치에서 중공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그 실은 동만지역에 거주하던 양민 학살, 재산 약탈 등 문자 그대로 10년에 걸친 마적 행위를 자행한 것이 항일운동이요, 그것이 곧 혁명 전통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김일성 일당들은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구절 가운데, 북괴군은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의 고상한 사상 체계와 혁명정신,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계승했다”고 내세우는 것은 6.25가 증명하듯이 그 북괴 집단이 양민학살·재산약탈을 일삼는 살인 강도단이라는 것을 표현한 또하나의 다른 말에 불과하다.

그리고 북괴 일당들은 북괴군이 “항일 빨치산 시기에 김일성에 의하여 창조된 백전백승의 전략·전술과 교묘한 군사·정치적 경험을 전면적으로 계승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김일성이 아닌 김성주의 빨치산 투쟁이란 역사가 증명하듯이, 양민들에 대한 불의의 습격에서 얻은 백전백승의 전략·전술임을 피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1930년대 동만 지역에는 순수한 민족주의 애국투사들로 항일투쟁한 독립군이 있었고, 사회주의 운동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공산당계인 소위 마적단들이 있었다. 김일성의 소속은 이 마적단이었던 것이다.

김일성 일당들은 북괴군을 가리켜, 당의 무장력이라고 규정(당규약) 하였으며, “자본주의 국가의 군대는 소수의 자본가·지주들을 위하여 절대 다수인 근로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제도를 무력으로 옹호·유지하며, 다른 민족과 남의 영토를 침해 할 목적에서 조직된 군대”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침략성이나 당의 군대임을 은폐하려 하였지만, 북괴군의 조직 목적부터 바로 그들이 말하는 대자본가·대지주(사회주의 개조의 덕분으로)로 둔갑한 김일성 일당의 군대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조선 인민군은 오직 조선노동당 앞에 충실하고, 오직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혁명의 길로 나아가며”라고 말함으로써, 북괴군이 북괴 치하에서 사는 모든 주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고, 북괴 당의 당병임을 공공연히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김일성 일당들은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유일 사상으로 확고히 무장되었으며,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충실할 따름이다. 그 어떤 다른 사상은 알지 못한다”고 못 박음으로써 괴뢰군은 곧 김일성의 사병임을 토로하고 있다.

그들은 북괴군을 가리켜 혁명의 무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혁명이란 바로 전 한국 영토의 적화통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북괴는 이 무력에 의하여 전 한국을 석권하고 적화통일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1948년 2.8창군 이전에 벌써 예비조직된 김일성 사병들의 발족 취지가 그러했고 창군 이래 6.25의 불법남침, 6.25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전쟁준비 내지 대남공작의 어느 하나도 침략성을 띠지 않는 성격이 없었다는 것으로 북괴군이 침략군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괴뢰당의 당병이요, 김일성의 사병임을 또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질 문 44>

북괴군은 원래 그 창건 목적부터가 침략군이기애 말로는 언제나 방어위주인양 가장하나, 실은 재 남침의 무력증강에 광분하는 폭력적인 군사노선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 답>

북괴는 괴뢰군의 군사노선을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로 정하고, 이 실현을 위하여 전복한주민을 들볶고 있다.

김일성 일당들은 이러한 군사노선에 언급하여 “전군의 간부화와 전군의 현대화는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와 맞서 있는 조건에서 일정한 수의 상비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면서도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게 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상비군을 핵심으로 군사력을 급속히 늘일 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하고 현명한 방침”이라고 말하고, 이어 “전인민의 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는 부문간에 차이가 없고, 지상과 공중·해중 등 넓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입체적인 현대전에 맞게 방위력을 강화함으로써, 어떤 형태로 어느 곳을 침입해 오든지 견고한 요새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싸울 수 있게 하는 방위체계”라고 내 세움으로써 그들이 군사노선을 정하게 된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전군의 간부화란 휴전 직후 북괴군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전설 정책의 하나로 당의 기본노선에 따라서 기재된 것이 전군의 간부화 방침이다.

피수 김일성은 전군의 간부화의 구호를 내세운 이유로서 “싸움을 못해 본 새 로 들어온 전사들에게 전투경험을 가르쳐 주어, 그들로 하여금 모두 다 전투 지휘를 할 수 있는 간부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전제하고 지난날의 경험은 괴뢰군을 강력한 간부군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음 전군의 현대화란 문자 그대로 전군은 현대무기로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그들의 말대로 미군과 맞설 무장의 준비를 의미하여, 전인민의 무장화란 노동적위대등 소위 민간방위 태세를 확립한다는 것이며, 전국의 요새화란 남침 후 유엔군 참전으로 패퇴하는 과정에서 겪은 쓰라린 경험을 살려 재차 남침했다가 다시 패퇴할 때에는 게릴라전으로 뺏쳐보겠다는 등 대응책에서 발의된 것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종의 전략·전술인 것이다.

북괴군의 4대군사 노선을 살펴 볼 때, 다른 분야에 관한 과장선전이나 자랑이 라던가와는 달리 어디까지나 방위체제 즉 수세에 있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말한 “미제국주의와 맞서있는 조건에서…혁명의 전취물을 보위 하면서도…” “입체적인 현대전에 맞게 방위력을 강화함으로써 어떤 형태로 어느 곳을 침입해 오든지 견고한 요새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싸울 수 있게 하는 방위체제”라는 말에서 엿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인 것이다. 북괴군의 성격이 북괴당에 예속되고 당의 지령에 의하여 하나에서 열까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부터 당의 혁명의 무력으로 침략적이 아닐 수 없다.

<질 문 45>

호전적이고 폭력혁명만을 위주로하는 김일성 일당의 「남한적화통일정책」의 전략·전술이란 폭동 사회질서 교란, 시설 파괴, 요인압살, 양민학살, 지하당조직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은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폭력행위가 아닌가?

<해 설>

북괴의 남한적화통일 정책에는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는 북한에 있어서의 정치·경제·군사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정치면에서는 전체 북괴당원의 대열을 검토하고, 모든 북한주민의 주민등록 사업을 통하여 혁명에 협력하는 층과 비협력하는 층과를 구분하여 전쟁에 대비하며, 경제면에서는 중공업 우선 발전을 서둘러 중기·무기등을 자급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 수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경공업과 농업의 동일수준 발전을 견지하는 것이다. 군사면에서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장비의 현대화 등이다.

둘째 남한에 공작원을 대량 첩투시켜 지하당을 조직하고 제2의 여·순반란 사건 등을 일으킬 수 있게 소위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동일북(帶同越北) 어선남치 등도 포함된다.

세째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북괴의 국제적 위신을 높여 공산권은 물론 중립국가 자본주의 국가와도 유대를 맺어 북괴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얻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세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적화통일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 실행방법은

첫째 소위 평화적 적화통일로 남한에 조직된 지하당을 통하여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정치인 고급관리 즉 장관이나 국회의원까지 포섭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군을 철수시키고 남북간의 경제 문화교류 등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남한정세로 보아 이 가능성은 5%도 안 된다고 자인하고 있다.

둘째 무력통일론이다. 북괴 집권층은 호지명, 카스트로, 케바라 등에 격정적인 매력을 느낀다. 월남이나 쿠바로 변하는 남한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다 즉 남한에서 게릴라전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그들은 본격적인 유격전을 전개하여 남한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면에 일대 혼란을 일으켜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은 후 결정적 시기를 포착 대규모의 무력공세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자연환경이 게릴라전에는 적합치 못하다. 이미 1·24군 공비 남파로 실패했다.

세째 남한에서 소위 전인민적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것인데, 첫째 둘째의 방법을 병용하는 것으로 이것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인민적 무장봉기란

4·19, 6·3사태와 같이 학생테모가 일어나면 무장간첩들이 군복이나 경찰복을 입고 특히 밤을 이용하여 학생테모에 무차별 사격을 해버린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군인이나 경찰의 총 뿌리에 죽은줄만 알면 테모는 불길처럼 것잡을 수 없게 일어나게 되고 이에 대비해서 경찰과 군인은 더욱 큰 병력으로 저지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될 때 곳곳에서 무장 게릴라들이 준동 남한은 온통 정치적 불안정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만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때를 소위 결정적 시기로 보고 북괴군의 육·해·공군이 휴전선을 넘어 총 공격을 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4.19, 6.3사태 때 그들의 소위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지 못했던 것을 통탄했다.

네제 월남이나 중동 등 국부전에서 점차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대되어 제3차 대전이 일어났을 경우 북괴는 그들의 무기로 자체방위 하다가 시기를 포착, 남한을 적화통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전쟁분위기의 조성은 김일성 일인 독재의 집권을 연장시키고 전 민중을 위압하는 독재자의 상투수법이요, 북한 주민의 반발의 극심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질 문 46>

6.25남침의 전범자의 죄상도 반성함이 없이 재남침 적화통일을 위하여 수많은 공작원과 무장공비를 남파하여 전쟁도발을 피하고, 남한의 지하당을 조직 무력혁명을 일으키려는 김일성 일당은 민족반역 도당이자, 인류평화의 파괴자가 아닌가?

<해 설>

북괴의 대남공작원 가운데는 출판물을 배포하는 공작원, 군사기밀을 탐지하는 공작원, 연교자를 유인하여 남북(拉北)하는 공작원, 통일전선—공개된 단체를 통해 요인을 포섭—공작원 등이 있는데 모두가 결국 남한에 지하당을 조직하여 소위 결정적 시기를 맞자는 것이다.

이와같은 공작을 하기 위해서 거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거점은 육내거점, 노천거점, 비밀 아지트거점등 세가지가 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거점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가지 이상 혼합된 거점을 구축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구체적인 공작에 있어서

첫째 남한에 지하당을 조직확대 하고 깊고 믿을만한 지하당원들로 생산유격대를 조직한다. 이것은 3,4명으로 한 조를 형성, 야간의 단 시간내에 시설파괴, 지서 습격, 요인 암살 등을 하는 것이다. 낮에는 자기 직장에서 평소와 같이 일을 함으로써 의심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공작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해안접선 지역에 무기저장고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결정적 시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무기를 실어다가 비밀아지트에 저장해 두고 완전히 포섭된자에게만 무기저장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다.

셋째 남한을 동요시키기 위하여 분쟁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농사철엔 풀 싸움을 일으켜 불화를 조성한다든지 유언비어를 퍼뜨려 인심을 흉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을 총동하여 임금 등 처우개선 문제를 제시시켜, 경영자나 자본주의와 싸우도록 조종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주 데모를 일으키게 사수하여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결정적 시기를 앞당기게 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으로 불평,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여 소위 적화통일 후에 화려한 직책을 보장해 주는 대신 이들을 지하당조직의 앞잡이로 이용한다.

네째 실업자들을 유인하여 대대적으로 월복시킨다는 것이다.

이 대대적인 납북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돈 벌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위장하여 감시가 소홀한 곳에 모이도록 한다. 이 장소는 납북기도 공작선과 가까운 해안으로 하든지 휴전선 부근으로 정한다. 약속된 인원이 모이면 강제 납치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방법은 남한의 선주(船主)와 유대를 맺는다. 그리고 어선에 승선한 다음 공해근방에 이르렀을 때에 강제 월복해 버린다는 것이다.

<질 문 47>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 우리동포들은 김일성 일당의 허위선전과 전략 전술에 속아 소위 「제 2전선론」을 내세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한국에 침공해 들어 가야한다”고 날뛰고 있는데 그 이상 죄를 범하지 말고 「민단」의 품으로 전향함이 옳지 않는가?

<해설>

「조총련」의 대남한공작 활동은 196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북괴의 대남공작 기본 방침에 의하여 공개·비공개 수단을 통한 조직의 확대와 기술적 전문화로 제3국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대남한 공작을 자행하고 있다.

「조총련」은 그 정책으로써 “평화적 통일사업을 조총련의 중심사업으로 규정하고 민단에 대한 공작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본에 있는 조건을 이용하여 대남한 정치선전을 강화함으로써, 남한에 있어서의 반미구국 투쟁을 지원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조총련」의 대남한공작의 강화책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총련」의 대남한공작은 여러모로 온갖 수단을 다하고 있다. 그것은 다만 선전이나 선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본 노선은 어디까지나 무력적인 수단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주 제 2전선론을 내세워 1·21사건과 「무에블로호」 사건에 관하여 산하 단체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무장유격을 지지하며 인민의 무장 쫓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다”는 기본노선을 재확인 시키고, 합법·비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장 공격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첫째 과업으로써 소위 사상동원이라는 대남한 공작의 전술노선을 결정하였다. 즉 「조총련 중앙위원회」는 “특히 무장투쟁에 대한 간부들의 사상동원을 철저히 시키며 이를 사생활과 밀접히 결부 시키도록 한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소위 혁명정세의 성숙에 대비한 것으로 만일 한국에서 무장폭동이 일어날 경우, 「조총련」은 일본에서 소극적인 지원만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한국에 침투하여 무장폭동에 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항상 전투 동원 태세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산하 단체들에게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김일성이 무장공비를 남파한 일을 「조총련」산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옳은 일이라는 인식을 넣어 주기 위해서도 필요했을 것이며 또 대중에 대한 정치훈련의 구실도 되어 “한국에 침공해 들어가야 한다”는 김일성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벌린 조직적인 훈련강화책이었다. 이와 같이 「조총련」의 대남한공작의 기본노선은 무력침공의 바탕을 이룩하여 그들의 말대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기지를 육성”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총련」의 대남한공작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재일본 현지공작

과 대남침투공작 활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재일본 현지공작에 있어서는 첫째 민단에 속한 교포포섭 사업으로 한국에 영향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하는 간접적인 장기공작, 둘째는 한국에서 합법·비합법적으로 일본에 건너오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그 계급·신분·학벌 등·모든 여건에 따라, 공작원 또는 협력자로 포섭하고 복송 유인공작을 하는 것 셋째는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우편물의 대량 투입에 의한 한국 거주자 공작에 주력하는 일 들이다.

이와 같은 공작방향에 따라, 공작기관 들은 한국선박 출입이 많은 각 항구에 공작원을 파견하여 이들에게 물질적인 선심공세를 수단으로, 이들로 하여금 선진적인 유인물을 남한에 밀송하게 한다던가 경우에 따라서는 공작금 반입 등 연락임무를 주어, 이른바 협력자로서의 포섭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한국으로부터 운동 선수단을 비롯한 각종 친선대표단·유학생·회의참석자들이 일본에 건너가는 정보를 탐지하고 사전에 그 각 개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포섭대상자에 대하여 집요한 접근책을 시도하여 세뇌공작.

복송 유인공작, 또는 대상에 따라서는 대남장기 공작자로 포섭할 경우도 있다.

그 밖에 국내에서 반정부 운동의 격화로 정치 정세가 불안할 때, 또는 연발·연시를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친척·친구 및 국내 유명인사 앞으로 우편을 이용한 대량 선전물을 반입케 하는 공작도 자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총련」의 대남한 침투 공작에 있어서는 민단을 파괴하자는 공작과 함께 실로 그 수단과 방법은 교묘하다. 그것은 한국을 내왕하는 일본인을 비롯한 제 3국인까지도 이용하며, 본국에 내왕하는 교포들에게 그들의 총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제인에 대하여 더욱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조총련」의 사업내용을 보면 남한에서의 내왕자를 파악하여 교양을 주는 사업, 남한에서의 내왕 선원을 교양하여, 선원을 통하여 출판물을 남한에 보낸다. 남한을 방문하는 민단원을 조사하여 교양을 주는 사업, 남한의 친척에게 편지와 선전 유인물을 보내는 일들로 되어 있다.

이와같이 「조총련」이 제아무리 억지로 민단체 인사들의 본국방문을 적극 저지시키려 해도, 그것은 자기네들이 한국사정에 허위선전의 탄로일 뿐, 진상은 밝혀지고, 최근에는 수 많은 「조총련」간부들이 대거 민단에 적을 옮기며, 그 죄악상을 폭로하고 있는 형편이다.

<질 문 48>

북괴는 6.25남침 직전 평화적 통일 남북협상을 제의해 놓고는 남침을 자행했고, 그후 20년동안 계속하여 평화적 통일, 남북교류를 제의해 왔으나, 북괴가 주장하는 평화적 통일방안은 평화적 방법이 아니라 전쟁(무기)에 의한 적화통일 획책을 은폐하기 위한 전술이 아닌가?

<해 설>

북괴가 주장하는 남북통일 방안의 추이를 몇 단계로 구분하면

(1) 1948.9—1954.4사이에 있어서는 미군철수·남북협상을 주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했으며 미국이 1950년 1월 4일에 태평양 안전보장인 「애치슨·라인」을 공포하자, 한반도가 미국의 방위지역 밖에 있음을 절호의 기회로, 6.25남침까지 강력한 평화공세를 표면상 내 세우고 대거 무력 남침을 개시하였다.

(2) 1954.4—1956.4사이에 있어서는 평화통일 공세와 더불어 남북간의 경제 및 문화교류, 통상, 통행, 서신교류의 개시 등 비정치적 측면의 남북교류를 제의하였다.

(3) 1956.4—1960.4사이에 있어서는 북괴의 가장 어려운 시기로서 피의 승전이 연속되던 때이며 경제계획도 실패에 돌아간 때인만큼 평화적 통일을 강력히 제기하는 한편 남북교류를 제의하였다.

(4) 1960.4—1965.4사이에 있어서는 국내의적으로 다원화와 혼란한 시기로서 북괴는 외교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에서 야기된 4.19학생 의거, 과도정부 그 후의 민주당 정부를 통해 야기된 사회적 혼란을 더욱 부채질 하기 위하여 무력통일을 가장한 평화공세를 더욱 강력히 내 세웠으며 평화통일, 자주적 통일 남북교류등 역시 평화공세를 시도하였다.

(5) 1965—현재 사이에 있어서는

북괴는 종래의 평화적 통일방안에서 투쟁적 요소를 더 첨가시켰다. 즉 그들은 남한에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합법적 투쟁과 비합법적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을 적절히 배합한 공세를 취하여 남북교류에 의한 평화공세를 떠들고 있으나 휴전으로부터 현재까지 7,800건의 휴전협정 위반과 각종대남 적화공작 및 공비남파등 만행을 보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평화통일은 위장된 것

이며 어떠한 교류도 악이용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하튼 북괴는 그들 고유의 평화통일 논의나 남북교류 제의를 세계적인 「평화공존 무드」의 조류에 편승하여 남북교류를 주장함으로써 남한의 제반 계층과 일반 대중의 통일논의의 분산을 초래케 하여 국론분열을 야기시켜 남한에 대한 북괴의 기지강화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대남전북 진술활동을 적극화시키려는 저의가 뚜렷하다고 보겠다. 동·서간의 긴장완화와 경제적 유대 강화추세에 부응하여 북괴는 중립제국에 무역증대를 획책하고 최근에는 몇몇 친서방국가에까지 무역관계를 개척함으로써 국제적 지위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유엔내의 신생제국 중립제국의 발언권증대와 이들 제국과의 유대증진을 통하여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를 곤란케하여 남북한 동시 초청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두 개의 한국관을 부각시켜 한국정부의 고립화를 촉진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북괴의 최고 전략인 남한의 무력적화를 목표로 남한내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증대시키고 우리의 통일방안인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와 한국의 유일합법성을 국제적으로 부인하기 위한 위장진술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질 문 49〉

북한주민들을 완전히 성분조사하여 거주지를 제한하고 집단생활을 시키며 이중삼중으로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남북간에 서신을 교류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허위이며 그들의 대남공작과 북한주민을 숙청하는 증거자료를 얻자는 것이 바로 서신교류론의 독소가 아닌가?

〈해 설〉

동·서독 사이에는 정치회담을 비롯하여 서신·문화교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같은 민족 같은 가족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4반세기가 되었어도 남북한 사이에는 왜 서신교류 마저도 할 수 없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북괴는 판에 박은듯이 같은 민족 같은 가족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4반세기가 되었으니, 한번 줌 서신이라도 교환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입장으로 보아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선전한다.

그런데 왜 이것을 반대해야 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그들의 흥계

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북괴는 월남자 유가족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 말하면, 직계는 8촌, 처가는 4촌, 외가는 3촌까지 월남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일일이 기록 카드에 기입하여 그를 다시 1, 2, 3부류로 구분하고 그중 2부류나 3부류는 이미 숙정하였고, 1부류도 1966년부터 실시된 주민재등록을 통하여 전 가재를 몰수한 후 북부 산악지대로 추방 하였다.

그들은 휴전 이후 「149호 대상」이라는 낙인을 찍혀 해안선과 휴전선에서 50킬로미터, 그리고 평양과 개성에서는 20「킬로미터」이내에서는 살지 못한다는 거주지 제한을 받아 이미 10여년 전에 북쪽 산악지대로 집단 이주 당하여 강제 노예생활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만일 북쪽에 친척이 있었다 하여도 지금 그 거주를 알아낼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생사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는테 누구에게 어떻게 편지를 보내겠는가?

둘째로 북괴의 철저한 편지 검열 때문에 만일 주소를 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의미에서의 서신거래는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요행 북한에 가족들이 살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남에서 보내는 편지는 가족들 손에 배달되지 않고 가족의 이름을 빌어 공산당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가 답장의 형식으로 이곳에 전달되어 올 것이 명백하다. 다시 말해서 남북간의 서신 거래는 공산당의 선전도구화 할 것이 뻔하다는 말이다.

남한 출신자의 가족을 간첩공작에 이용할 때는 공산당의 초안대로, 월북한 사람에게 남한에 있는 자기 가족에게 편지를 쓰게하여 일본을 경유, 이 편지를 남한에 전달하는데 이 때도 당사자는 자기 가족들의 답장을 절대로 보지 못한다. 그것은 공산당이 중간에서 편지를 조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물며 소위 성분이 극히 불량한 월남자의 편지 거래를 그들이 그대로 허용할 리가 있겠는가?

세째로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 연고자가 있으면 감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될수록 그러한 사실을 숨긴다. 만약 이쪽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재북가족이 남한에 그들의 가족 또는 친척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숨기고 있었다면 당을 속였다는 죄로 그 운명은 영원히 망치게 되는 것이다.

네째로 남에서 보내는 편지는 주소, 가족사항, 살림형편, 직업 등을 북괴에 알려주는 것이며, 이것은 그들의 대남간첩 공작에 더 없는 좋은 자료가 되며 북괴는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명을 미끼로 남한에 사는 가족을 최대한으

로 이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몇 모르고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편지를 보낼 사람은 어느때가는 밤중에 북으로 부터의 죽음의 사자 즉 간첩의 방문을 받게 될 것이다.

서신의 비밀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우리 한국에서는 남북간에 서신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통제할 강력한 대책이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편지 한장 보낼 수 없는 장막속에 쌓여 노예생활을 하는 것이 북한 주민의 실정이고 보면, 남북간의 서신교류란 북괴의 선전과 농간임은 명백하다.

<질 문 50>

① 북한에서는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토지 및 재산이 몰수되고 교회와 사찰 등이 탁아소·유치원·창고·휴양소·숙박소로 되어 버렸다 면 완전히 종교를 말살하려는 정책인데 이것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북괴 헌법에 위배된 것이 아닌가?

② 종교는 아편이니 믿지 말라고 하면서 공산주의만을 믿으라고 강요한다면 그 공산주의는 종교가 된 것이 아닌가?

③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 놓고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는 말살하면서, 종교를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 대대적으로 반종교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이론적인 모순이 아닌가?

<해 설>

유물론을 신봉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증오하고 이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들은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말살하려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말살하려고 광분하는 숨은 목적은 공산주의를 종교처럼 무조건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마치 사교가 정교를 비난하듯이 공산주의라는 사교가 참다운 종교를 탄압하고 말살하려는 셈이다. 소련 공산당 역사가 그러하였고, 동구 공산국가들에서도 종교인에 대한 탄압으로 얼룩진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제아무리 탄압으로 종교를 말살하려 하였지만, 이들 나라 독재자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종교는 공산당의 탄압이 심할수록 이들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교에 대한 동정과 유혹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신앙의 자유란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속하며 천부의 특권으로서 그 어떤 인위적 힘으로 탄압 또는 말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8. 15해방 이후 북괴의 종교탄압은 철저했고, 혹독하였다. 1959년 북괴가 발간한 반종교운동의 지침서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여야 하는가”라는 책자는 결론을 맺는 부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북반부에 아직 남아서 준동하고 있는 일부 악질 종교인들이 종교의 간판 밑에 반혁명적인 행위를 조작하여 종교적 사상을 우리들 속에 부식시키려는 기도와 철저히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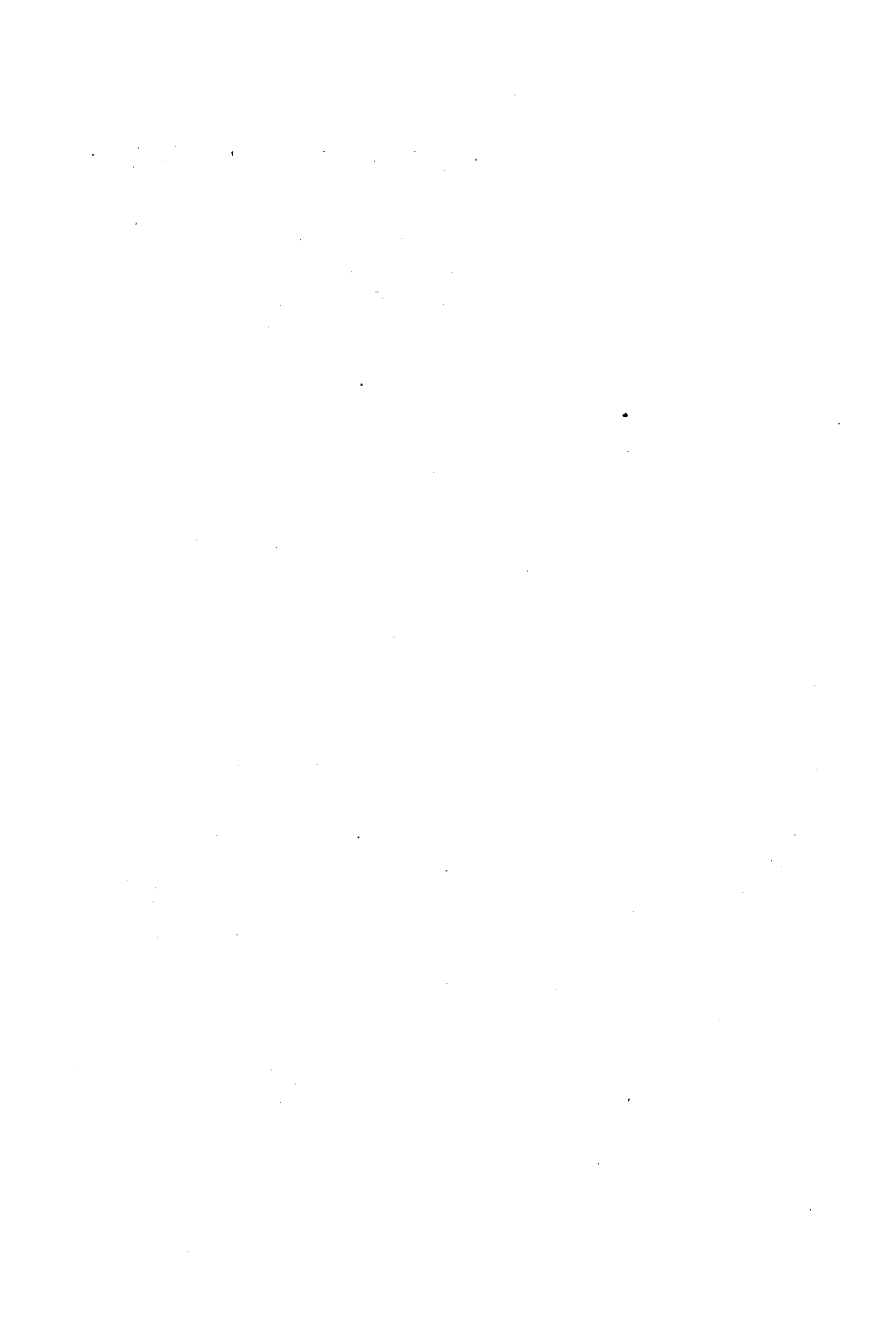
6. 25전에는 종교의식은 금하여도, 교회예배당·사찰 등을 비롯한 종교시설들은 대체로 원형이 파괴되지는 않았다. 전쟁시에 많은 피해는 입었지만 전후에도 많은 시설들이 남아 있었다.

휴전후에 북괴는 대파된 종교시설들을 완전히 철거해 버렸고, 수리하여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종교시설의 표식이 나지 않도록 개축하여 탁아소·유치원·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끝으로 종교 말살의 한 방법으로 북괴가 취한 조치는 북한주민들에게 시간적 여유와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강제노동과 세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한편 북괴당원들로 하여금 대대적인 반종교운동을 전개하도록 하여 조금이라도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언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개리에 박해를 가하였다. 북괴는 그들의 상투적인 방법인 간첩, 또는 반동분자라는 굴레를 씌워 종교인을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여 왔다.

북괴의 종교정책에서 더욱 가증한 일은 마치 북한에서도 종교인들이 종교활동을 하는양 「기독교동맹」 「불교도연맹」이라는 어용·유명단체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시의 종교시설 등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탁아소·유치원·창고로 쓰고 있고, 불교의 사찰들은 석왕사를 비롯한 몇개의 고적으로서 가치가 있는 명찰 이외에는 휴양소와 정양소, 지질탐사대와 식물채집자들의 숙박소, 심지어 입산사업소의 현지 숙소 등으로 사찰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Ⅲ. 해답편

<질 문 1>

소련군은 과연, 북괴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해방의 은인」입니까?

<해 설>

이 문제는 복잡한 국제관계가 얽혀 있는 데, 이 문제에 답하기전에 '해방'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 언급하고 넘어 가야 하겠다. 우리가 쓰는 '해방'이라고 하는 말의 뜻과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해방'이라고 하는 말의 뜻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벗어났다고 하여서, 우리가 해방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일본이 물러간 후 그곳에 공산정권이 들어서, 공산통치를 해야 그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해방을 맞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에 공산정권이 아닌 어떤 정권이 서드라도, 우리는 해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산당은 공산독재정치가 지배해야 우리는 해방된다고 한다.」

한국의 해방도 소련군이 진주하여 공산정권을 세워야 해방을 맞이 할 수 있으며, 미군이 진주한 곳에서 공산정권이 서지 못하면 우리는 해방을 맞이 할 수 없게 되므로 공산정권을 세워서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가지는 공산주의자들 눈에는 소련군밖에는 해방의 은인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과연 소련군은 우리의 '해방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선 소련군이 이렇게하여 우리 나라에 진주하게 되었는지 이에 대하여서 살펴 보기로 하자.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2월 1일에 미·영·중국 등 3대연합국의 수뇌들이 '카이로'에 모여서 회합한 끝에 소위 '카이로'선언이라고 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속에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해방·독립시킬 것을 결의 한다」고 공약하였다. 이 공약은 다시 1945년 7월 26일 일본의 패망이 결정적으로 되었을 때 미·영·중국의 수뇌들이 서명한 「포츠담 선언」에 의하여서 재확인 되었는데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의 주권은 본주·북해도·구주·시고구와 우리가 결정할 제조도에 국한될 것임」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보는 바 「카이로」 「포츠담」선언에는 소련의 서명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소련이 한국의 해방과 독립을 약속한 것은 1945년 8월 8일의 매일 선전포고

에서 「한국의 해방과 독립」이라고 박아서 말하지 않고 「포츠담 선언」에 가담한다고 선언함으로써 한국의 해방과 독립에 대한 공약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소련은 한국의 해방과 독립에 대한 원 후원국이 아니라 가담국에 지나지 않았다.

소련이 대일전에 참가할 시기에 대하여서는 1945년 2월 11일 미·영·소의 3거두에 의하여서 서명된 「알타 협정」에 나타나 있다. 「독일이 항복하고 유럽 전쟁이 종결된 이후 2개월 내지는 3개월 후」라고 하였다. 그런데 독일은 1945년 5월 8일에 항복하였으므로 이 협정대로 한다면 소련은 7월 내지는 8월에 참전할 것이 예상되고 있었다.

그 후 1945년 8월 6일에는 일본 「히로시마」에 최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으며, 일본은 또한 이미 7월에 소련을 통하여 전쟁을 종결시켜 줄 것을 의뢰한 바 있었고, 바로 8월 8일에는 「포츠담 선언」을 원칙적으로 수락할 용의가 있음을 연합국에 통고하였다. 소련은 이시기야말로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할 절호의 시기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일본이 소련에게 전쟁 종결에 대한 중재를 부탁한 때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1941년 6월 22일의 독·소 개전보다 앞서 일·소는 4월 11일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였다. 소련이 이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8월 8일에 대일 선전을 포고하기까지는 소련은 일본의 적국이 아니라 중립국이었다. 이때문에 소련에 중재를 부탁하였던 것이다.

소련군은 8월 9일에는 두만강을 넘어 북한 땅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8월 13일에는 청진에 상륙하고 21일에는 원산에 상륙하였으며, 24일에는 평양을 점령하는 한편 그 일부는 38선을 넘어 계속 남하할 기세를 보이었다.

이처럼 소련군이 한반도에서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하고 있을 때 미국의 전투부대는 아직 오키나와에 있어 한국에서 군사행동을 할 것인지 조차 미확정상태에 있었다. 소련의 군사행동을 이대로 방치하여 둘 때 소련은 전한반도를 사실상 점령하게 될 형편이었다. 그러므로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합동참모회의에서 작성한 「일방명령 제1호」 즉 한국의 북위 38도선으로써 미·소 양군의 군사행동의 범위로 정한 문서를 8월 15일에 스탈린에게 송부하였던 바 16일 스탈린은 일본이 항복할 경우 일본의 북해도의 북반부도 소련군이 점령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한반도 38선의 이북만을 점령한다는 것을 수락하였다, 9월 2일 연합군 사령부는 미·소양군이 한반도를 38선을 분계로하여 분할점령

한다는 것을 발표하였으며 미군은 9월 8일에야 인천에 상륙하였다.

이와 같이 38선은 소련군이 전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군사적 조치로서 미국이 제안한 것을 소련이 수락함으로써 생겨났다. 그러나 그 후 이 선은 군사적 분계선이 아니라 한국을 사실상 남·북으로 갈라놓은 분단선이 되고야 말았다.

여기에서 볼때 소련군은 일본과 싸움다운 싸움도 하지 않고 항복 직전에 있던 일본에 대하여서 일본과의 불가침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면서 선전을 포고하고 한반도에 진입 점령하였다. 이에 반하여 미국군은 태평양전쟁에서 처절한 싸움을 한 끝에 일본의 항복을 얻고 소련에게 뺏길 뻔 하였던 한국에 대한 점령권을 38선을 설정함으로써 겨우 그 일부라도 찾아냈던 것이다. 우리의 해방을 위하여서 처음부터 힘쓴것은 각 구체적 공약, 일본과의 싸움에 비추어 볼때 미국이지 소련은 아니었던 것이다.

소련은 태평양전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것은 원자폭탄이 아니라 소련의 대일전 참가라고 선전하였다. 그것도 불과 1주일 밖에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원자탄 투하로 이미 항복이 결정적으로 되었던 일군을 상대로 싸워가지고 승리의 결정적 구실을 하였다고 하는 소련의 선전은 낮이 뜨거워서 차마 들을 수 없다고 하겠다.

<질 문 2>

한반도를 서로 나눠 점령한 미·소 양군은 어떤 「점령」정책을 썼습니까?

<해 설>

미군에 앞서 한반도의 북부를 점령한 소련군은 이 점령군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체제를 공산화하는 소위 소비에트화정책에 착수하였다. 김일성도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한 그 시각부터 북한에는 공산당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소비에트화의 첫 단계로는 공산당 지도자를 풀라서 수입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소련은, 크레믈린에 맹종이 철저한 스탈린주의자인 망명 공산당원 김일성을 택하여 소련군의 소좌계급장을 붙여서 소련 점령군의 끔무니에 달고 북한에 수입해 들여왔다.

당시 33세의 무명의 청년 김성주는 우리 민족의 오랜 신비적 영웅이던 김일성장군으로 둔갑하여 1945년 10월 14일에 소련 군정 당국이 마련한 「김일성장군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에 나타나 그 첫 선을 군중앞에 보이게 되었다. 이로부터 소련 군정 당국은 그를 「민족의 영웅」이요 「영명하신 지도자」로 날조하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김일성은 입북 이후 줄곧 초당파적 입장을 가장하고 민족의 대동단결을 내세웠다. 그것은 민족주의자로 가장함으로써 소박한 대중을 속여 그 여망을 획득하는 한편, 소련 당국이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서였다. 그러나 공산당 조직은 은밀히 진행되어 북한의 공산화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즉 10월 14일의 평양시 군중 환영대회에 앞서 10월 10일 소련군 사령부 당국자들의 입석, 지도하에 「조선 공산당 서북 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가 열렸다. 김일성은 이 대회에서 정치보고를 하고, 소련군 사령부의 후광을 업고 대회를 지배하였다. 그리고 10월 13일에는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창건되어 북한 소비에트화의 정치적 도구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혁명적 당」이 발족하였다. 그리하여 12월 17일, 18일에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 제3차 확대 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김일성은 소련의 당초의 뜻대로 드디어 책임비서로 선출되었던 것이다.

이 제3차 확대 집행위원회에서 김일성은 당 노선과 조직에 관한 보고연설을 하였다. 이 때에 북한에 「민주기지」를 건설할 것을 선언하였다. 즉

...“그러면 우리당 앞에 제기된 당면과업은 무엇인가? ...북조선을 통일된 민주주의적 독립국가를 위한 강력한 민주기지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산화계획이 소련군정에 의하여서 착착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들 계획은 모두 비밀리에 진행되었던 까닭에 북한 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미 이 때에 김일성도당은 공산당에 의한 공산주의 통일을 호언하였고 이 모든 일들이 소련군의 지원하에 진행되었다고 김일성 자신이 말하였다.

“우리당 앞에는 붉은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공산당의 영향을 확대 강화하고 북조선에 민주주의 기지를 축성 강화하여야 할 혁명과업이 제기됩니다”

소련 군정당국은 이상과 같이 김일성을 날조하여 이를 중심으로 공산체제를 굳히는 한편, 소위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소련 군정은 처음부터 공산당 1

당독재의 정권을 수립하려면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련은 연합국과 맺은 여러 국제협정 국제여론을 고려하며, 점령지역의 민족감정에 자극을 주지않기 위하여서 지선적인 소비에트화의 길을 피하고 공산당이 주도권을 쥐고 좌우할 수 있는 연립정부를 수립하여 실리를 취하게 된다.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자 북한 각처에서는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전국 준비위원회」 「자치대」 「치안 유지 위원회」등 여러가지 이름을 가진 자발적인 자치조직들이 생겨났다. 평양에서도 8월 17일 애국적 민족주의자 조만식선생을 위원장으로 하여 「평남 전국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일제의 도당국으로부터 임시로 행정권을 접수하였다.

평양에 진주한 소련군 사령관은 8월 25일에 「소련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이튿날인 26일 밤에 이 평남 전국준비위원회의 해체를 명령하는 동시에 민족진영 인사와 공산당 인사 각 16명씩으로서 연립행정기구인 인민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명칭문제로 민족진영에서 「내세운 정치위원회」와 소련군이 지시하여 공산당이 주장한 「인민 위원회」간에 서로 대립이 있었으나 결국 「인민 정치 위원회」로 낙착되었다. 이 명칭은 평남에 한하고 다른 곳에서는 모두 「인민 위원회」라고 칭하였다. 이 때에 소련군정은 조만식선생의 인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선생을 위원장에 앉히고 대신 투무, 보안, 사법 등 실권이 있는 자리에는 공산주의자들을 앉혔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북 5도에는 인민위원회가 생기고 소련군정의 명령에 따라 이들은 자도의 행정권을 이양받았던 것이다. 행정이양이 끝나자 1945년 10월 8일 소련군정은 「북조선 5도 회의」를 소집하고, 10월 28일에는 「북조선 5도 행정국」을 정식 발족시켰으니 소련은 북한의 분할과 예측화의 의도를 처음 드러냈다. 그리하여 조만식선생을 그 위원장에 취임시키고자 권하였으나 선생은 이를 거절하고자 말았다.

다음 소련군정은 그 점령지역에도 복수정당제도를 갖춘 민주주의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며, 도시의 소시민, 중농, 기독교인들을 조직 포섭키 위하여서 「반일 민주주의」정당의 결성을 서둘러 1945년 11월 3일 조만식선생을 당수로 「북조선 민주당」을 결성하였으나, 부당수 및 서기장 겸 정치부장직에는 공산당 간부가 앉게 되었다.

그러나 동년 12월 27일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한국의 신탁통치에 관한 결정이 발표되자 조만식선생 영도하의 「북조선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소련군정 당국은 조만식선생을 회유하여 지지하게 하려 하였으나 선생이 끝내 반배하자 선생을 가두고,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중앙 주권기관」으로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창립하였다. 위원장에 김일성, 부위원장에 김두봉이 선출됨으로써 김일성은 명실 상부한 북괴집단의 두목이 되었다. 이로부터 「북조선 민주당」내 반공 인사들은 대거 납하하였으니, 이 당은 공산당의 보조기구로 화하게 되었다.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라는 괴뢰집단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소련군정은 그것을 정당 사회단체의 지도자들이 제안한 것 같이 꾸미려 하였다. 당시 정당에는 김일성의 공산당, 김두봉의 연안파(중공파) 독립동맹, 조만식선생을 쫓아낸 북조선 민주당 밖에는 없었다. 그리하여 「임시 인민위원회」를 수립하던 바로 2월 8일에 「천도교 청우당」을 급작스럽게 만들어 내어 공산당의 꼭두자식 구실을 하게 하였다.

이제 공산당은 북한에 있는 모든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그들 의사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이들 단체들은 한데 묶어 전 인민이 단결되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에 이른바 1946년 7월 22일 김일성의 제의에 의하여서 4개 정당과 15개 사회단체를 망라하여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선」을 결성하고, 8월 28일에는 독립동맹의 후신인 「북조선 신민당」과 「북조선 공산당」이 합당하여 「북조선 노동당」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경과를 밟으면서 소련은 북한을 완전히 소비에트화하기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중이나, 그 후에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사절로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을 만난 바 있는 밀로반·질라스는 다음과 같은 스탈린과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 전쟁은 과거의 것과 같지 않아요 영토를 점령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군대가 할 수 있는한, 그 자신의 제도를 구축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스탈린과의 대화〉속에서)

과연 소련은 제2차대전 중이나 그 후에 그 점령한 지역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스탈린이 위에서 말한 그대로를 실천하였던 것이다.

이상의 소련 점령정책에 대하여서 그러면 미국은 어떤 정책을 썼던 것인가? 미군은 1945년 9월 8일에 인천에 상륙하였다. 이에 앞서 9월 2일에 한국 진주군 사령관인 미 제8군 사령관 존·R·하지 중장은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미군은 근일중에 귀국에 상륙하게 되었다. 당군은 일본이 동경에서 조인한 일본군 항복에 따라 연합군 대표로서 상륙하는바 귀국을 민주주의 제도에 있게하고 국민의 질서유지를 도모함도 또한 이번 상륙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군이 인천에 상륙한 다음 날인 9월 9일 「맥아더 사령부」포고 제1호로서 미군이 남한을 점령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38도선 이남에 미군정을 실시한다는 것과 점령에 관한 조건 6개조를 발표하고,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까지 그 군정을 충실히 실시하였다. 그 제1조에서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국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시행한다」고 군정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였다.

미군정이 시행되는 동안 군정당국은 어떠한 체제나 제도를 이 땅에 고정하거나 강요하려하지 않고 장차 이 땅에 정식 정부가 한국민의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수립될 시기를 대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기간중 어떠한 형태의 통치권이라도 한국민에 맡겨진 일도 없었다. 미군정치의 책임 밑에서 모든 통치가 이루어졌다.

1946년 2월 8일 북한에 소위 중앙 주권기관으로 「임시 인민위원회」가 수립된 1주일 후에 남한에서는 「민주의원」이 발족하였다. 이 기구는 통치권을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라 「미군사령관의 자문자격으로 협조하는」자문기관에 불과하였다. 북한에 단독 북괴정권이 수립된 4개월 후인 6월 3일에 이승만박사가 전북 정읍에서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할 것”이라고 제의하였으나 동월 11일에 러취 군정장관의 반대성명이 발표되었으며, 1947년 1월 5일에는 하지 사령관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정부의 남·북통일 정부 수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정부는 모스크바 협정을 이행하는 동시에 남·북통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는 한국에 있어서 단독정부나 행정이양은 있을 수 없다”

만일 소련도 상기 「하지」성명과 같은 미국의 입장을 지켰더라면 한국 통일 은 그 옛날에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에게 이런 것을 바란다는 것은 한 날 꿈에 지나지 않는다. 소련이야 말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한 흉계를 꾸민 원흉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은 이 흉계의 자본대로 움직인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다.

<질 문 3>

대한민국은 과연 북괴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 「분단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 설>

미·소 양군의 군사적 점령범위를 정한 경계선으로 그어진 38도선은 소련군의 점령정책으로 말미암아 남·북한을 갈라놓는 분단선으로 동결되어만 갔다. 이러한 사태를 시정하고, 국제적으로 공약된 한국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군 사령관은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한국문제를 취급하여 주기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45년 12월 16일~27일에 걸쳐,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개국 외상회의를 열고 「조선 문제에 관한 결정」에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이 임시정부의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미·소 양점령군의 대표로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최고 5년의 기한으로 미·영·소·중국의 4개국 신탁통치안을 이 공동위원회에서 제출한다는 것 등이 그 결정의 골자였다.

이 신탁통치안이 발표되자 우리 민족은 좌우할 것 없이 거국적으로 이에 반대하였으나, 공산당 및 그 동조자들은 그 태도를 표변하여 신탁지지 쪽에 서게 되었다. 이리하여 미·소 공동위원회는 1946년 3월 20일에 서울에서 첫 회합을 가지게 되었다.

회의는 임시정부 수립에 관한 협의 대상에서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정당, 사회단체는 제외하고자 하는 소련 측의 주장과 의사발표의 자유라는 민주적인 원칙에서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단체에도 협의 대상으로 참가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 미국측의 주장이 맞서 5월 6일에 일단 결렬, 무기 휴회에 들어갔다. 익년 5월 21일에 다시 열렸는데 협의 대상문제로 7월 드디어 결렬되고 말았다.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 국무장관 마샬은 소련 외상 몰로토프에게 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종용하였으나 소련측은 동 23일에 3상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단체와는 협의할 수 없다는 종전의 주장을 거듭 고집하는 회합을 보냈다.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10월 19일에 회합하고 무기 휴회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국 점령의 당사국으로서 미·소 양국이 한국문제의 해결에 실패하자 미국은 마침내 1947년 9월 17일 제2차 유엔 총회에 한국문제를 상

정하고, 세계인류의 심판을 통하여서 한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로부터 한국문제는 미·영·소·중국 특히 미·소 양 점령국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의 문제로 되었다. 유엔 총회는 9월 23일 한국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 정치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토의 보고하도록 하였다.

유엔 총회는 1947년 11월 14일 「한국 독립의 절차를 규정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엔 임시위원단을 구성하고 동 위원단으로 하여금 한국 전역에 걸쳐 1948년 3월까지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된 독립정부를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러나 북한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군의 협조 거부로 이 유엔 결의가 실시 불가능하게 되자 1948년 2월 6일 유엔은 소위 소총회에서 선거감시 위원단의 접근 가능한 지역만에서의 선거를 실시하도록 그 권한을 확인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는 유엔 감시 하에 총선거가 실시되고, 5월 31일에는 제헌 국회가 구성되고 8월 15일을 기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고, 미 군정도 이 날로 폐지되었다.

그리하여 동년 제3차 유엔 총회에서는 12월 12일자로 「한국에 관한 총회 결의문 제195(III)호」를 압도적 다수(48대 6)표로 채택하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하였으며, 전 한국국민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의 한국에 대한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동 정부는 동 지역의 선거인들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 있으며 임시 위원단에 의하여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둔 것이라는 것과 대한민국정부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선언하였다. 따라서 한 반도 내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의 정부나 통치기구라도 이는 합법적인 정부라고 인정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서 소련 점령군 당국은 「유엔 한국임시 위원단」의 북한 입경을 거부하고 1948년 8월 25일 조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하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소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부를 평양에 수립하였으니 한국의 분단은 기정 사실로 화하게 되었다.

이런 경과를 밟고 한국 분단은 사실화되었다. 한국에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미·소가 지어야 한다. 그러나 소련의 한국 공산화통일에 대한 전략 때문에 미국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책임은 유엔에 옮겨졌다. 그러나 소련은 한국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처리문제이므로 유엔에서 취급할 수 없으며, 관계 당사국(미·영·중·소)간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전후 25년을 끌고 왔으나 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와는 반대로 한국문제를 전후처리문제로서 당사국 간에서 해결코자 모스크바 3상회의를 열고, 그 결정에 따라 미·소공동위원회까지 열었으나, 그것이 실패에 돌아가고 당사국 간에서 합의를 이룰 수 없다는 현실에 부딪혔다. 여기에서 미국은 한국문제는 세계의 안전과 평화에 관련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음을 깨닫고 유엔에서 해결하려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남한에 대한민국이 먼저 섰기 때문에 북한에도 인민공화국이 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련은 공산국가 이외의 어떤 국가도 한반도 안에는 설수 없다고 하는 전략 때문에 한반도는 분단된 것이다.

또 대한민국이 먼저 섰기 때문에 북한에도 인민공화국이 세워지고 한반도는 분단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북괴정권을 똑같이 취급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하겠다. 유엔 결의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은 비록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할 수 있었던 지역에 대하여서만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것이다. 따라서 북괴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지배권과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 땅에서 실질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단체인 것이다. 즉 그들은 국제법상에서 말하는 실력단체인 것이다. 합법정부와 실력단체를 같은 차원에서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련의 세계 적화의 야욕 때문에 그 희생이 된 분단 국가는 우리 이외에도 독일이 있는 것이다.

<질 문 4>

일부 외국인이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의 중립화통일은 과연 정당할까?

<해 설>

이 문제에는 한국을 둘러싼 국제관계, 한반도 내에 남한에는 합법적인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어 있으나 그 지배권과 관할권이 사실상 북한에까지 미치지 못하여 북한에 사실상 실력단체인 김일성 집단이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관계, 중립국가로 통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립을 유지할 수 있겠는지

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국제정치 권력관계 등의 문제가 얽혀있다. 중립화문제는 이와 같이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말로나 생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그 실현은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다.

(질문 3)의 해답에서 이미 밝힌 바 한국에 통일정부를 수립할 일차적 책임은 미·소에 있으나, 이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양국 간에서 한국문제의 해결에 실패하자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고, 유엔에서도 「한국독립의 절차를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나, 소련은 끝내 한국문제를 전후 처리문제라고 고집하여 「한국임시 위원단」의 활동에 협조할 것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문제의 해결에는 우선 미국과 소련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유엔도 한국문제에는 깊이 관여하고 있다. 한국문제는 우리 한국사람들끼리의 문제인 동시에 미·소 나아가서는 유엔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미·소가 합의할 수 있는 전망은 현재로서는 요원하다고 하겠다. 그것은 소련이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세계 적화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련이 이 야욕을 버리지 않는한 합의에 도달하기는 매우 힘이 드는 일이며, 소련이 이 이데올로기를 버린다는 것은 소련에서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까운 장래에 소련이 공산독재 체제를 버린다는 것도 바랄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미·소가 합의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인데 국제정세에 극적인 변화가 있어 미·소가 합의한다고 손치더라도 북한에는 김일성 집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중에서도 가장 뒤 떨어진, 따라서 가장 공격적이며 독재적인 집단이 있어서 사실상 북한 땅을 4반세기 동안이나 지배하여 왔다. 이 집단이 어떻게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버릴 것이며, 가령 통일정부가 수립될 수 있다면 그 후에 이 때까지 사실상 북한 땅에서 행사하여 오던 통치권을 순순히 통일정부에 내놓겠는지 크게 의심이 가는 것이다.

이런 애로가 다 극복되고 한반도 내에 중립통일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하자, 그 때에 중립이 어느만큼 보장되었는지 또한 의심스러운 것이다. 한반도는 옛적부터 중국대륙을 그 배경지로 하고 있어, 중국대륙의 절대적 영향을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하물며 현재 중국대륙에는 북괴집단에 못지 않게 질이 낮은 낙후된 공격적인 중국 공산당이 들어 앉아 있다. 또 소련은 제정러시아의 태평양 진출 남진정책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 받고, 기회만 있으면 한

반도에 진출하고자 하고 있다. 이미 북한에 진출함으로써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의 숙원을 그 일부나마 이룬 셈이다. 중립이란 어떤 다른 나라와도 동맹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중국과 소련의 틈바구니에서 통일중립 한국정부가 우방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그 독립과 안전을 유지할 것인가? 「결국 소련이나 중공에게 정부되고 말 것이 예측된다」.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안전과 평화를 미국·일본·중국·소련으로부터 보장받자고 하는 논의가 나왔다. 한국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한다면 이런 꿈과 같은 이야기는 나올 수 없다고 보여진다.

요는 한국 내에 중립정부가 수립되는 경우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권력관계로 말미암아 그 중립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며, 한국 독립과 안전은 우방과의 동맹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질 문 5>

극소수의 외국인인 남·북한이 구태여 통일할 필요없이 현 분단상태를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 설>

‘한국은 하나이며 한민족도 하나이다’ 이것은 신라에 의해서 신라·고구려·백제 3국이 통일된 후 우리 민족이 지켜왔던 역사의 사실이었다. 그런데 우리 세대에 와서 한국이 둘로 쪼개졌다는 것은 우리 역사의 큰 오점이다.

돌이켜 볼 때 우리 강토가 두 개로 쪼개진 것은 우리 민족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 아니었다. 그 책임은 우리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잘못 때문에 ‘하나의 한국’이 두 개로 분단되었다고 하여 우리 스스로 하나로 되려는 노력을 포기할 때, 과연 두 개로 쪼개진 책임이 있는 다른 나라도 끝까지 하나로 만들 임무를 완수하여 주겠는가? 우리는 한반도의 주인이다. 주인이 하나로 되려는 노력을 버릴 때 제 3자가 되는 미국은 차라리 잘되었다고 자기들의 책임까지도 포기하게 되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한국통일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남·북통일에 대한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한국, 하나의 한민족」이란 오랜 역사적 전통과 유산을 현실 앞에 포기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한국이 반드시 하나로 된다는 신념과 역사상 증거를 가지고 남·북통일을 위하여 꾸준히 힘 써야 하겠다.

<질 문 6>

북괴가 소위 「자주적 통일」을 주장하는 속셈은 무엇입니까?

<해 설>

(질문 1) (질문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문제이기에 앞서 미·영·소·중의 문제이며, 또한 유엔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외국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려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북괴도 이와 같은 이치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우선 한국문제를 유엔으로부터 떼어 내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의 철수를 피하고자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괴의 진의는 어디까지나 남한에 대한 무력침공에 있는만큼 「세계의 양심의 전당」인 유엔으로부터 한국문제를 떼어 내어 세계의 이목을 가리는 한편, 유엔군 특히 미군의 철수를 실현시켜, 북괴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도발할 경우 멀리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군이 다시 우리를 도우려 달려오지 못하게 하려는 흥계가 거기에는 숨어 있는 것이다.

또 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데에는 우리의 민족감정에 호소하여 외국배척 특히 반미운동 내지는 반미감정을 유도 촉발시키자는 공산당의 흥계가 숨어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민족감정 속에는 외국인 특히 일본인을 싫어하며, 혐오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경계하는 마음 가짐이 크게 도사리고 있다. 공산당은 이 외국인의 배제를 싫어하며 경계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반미의 방향으로 돌려보자는 속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와같이 주장함으로써 공산당은 그들이 소련의 꼭두각시라는 것을 감추고 민족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우리 민중을 속이려는 잔피도 여기에서 부리고 있는 것이다.

공산당이 한국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주장하게 된 것은 1947년 6월 26일

미·소공동위원회 석상에서 소련 측이 발표한 성명에서 비롯한다. 그 때 소련 측이 발표한 성명을 살펴보면, 그 때 소련 측은 「1948년 초에 미·소 양국 군대를 조선으로부터 철수시키고」 「조선문제의 해결을 조선 사람 자체에게 맡기자」고 주장하였다. 이 때부터 북괴는 국제정세의 변동, 남·북한의 국내상황의 변천에 따라 그 시기 마다 알맞는 구호로서

- ① 외국군의 철수
- ② 언커크의 해체
- ③ 유엔 결의의 무효화
- ④ 외국과의 군사조약의 철폐

를 제시하였다.

또 조선문제의 해결을 조선 사람 자체에 맡기자고 하는 방안으로

- ①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 자유선거의 실시
- ② 과도적인 조치로서 남·북 연방제의 실시
- ③ 남·북간의 문화 교류 및 합작
- ④ 서신 및 인사의 교류
- ⑤ 남·북 간 경제실무자들의 협의체 구성
- ⑥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그리고 정부 각계 인사의 연석회의 소집
- ⑦ 학생회담의 개최 등을 다채롭게 제시하여 왔다.

원래 소련은 소련군이 진주한 곳에서는 공산 정권 이외의 어떠한 형태의 정권도 수립할 생각이 없었다. 북한에서도 김일성 피퇴 정권을 수립하였으나 남한에서는 미군정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북한에서 처럼 소련군의 무력의 위협에 의하면서 공산정권을 수립할 수 없었다. 소련군은 북한에 소위 「민주기지」를 건설하여 기회가 오면 남한에 공산 정권을 세워 전 한국을 공산화하려 하였다. 그기회란 다음 경우일 것이다.

① 북한을 근거지로하여 남한에 공산반란이나 공산혁명을 공작, 선동, 유발하여 남한의 민주적 합법 정부를 전복하는 것.

② 미국군 기타 한국 주둔 외국군이 철수하여 남한에 군사적인 공백이 생기거나, 한국군의 군사력이 북괴군의 군사력보다 약하며 북괴군이 충분히 남한을 침공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공산당은 위의 두가지 방안을 서로 섞어서 써왔으며 앞으로도 쓸 것이다.

6월 26일 소련 대표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그 성명을 발표할 때만 보아도

전한반도에 공산 지배를 확립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이미 「민주기지」 건설에 대한 성과는 믿음직한 것이 있었다. 1946년 2월 8일 김일성을 피수로하여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발족하였고 1947년 1월 27일을 기해 「임시」 자를 빼어버렸다. 이 때에 공산당은 북한을 완전히 지배·장악하였다는 것을 과시한 셈이다. 또 소련군은 1946년부터 「보안 간부훈련」 등 명목으로 장교 양성을 서두르고 1947년 중엽에는 공산군의 창설을 일단 끝맺었다. 즉 소련은 남·북한에 대한 군사, 정치, 경제를 비교 계산하여 한국 사람 자체에게 한국문제의 해결을 맡기면 공산 측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전기의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이 성명은 혁명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당이라고 하지 만 국제 협약과 국제적 신의를 무시한 후안무치한 성명이다. 한국의 독립에 대하여서는 어디까지나 카이로, 포츠담 선언,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의 관계국인 미·영·소·중국 특히 한국을 점령하였던 미·소가 책임져야 한다.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처사는 미국이 끝까지 그 책임을 지려한 데에 비하면 소련이 국제적 배신자라는 것을 역역히 보여준 산증거라고 하겠다. 김일성 집단은 소련의 이와 같은 배신을 문책하기는 커녕 앵무새 모양 이를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으니 이 또한 북괴의 괴뢰성을 역역히 입증하는 산 증거라고 하겠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문제가 결정되자 북괴가 보여 준 반응은 어느 모로 보나 「자주」와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하겠다.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가 발표되자 남한자지에서는 이 결정이 한국민의 자주·독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맹렬한 반탁운동이 일어났다. 심지어 남한 공산당도 처음에는 이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북괴는 소련의 의사를 받들어 북한에서 일어난 반탁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고, 남한 공산당도 북의 찬탁방첩에 따라 그 태도를 돌변하여 찬탁 편에 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괴에서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자주노선」이란 성립될 수 없었다. 공산당은 공산혁명을 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자유노선」을 내 세웠던 것이다.

끝으로 공산 측 남·북통일 안에는

- ① 국제회의 소집
- ② 유엔 국가회의의 소집
- ③ 중립국 감시안 등이 나온다.

이들은 한국문제를 유엔 밖으로 끌어내어 대한민국이 유엔 감시위원단의 감시하에서 실시된 총선거에 의하여서 수립된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부인하려는 총계다. 북괴가 부르짖는 바 한국문제를 자주적으로 외국의 간섭없이 해결한다고 하면서 왜 국제회의, 중립국 감시 같은 제3국의 개재를 요구하는가? 그것은 자가당착의 모순인 것이다. 북괴도 한국문제는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문제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그럴바에야 차타리 한국문제를 유엔에서 떼어내어, 대한민국의 합법성을 말살하고 대한민국과 일대일로 국제회의에서 자리를 잡을 기틀을 마련하자는 속셈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1966년 제21차 유엔 총회에서 북괴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한다면 초청을 할려고 용의가 있다」는 유엔의 북괴 초청을 북괴가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북괴는 시종 일관하여 유엔의 권위와 권능에 승복할 것을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도 이상과 같은 북괴의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질 문 7>

북괴는 입버릇처럼 「평화적 민주적 통일」을 부르짖는데 북괴의 진정한 통일방안은 무엇입니까?

<해 설>

북괴가 진심으로 평화적 민주적 통일을 할 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행동으로 표시한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공산당이 하는 말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음 두가지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고자 한다. 공산당은 자들끼리 사이에서 하는 진정한 말과, 그 때 그 때의 정세에 따라서 공산당 운동,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쓰는 대외적 선전용 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쓰는 술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평화, 민주주의라는 술어도 우리가 뜻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만 듣고 그 말이 가지는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번번히 공산당에 속아 넘어 가는 것이다.

북괴는 입 버릇처럼 「평화적 민주적 통일」을 선전하고 있지만, 그러면 북괴의 진정한 통일 방안은 무엇인지 김일성이 공산당 당원들끼리 사이에서 말한

선전용이 아닌 진정한 말을 여기에서 들어 보기로 하자.

「조선 노동당 규약 전문」을 보면 김일성 집단이 우리 나라에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거기에는

‘조선 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방봉전적 민주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라고 쓰여 있으니, 그들의 최종목적은 전한국의 공산화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당면 목적으로서는 북한의 공산화와, 전국적으로 민주혁명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김일성은 어떤 방법을 썼던가.

우선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자 소련군은 그 무력의 위협하에 북한을 완전히 소비에트화하고 여기에 김일성 괴뢰 정권을 수립하여 <질문 2>에서 본바, 김일성이 1945년 12월 제3차 공산당 확대 집행위원회에서 말한것 처럼 소위 혁명 민주기지, 화노선을 답습케하여, 북한을 남한에 대한 공산혁명의 작전기지로 삼았던 것이다. 그 후 여러 가지 통일 방안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들은 한 날 선전용 슬로간에 지나지 않고 진정한 말이라고 할 수 없다.

1961년 8월 17일 「조선 노동당」 제4차 대회 결정서에 나타난 통일전략을 보면

- ① 남한에서의 공산지하당 조직 확대
- ② 그것을 핵심으로 반미·반봉건 통일 전선의 형성과 권력 탈취 투쟁
- ③ 남북의 통일 전선을 합동시키는 형식을 거치는 공산화 통일의 실현이라는 「3단계 통일 전략」을 짜놓았는데 지금까지 이 기본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조선 노동당 창건 20주년 기념 경축대회」 보고에서도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당과 북반부 인민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조선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지원할 것이며 그들과 함께 우리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열렬히 싸울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이 혁명에서 승리하고 자기 수중에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 북반부 사회주의 역량과 남조선 민주주의 역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통일될 것이다.”

1965년 4월 인도네시아 아리·알함사회과학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김일성은

「남조선 혁명은 결국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 역량의 성장과 그들의 결정적인 투쟁에 의하여서만 승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은 공산 통일 완수에 필요 불가결한 세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① 북괴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충실히 하여 혁명기지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더욱 더 강화하는 것

② 남조선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결속시킴으로써 「남조선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

③ 조선 인민의 국제 혁명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

1966년 10월의 「노동당 대표자 대회」에서 김일성은 또 통일전략의 기본노선을 밝히고 현단계에서 남조선 혁명의 기본 방침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역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성장시킴으로써 「결정적 시기에 혁명적 대사업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에 있다고 강조하고, 남한에 있어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그리고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을 적절히 배합하여 혁명시기를 조속히 성숙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제4차 노동당 대회로부터 9년만에 제5차 당 대회가 1970년 11월 2일에 열렸다. 여기에서 김일성은 「사업총화 보고」라는 연설을 하였는데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에서 다음과 같이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미제 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여 현군사팃쇼 독재를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 서면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역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조국의 통일은 순조롭게 실현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이전의 통일 방안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현 대한민국 정부를 「뒤집어 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 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략 전술에 관하여서 이 연설 속에서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우선 남한혁명의 성격을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 「지주, 매관자본가, 반동 관료배들과 그들의 팃쇼 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이 성격에 따라 남한혁명의 기본임무를 「미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남한에서 「내 쫓고」 그 「식민지통치」를 없애고, 현 대한민국 정부를 뒤집어 엎고 여기에 공산체제를 세운다는 데에 두고있다.

이와 같은 혁명을 하는 주체세력(동력)으로 「노동계급과 그의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을 비롯하여」 「진보적인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 군인, 일부 애국적 민족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을 들었으며, 특히 청년, 학생, 군인들을 내세운 것은 주목 해야한다.

혁명의 방식으로서의 폭력혁명을 내세웠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북괴 공산주의의 낙후성을 뚜렷이 본다. 즉 「정권을 위한 투쟁에서 평화적 이양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순수한 대중운동만으로 혁명을 승리에 이끌 수 없다」 「반파쇼 민주화를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벌리는 것과 함께 적들이 반혁명폭력에 혁명적폭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하겠다」고 명백히 폭력혁명을 선언하였다.

그러면 「반혁명적 공격을 제때에 물리치고」 「혁명적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 수 있기」 위하여서 어떤 전술을 쓰겠는가, 이 점은 우리 반공국민으로서 똑똑히 알아두어야 할 점이다. 공산당은 이 방법에 의하여서 활동하겠기 때문이다.

우선 「노동계급의 전위대인 맑스-레닌주의 당의 영도 밑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동원하여 「당역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자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단체」를 근로자들 속에 조직하고 그것을 튼튼히 하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 반공산주의의 세력을 고립화시키고 공산세력의 절대적 우세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와 각계 각층 군중, 개인들을 망라하여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도록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청년학생들을 묶어서 혁명 주력군인 노동자, 농민들과 조직적 유대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당은 앞으로 청년 학생들에 대한 공작을 더욱 활발히 적극적으로 할 것이 예상된다. 청년 학생들에게 한 반공 승공 교육이 시급하다고 보겠다.

또 혁명역량은 광범한 대중투쟁이 벌어져야만 성장 강화될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 계기가 있으면 공산당들은 사회적 소요를 일으키려고 획책한다. 이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은 전략 전술적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혁명 발전의 요구와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는 투쟁구호를 내세우고 투쟁형태와 방법을 옳게 선택하여 원수들의 내부모순과 약점들을 비롯한 온갖

능숙히 이용하는것.

그리하여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 및 반합법 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 투쟁과 비폭력투쟁, 큰 규모의 투쟁과 작은 규모의 투쟁과 같은 여러 가지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옹기 결합하여」 혁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혁명투쟁을 하는데 있어서 남한 인민들은 고립되어 있지 않다. 북괴의 혁명기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음, 그러나 남한의 혁명은 어디까지나 남한 인민들이 주동이 되어서 수행해야 한다. 그렇다고 북괴는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북괴는 남한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앞으로 계속 북괴의 간첩파견등 간첩 침략이 격화해 갈 것을 시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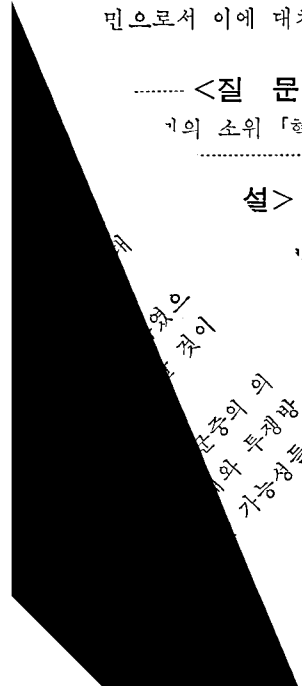
이상 제 5차 공산당의 당대회에서 김일성이 한 연설 중에서 남·북통일과 그 전제인 남한의 혁명방식에 대하여서, 혁명의 전략적 목표, 혁명의 주동세력과 예비세력 후원세력등 세력배치, 혁명의 형식, 투쟁 형태, 공격목표등 전략, 건설상지도에 대한 문제에 걸쳐서 지루하게 논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논한 그것이 북괴 공산당이 대한민국에서 벌이고자 하는 바로 그 혁명운동인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공산당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바를 익혀 알아서 반공국민으로서 이에 대처하는 바가 있어야 하겠다.

<질 문 8>

기의 소위 「혁명적, 민주적 통일」 주장의 지의는 무엇입니까?

설>

1. 바 북괴의 진정한 남북통일 방안은 폭력혁명에 의해서 대공산체제를 세운다음, 남·북한 공산당끼리 합하여 통할하자면 남·북한 공산당끼리의 평화통일이라고 나떡화적, 민주적 통일」이란 한 날 대외적 선전용어 익해야 할 것은 공산당이 쓰는 「평화」 「민족주 뜻이 다르다는 것이다. 공산당의 뜻대로 한 』로 옮겨 볼때 곧 「폭력적 혁명적 적화통 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거짓 말



을 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공산당의 참 뜻을 몰랐기 때문에 속았다고 하는 것과 밖에는 안된다.

우선 우리의 생각으로는 평화란 어떤 형태이건 싸움, 다툼이 없는 상태들의 미한다. 그러나 공산당이 생각하는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다. 독일의 크라우제비츠라는 전략가가 쓴 「전쟁론」이라고 하는 책의 서두에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고 한 유명한 말이 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평화란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장이다. 또 중공의 두목 모택동은 「정치란 유혈을 보지 않는 전쟁이며, 전쟁이란 유혈을 보는 정치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공산당은 본시 전쟁과 평화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모두 정치의 연장인데 단지 평화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정치(싸움)요,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싸움)라는 것이다. 공산당은 정치라는 것을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계급투쟁이라고 보고 있다. 소련이 평화공존론을 부르짖고 있다고 하여, 결코 계급투쟁이나 사회주의 혁명을 부인한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전쟁과 평화는 계급투쟁의 다른 형태인 것과 같이 평화공존도 계급투쟁의 특수 형태라고 한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하면 평화는 전쟁의 반대가 아니며, 그것들은 어전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변형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에 있어서는 전쟁과 평화 간에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은 평소부터 평화에서 전쟁으로 바뀔 때에 대하여 만전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그들은 중공국방상 임표의 말대로 「정권은 총구에서 방생한다」는 철학을 신봉하고 있다. 전쟁 준비야 말로 공산주의자들의 생리요 체질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김일성 집단이 제 아무리 평화통일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진정으로 전쟁없이 통일을 하고자 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그는 언제나 평화를 전쟁으로 탈 바꿈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제 5차 당대회 총회 보고에 있어서도 김일성은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로 전당과 전인민을 전쟁 준비에 동원, 공격수단과 방위 수단을 다 갖추어 언제라도 전쟁을 도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호언하기에 이르렀다.

다음 민주주의에 대하여서 그 뜻을 가려 보기로 하자.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마치 민주주의를 가장 신봉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민주주의」니 「신 민주주의」니 「인민 민주주의」니 하면서 민주주의

를 팔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민주주의는 피통치자들이 그 통치자나 중요한 정책상 결정을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는 절차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뜻 하는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란 통치의 내용으로서 다수자가 소수자를 지배하는 통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통치라는 것을 계급 억압과 착취의 한 수단이 라고 볼 때 민주주의도 계급지배와 억압, 착취의 한 도구라고 말한다. 이리하여 부르조아가 지배계급이 되면 부르조아 민주주의요,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 계급의 되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부르조아보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숫자 상으로 다수이므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부르조아 민주주의보다 더 높은 형태의 새로운,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업이 발달되지 못한 나라에서는 노동자계급(프롤레타리아트)은 숫자상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다. 이런 나라는 대체로 농업 국가이므로 농민이 국민의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공산당 논법대로라면 이런 국가는 농민 민주주의어야 할 것인데, 공산주의에 있어서는 농민은 노동계급의 영도와 지도가 없으면 혁명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이 농민을 영도하여 이 양 계급의 동맹을 맺고 정권을 수립해야 한다. 이 정권 형태가 인민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인민 민주주의에는 농민 이외에도 진보적인 청년 학생, 지식인, 일부 애국적인 민족 부르조아, 소자산가등 모든 계급이 참여할 수 있다. 이에 참여할 자격은 「진보적」, 「애국적」 인사이어야 하는데, 그 뜻은 공산당의 영도와 지도를 받아 들이고, 그들의 말을 고분 고분 잘 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당장 「반동분자」 「인민의 적」으로 몰려 탄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에 알아둘 것은 공산주의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와 독재를 동일한 정치체제에 대하여서 쓰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부르조아 민주주의는 부르조아 독재이며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한다. 그것은 다수자 지배의 민주주의가 부르조아 사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 부르조아 민주주의지만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트의 계급관계에 있어서 부르조아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억압, 착취하고 있으니 그것은 곧 부르조아의 독재라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인데, 그 임무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하여서 타도된 부르조아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들을

억압 탄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법으로 인민 민주주의는 인민 민주·독재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독재가 같다고 하는 말이 함부로 나오고 있다. 그것은 공산주의들이 민주주의를 통치의 형식 절차로 생각하지 않고 통치의 내용으로 생각하는 데에서 나오는 이론상 모순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적 개념을 엄두에 두고, 이제부터 북괴의 소위 「평화적 민주적 통일」 방안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 중 몇가지만 여기에서 논평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민주적 남·북한 자유선거 제안에 대하여서

해방 후 25년이 되었지만 북한에서는 민주적인 자유선거가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민주적 자유선거란 통치자를 선출하는 데에 있어서, 경쟁하는 입후자중에서 선거민들이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자주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책임자에게 투표하고, 득표수가 많은자를 통치자로 선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단일 입후자에게 투표하되, 흑·백 투표함에 투표하여 그 입후자가 책임이냐 아니냐를 묻는 절차를 거쳐 통치자를 선출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민주적 선거 절차라고 할 수 없다. 즉 그것은 경쟁하는 사람들 중에서 책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된 사람에 대해서 좋겠는가, 나쁘겠는가의 가부를 묻는 문의의 절차이다. 따라서 민주적 자유선거와 공산식 흑·백선거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후자에 있어서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 공산식 선거도 비밀, 평등, 보통, 일반 선거를 한다고 하나, 선택의 자유가 없는 한 그것은 민주적 선거라고 할 수 없다.

둘째 민주선거가 북괴 공산당과 더불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선거가 주기적으로 실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감시의 문제에 관하여서

대한민국은 그 설립 초부터 유엔의 감시하의 총선거를 실시하였으며, 남·북한의 총선거에 있어서도 유엔의 감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유엔의 권위와 권능에 승복할 것을 거부하고 북괴는 중립국의 감시를 주장할 바 있다. 이 중립국에는 친공 내지는 공산국가들을 포함시켜서 한국전 휴전 감시위원단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리를 보자는 것을 공산 측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세째로 과도적 조치로 남·북 연방제를 제의한데 대하여서

여기에는 다분히 속임 수가 감추어져 있는 제안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두개

의 한국을 국제법상으로도 기성사실화 하자는 제안으로 북괴의 국제적 지위를 대한민국과 같은 지위에 올려 놓자고 하는 흉계이다. 하나의 한국에 두 개의 남·북정부가 있을 수 없다. 또 체제나 이데올로기가 서로 다른 제도를 가지고 연방제를 실현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일정부를 어떻게 수립하겠는지 여러 면에서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하겠다.

네째로 남·북한 의회의 합동회의 제안에 대하여서

이것 또한 세제의 연방제안과 같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더욱이 북괴 의회란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는 달라서 그것은 단일 입후보에 의하여서 흑·백투표로 지명된 사람들에 의하여서 구성되었으니, 그 구성에서 대한민국 국회와는 다르다. 또한 그 기능 면에 있어서도 북괴의 의회는 공산당 정책을 심의, 비판,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것은 제외된 안건을 만장일치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공산당 정책을 의회에서 결의 통과시켰다고 하는 요식기관이다. 대의원들도 박수 갈채로 만장일치 통과시킨 공산당의 정책을 자기 투표인들에게 선전 주지시켜야 하는 공산당 선전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구성 면에서나 기능 면에서 전연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와 북괴의 의회를 합동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밖에도 남·북 교류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지만, 요는 북괴의 「평화적, 민주적 통일」방안이란 그들의 참 뜻을 가리기 위한, 그리고 대외적 여론에 호소하고, 이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보려는 대외적 선전적 제안에 불과한 것이다.

1954년 11월의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일성은 남·북공존론을 비판하면서

“심지어 어떤 동무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가 서로 공존한다고 하니 까 남조선과 북조선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우리 한 나라 안에서 남조선과 북조선이 분리되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상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며 우리의 통일 사업을 방해하는 해로운 견해이다. 우리 인민이 모두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요구하고 있는데 인민을 대표하는 우리 당이 어떻게 통일에 대한 구호마저 내던지고 「남·북공존론」을 들고 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여 남·북공존론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또 북괴는 「중립 통일」도 이를 죄악시한다. 1958년 「청년 생활」(「민주청년동맹」기관지) 5월 호에 나온 당

대변인의 논문에

“정전 후 어렵고도 엄중한 시기에 당시 국제적으로 나타났던 수정주의 이론과 구호를 이용하여 그를 거의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우리당과 정부를 정면으로 공격할 음모를 꾸미고 나섰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과 형제 당들의 사이를 이간시키려 책동하였으며 우리나라를 선두로하는 국가들로부터 떼어내어 소위 「중립국」으로 만들려는 반역적 책동을 감행하려고 기도하였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북괴가 「중립적 통일」을 어느 만큼 중요하고 있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만적 평화통일에 대하여서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안에서의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인구비례 총선거에 의하여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인바, 인류의 양심과 평화의 염원을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다.

<질 문 9>

동·서독이 서로 교류하고 있는 것 처럼 우리도 「남·북교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 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북괴도 남·북 간의 문화교류 및 합작 서신 및 인사의 교류, 남·북간 경제실무자들의 협의체 구성,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그리고 정부 각계 인사의 연석회의소집, 학생회담의 개최 등 여러가지 남·북 교류의 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북괴가 진정으로 남·북 교류를 원하여서 이런 제안을 하였다면 어느만큼 좋겠는가? 그러나 <질문7, 8>에서 밝힌바 북괴는 진정으로 이와 같은 교류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괴는 6·25동란 이전부터 부단히 유격부대를 남한에 파견하여 공산당의 지하조직을 확대하고, 신생 대한민국의 전복을 꾀하여 오더니 드디어 1950년6월 25일 미명을 기해 남침을 감행하였다. 6.25에서 참패하자 그 힘을 키우는 동안 평화통일을 부르짖는 듯하더니 1961년 제4차 당 대회를 계기로 소위 「3단계 통일 전략」을 내세우고, 종래의 평화적 제스처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대남공작의 적극화 강경노선을 밝게 되었다. 그리하여 북괴의 어선 남침, 군사분계선

상에서의 빈번한 군사총돌, 게릴라들의 남파, 이들에 의한 파괴, 살인, 방화, 테러 행위,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의 납치, 칼 여객기 납치, 북한 천진 앞 바다에서의 미국 정찰기, EC-21의 피격이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1968년 1월 21일에는 31명의 무장 유격부대가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를 습격하고자 서울 청운동 일대에 진입하였으며, 동년 11월에는 삼척 및 울진지구에 120명의 무장 공비가 침투하였다. 물론 이들은 모두 우리의 군경, 향토예비군에 의하여 전멸되었다.

우리가 아무리 북한과 교류하고자 원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관저마저 습격해오는 잔인 무도하고 악랄한 집단과 어떻게 교류할 수 있겠는가. 물론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그렇지 않겠으니, 우리가 그들과 직접 교류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또 북한 일반 주민들도 남한과의 교류를 목마르게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과 우리사이에는 김일성 집단이라고 하는 공산당이 가로 막고 있어 이들이 북한 주민들을 끔작 못하게 완전히 노예와 같이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공산당이 끼어 있는 한 남북한의 교류란 도저히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다.

김일성 공산당은 그러면 어떤 공산당이기에 이처럼 악랄한 것인가. 그들은 공산당 중에서도 가장 질이 낮고 튀 떨어진 공산당이라 하겠다. 김일성위상화, 신격화에 의한 1인 독재의 공산주의를 20세기의 70년 대에 와서도 신봉하고 실시하고 있다. 공산당 중에서도 러시아, 독일이나 체코슬로바키아 기타 구라파 제국의 공산당은 이미 이와같은 스탈린식 1인 독재체제를 탈피한지 오래다. 그러나 중공이나 북괴는 아직도 20세기전반기의 스탈린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낙후된 상태에서 감돌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공산당이라고 하지만 거거에는 각 공산당들의 발전 단계에 따라 공산당들이 신봉하고 실시하고 있는 공산주의의 내용이 다르다. 동독과 같이 선진공산사회의 공산주의는 북괴의 공산주의와는 달라서 침략적 호전적이지 아니므로 동, 서 독일간에는 충분히 상호교류의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북괴집단은 가장 낙후된 공산주의의 특징인 침략성, 호전성, 야만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정치철학은 폭력이 정의라는 철학인 만큼, 북괴가 이와같은 공산주의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남북교류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박정희대통령도 8.15선언에서 북괴가 그들의 침략성 호전성을 버린다면 남·북협상 교류는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질 문 10>

공산세계의 다원화란 무엇입니까?

<해 설>

공산당이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세계공산화를 궁극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1953년에 스탈린이 죽기까지는 소련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 지도 하에서 세계공산당은 한덩어리가 되어 세계 공산화에 광분하여 왔다. 그런데 당시 소련 공산당은 스탈린의 1인독재에 의한 공포, 만일 경찰 정치를 소련내에서 실시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비타협강경노선을 추구하고 소위 소련을 사회주의 혁명기지로 하여 각국에 민족해방 혁명을 수출하는 호전적인 혁명노선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이 죽고 흐루시초프의 권력이 확립되자 소련에도 새로운 풍조가 일기시작하였다. 이 때까지 우상의 대상으로 신격화하였던 스탈린의 격하운동이 일어나고, 일인 독재체제 대신에 소위 집단지도체제의 리더쉽이 나타나고 비밀경찰 두목 베리아의 숙청을 기점으로하여 공포, 비밀 경찰통치로부터 공산당에 의한 영도, 지도 통치라고 하는 공산당 본연의 통치체제에 돌아와서 소위 「자유」화풍조가 일기 시작하였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이 때까지의 비타협 호전적인 대외정책 대신에 평화공존이라는 유연한 정책을 내걸고 미·소의 협상에 의한 세계문제 해결에 힘써 소위 해빙기라고 하는 미·소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 어떤 나라도 독자적인 길을 따라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밝혀 혁명의 수출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여 공산세계의 다원화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면 같은 공산당인데 왜 스탈린 시대의 공산주의와 스탈린 이후의 공산주의는 이렇게도 다른 것인가.

그것은 공산주의가 자라고 발달한 소련사회의 발달단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즉 스탈린시대의 소련 사회는 저개발 후진 공산사회였으며 여기에서 자라난 공산주의도 비밀경찰에 의한 공포정치와 스탈린 우상화에 의한 1인 독재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공산주의식 사회개발 방식은 모든 자원의 조달, 배분, 관리를 국가 권력이

독점하며 그 지도를 공산당이 또한 독점한다. 그리고 엄격한 계획경제에 의해서 생산재 부문 중공업과 군수 부문산업에 우선권을 주어 경제 개발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 생활의 모든면을 국가 권력의 통제밑에 두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발 방식을 채택할 때 국민 생활의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하게 마련이다. 특히 공업이 발달되지 못한 농업국가에서 공산주의식 개발 방식을 택할때 국민 생활의 참혹상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생지옥을 연출하는 것이다.

중공업, 군수공업은 경공업, 농업부문에 비하여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나 공산사회는 민주체제와는 장벽을 쌓고 교통을 끊어 버린다.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기술적 내지는 자본의 원조, 지원이 없이 중공업 건설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은 국민에게 먹을 것을 먹이지 않고 입을 것을 입히지 않고 이와 같이 하여 국민이 굶주리고, 떨면서 절약한 재원을 생산부문, 중공업부문, 군사업에 돌리는 것이다.

또한 소비재부문의 경공업은 농업부문이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국민이 쓸래야 쓸물건이 없고, 먹을래야 먹을 식량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한번 농업 작황이 좋지 않아 기근이나 들면 외부로부터의 식량의 원조가 없는터에 때 죽음이 나게 마련이다. 공산정권 수립 초의 소련과 중공에서의 기근과 그 참상은 공산당이 인류역사에서 저지른 큰죄악의 하나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공산정권에 가장 반대하는 사람은 농민이다. 농민은 어디에서나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자기가 지은 곡식을 먹고 또는 이를 시장에 가서 팔아서 필요한 비용에 쓰게끔 된다. 그러나 공산주의에서는 토지는 모두 국유 내지는 공유하며 그 생산물은 소위 공출하게 된다. 여기에서 농민은 공산정권에 제일 반대하는 층이 되며 심지어 자기가 소비할만큼 만 농사를 짓고 그 이상은 짓지 않게 된다. 이리하여 농산물의 생산은 더욱 떨어져 간다. 이렇게 되면 공산정권의 농민에 대한 강제 탄압은 더욱 심하여 가고 이에 따라 농민의 불만 불평은 더욱 늘어난다.

요컨대 공산식 개발에 따르면 그 초기에는 국민의 소비생활을 극도로 억제해야 하므로 이로부터 국민의 불만 불평이 짝뜨게 된다. 이에 더하여 국민 생활의 모든 분야를 국가 권력의 통제하에 두므로 생활의 부자유에서 오는 불만이 상승효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공산체제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국민

의 불만과 불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체제로서 비밀경찰 체제가 불가피한 것이다. 비밀경찰은 테러, 강제, 협박등의 공포수단에 호소하여, 이들 불평,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소련을 비롯한 중공, 북괴 등의 강제노동의 죄악은 우리인류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인류문화의 치부인 것이다.

정치가 이와 같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폭력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합리적 정치의 방식인 토론, 비판, 합의 같은 절차는 필요없게 된다. 오직 명령과 복종, 불복종이 있을 따름이다, 복종하지 않는 자는 제거되며 복종하지 않는 자의 수가 적어질 수록 명령자의 명령은 절대화해 간다. 여기에서 명령자로서의 카리스마(신비스러운 권위를 가지는자)가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개인 우상화에 의한 1인 독재체제가 확립되어 간다. 북괴의 김일성 체제도 소련이 추진시켜발공산국가로서 스탈린 주의와 스탈린 체제를 확립하였던 것과 꼭 같은 경로를 밟고 나타난 것이다. 북괴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중에서도 가장 뒤 떨어진 공산주의라고 하겠다.

그러나 스탈린이 죽고 흐루시초프가 집권하자 소련 공산주의도 스탈린주의로부터 탈피하였다. 물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이상 세계 적화혁명 의 최종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공산주의 발전단계가 달라짐으로써 통치방식도 달라지고 세계 혁명 수행 방식도 달라졌다. 즉 스탈린 시대의 잔인 무도한 공포 정치에 의하여서 생산재 부문 중공업, 군수산업이 확립되었으니, 이제 국민의 소비생활도 운택케 할 여유가 생겼다. 따라서 국민의 생활도 점점 향상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생활에 대한 불평 불만은 완화됨으로써 공포정치의 필요도 그 만큼 해소되어 갔다. 아직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 통제 는 해제되지 않았지만 어느정도 완회되어 간다. 여기에서 비밀경찰에 의한 통치 대신에 공산당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며 통치수단도 공포 대신에 공산당 내에서의 토론, 비판, 합의등의 합리적 수단을 택하게 되며, 리더쉽도 개인 우상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대신에 집단지도체제를 택하고 당내 민주주의의 소생에 따라서 당내자유화의 새 기풍이 일게 된다.

세계혁명노선에 있어서도 소련 산업의 비약적 발전과 군사 테크노로지(기술)의 발달 특히 핵력 개발과 그 운반체의 발전, 우주과학의 발달로 말미아마 평화공존과 사회주의 건설의 다원화 노선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소련 공산사회가 더욱 발달하면 공산주의가 어떻게 변모하겠는지 누

의 불만과 불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체제로서 비밀경찰 체제가 불가피한 것이다. 비밀경찰은 테러, 강제, 협박등의 공포수단에 호소하여, 이들 불평,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소련을 비롯한 중공, 북괴 등의 강제노동의 죄악은 우리인류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인류문화의 치부인 것이다.

정치가 이와 같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폭력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합리적 정치의 방식인 토론, 비판, 합의 같은 절차는 필요없게 된다. 오직 명령과 복종, 불복종이 있을 따름이다, 복종하지 않는 자는 제거되며 복종하지 않는 자의 수가 적어질 수록 명령자의 명령은 절대화해 간다. 여기에서 명령자로서의 카리스마(신비스러운 권위를 가지는자)가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개인 우상화에 의한 1인 독재체제가 확립되어 간다. 북괴의 김일성 체제도 소련이 추진저개발공산국가로서 스탈린 주의와 스탈린 체제를 확립하였던 것과 꼭 같은 경로를 밟고 나타난 것이다. 북괴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중에서도 가장 뒤 떨어진 공산주의라고 하겠다.

그러나 스탈린이 죽고 흐루시초프가 집권하자 소련 공산주의도 스탈린주의로부터 탈피하였다. 물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이상 세계 적화혁명의 최종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공산주의 발전단계가 달라짐으로써 통치방식도 달라지고 세계 혁명 수행 방식도 달라졌다. 즉 스탈린 시대의 잔인 무도한 공포정치에 의하여서 생산계 부문 중공업, 군수산업이 확립되었으니, 이제 국민의 소비생활도 운택케 할 여유가 생겼다. 따라서 국민의 생활도 점점 향상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생활에 대한 불평 불만은 완화됨으로써 공포정치의 필요도 그 만큼 해소되어 갔다. 아직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 통제는 해제되지 않았지만 어느정도 완회되어 간다. 여기에서 비밀경찰에 의한 통치 대신에 공산당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며 통치수단도 공포 대신에 공산당 내에서의 토론, 비판, 합의등의 합리적 수단을 택하게 되며, 리더쉽도 개인 우상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대신에 집단지도체제를 택하고 당내 민주주의의 소생에 따라서 당내자유화의 새 기풍이 일게 된다.

세계혁명노선에 있어서도 소련 산업의 비약적 발전과 군사 테크노로지(기술)의 발달 특히 핵력 개발과 그 운반체의 발전, 우주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평화공존과 사회주의 건설의 다원화 노선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소련 공산사회가 더욱 발달하면 공산주의가 어떻게 변모하겠는지 누

구나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변모하리라고 하는 것만은 확언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국민소비생활에서 어느 정도 선택의 자유를 허용받은 소련 국민이, 앞으로 그 자유의 범위를 어느 정도 넓히겠는지 관심거리이다. 소비생활에서 선택의 자유를 맞본 이상 정치생활에 있어서도 선택의 자유가 확대되어 갈 것이라는 것이 논리의 추리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공산국가에서 복수정당제도를 채택할 것인가. 앞으로 공산당이 겪어야 할 큰 시련이 여기에 있다. 즉 공산당 독재체제로서의 소비에트체제가 붕괴할 날도 오지 않았는가라고 문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공산주의도 지금에 와서는 공산사회의 개발 단계에 따라 그 내용도 달라진다. 북괴의 공산주의도 공산주의의 단계적 발달 추세로 보아 변모할 날이 올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8. 15선언에서 제시한 「평화통일을 위한 전제 조건」을 갖춘 공산주의가 북한에서도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지금 당장 김일성 집단의 공산주의를 가지고는 그런 공산주의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시일을 가지고 북한 공산사회의 발전을 지켜볼 때 그런 시기는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의 평화적 통일의 시기도 이때에는 성숙될 것이다. 일부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평화통일은 결코 실현성이 없는 것은 아니며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올 것이다. 다만 적정되는 것은 호전적인 김일성 도당이 그들의 공산주의가 변모하여 가는 것에 견디지 못하여 초조한 나머지 자신들의 대내적 모순을 전쟁의 도발에 의하여서 대외적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김일성도당의 현재 노선으로 봐서 이 공산이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우리는 김일성도당의 전쟁도발 위협에 대해서 언제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질 문 11>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광복 25주년 경축식전에서 남, 북통일에 대한 중요한 구상을 선언하였는데 북괴가 이를 「허위와 기만에 찬 정치적 모략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진의는 무엇입니까.

<해 설>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1970년 1월 25일 광복 11주년 경축식전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중요한 구상을 선언하였다. 국토 통일에 대하여 국민은 누구나 이를 염원하여 왔으나 그 통일방안에 대하여서는 구구하던차에 박대통령의 8.15구상이 선언됨으로써 국 내외에 커다란 반응을 일으키고 국민은 물론 국제 여론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 구상내용은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한 전제조건」의 제시와 「평화적 경쟁을 하자고 하는 「하소연」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조국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한 접근방법의 선행조건은」 북괴는 지금과 같은 침략적이며 도전적인 행위를 버리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이를 보장하는 명확한 태도를 표시하는 동시에 그 실천을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긴장상태의 완화가 없이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에의 접근은 불가능한 것이며, 지금과 같이 침략적이며 도전적인 행위를 계속하는 한 북괴가 무슨 소리를 하던 그것은 가면이요, 위장이요 기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괴는 무장공비의 남파등의 모든 전쟁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소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해 온 종전의 태도들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내외에 선언하고 이들 행동으로 실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로 북괴가 수락하며 이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유엔에 의하여서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한에 가로 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박 대통령께서는, 북괴가 박대통령께서 제시한 전제조건을 수락하고 실천한다면 남·북통일에 대한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아울러 북괴가 한국의 통일과 독립 및 평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인정하고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한다면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괴가 참석하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의 획기적인 선언을 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박 대통령께서는 북괴에 대하여서 「더 이상 무고한 북한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말하자면 민족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더 살기 좋은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적 경쟁에 나설 용의가 없는가」라고 선

의의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평화적 경쟁을 북괴에 하소연하였다. 여기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 체제가 공산독재 세계보다 더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자신을 피력하고, 대한민국은 중국에 가서 이 평화적 경쟁에서 이긴다는 신념을 토로하였던 것이다.

· 이 선언에 의하여서 곧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때까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던 구구한 남·북통일 방안은 방향 감각을 찾게 되었으며, 남·북통일에 대한 희망을 잃었던 국민들에게 일부의 희망을 안겨다 줌으로써 국민의 남북통일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히게 해주었다. 한편 대외적으로도 『막강한 군대를 유지하고 월남에까지 파병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하여서 대한민국이 호전적, 침략적이어서 혹시나 북한을 무력으로 통일하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품지 못하고 있던 일부 국가에 대하여서』 대한민국의 평화적 진의를 알리고 전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신뢰와 위신은 더욱 높아졌다.

이상과 같이 박대통령의 「8·15 구상」이 국 내외에서 좋은 반응을 일으키자 김일성 집단은 이를 헐뜯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제 5차 당 대회 총회보고」 연설에서 <평화통일구상>은 「조국통일 문제를 실현할 아무런 방도도 없는, 성명으로 허위와 기만에 찬 정치적 모략·선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종전의 태도를 조금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즉 박 대통령께서 제시한 침략적이거나 도전적 행위를 중지하라고 한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하여서는 일언 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미군과 대한민국 정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통일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그 도전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서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을 남한에서 몰아내고 현 대한민국정부를 「뒤집어 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남한에 공산정권이 서면 북한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한의 「애국적 민주역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순조롭게 남·북통일을 실현된다고 하였다.

박 대통령의 8·15구상과 김일성의 보고를 대조해 볼 때 그야말로 천양지차가 있는 것이다. 누가 진정으로 평화적 통일을 원하고 있는가 판한 일이다. 박 대통령께서 지적하였듯이 긴장상태의 완화없이 평화적 방법에 의한 접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선 도발적, 침략적, 도전적 행위를 중지하지 않고서는 긴장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김일성 집단은 대한민국의 전복, 혁명의 승리를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으니 김일성 집단은 평화적 통일은 생각조

차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겠다. 즉 김일성 집단은 공산정권이 남한에 서기 전에는 평화통일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장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김일성 집단의 진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평화적 민족통일의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야말로 김일성 집단이 존재하는 한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김일성 집단이 있는 한 「한국의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하게 되므로」 남·북은 당분간 두개로 갈라서서, 북한에는 공산독재 체제가, 남한에는 민주주의 체제가 세워져 각기 그 갈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두가지 체제중에서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잘 살 수 있게 하겠는가? 남한 국민이 더 잘 살겠는가, 북한 국민이 더 잘 살겠는가? 이에 따라서 장차 김일성 집단이 사라지고 박 대통령께서 제시한 전제조건을 받아들인 정권이 북한에 수립될날이 왔다고 가정할 때, 통일한국의 통치체제가 결정지워 질것이다. <질문 10>에서 설명한 것처럼 민주체제가 우세하다는 것은 더 말할나위도 없을 것이다.

<질 문 12>

북괴가 부르짖고 있는 소위 「반제 반봉건 민주해방 투쟁」이란 무엇입니까?

<해 설>

북괴가 소위 「반제·반봉건 민주해방 투쟁」을 부르짖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의 혁명적 전략단계론에서 공식화한 것을 그대로 복사하여 부르짖고 있는 교조주의에 불과한 것이다.

공산주의 교과서에 의하면 혁명의 전략단계에는 다음 세 가지단계가 가능하다고 한다.

제 1 전략단계 :

이 단계는 봉건적 민족적 억압을 전멸하기 위한 즉 인민민주주의 승리를 위한 단계이다.

현재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의 반식민지, 식민지제국에 있어서의 해방투쟁은 아직 이 단계에 있고 1971년 2월 혁명이전의 러시아도 이 단계에 있었다.

이 단계에서의 주요전략 원칙은 반봉건·반제국주의적(반제·반봉건)민주혁명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일체의 반제세력을 광범한 민족전선에 집결하는 것이며, 민족적 민주주의 국가를 창설하여 비자본주의적 발전방향을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는 혁명이 민주주의 단계에서 머물지않고 사회주의 혁명에 성장전환하게끔 모든 가능한 일을 하여야 한다.

제 2 전략단계 :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단계이다.

현재 자본주의 제국의 노동계급은 이 단계에 있다.

주요한 전략원칙은 독점체제의 지배와의 투쟁과 광범위한 반독점동맹의 전술과 이에 따르는 새 주민층을 획득하는 것, 사회주의에 평화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온갖 가능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는 무장투쟁 준비를 갖추고 브르조아지의 반혁명에 대비한다.

러시아는 1917. 2~10월에, 그리고 현재의 유럽과 아시아의 사회주의 제국, 쿠바는 제 2차대전 후에 이 단계를 경과하였다.

제 3 전략단계 :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와 더불어 이 단계에 옮겨간다.

소련과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이 단계에 있다.

이 단계에서 공산당과 노동계급은 최단기간 내에 착취계급을 완전히 전멸할 때까지 국내에서 해방전쟁을 완수하고,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켜 그 달성된 경제적 성공에 의하여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서 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함을 해야한다.

전략원칙으로서는 사회주의 제국이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고, 경제부문에서의 성공을 배가하여 평화적 경제경쟁에서 자본주의에 이기는 것이다.

사회주의 제국의 경제적 위력이 확실하게 증대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 세계혁명의 궁극적 승리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세계사회주의 혁명의 완수와 더불어 해방투쟁의 최종의 전략단계는 끝난다.

이상 이 공산당이 세계 공산주의 혁명을 끝낼 때까지의 공산당 운동의 행동지침인 전략단계에 관한 윤곽인데, 어느 공산당을 막론하고, 대체로 이 지침에 의하여서 그들의 전략을 수립한다고 하겠다. 김일성 공산집단도 그 예의는

아니다. 이 전략론을 볼 때 그들이 현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자본주의 관이 아직 마르크스의 「자본론」, 테닌의 「제국주의론」을 탈피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세기 후반기의 우주시대의 과학혁명, 기술혁명, 경영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아직도 계급투쟁, 착취의 교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공산당의 이론이 시대에 뒤 떨어져 있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일성의 「반제·반봉건 민족해방」론도 위 3단계 전략단계론에 비추어 볼 때 그 제1단계 전략을 모방, 복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문 7>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는 것처럼 김일성 집단은 이 전략단계론에 따라 남한 혁명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즉 미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이며 지주, 대관자본, 반동 관료배(공산당은 이들이 한국에서의 반민주세력이라고 보고 있다)와, 그들의 팽쇄를 반대하는 인민 민주혁명이라고 그 전략단계를 규정하였다. 이 남한혁명의 단계규정에 따라서 김일성은 이 단계에서의 전략적 전술적 지도론을 공식에 따라서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 1 전략단계에 있는 나라들 즉 현재의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아프리카의 반식민지·식민지 제국에서는 공산당이든 모두 이 반제·반봉건 민족해방혁명, 인민 민주주의 혁명을 부르짖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공산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도 공산당의 이 교조에 따라서 반제·반봉건 민주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을 부르짖은 것이다.

<질 문 13>

북괴는 남한에서는 민주적, 계급적 모순이 날카로워지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혁명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당한 주장입니까?

<해 설>

김일성 집단이 이와같이 주장하는 것은 남한에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광범한 인민들이 혁명에 적극 가담하여 주었으면 하는 그들의 희망과 그 희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그들 자신의 방침을 말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5.16 군사혁명 후 「조국의 근대화」와 「민족의 중흥」이라고 하는

슬로전을 내걸고 사회의 근대화 작업과 경제의 건설에 온갖 민중의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1962년부터 시작하였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리에 끝마치고 우리 사회가 근대화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곧 이어 1967서년부터 제 2차 5개년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1970년으로써 그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이미 우리사회는 근대화의 문턱을 넘어서 풍요한 복지사회를 향하여 출발을 치게 되었다. 1972년부터는 제 3차 5개년계획이 실시되었는데 그 계획이 결실되는 1976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은 400달러 선에 가까와져 우리는 상위의 중진국 대열에 끼이게 될 것이다.

그간 우리가 이룩한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국민총생산면과 1인당 국민소득 면에서 살펴 볼 때 1960년을 기준한다면 국민총생산이 2,467억원, 1인당 국민소득 94.4달러였다. 그러던 것이 5년 후인 1965년에는 각각 8,058억원, 141.1달러로 되어 60년에 비하면 국민총생산이 3.2배, 1인당 국민소득이 1.03배로 늘어났다. 1970년에는 다시 1.4배 성장하여 국민총생산이 2조 5,620억원, 1인당 국민소득이 223.3달러로 되었으니, 전자에 있어서는 무려 10.3배, 후자에 있어서는 2.36배로 늘어났다. 이와같이 남한에 있어서는 경제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개발도상국가로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발전을 이룩하였으니 국민생활도 점차로 향상되어 사회는 안정과 질서를 되찾고 70년대의 번영과 민복을 기대하면서 조용하면서도 우렁찬 전진을 하고있는 것이다.

공산당이 말대로 남한에서 민주적, 계급적 모순이 날카로워지고 광범한 인민대중이 혁명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와같은 기적적인 개발발전을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이처럼 해를 거듭할 수록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는 그 사실이 공산당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증인 것이다.

물론 우리 나라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모범적인 개발을 성취하였다고는 하나 아직 1인당 국민소득이 200달러선을 겨우 넘어선 이 마당에서 국민의 모든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 줄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만은 능률적인 행정과 정치체제에 의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져 그 해소를 위한 시책에 잘 반영되어 나가고 있다.

또한 나라에 큰 정치문제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의견, 특히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수단으로서 과격한 시위가 일어나고, 「한 때 질서가 혼란」에 빠지던 사례도 있었다. 예컨대 1964년 6월에 있었던 대일 「굴욕」 외교 반대 학생 테모 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공산당이 말하는 소위 인민대중이 공산혁

명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에 중대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의견을 강력, 주장하여 자기 주장을 관철 시켜보고자 하는 강경한 수단으로서 민주체제 하에서는 어디에서나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인 것이며,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의하여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자 하거나,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대한민국 사회에는 혁명이 일어날 객관적이거나 주관적 요인은 없는 것이다. 다만 있다면 북괴가 공언하듯이 소위 「혁명 기지」라고 하는 북괴 땅에서 끊임 없이 남파되어 오는 간첩들일 것이다.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남한에 공산당 지하조직을 만들어서 이를 중심으로 월남에서 보는 바와 같은 민주해방 전쟁을 유발시키고자 안간 힘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6.25의 쓰라린 경험에 의하여서 공산당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남한 국민들은 체질적으로 공산당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용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반공국민에게 공산당이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점은 제4차 공산당 대회 연설에서 김일성 자신도 자인하였던 것이다.

<질 문 14>

북괴가 부르짖고 있는 소위 「반미투쟁」이란 무엇입니까?

<해 설>

문 12, 13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 혁명의 단계론에 의하면 그 제1단계가 반제 반봉건적 민주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라고 하였다. 북괴도 이 혁명 단계론에 따라서 남한의 혁명도 민주해방, 인민민주주의 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남한 혁명의 기본 임무는 미제국주의와 그 식민지통치를 남한에서 내쫓아 대한민국 정부를 뒤집어 엮고 여기에 공산체제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북괴는 「미국은 제국주의 원수로서 남한을 점령하고, 우리 인민의 모든 불행의 화근이며, 통일을 가로 막는 기본 장애이므로 남한에서는 반미 반제국주의 구국운동이 일어 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북괴가 유엔에 의하여서 수립된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적화 남·북 통일을 꿈꾸는 한 미국은 적화통일을 가로 막는 기본장애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남한을 점령하고 우리의 모든 불행의

화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미국을 공산침략을 막아주고, 우리의 국가 건설을 도와준 친구라고 하겠다. 또 남한에 반미·반제국주의 구국운동이 일어 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한·미 양국은 피로 맺어진 동맹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굳게 뭉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질문 2)에서 밝힌 바 소련은 북한 점령이 그 날부터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목표로 김일성 집단을 앞잡이로 내 세워, 심지어 6.25 사변이라고 하는 동족상쟁의 끔찍한 비극을 빚어 내기까지 하였다. 그 후에도 공산통일이 아니면 한국통일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는 태도를 지키면서 북한에 대한 소위 공산혁명기지의 강화, 이 기지를 이용한 끊임없는 간접침략과 이에 의한 소위 남한 민주 해방혁명의 조작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련에 맞서서 미국은 어디까지가 우리 민족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유민주주의의 하의 민주적 자주·자결의 원칙을 고수하여, 이를 시종 일관하여 관찰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일본의 항복에 따른 소련군의 전 한반도 점령의 위기를 3.8 선에서 가깝사로 막았다. 또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자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민족진영만으로서 신탁통치 기간 중에 세워질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하려는 소련의 흥계를 의사 발표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원칙으로 물리쳤다. 미·소 간에서 한국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유엔의 해결에 맡기게 하였다. 이리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비록 그 지배권과 관할권을 북한 땅에는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유엔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6.25 사변이 일어나,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하자 미국은 북괴의 침략을 막는 데에 앞장서서 유엔군을 이 땅에 파견케 하였다. 미국 자신은 150억 달러의 전비와 33,629명의 전사자를 포함한 157,530명의 총피해자를 내면서까지 우리를 도와 북괴의 침략을 물리쳤다. 현재 한·미 양국은 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혈맹의 우방으로 굳건한 동맹을 맺고 있다. 미군은 그 수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계속 우리 나라에 주둔하면서 우리와 더불어 국토방위의 일익을 담당하여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볼 때 김일성 집단은 미국만 없었던들 한국의 적화는 이미 1945년 소련이 전 한반도를 점령하였을 때, 1947~48년 신탁통치가 실시되었을 때, 1950년 북괴가 남침을 감행하였을 때, 1953년 이후 휴전이 이루어

져 미군이 철수하였다면 달성되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눈에는 미국은 통일(적화)을 가로 막는 기본 장애라고 보일 것이다. 김일성 집단은 어떻게 하나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떠나기를 바라고, 온갖 수단을 써서 미군의 철수를 실현시키코자 하는 것이다.

이 경과에서 보면 미국은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의 화근이 아니라 오히려 은인인 것이다.

미군이 남한을 점령하였다고 북괴는 선전하고 있다. 미 점령군이 인천에 상륙한 것은 1945년 9월 8일이었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점령군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였다. 그 이후 대한민국군이 창설되자 1949년 6월 27일로 전 미군은 완전 철수하고 한·미 간 잠정군사협정에 의하여 498명의 군사고문단이 한국군에 배속되었다. 6.25 사변이 일어나자 미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참전하고 휴전후에는 1953년 10월 1일에 조인된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은 우리 나라에 주둔하면서 우리 국토방위의 일익을 담당하여 주고 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미국은 전승국 점령군으로서(남한에 주둔한) 일 이외에는 남한을 점령한 일이 없다. 공산당이 주둔을 점령이라고 한다면 공산당의 용어에서는 주둔은 점령과 같은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미군의 주둔은 한·미 양국간의 조약에 의한 것이며, 유엔군의 출병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서 북괴 칠락군을 격퇴하기 위하여서 출병된 것이다.

또한 미국은 군정시대로부터 해방 후의 사회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 모든 산업이 마비되고 생산이 정지된 우리에게 식량과 의료를 대주어 우리를 굶주림과 추위에서 지켜주었다. 6.25 사변이 가져온 황폐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시 부흥하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일단 우리가 이 황폐로부터 일어서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 개발해 나가는 것을 도와 주고 있다. 또한 김일성 도당의 비위를 거슬렀을 것이다.

이 모든 점으로 미루어 보아 김일성 집단의 미국에 대한 욕설은 한낱 악의에 찬 증상이며, 날조된 허위임이 명백하다. 남한에서는 그 누구나 미국에 대하여서 친국감을 느끼며 「미군이 계속 이 땅에 머무르면서」 우리와 더불어 공산당의 칠락과 위협을 막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질문 15>

북괴가 떠버리고 있는 것 처럼 소위 「남한 혁명투쟁」속에서 나와서 「남한 혁명투쟁」을 영도할 「통일 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이 남한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해설>

〈질문 13〉에서 밝힌 바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에는 혁명이 일어날 객관적이거나 주관적 요인은 없다. 다만 북괴의 남파 간첩에 의하여서 그러한 혁명을 조장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책동이 있을 따름이다.

이 점에 대하여서 북괴도 자인하고 있다. 즉 1961년 9월의 제4차 공산당 대회에서 김일성은 『4.19 혁명은 혁명적 당이 없고 명확한 투쟁강령이 없으며, 따라서 기본 균중인 노동자, 농민이 광범위하게 참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철저히 조직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다』고 말함으로써 당시 남한에는 공산당이 없었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이것을 교훈삼아 북괴는 남한에 공산당을 조직하여야 하겠다는 소위 「3단계 통일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1965년 4월 인도네시아 아리·알함 사회과학원에서 김일성은 오늘 날 남한 국민들 간에 반공사상이 전례없이 강화되어 있으므로 공산화통일이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고 비명을 울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70년 11월에 개최되었던 제5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은 남한혁명운동의 약점을 극복하고 혁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서 남한에 공산당을 조직하는데 힘써, 지금은 「통일 사회당」이라고 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어서 김일성은 이 「통일 사회당」은 1964년 6월의 「한·일회담」 반대운동, 1965년 8월의 「한·일협정」 반대투쟁, 1967년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반대투쟁을 비롯한 많은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고 오늘 남한 혁명투쟁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투쟁과정에서 당은 단련되고 남한 국민들에게 그 영향력과 신임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고 하였다.

과연 남한에는 북괴가 주장하는 것처럼 「통일 혁명당」이라고 하는 공산당이

남한 혁명 투쟁 속에서 나와서, 남한 혁명을 영도하고 있는가? 아니 「통일 혁명당」 그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존재할 수도 없다. 있으면 「통일 사회당」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남파 간첩이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통일사회당」은 결코 남한 혁명 투쟁 속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남한에는 혁명투쟁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북괴에서 남파된 간첩활동을 혁명투쟁이라고 한다면 혁명투쟁은 북괴에서 유입된 것이며, 북괴는 그것을 유출한 셈이 된다. 또한 남한에는 영도할 혁명투쟁도 없었으니 이를 영도할 당도 필요 없었다. 간첩이 남파되어 그 간첩활동을 「통일 사회당」의 이름으로 한다면, 남파 간첩이 근절되지 않는 한 「통일 사회당」은 그 이름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 1961년에 남한에 공산당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였고, 1965년에 남한에서는 공산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시인하였던 김일성이 1970년에 와서는 「통일 사회당」을 왜 떠버리게 되었을까?

이미 1961년 제4차 당 대회에서 「3단계 통당전략」을 내 놓았을 때, 북괴는 남한에 공산당을 조직하여 4.19와 같은 기회가 오면은 기회를 이용하여 공산혁명을 선동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북괴는 4.19와 같은 공산혁명의 좋은 기회가 와도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이 결정적 시기를 보고만 넘겼던 것이다. 그 까닭은 공산당이 남한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자기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 이후부터 북괴, 공산당 조직을 위한 간첩을 남한에 수 없이 침투시켰으나 모두 실패에 돌아 갔다. 여기에서 1965년의 김일성의 비명이 나왔는데, 대한민국에서도 북괴의 이와 같은 전략에 대응하여 물썰 틈 없는 반공태세를 더욱 강화하기에 이르러 김일성으로 하여금 비명을 울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1970년에 들어 와서도 대한민국의 반공태세는 더욱 강화되어 공산 간첩이 발 붙일 곳이라곤 좀 처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 왜 김일성은 남한에서 공산당이 조직되어 있어 적극적인 혁명활동을 하고 있다고 선전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1961년에 남한에서 공산당을 조직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10년이 지난 1970년에 와서도 공산당이 없다고 하면, 진지 전능의 김일성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으며, 그의 영도력이 도전 받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을 한 날 특히 대내외 정치적 조작 허위 선전이라고 하겠다.

<질문 16>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복귀가 주장하는 것 처럼 참된 것이 아닙니까?

<해설>

<질문 8>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은 피치자의 동의에 의하여서 통치한다는 데에 있다. 이념 상에서 민주주의를 규정한다면 독재도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독재권력도 최소한의 피치자의 동의 없이는 권력 자체가 설립할 수 없다. 따라서 독재권력도 통치권력인 이상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주장할 근거가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이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규정한다면 공자·맹자를 비롯하여 히틀러, 스탈린도 민주주의가 될 수 있으며, 우리 나라에도 이미 신라 부족국가 시대에 화백이라는 민주주의제도가 있었다고 하는 주장을 하게되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축구 경기를 하는 데에 룰(규칙)이 있어야 경기를 진행시킬 수 있듯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도 룰이 있어야 한다. 이 룰의 하나가 민주주의 원칙인 것이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룰이다. 따라서 이 룰에 의하여서 운영되는 사회생활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그 사회가 잘 사는 사회인지 이 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것은 마치 축구경기가 일정한 룰에 의하여서 진행되지만 어떤 경기의 내용은 훌륭했고, 어떤 경기의 내용은 빈약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오랜 경험과 지혜에 비추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를 운영해 보니 사회가 가장 잘 운영됨을 우리는 알게되었다. 공산주의자들도 이 말을 빌어다가 그들의 독재체제에 쓰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그러면 민주주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배 내지는 지도받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자주적 판단에 의하여서 자신을 지배내지는 지도할 사람을 고르거나 기타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승복하며, 일단 결정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닌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인 것이다. 따라서 이 원칙의 전제는 스스로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게 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것들 중에서 골라낼 수 있는 자유와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일단 이루어진 결정에는 승복하되, 그 결정은 차후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아무리 물이 좋아도 그 물을 쓰는 사람이 시원치 않으면 사회생활의 내용은 시원치 못하다. 그것은 선수가 좋지 않으면 좋은 경기를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좋은 선수가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운용에 있어서도 훌륭한 시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스스로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민이며, 이와 같은 시민은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자라고 나타날 수 있다.

사람이란 이성적인 동시에 감정적인 동물이다. 따라서 우리는 판단할 때 이성으로도 할 수 있으며 감정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적인 판단은 흔히 비합리적으로 흐르기 쉬우며 지속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성적인 판단은 그 결과가 비합리적이 될 수도 있지만 이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므로 합리성을 추구하게 되며 일관성이 있다. 자주적 판단은 우선 이성에 입각한 판단이 되어야 한다.

이성에 입각한 판단을 하자면 먼저 알고, 배워야 한다. 또 남의 이야기나 경험을 들어야 하며 자기의 지식, 경험, 의견을 남과 더불어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시위,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 욕망, 이해관계는 물론이요, 외부의 유혹, 압력, 자극을 부단히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감정, 욕망, 이해관계, 유혹, 압력, 자극을 뿌리치고 스스로의 이성에 쫓아서 판단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이 되니 첫째로 모든 유혹, 감정, 욕망을 뿌리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기의 신념에 대하여서 성실해야 하고, 자기 의견, 경험이 귀중한 것과 같이, 남의 의견, 경험을 존중할 수 있는 이해심과 관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으로서는 같다고 하는 평등관과 사람은 누구나 사람으로서 존귀하다고 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제도상 보장이 있어야 하니, 양심,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등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사람들의 자주성을 가장 크게 압박하는 것은 의·식·주에 대한 위협

이다. 따라서 누구나 의·식·주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생존권의 보장이 중요하다 하겠다. 현대 선진국가에서는 이른바 복지사회의 건설을 그 목표로, 국민에 대한 이 생존권의 보장에 온갖 노력을 쏟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발달하고, 산업사회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 수록 이와 같은 자주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여건들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근대사회의 발달로 말미암아 현대의 거대하고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고 얽힌 사회를 움직여 가자면, 소위 계층적으로 지체가 조직된 부르코라시가 불가피하다. 사람은 이 부르코라시를 움직이는 한 톱니, 내지는 부분품이 되고 기계적으로 되어 간다. 따라서 사람의 존귀, 평등은 말살되고, 스스로의 판단을 갖지 못하는 기계적 인간, 소위 로버트화한 인간이 나오게 된다. 한편 이해가 얽히고 얽힌 복잡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이 복잡한 인간 관계의 물결속에서 허우적 거리며, 헤어나지 못하여, 자기자신을 잃고 얼빠진 사람으로 되어 간다.

또 쏟아져 나오는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의 뉴스, 해설정보등에 휘말려 사람들은 자기 의견, 경험을 가지지 못하고, 이들 대중 전송 매개수단의 뉴우스해설자나, 정보제공자의 견해를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획일적인 판에 박은 인간으로 되어간다. 뿐만 아니라 생활이 안정되고, 쓸 물자나 써비스가 범람해서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사람들은 이 물건을 쓰는 데에 정신이 팔려, 그것이 생활의 전부인 것 처럼 느끼고, 소비적, 향락적 인간으로 되어간다.

이와 같은 인간들이 사회에 짝 찻을 때, 그 사회에 아무리 민주적제도가 확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어 갈 수 없다. 심지어 이와같은 얼빠진 사람들을 꼭두각시처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완과 기술을 지닌 자가 나타나 독재자로서 군림할 위험마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사회는 사람들이 얼간이가 되지 않게하는 대책과 제도를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지배자, 지도자 기타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사람,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골라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쓰는 물품을 찾는 데도 우리는 많은 물품을 여러모로 보고서 골라서 사용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도 자기를 다스릴 사람, 자기가

따를 제규정, 정책등을 결정하는 데 많은 사람, 많은 방안 중에서 골라서 결정해야한다. 그러나 이 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람들의 의견이 꼭 일치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 의견을 좇아 결정한다는 다수결의 편법을 인간의 지혜는 고안해 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의견이라고 하여 반드시 그것이 옳다거나, 정당하다거나, 합리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독재체제에 있어서는 선택의 원칙이 없으며, 다수결의 편법에 있어서도 오히려 명령, 지도에 복종한다는 지도력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결에 의하여서 일단 결정되면 민주적절차에 의하여서 그 결정을 변경할 때까지는 개 개인이 아무리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복하여야 한다.

이상인 민주생활의 틀인데, 이 틀이 지켜지고 있는 한 누가 정권을 잡고 있던, 그 사회생활의 내용이 어떻든 그것은 민주적 체제인 것이다. 따라서 부르조아가 정권을 잡던, 심지어 스탈린, 히틀러가 잡던 이틀이 지켜지는 한 그것은 민주주의이며, 그 사회가 잘 살던, 못 살던, 이 틀이 지켜지고 있으면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잘 운영되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다.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교육, 생활정도, 사람들의 사람됨,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 사회의 문화 정도, 그 사회의 문화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건들이 고루 고루 갖추어졌을 때, 그 사회의 민주주의는 그렇지 못한 사회의 민주주의 보다 더 잘 운영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국민의 교육생활 수준, 그 사회의 문화 수준이 높다고 하여서 그것만으로는 민주주의가 달성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패전 전의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전 후의 소련,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을 보면 이 점이 명백해 질 것이다. 따라서 사회 그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이 잘 짜여져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에도 발달의 정도에 따라 미국, 서부유럽 제국과 같이 발달된 민주주의, 덜 발달된 민주주의, 소련등 공산국가를 비롯하여,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의 일당 내지는 군사독재 국가와 같이 발달하지 못한 민주주의를 구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 중 어디에 들 것일까? 그것은

보는 사람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발달된 민주주의 그룹에 속하겠는가? 아무리 공평히 보아도 이 속에는 들지 못한다. 그렇다고 발달하지 못한 민주주의 그룹에 속한다고도 할수 없으니 결국 덜 발달된 민주주의 그룹에 들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루 속히 이 덜 발달된 상태로 부터 탈피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발달시킬 수 있는 유리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 즉 우리는 서방 민주진영에 속하여 미국을 위시한 선진 민주국가들과 밀접, 부단한 교류를 하고 있다. 또 우리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으며, 국민 생활수준도 해를 거듭할 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또한 우리의 정치체제도 자유민주주의 원칙 밑에서 짜여져 있으므로 이 체제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회여건만 갖춘다면 우리도 선진 민주사회 부럽지 않은 민주사회의 건설과 민주적 생활을 즐길 날이 머지 않아 올 것이다.

<질 문 17>

북괴가 선전하듯이 5.16 군사혁명에 의하여서 남한에는 군사팻쇼 통치가 시작되었습니까?

<해 설>

팻쇼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며 이해하겠는가에 대하여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일단 독재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기로 하자. 물론 이 독재라는 뜻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간단히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통치체제 즉 개인 또는 어떤 집단이 피치자의 동의 절차를 통하지 않고 통치하거나, 피치자의 민주적 선출 절차를 거쳐서 신출되지 않은 개인 혹은 집단이 통치하는 체제라고 규정하기로 하자.

이러한 의미에서의 군사팻쇼 통치가 대한민국에 있었으며, 있었다면 언제 있었으며 그것은 왜 생겼나? 그리고 그후 어떻게 되었나? 등에 관하여서 논하여 보자.

1960년 3.15 정·부통령선거의 부정으로 유발된 4.19 학생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은 무너지고, 동년 7월 29일에 실시한 민의원·참의원 선거에 의하여 내각 책임제 하의 장면 내각이 발족하였다.

장면 내각은 4.19혁명 후의 어려운 국내, 국제 문제를 능률있게 처리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온 국민의 기대와 주시 속에서 출발하였던 것이다.

당시 국민들은 자유당 정권의 독재적 통치 밑에서 억압되었던 불만, 울분을 4.19 혁명에서 얻은 해방으로 탄압하면서, 마구 터뜨렸다. 이로 말미암아 자유의 광란 사태가 이 땅에 재연되었으며, 책임 없는 자유의 요구는 방중에 흘러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지고, 생산은 마비되고 물가는 뛰고, 실업자들이 거리에 범람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북괴는 이와 같은 남한의 혼란을 틈타 평화통일에 대한 선전공세를 마구 쏟아 「연방제 통일안」, 「남·북 실업인의 경제위원회」조직, 「남·북 대표의 평양, 서울 또는 관문점에서의 회의」 등을 제의하고, 특히 학생층에 호소함으로써 남한에서는 일부 학생, 정치인들까지도 동조하는 자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어려운 난국을 맞이하여 장면 내각은 국민의 불만, 울분을 능률적으로 받아들여 그 배출구 해소책을 강구하고, 혼란에 빠진 사회질서를 바로 잡고, 생산을 일으켜 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업자를 구제하고, 제2의 해방을 맞이한 국민의 생명력, 의욕을 북돋아 그 힘을 뭉쳐 새나라의 창건에 쏟아 넣을 만한 정치력을 발휘하여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집권당으로 등장한 민주당은 이와 같은 막중한 정치인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신·구파의 집권 파쟁에 실날이 없었으며, 민주당 신·구파가 단합하여도 혁명 후의 이 난국을 수습하는데 힘에 모자랄 형편에서 드디어 갈라서고 민주당 신파 단독 약체 내각이 수립되었던 것이다. 이 약체 내각의 운명은 뻔한 것이었다.

장면 내각은 성립 초부터 외부정세를 이끌지 못하고 정세에 밀려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헤어 나지 못하였다. 10월 11일에는 4.19 부상학생들이 민의원에 난입하여 의장석을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학생들이 의사당에 침입한 이유가 어떻던 의사당 의장석이 외부난입자들에게 점거되었다면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집권당이 집권할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의회정치의 발상지 영국에서는 국왕이라도 하원에 들어 가는 데에는 하원의 장의 안내 없이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의장석이 외부 난입자에 의하여 점거되었으니, 이 시점에서 제2공화국은 상징적으로는 끝났던 것이다. 다만 사실상으로 언제 끝나겠는가 하는 시간문제만 남게 되었다.

그러면 다음에는 누가 정권을 잡겠는가. 어떤 형식으로 잡겠는가? 이 시점에서 정권은 버려졌고 굴러 다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주울 수 있는 자

만 나타나면 되는 것이다.

첫째 학생들이 있다. 그들은 신분상제한 때문에 정권을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유지할 수는 없다.

둘째 정치인이 있다. 그들은 정권을 내던진 장본인들이다.

세째 실업인 경제인이 있다. 그들은 부정 축재로 민족의 심판의 대상에 오르고 있었다.

네째 노동자 농민이 있다. 그들은 아직 정권을 유지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지식인이 있다. 그들은 개인으로서 정권에 참여할 수 있어도 정권을 유지할 만큼 단일 세력을 이루지 못하며, 또 생리적으로 정치, 당파등을 싫어한다.

만약 공산당이 있었다면 그들은 힘들지 않고 덩굴고 있는 정권을 주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행히 북괴도 자인하다 시피 당시 남한에는 공산당이 없었다.

이와 같은 정세하에서 그래도 단합된 세력을 이루고 있던 것은 군부세력이었으니 자연지세로 정권은 군부에 흘러들어왔다. 그 거사가 5.16 군사혁명이었다.

따라서 군정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 군정은 헌법의 시행을 정지하고 군사독재를 실시하였다. 다만 군정의 기간은 어느만큼 지속되다가, 민정에 이양되겠는가, 이양의 형식은 어떠하겠는가? 이런 점등이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것이다.

우선 군정이 민정으로 넘어 가려면 장면 내자이 해결하지 못하였던 4.19 후의 혼란을 수습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였다. 군정이 지니는 정치적 한계때문에 군정에 새 나라를 세우는 정치적 창조를 바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군정은 혼란한 질서를 바로잡고 사회를 청소하고, 북괴의 난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사기를 북돋아 새로운 나라를 세워보자는 의욕을 가꾸고 키워주었다.

이와 같은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밟고서 1963년 12월 17일에 제3공화국이 탄생되어 2년 6개월만에 군정은 종식되고 민정이 성립하였다. 이리하여 제3대 대통령으로는 군정의 최고책임자였던 박정희 대장이 군복을 벗고 예비역에 편입한 후 대통령으로 입후보하여 당선이 되었던 것

이다. 혁명주체 세력 또는 군정에 참가하였던 군인중에서도 이때에 박정희 대장을 따라 예비역에 편입한 후 정계, 관계, 실업계에 진출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남은 사람들은 자기 원때에 복귀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군정 연장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분하였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짧은 시일안에 군정이 종식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며, 우리 민족의 민주역량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제국가에서 군정의 악순환이 지속되며 아직껏 민정으로 돌아오지 못한 희랍의 군정을 볼 때 우리는 군사정부의 늪툼한 민정이양을 타국의 모범이 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질 문 18>

북괴가 악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 답>

<질문 16>에서 논한바와 같이 자유는 민주주의 원칙이 원활하게 운영되어 가기 위한 유효유인 것이다. 따라서 자유의 보장 여하에 따라서 민주주의 발달을 평가할 수 있으며, 꺾꾸로 민주주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자유의 보장의 범위 제도 등이 획정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아직 덜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 그룹에 속한다. 따라서 선진 민주주의 제국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 나라의 자유는 상당히 제한받고 있다고 보여질 것이며, 발달하지 못한 민주주의 그룹의 수준에서 보면 우리는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수준에서 이 문제를 보아야 하겠는가? 사회가 정체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우리는 현상보다 높은 수준의 척도를 가지고 그 수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데에서만 발전과 진보를 이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선진 서구 제국가의 수준을 척도로 하여, 이 척도에 비추어서 대한민국의 자유의 보장의 문제를 논하여 볼 때 우리의 자유는 이들 국가에 비하면 아직도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김일성 집단이 대한민국에서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악선전한다면 적만하장도 유분수 격이다. 북괴나 공산사회에서도 가장 뒤진,

20세기 전 사반세기 시대에 소련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산주의를 지금도 실시하고 있다. 공산사회에서 가장 선진사회라고 할 수 있는 소련사회도 민주주의의 발달 정도에서 보면 발달되지 못한 사회이다. 따라서 발달되지 못한 범주에서도 가장 뒤진 사회인 북한 사회에는 자유의 한 편이라도 있을 까닭이 없다. 이런 주제에 대한민국의 자유에 대하여서 이런,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며, 우선 자기 밑부터 닦고서 남이 더럽다고 나무랄 자격이 생기는 것이 법이다.

이상은 자유의 제한에 대한 일반적 이야기이지만 대한민국에는 또한 대한민국 특유의 특수사정이 있다.

현재 우리는 북괴의 간접침략을 받고 있으며, 38선을 중심으로 대치하고 있다. 따라서 북괴의 간접침략에서 오는 불안 파괴의 요소가 날로 심하여 갈 것이 예상된다. 선진 제국과 같은 무제한 자유를 허용할 때, 북괴는 이 자유를 이용하여 그 파괴활동, 간접 침략을 더욱 자행할 것이다.

어떤 나라도 전시에는 그 국민들에 대한 자유를 제한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시는 아니지만 북괴와 군사분계점을 중심으로 양 측 군대가 직접 총을 맞대고 있으며,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북괴의 간접침략을 직접 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서구 선진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민주 국가의 국민이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한국의 현실적 요건은 이를 조문대로 누릴 수 있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는 1958년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1962년개정)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반국가적 행위를 한자를 엄중히 다스리는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1961년에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할 목적으로」 「반공법」을 제정(1962년 개정) 실시하고 있다.

물론 이 법들은 한국이 처해있는 국제적인, 국내적인 상황과 분만하여 생각해 볼 때 비민주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관련시켜 볼 때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어 없어서는 안될 법인 것이다. 자유나, 국가의 안전이나 이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누구나 서슴치 않고 국가의 안전을 택할 것이다. 국가가 우선 있고, 다음에 자유가 있는 것이다. 현대의 정치체제에서는 국가가 없는 국민에게는 자유가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정권을 쥐면 그 국민들에게 손톱만큼이라도 자유

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권을 잡기까지는 자유의 투사인 양 자유를 부르짖는다. 그것은 자유 민주주의 하에서의 자유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데에 큰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산당은 이 자유를 이용하여 그 자유를 보장 부여해 주는 국가를 전복하고, 자유가 없는 공산사회를 만드는 데에 이용하고 있다. 선진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공산당의 의도를 알면서도 그들에게 까지 자유를 부여, 보장해 주고 있다. 그 까닭은 공산당에게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만들므로써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선진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무장 공비에 의하여서 대통령 관저마저 습격당하는 형편에서 어떻게 공산당에게 활동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유를 제한하고 공산주의 및 공산당과 그 동조자들의 활동을 금할 때 여기에 우려해야 할 사태가 나타난다. 그것은 집권층이나 기성체제에 반대하거나 항의하는 운동 내지는 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쳐 탄압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력의 남용이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의 제한 문제와는 원칙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다. 권력의 남용은 어떤 권력이라도 빠지기 쉬운 유혹이다. 그것은 자유의 제한과는 구분하여야 할 문제이다.

요는 한국의 현실에서 자유의 제한은 인정되지만 그것은 권력의 남용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제한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것임은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상황이 용납하는 한 하루 속히 이 제한의 폭을 좁혀 가면서 한발자욱씩 보다 완전한 민주주의에 접근해 가려는 노력을 아끼서는 안될 것이다.

<질 문 19>

북괴의 주장과 같이 현 대한민국 정부는 군사궐요 정부입니까?

<해 설>

1961년 5월 16일을 기하여 세워진 군사정부는 1963년 12월 17일 민주적절차

를 거쳐서 민정으로 넘어 옮김으로써 군정은 종식되고 제 3공화국이 탄생되었다.

북괴는 5.16군사 혁명(북괴는 '정변'이라고 한다) 후 남한에서는 「노골적인 군사팃쇼통치」가 시작되어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짓밟히고 공산주의자와 그 동조자들이 탄압당하여, 그 세력들이 파괴당하고 남한의 「혁명역량은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고 시인하였다.

그러면 과연 현 대한민국 정부는 군사팃쇼라고 규정할 수 있겠는가?

(문 17)에서 본 바 팃쇼라는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겠는가에 따라서 현 대한민국 정부를 팃쇼라고 하겠는가, 또는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겠는가가 규정지워질 것이다. 공산당의 논법으로 한다면 공산체제 이외의 어떤 형태의 정부도 이는 팃쇼요, 독재가 된다. 심지어 인민민주주의 체제도 인민 민주독재이며,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도 프롤레타리아 독재인 것이다.

하물며, 군정이 시작되자 공산세력, 용공세력은 군정의 강력한 반공정책에 의하여서 괴멸되었으며, 이 땅에서 사라졌다. 북괴가 군사정부 및 제 3공화국에 대하여서 군사팃쇼라고 악담하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반공정책이 성공하였다는 증거인 것이다.

팃쇼를 독재와 일단 같은 뜻으로 보고 독재를 피치자의 동의절차를 통하지 않고 통치하거나, 민주적 선출절차를 거쳐서 선출되지 않은 치자에 의한 통치라고 정의한다면, 현 대한민국 정부는 엄연히 군사 독재가 아닌 것이다.

현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10월 15일, 1967년 5월 5일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 및 1963년 11월 26일 및 1967년 6월 8일에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의하여서 수립되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민주적 선출절차를 거쳐서 치자를 선출하고 이 선출된 치자들이 국민들의 동의절차를 통하여서 통치한다는 헌정의 상도를 원칙으로 지키는 통치를 하고 있는 이상 현 대한민국은 독재체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거때마다 나타났던 선거시비나 야당에서의 선거결과에 대한 승복거부의 사태가 발생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직 발달도상에 있기 때문이라겠다. 집권세력을 비판하고 차기 정권을 쟁취해야 할 야당의 입장에서는 선진 민주주의의 기준에서 발달도상에 있는 민주주의를 보기 때문에 그 어느 선거치고 완전히 민주주의적으로 치러졌다고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야당의 비판은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왜 발달도상에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야당이 시비하는 바와 같이 부정선거의 여지가 있는가? 그 책임은 선거민들에게 있다고 하겠다. 물론 입후보자들이 깨끗한 선거를 하면 국민이 아무리 부정선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선거는 깨끗하게 치러질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론상으로는, 실제상으로는 많은 모순이 있다.

즉 입후보자란 선거민 중에서 나오는 것인데 선거민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속에서 나오는 입후보자도 깨끗하지 못하는 법이다. 흙탕 물 속에서 연꽃이나 오는 예외도 있으나 대개 흙탕물 속에서는 흙탕을 뒤집어 쓰고 나오게 마련이다. 따라서 선거민이 깨끗해야 깨끗한 입후보자가 나오는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 선거는 복피식으로 단 한사람에게 대하여서 찬·반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상대자 중에서 골라 내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자가 부정선거운동을 하면, 정도의 차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상대적으로 자기도 부정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드디어 부정은 부정을 불러 일으켜, 부정 경쟁이 나타난다. 더우거나 선거에는 우선 이기고 봐야한다. 깨끗한 선거에 의하여서 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러운 것이지만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이기고 봐야한다는 심리가 작용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더러운 선거를 하는 사람에게는 선거민들이 표를 찍어 주지않고, 더러운 선거를 하면 반드시 떨어진다는 선거풍토가 우리 나라에 확립되어 있기만하면 부정선거를 할려고 해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공명선거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도 이런 경로를 따라서 공정하게 치러지게 되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에 있어서 선거민들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 권리를 막걸리나, 수전이나, 고무신 짝이나, 돈 몇푼으로 팔아 넘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왜 선거민들 중에는 그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권리를 값싸게 팔아 넘기는 사람들이 있을까?

첫째 우리에게는 민주적 문화, 정치 전통이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1954년 5.10 선거시까지의 지배자의 명령에만 복종할 줄 알았지 스스로 다스려본 전통이 없었다. 따라서 관내지는 상부의 지지, 명령에 고분고분 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러나 언제까지라도 고분 고분만 하고 있지는 않았다. 한계점에서는 마음의 울분을 일시에 폭발시켰다. 왕조시대의 순한 민요, 민

란, 일제시의 3.1운동, 만세사건, 해방 후의 4.19 혁명등이 그 예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서 통치하는 문화 전통이 없었다. 해방 후 처음 민주제도를 수입하였으나 이 수입품은 아직도 국산화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권자들은 민주제도를 유성하는 대신 민주제도가 우리 문화 속에 착근하지 못한 것을 기화로 국민 스스로가 다스리고 결정하는 권리에 간섭하며 이를 제한하였으니 민주주의는 자랄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둘째는 국민의 사람됨이다. 스스로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됨이 모자란다. 이에 대하여서는 (문 16)에서 논한 바 있다. 요는 공짜를 좋아하는 습성, 남이 보지 않거나, 모를 때에 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는 습성,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는 습성,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습성, 이런 습성으로부터 부정 부패가 시작된다. 이런 습성은 돈, 교육, 지식과는 관계없는 습성이며, 자신의 마음 가짐 하나로 얼마든지 키워낼 수 있다.

세째로 우리의 사회구조가 자주적 판단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한다. 특히 가족 공동체와 촌락 공동체의 문제이다. 우리 조상들은 농업을 주생산업으로 하여 대 가족제도를 유지하면서 촌락 공동체속에서 살아왔다. 그리하여 선조를 존중하고 연장자를 공경하고, 상부 상조하는 미풍 양속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그 반면 우리의 사회생활, 사회관계에 대한 적응력은 가족, 촌락공동체 밖에서는 흔히 무력하게 되어 공중심, 도덕심을 잃기 쉬우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가족, 촌락 공동체에서 익힌 생활태도, 행동양식, 가치관을 가지고 임하게 되니, 그로써 새로 발견해 가는 근대 사회에 적응시키고자 한다.

근대 사회는 주로 이익에 얽힌 사회여서 썸이 빠르고, 시비가 분명하며, 어떤 단체나 조직이라도 그 세워진 목적이 명확하여 흐리멍텅한 점이 없다. 그 구성원도 소속단체 조직에서 해야 할 구실이 뚜렷하다. 그러나, 가족, 촌락이란 집단은 우리 개인생활을 몽땅 그 속에 삼켜서 각 소속 구성원의 구실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시비, 썸 보다는 정, 의리로 사회생활을 운영하려 한다. 따라서 동굴 동굴, 흐리멍텅한 점이 많다.

이런 공동체 속에서 자란 우리는 분명한 썸 위에서 시비를 분간하기 보다는 동굴동굴하게 흐리멍텅한 것을 좋아하는 태도, 행동을 키워왔다. 특히 윗 사람에게는 무조건 따르는 습성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자주적 합리적 판단을 하는 습성을 우리는 키우지 못 하였다.

이상 말한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서 부정선거를 빚어 내는 데에 작용하였다

고 하겠다. 선거권자의 일대 자성이 없이는 부정선거는 근절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자성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다. 공명 선거를 위한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서 부정 선거를 한 발자욱 한 발자욱씩 고쳐 나가면 언젠가는 공명 선거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끝으로 민정으로 복귀하였다고는 하나 집권세력은 여전히 군정시의 군인 세력이며, 따라서 제 3공화국은 군정의 연장이 아니냐 하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

민정이양시 군정에 참여하였던 군인중에서 민정에 참여할 군인들은 예비역에 편입하고, 이들과 1부 구정치인 및 젊은 지식인들을 합쳐서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여 민주공화당을 창립, 민주적인 선거절차를 거쳐서 공화당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서 수립된 공화당 정권은 과연 군정의 연장이겠는가?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군사혁명 주체세력들이 군복만 벗었지 그대로 남아서 민정에 참여하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그것은 군정의 연장이다라고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가 (문 16, 17)에서 밝힌 바, 그것이 군정 즉, 군사독재이나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통치하느냐에 의해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의해서서 결정되는 것이다. 제 3공화국이 민주절차에 의해서서 세워진 이상 그것은 민주체제인 것이다. 따라서 군정은 아니며 하물며 군정의 연장은 더욱 아닌 것이다. 실질적 통치자는 군정으로부터 연장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 통치방식이 독재방식이 아닌 이상 그것을 군정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인 것이다.

<질 문 20>

북괴가 선전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입니까?

<해 설>

북괴는 미국이 남한을 침략하고 미국은 여기에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결국 독점자본주의가 발달하며 결국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독점자본이 국내에서 팽창하게 되면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게 되어, 자본주의는 제국주의 단계에

도달한다. 그리하여 자 제국주의 국가 간의 모순은 세계전쟁을 유발하여 이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발달의 최후 단계로서, 이 시대는 전쟁과 혁명의 시대라고 말한다.

그러면 혁명은 어디에서 일어 나겠는가? 자본주의는 어디에서나 똑같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며, 불균형적으로 발달하는 것이므로, 중국, 인도와 같이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하고 세계 자본주의를 연결하는 고리가 약한 곳에서 혁명은 일어난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혁명은 첫째로 사회주의 혁명이라기 보다는 반 제국주의, 반 봉건주의의 민족해방투쟁, 인민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혁명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에 따라서 북괴는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 약탈자이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 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수라고 규정하고 미제국주의의 타도에 그 투쟁의 첫째 의의를 두고있는 것이다.

(문 14)에서 북괴의 「반미투쟁」의 저의를 밝힌 바 있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논급하지 않겠지만 공산당이 부르짖는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 환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다. 즉 그것은 대한민국은 20억여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국차관을 들여와서 국민 1인당 1만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는 미국·일본의 경제적 지배를 강화하여 장차 우리 나라를 미국·일본의 지배에 들게 하고, 식민지로 만들 염려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인 것이다.

우리 나라는 1962년 이후 경제적인 성장을 꾸준히 지속하여 왔다. 이는 우리국민들의 노력에도 힘입은 바 컸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자본의 도입에도 힘입은 바 있었던 것이다.

1959~1969년 사이에 도입된 외자의 총액은 24억 3,425만 달러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상업차관으로 314건에 15억 4천만 달러이다. 이것을 도입국별로 보면 미국이 249건에 9억 5천 300만 달러, 일본이 161건에 5억 1천 500만 달러, 다음 서독이 58건, 영국이 33건, 프랑스 15건, 이탈리아 10건, 서서 9건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산업의 각 분야에 교루 교루 투자되어 있는 것이다. 즉 미국과 일본으로 부터의 차관이 전 상업차관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막대한 빚을 미국·일본으로 부터 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빚에 견디어 낼 수 있겠는가? 이 빚을 갚지 못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걱정

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 경제의 거리관계를 무역상으로 볼 때 다음표와 같다,

단위 : 1,000달러

년도 국별	6 5			6 6			6 7	
	수 입	수 출	수입초과	수 입	수 출	수입초과	수 입	수 출
일 본	66,628	43,974	-22,654	293,794	66,293	-227,501	443,051	84,726
미 국	182,286	61,695	-120,591	253,694	95,782	-157,912	305,106	137,431
한국총액	175,082	-288,360	716,441	250,334	-466,107	996,246	320,229	-676,017

년도 국별	67	6 8			6 9		
	수입초과	수 입	수 출	수입초과	수 입	수 출	수입초과
일 본	-358,325	623,998	99,744	-524,254	753,817	133,326	-620,491
미 국	-167,729	448,985	235,448	-213,537	312,175	-218,004	-218,004
한국총액		1,462,873	455,401	1,007,472	1,823,612	622,516	-1201,096

1969년도만 보더라도 미국 및 일본으로 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액은 우리나라 총 수입액의 각각 30%, 45%를 차지하며 수출액은 총 수출액의 각각 50%, 21%를 차지한다. 그리고 수입초과액은 각각 2억 1천 8백만 달러, 6억 2천만 달러인바 수입 대 수출비는 각각 1.7 : 1, 5.6 : 1의 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 우리 나라 무역은 전적으로 일본과 미국을 주대상국으로 하고 막대한 수입초과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니 그만큼 우리 경제가 일본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도가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의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경제의 자립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경제의 자립이 없이 정치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우리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빚을 갚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외자도입구조의 특징은 중 단기성의 상업조 차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1969년부터 원리금 상환에 큰 부담을 주기 시작하였다. 전년까지만 하여도 원리 상환금 5천 2백만 달러는 당해년도 경상외환 수입의 5.6% 밖에는 되지 않았으나, 69년에는 드디어 원리 상환액 1억 1천 4백만 달러에 이르

러 69년도 경상외환 수입액의 10%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조건이 불리한 상업차관의 도입은 억제하고, 조건이 유리한 공공차관이나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는 외국인 직접투자 내지는 합작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리금 상환을 필요로 하는 상업차관을 억제하는 한편 무역을 증대하여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외자를 벌어들여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 나라는 수출 제1주의로 온갖 힘을 기울인 결과 수출실적은 년 평균 40%의 성장을 보여 68년에 5억 달러, 69년에 7억 달러, 70년에는 1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76년의 수출목표는 35억 달러, 79년에는 50억 달러로 잡고 있다.

그러나 수출목표를 무난히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전기한 바 수입이 엄청나게 수출을 초과하면 오히려 빚을 더 많이 지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연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므로 수출을 위한 원자재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수출이 늘면 늘수록 수입도 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수입한 원자재에다가 우리의 기술과 노동을 가공하여 수출품을 생산하여 그것을 수출함으로써 그 차액으로 외자를 얻어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수출 원자재를 조달하기 위한 수입 외의 수입은 이를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 될 뿐만 아니라, 질이 좋은 노동과 기술의 개발을 유지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정책과제가 긴급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 무역에 있어서의 수입초과 등을 살펴볼 때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들은 결코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은 아니다. 우리 국민의 근면과 절약하는 마음 가짐만 확립되어 있다면 능히 이 어려움을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의 빚을 많이 지었고, 그들 경제에 의존하는 도가 많다고 하여서 그들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고 겁낼 필요는 없다. 지배를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빚을 졌으니 하는 수 없이 미국이나 일본이 하라는대로 하는 수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모두 자주 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위신을 가진다면 그들의 지배는 받지 않을 것이다.

지금 세계는 하나의 세계로 지향하여 가고 있다. 따라서 어떤 국가라도 외 부국가와 담을 쌓고 지낼 수는 없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우리의 벗, 이웃들과 담을 쌓고 지낼 수는 없다. 상호의 협동 협조 하에 교류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 교류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다. 서 유럽 제국가들은 이미 정치적인 담을 넘어서 경제 공동체까지도 형성하고 있다. 우리도 앞으로 미국·일본과의 관계 특히 경제적으로는 더욱 밀접해질 것이다. 경제적 관계가 두렵다고 하여서 역사적 추세에 거역할 수는 없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 측에서 볼 때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식민지 소유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제2차 대전이 끝나자 패전국은 더 말할나위도 없거니와 전승국들도 그들의 식민지를 모두 해방 하였다. 지금에 와서는 가지고 있던 식민지를 내놓을지언정 다시 식민지를 만들고자 하는 국가는 없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를 가질 필요도 없게 되었다. 현 세계에서는 국가 간의 상호 경제 유대의 강화와 자유로운 경제교류로 말미암아 식민지가 다하던 경제적 필요가 충족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 공업국가에서도 식민지를 소유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경제적 침략에 의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식민지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 한 날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다만 정치적 지배 대신에 경제적 지배의 우려는 다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니 그 지배에 복종하느냐 않느냐는 객관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발전과 주관적으로는 우리국민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질 문 21>

한·일관계 정상화에 의하여서 북괴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로 되었습니까?

<해 설>

(문 20)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미국의 경우와 같이 논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일 간의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과 같이 논할 수 없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점을 살피면서 한·일 문제를 논해 보겠다.

한국과 일본은 먼 옛날에는 땅이 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육로로 일본에 갔다고 한다. 그 후에도 우리나라 문명이 직접 일본에 들어가거나 대륙문명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떼어낼 수 없는 이웃이지만, 양국 간의 관계는 이 때까지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일본은 때때로 우리나라를 침범하여 우리를 괴롭힌 일이 한 두번이 아니었으며,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은 포악한 이웃이었다고 할 것이다. 특히 20세기 전반기에서는 우리는 일본의 침략의 희생이 되어 36년간 그 식민지통치를 받아 왔으며 우리민족 감정 속에는 일본에 대한 불신, 혐오, 증오감마저 깊게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다.

해방 이후 당분간 한·일 양국의 관계는 끊어져서 사람의 왕래, 물자의 교역은 밀출입국, 밀무역 이 외에는 일체 중단되었다. 그러나 밀출입국, 밀무역에서 나타난 경향은 한국민의 일본 밀입국과 일본 제조품의 밀수입과 한국 1차생산품의 밀수출 및 엄청난 수입초과라는 추세를 보였던 것이다.

전술한 바 일본이 아무리 포퓰러 이웃이라고 하더라도 한·일 양국이 장기간 교류를 끊고 있다는 것은 부자연한 일이었다. 양국은 언젠가는 국교를 정상화 하여야만 하였다.

한·일 양국이 처음 정부간 접촉을 시작한 것은 일본이 1951년 9월 6일에 연합국과 강화조약을 체결한 후 이 조약에 따라 6월 20일 제1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을 동경에서 개최할 때에 비롯한다. 그리하여 1952년 2월 15일에 본 회담을 개최하였는데 20일에는 결렬되었다. 그리하여 자유당 정권시대에는 1958년 4월 15일에 개최하였던 제4차 회담이 4.19혁명으로 중단되기까지 4차에 걸쳐 회담하였으나 아무런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 하였다. 그것은 일본 측의 오만 불손한 한국에 대한 멸시감과 한국측의 일본에 대한 불신, 증오감이 서로 얽혀서 좀처럼 타결을 보지 못 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 한·일 친선 분위기가 조성되고 1960년 10월 25일에 제5차 한·일회담이 개최되었다. 한·일 친선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민주당 정권이 한국 경제개발을 위한 일본의 기여를 평가하고, 한·일간의 국교정상화가 한국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일본도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긴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때까지의 한국 멸시의 태도를 버리고 성의껏 한·일회담에 임하려는 태도를 보

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5차회담은 5.16 군사혁명으로 중단되었으나 1961년 10월 20일에 제6차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6차회담에 임하는 군사정부의 태도나 일본의 태도 또한 5차회담에 임한 민주당 정부의 태도나 일본의 태도와 대동소이 하려 한·일회담의 조기 타결의 전망이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일회담 타결의 전망이 확실해지자 국민감정을 촉발하게 되어, 재야세력은 「대일 굴욕외교 반대 범국민투쟁 위원회」를 조직하고 한·일회담에서의 우리 측 태도가 굴욕적인 저자세라고 반대하고 나섰으며, 학생들도 반대 데모를 일으키는 등 정가는 소연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시종일관 그 처음부터 이 협상태도를 견지하면서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조약 협정을 일본 동경에서 조인하였으며, 동년 12월 18일 한·일 협정비준서를 교환하였다. 이로써 해방 이후 20년을 끌어오던 한·일국교정상화 문제는 매듭을 짓게 되었다.

국교정상화 후 한·일관계는 돈독하게 되어 사람과 물자의 교류는 빈번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무상, 유상 원조 및 기술지원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구실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할 것이다. 그 반면 일본 자본의 유입 우리 경제의 일본 경제에 대한 의존은 점점 커져가 마침내 우리는 일본의 경제적 지배를 받고 그 식민지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우리 경제가 발전을 지속하고 우리의 몸 가짐과 마음가짐이 자주적 주체성을 잃지 않는 한 우려할 것이 없으며, 20세기 후반기의 세계 조류 또한 식민지의 재취득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였다.

지금과 같은 한·일 간의 경제교류의 추세로 보아 앞으로 한·일 경제 협력 체제에 있어서 어떤 획기적 체제, 예컨대 제한된 지역 간의 공동경제체제 같은 것이 논의될 가망이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무역의 역조현상과 한·일간의 경제력 격차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그 실현은 불가능 할 것이므로 우리도 하루속히 경제적 실력을 키워야 하겠다.

지금 북괴는 일본에 군국주의가 미국의 적극적인 부축을 받아 또다시 머리를 쳐들기 시작하였다고 떠벌리고 있다.

우리도 일본에 군국주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해 가고 있고 그렇다고 하여서 공산군의 위협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상 우리도 자유진영에 속하고 있는 우방으로서의 일본에 강

한 군사력이 있다면 마음 든든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1969년 11월 일본 사포 수상이 오끼나와 반환문제로 방미하였을 때 「닉슨」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제4항에서 「한국의 안전은 일본 자체의 안전을 위하여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중요」라는 말은 영어로 “Essential”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중요」라고 하기 보다는 「본질적 요소」라고 하는 의미라고 해석된다.

즉 한국, 일본의 안전은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한국의 안전은 일본의 안전의 한 요소라고 하는 의미이다.

그러면 일단 유사시에 일본군이 한국에 달려온다는 이야기인가? 우리도 일본군의 한국 상륙을 원하지 않으며, 일본도 그 헌법상으로도 국민 여론 감정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단지 그것은 한국에 무력공격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을 위하여서 중요하다라는 인식 위에서, 미군이 일본국 내의 시설, 구역을 전투행동의 발진기지로써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국, 일본, 자유중국, 미국을 포함한 극동군사동맹을 구상하는 이도 있으나 이는 단지 극동에서 긴장상태만 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니 불필요하다 하겠다. 지금 체제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미국, 일본—미국, 자유중국—미국의 쌍무체제로써 족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공산중국이 그 호전성과 침략성을 발휘하여 자유중국을 침공하거나 한국을 침략할 위협이 현실화하였거나 동남아시아를 석권하는 사태가 나타났다면, 전기 극동 4국 군사동맹. 아니 태평양 군사동맹이 필연적이 될 것이다.

<질 문 22>

유엔에 의한 합법적 「대한민국의 승인」은 북괴의 주장처럼 부당한 것입니까?

<해설>

(문 3)에서 논란 바 1948년의 5.10선거에 의하여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에 의하여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언되었다. 그러나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하지 않고 있는 북괴는 대한민국의 수립을 구실로

소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괴뢰단체를 만들고 이것을 남·북한 전 국민을 대표하는 전 한국의 「최고주권 기관」이라고 자칭하고 나섰다. 일개 실력단체도 되나 마나한 북괴가 한반도의 전 주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그 자체가 우수한 일이며, 누가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여 주었는지 모를 일이다.

북괴는 5.10 선거는 망국적 단독선거이며 총검의 비호 하에 허위와 날조로써 실시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것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애속화 정책과 민족분열 정책의 소치로서 남한 주민의 절대다수는 「선거」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외국의 노골적인 간섭 하에서 진행된 단독선거는 비법적이며, 따라서 이 선거에 의하여서 수립된 「정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유엔 한국 위원단」의 감시 하에 선거를 한 것은 「합법성」을 날조하기 위한 연극이라는 것이다.

이상 북괴의 주장을 들을 때 억지가 이만 저만이 아닌 것이다. 즉 미·소공동 위원회에서 한국문제가 타결되지 않아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한국문제가 유엔에 상정되어 전 한반도에 걸친 총선거를 실시키로 가결되었으나 이를 반대하고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그러나 유엔에서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선언하면서도 그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은 유엔 임시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만 가진다고 하였다. 북괴가 그 괴뢰정부를 전 국민을 대표하는 전 한국의 최고주권 기관이라고 마치 통일정부인 것처럼 주장한 것과 비교할 때 대한민국은 아직 전한국통일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통일정부 수립은 숙제로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북괴처럼 이미 통일정부를 수립해 놓고 어떻게 또 통일정부를 수립하자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저의는 남한은 무조건 북괴에 흡수 되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또한 남한주민의 절대다수가 선거에 참가하지 않았고 외국의 간섭하에서 선거가 실시되었으므로 이 선거는 비법적이며 따라서 이 선거에 의하여서 수립된 「정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 이 선거가 외국의 간섭 하에서 실시되지 않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대한민국을 인정하겠다는 말이겠는데 과연 5.10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제헌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 수는 1946년 8월 30일 현재로 조사한 인구 19.1

90,877명의 40.9%에 해당하는 7,840,871명이었다. 선거인 수는 보통 인구에 대하여 48% 내지는 50%를 차지하는 것인데 5.10 선거에 있어서는 그율이 조금 낮았다고 하겠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유사이래로 처음 선거가 실시되어 일부 국민들이 등록을 할 줄 몰랐다는 것과 좌익계열과 민족진영의 남·북협상파가 선거를 거부하였다는 것에 기인하였다고 보겠다. 그러나 투표자는 선거인 총수의 95.5%에 해당하는 7,487,649명이며 기권자는 선거인 총수의 4.5%에 해당하는 353,222명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당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독립정부를 열망하였는가를 말해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유엔 임시위원단」은 「……1948년 5월 10일의 투표결과는 본 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었고 전 한국 국민의 3분의 2를 구성하는 주민이 거주하는 한국 지역 내에 선거민의 자유의사의 타당한 표현이라고 하는 본 위원단의 견해를 기록하기로 결의한다」는 결의문을 대한민국 국회에 발송하였던 것이다.

이 「유엔 임시위원단」이 한국 선거를 감시한 결과는 북괴의 주장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그것은 전 한국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 있어서 그 주민의 자유의사를 타당하게 표현하였다고 보았던 것이다. 북괴의 주장이야말로 허위 날조된 선전이었던 것이다.

또한 북괴는 「유엔 한국 위원단」의 선거 감시에 의하여 「합법성」을 날조하기 위한 연극을 꾸며었다고 한다. 1948년 12월 12일자 「한국에 관한 총회결의문제(Ⅲ)호」에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선거 감시에 의하여 합법정부가 수립되고 동 정부는 선거민들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며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였다. 그런데 동 결의문은 48대 6의 압도적 다수로써 채택되었고, 북괴의 주장대로 한다면 이 결의에 찬성한 유엔 48개국은 그 연극이 잘됐다고 감채를 보냈단 말인가. 하두 할 일이 없어서 48개국이나 연극을 관람하였다는 것인가? 북괴는 아마도 유엔의 회의장을 연극장으로 알고 있는것 같다. 사실이지 공산국가들은 소위 그들의 의회전술에 따라 유엔 회의장을 세계의 안전과 평화 문제를 토의하는 장소로 보지 않고, 공산주의의 선전장소, 쇼를 부리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여러각도에서 논한 바 북괴가 주장하는 대한민국 수립은 비법적이며 유엔에 의한 승인은 부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부당한 주장인 것이다.

<질 문 23>

대한민국과 북괴의 경제체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해 설>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는 자유 경제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유 경제체제라는 것은 모든 기업에 대한 개인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경제계획에 따라서 모든 인적, 물적, 재원을 조달, 관리, 배분하는 공산체제와는 다르다.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영의 자유와 개인 재산의 사유를 인정하며, 재원의 조달 및 배분도 시장「매카니즘」과 기업 간의 자유, 경쟁에 맡기는 체제이다. 따라서 이런 체제하에서는 개인은 누구나 자기 책임으로써 모든 기업을 경영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나오는 이윤은 기업주의 소유가 되며 그 처분도 자유인 것이다. 또한 누구나 기회와 능력과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의 직업과 직장을 선택 결정하여 일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의 처분에 대하여서도 소득자의 자유에 맡겨지는 것이다. 또한 자본재, 소비재의 배분, 자본, 노동의 조달 등도 시장 「매카니즘」을 통한 자유 경쟁으로 이루어진다. 즉 모든 경제활동은 개인의 책임 하에서 개인의 자주적 자유로운 활동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북괴는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다. 공산주의적 경제체제는 모든 재원의 조달, 배분, 관리를 국가 권력이 국가 계획경제에 의하여서 독점하며, 그 지도도 공산당이 독점하므로, 소위 개인 기업이란 존재할 여지가 없다. 간혹 소 규모의 개인기업의 존재가 국가 권력에 의하여서 용납되는 일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서 용납되는 편의이며, 정치적 필요가 사라지면 언제라도 말소된다. 즉 개인의 영리행위는 공산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모든 기업은 국유, 내지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투자란 용납되지 않는다.

또한 인적 자원의 조달, 분배, 관리도 국가 계획에 의하여서 실시되므로 자유 경제체제에 있어서와 같이 직업, 직장의 선택 이주, 이전의 자유도 극히 제한되며,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도 국가 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얻어지는 소득의 처분은 영리를 위한 개인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그 외에는 자유 처분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문10)에서 논란

바 공산체제가 개발되지 못한 단계에 있어서는 그 생산하는 소비재가 부족하고 질이 나쁘므로 국민 소비생활은 비참하다 못하여 지옥상을 이룬다.

이와 같은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 밖에두어 통치하게 되니 국민의 자유로운 생활은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공산사회가 발달하여 국민의 소비생활이 나아짐에 따라 거기에도 자유화의 바람이 불게 되어, 앞으로 이 세 바람에 대하여서 공산당은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주목꺼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질 문 24>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8.15선언에서 북괴 김일성 집단」에 대하여서 「선의의 경쟁」을 촉구하였는데 과연 남·북한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해설>

물론 대한민국이 이긴다. 그것은 한국은 민주체제를 택하고 민주적 개발방식에 따르고 있지만, 북괴는 공산독재 체제를 취하고 공산식 개발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동안 남·북한이 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실적을 대조해 보기로 하자.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하나였으며, 하나로 되어야만 한다. 해방 당시의 한국 경제의 지역적 구조를 볼 때 북한에는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었고 석탄, 전기 등 에너지 자원, 제철, 시멘트, 비료등 중공업이 이곳에 편재해 있었는데 반하여 남한에는 농업, 경공업 밖에는 없었다. 따라서 북한의 중공업과 남한의 농업, 경공업이 상부 상조하여 한국 경제를 부흥시킬 수만 있었더라면 우리 한국의 발전은 큰 고통도 없이 신속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우리가 겪은 말 못할 서러움, 고통은 이를 닦아서서 무슨 쓸데 있겠는가.

하여튼 국토의 분단으로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그리고 북한은 공산독재 체제하에서 자기 개발과 발전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남한에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 것은 1962년 박정희 대장 영도하의 군사정권에서였다. 1962년을 기점으로하여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 시험되고, 1963년 제 3공화국이 수립된 후에도 박정희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

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 제 1차 계획을 답습하여 65년에 그 계획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었다. 이어서 제 2차 계획(67~71년)이 실시되었는데 지금 계획목표를 거의 모두 달성하고, 제 3차 5개년 계획(72~76년)의 정지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제 68년, 69년, 70년, 3개년 간의 국민총생산을 보면 자기 1조 5,757억원, 2조 471억원, 2조 5,620억원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13.3%, 15.9%, 9.7%의 실질성장율에 해당한다. 따라서 1인당 164.7달러, 198.0달러, 223.3달러 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내었다.

한국이 목표로하고 있는 70년대의 대체적인 경제목표는 70년대 전반기까지는 100억 달러 이상의 국민 총생산을 달성하고 70년대 후반기까지는 1인당 국민 소득을 500달러 이상 선까지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80년대까지는 국민 총생산 규모는 20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될 것이 기대 된다. (70년도에는 한국이 약 65억달러 이상, 북한은 30수억 달러라고 추정)

이제 한국 경제의 성장상을 60년대초와 비교하면 60년까지의 연간국민 총생산은 20 수억달러(국민 1인당 소득 약 90달러), 대외수출은 3천만 달러였다. 그러던 것이 70년에는 거기 3배, 30배 이상으로 신장하였으며, 67~69년 3개년 간의 연간 평균 성장율은 12.7%의 고율을 나타냈다.

주요 생산품을 보면 70년에는 화학비료 128만 톤(60년에는 8만 5천톤), 시멘트 650만 톤(3만 8천 톤), 철강재 128만 톤(11만톤), 정유 일산 22만 5천바렐(생산 없음), 전력 시설용량 231만 킬로와트(36만 7천 킬로와트), 전력 생산 약 120억 킬로와트 시(15억 킬로와트 시)에 달하였다. 76년까지는 화학비료는 200만톤 이상, 시멘트 800만톤 이상 1,000만톤, 철강재 350만톤 이상 정유 일산 40만 바렐 이상 발전용량 600만 킬로와트 이상, 전력생산 300억 킬로와트시 이상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제는 에너지원, 중공업의 기초라고는 거진 없었던 기초로부터 출발하여 비약적으로 신장하였으니, 자유우방 제국은 기적적으로 성장한 개발의 모범국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북괴는 남한보다 유리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소위 민주 혁명기지의 건설에 광분하여 왔다. 그러나 북괴의 경제는 그들의 대외적 선전에도 그 간 신통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던 것 같다. 북괴의 사정은 비밀에 묻혀, 외부세계에서는 전혀 알길이 없다. 그러나 북괴는 1966년 10월에 개최한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인민경제 7개년 계획」을 3년간 연장하게 되어, 외부세

계에서도 북괴경제 사정이 뜻대로 되지 않아, 경제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계획에 차질을 가져온 것은 대남군사 노선을 강화하여 북한 전역을 국군화하는 데에 광분한 나머지 군사비에 그 재원의 대부분을 낭비하였고, 태산같이 밟았던 소련으로부터의 원조도 격감한 반면, 공산 독재 통치에 주민들이 너무나 시달렸으므로, 그들의 노동생산성이 저하하였다고 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이 7개년계획은 소위 「천리마 운동」이라고 하는 초과 노동의 강제 착취에 의한 증산정책에 의하여서 강행되었다. 이 때에 북한 주민이 어느만큼 시달렸으며 고통을 받았는 가는 새벽 별 보기 운동이라던가, 삼 천원 뜨고 한 번 등을 펴는 운동 등을 벌였다고 하는 데에서 짐작이 갈 것이다. 이렇게 시달리고 지친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다.

이와 같이 법석을 벌이면서 경제계획의 목표달성에 안간 힘을 썼고, 1970년 11월의 제5차 당대회에서 7개년 경제계획이 3년 연장되었지만, 전력, 석탄 등 「에너지」산업부문을 제외하고 많은 부문에서 계획목표가 달성되지 못하였다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제5차 당대회에서 신 경제발전 6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것을 대한민국의 제3차 5개년계획과 대조해 볼 때 우리는 남북의 경제적 실력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제3차 5개년 계획의 목표연도인 1976년의 국민 총생산의 추정액은 약 130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 생산 목표를 보면

(1) 전력생산(전전에는 60년대 초까지 북괴가 10배 이상 우위에 있었다) 75년 까지 남한에서는 300억킬로 와트 시를 생산한다. 북괴는 76년의 목표를 280~300억 킬로와트시로 잡고 있으니 우리가 우세하다. 70년의 실적은 우리가 약 120억 킬로와트시, 북괴는 165억 킬로와트시였다.

(2) 화학 비료(전전에는 북한에만 편재하고 있었다)

76년까지 한국에서는 200만톤 이상을 목표로하고 있으며 70년의 실적은 128만톤이었다. 북괴는 70년실적 150만톤이며, 280~300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성분계산상에 차가 있으므로 평면적 비교가 어렵다. 비슷한 생산량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생산량을 비교할 때 우리는 헤크탈 당 69년에 150킬로그램, 76년에 220킬로그램이며, 북괴는 70년 실적이 정보당 담 674킬로그램 담 478킬로그램이나, 목표 연도인 76년도에는 정보당 1000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어, 남·북한 비료의 성분상 차이를 짐작할 것이다.

(3) 시멘트(남한에서는 거진 생산되는 부문이다)

북괴의 목표는 750~800만톤이나 우리는 800만톤~1,000만톤으로 우리가 우세하다. 70년의 실적은 북괴는 400만톤, 우리는 650만톤이었다.

(4) 철강재(이 부문 또한 북한에 편재되어 있었다).

북괴의 76년도 목표는 380~400만톤이며, 70년도의 실적은 220만톤이었다. 우리는 70년에 128만톤을 생산하였으나, 현재 조강 103만톤 규모의 종합제철 공장을 건설중에 있으므로 이것이 완공이 되면 76년도에는 350만톤 이상의 철강재를 생산하게 되므로 북괴를 능가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5) 정유 및 석유화학

이 부문은 한국이 절대 우세하며 북괴는 석유화학에 기초한 유기합성 공업 부문 창설에 관한 연구를 겨우 시작하였다. 석유화학 공업은 2차대전 이후의 현대 공업이 정수인데 북괴가 겨우 그 창설을 여구하겠다고 할 점으로부터 그들의 공업화는 2차대전 이전의 패탄이라고 볼 수 있겠다.

(6) 석 탄

한국은 연료액화의 현대적 연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므로 남·북의 비교는 의미가 없으나 참고로 북괴의 목표와 실적을 적으면 대기 5천만~5천3백만톤, 2,750만톤이다.

이상 남·북한의 주요 생산물에 대하여서 비교하여 볼 때 우리 쪽이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경제개발을 시작하였을 때 북괴보다 열세의 상태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10년이 경과한 오늘에 와서, 그리고 다음 5개년후를 전망하여 볼 때 우리가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 격차는 시일이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는 민주체제에서 민주적 개발방식을 택하였으며 북괴는 공산독제 체제에서 공산식 개발 방식을 택하였다는 데에 유인하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북괴에 대하여서 「선전의 경쟁」을 촉구한 것도 이와같은 민주체제의 우위성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은 「개발과 건설과 창조와 경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질문 25>

대한민국 국민은 복귀가 선전하는 것처럼 과연 험뻑고 굶주리고 있습니까?

<해설>

대한민국은 5. 16 군사혁명 후 군사정부에 의하여서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제 3 공화국이 발족한 후에도 민주공화당 정부는 계속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제1차 계획이 성공리에 완수하자 곧 이어서 1967년부터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60년도에 3,200만달러에 불과하였던 수출실적은 64년에는 처음으로 1억달러를 넘어섰으며 67년에는 3억 2천만달러 68년에는 4억 5천만달러, 69년에는 6억 2천만달러, 70년에는 드디어 10억 달러를 넘었다. 한편 재정구조면에 있어서도 원조(대충자금) 의존도가 60년의 31.5%로부터 68년의 12%로 대폭 줄고, 70년도에 와서는 자립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2차에 걸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비약적 성장을 하였다. 한국의 국민 총생산은 1965년 불변시장 가격으로 53년을 100으로 할 때 67년에 236으로 되었으니 14년간에 실질가격으로 2.4배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성장율로 보면 54년~57년에 연 평균 5.5%, 58년~61년에 연 평균 4.1%, 62년~67년에 8.4%, 가 가 가 성장하였으며, 54년~67년의 14간에 연 평균 6.3%의 성장을 하였다. 특히 65년과 67년에는 농작의 흉작에도 불구하고 2차 산업이 20% 이상의 성장을 보인 데에 힘입어 각각 7.4%, 8.9%의 성장을 보였으며 66년, 68년, 69년에는 각각 13.4%, 13.3%, 15.5%라고하는 경이적 성장을 보였으나 70년도에는 9.7%로 과열된 성장이 약간 진정되었다.

산업구조면에 있어서도 크게 변화하였다. 54년 현재의 우리 나라 국민 총생산의 구성비는 1차 산업이 49.0%, 2차 산업이 12.3%, 3차 산업이 38.7%였으나 69년 현재 각각 28.8%, 21.5%, 49.7%, 로 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의 추이를 보면 53년에 불과 76달러이던 것이 63년에 100달러를 넘어섰고 67년에는 143달러, 68년에는 164달러, 69년에 198달러, 70년에 223달러로 200달러를 넘어섰다.

이와 같은 고도 성장을 가능케 한 것은 외국원조와 해외저축에 힘 입은 높은

투자율 때문이었다. 국내 총 투자율은 54년~57년에 연 평균 12.1%, 58년~61년에 12.0%, 66년 21.7%, 69년에 30.0%에 이르렀다. 그 자금 원천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

	1959	1961	1966	1969
투 자 율	10.7	13.1	21.7	30.0
국내저축율	3.9 (36.5)	4.5 (34.8)	13.2 (60.7)	18.0 (62.7)
해외저축율	6.8 (63.5)	8.6 (65.2)	8.5 (39.3)	11.2 (37.3)

자료 : 한국은행. ()안은 총투자자에 대한 구성비

위 표에서 보는 바 59년, 61년에는 해외저축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았으나, 66년, 69년에 있어서는 국내 저축율이 해외저축율을 능가하고 있어 해외 의존도가 감축되었다.

해외저축 의존도가 줄어들었으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정투융자와 일반경비는 계속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세 징수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였다.

65년도 재정투융자의 원조재원과 국내 재원의 비율은 34.2대 65.8이었다. 이것이 67년에는 18대 82, 68년에는 0.8 대 92로 재정 자립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그리고 총 수입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65년에 55.2%, 69년에는 81.7%(전매익금 포함)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민의 조세 부담율도 국민총생산에 대한 조세 부담율로 보면 65년 8.6%, 68년 14.4%, 69년에는 15.4%로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국내 수입은 65년의 546억 원에서 69년에는 2,620억 6천여만으로 거의 다섯 배로 늘어났다. 기간 중 국민총생산 성장율이 경상 가격으로 20% 내외인데 비하여 국세는 40%를 넘는 증가율을 보여 국민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 추이를 보면 65년에 42.6대 57.4, 66년에 46.9 대 53.1, 67년에 48.5 대 51.5, 68년에 48.1 대 51.9, 69년에 48.3 대 51.7로 직접세의 비율은 오르고, 간접세는 내려가고는 있으나 아직도 간접세의 비율이 직접세보다 높으니, 그만큼 서민 생활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60년대의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전국도매 물가는 60년~69년 중 195.8%등귀하였으며, 서울 소비자물가는 이 기간 중

205.2%의 상승율을 보였다. 또 수입상품 도매물가도 170.5% 등귀하였다. 즉 70년대의 상반기(60년~64년) 전국 도매물가는 연 평균 17.7%의 상승율을 보인 반면에 65년~69년 하반기에는 연 평균 8.0%의 상승율을 보였다. 서울 소비자물가도 상반기에는 14.1%, 하반기에는 11.5%의 상승율을 보였다. 수입상품 도매물가도 상반기에는 21.0%, 하반기에는 5.4%의 등귀율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때 물가는 하반기에 들어와서 연 평균 6~10%의 등귀율에서 안정되었다.

한편 도시 일반서민의 소득을 살펴보자 경제기획원이 조사 발표한 도시가계 조사(전국 도시근로자 가구)에 의하면 도시의 월 평균 근로자 소득은 67의 20, 720원에서 68년에 23, 830원으로 15% 증가하였다. 이를 연중 전국 소비자물가 등귀율인 10.8%를 감안할 때 실질소득은 21, 507원이 되어 실질 소득 증가율은 3.8%가 된다. 여기에서 연중 조세잡부금 22, 530원을 뺀 명목 가치분 소득은 22, 530원이 된다.

농가소득은 농림부 농가경제 조사에서 보면 68년도에 월 평균 농가소득은 영농에 의한 농업소득 11, 411원, 농업, 소득 3, 502원 합계 14, 913원으로 전년의 12, 456원보다 19.7%을 가하였다. 이를 연중 소비자물가 상승율을 감안하여 실질소득을 산출해 보면 13, 302원으로 전년에 비해 10.8%의 증가이다. 이는 도시가계의 전년비 증가율 3.8%를 훨씬 상회한다 농가의 가치분소득은 14, 463원으로 전년보다 20.0%의 증가이다.

그러면 현재 실업자는 어느 정도 있는가를 다음 표에서 살펴보자.

	경제활동인구(단위 1,000명)			취업율%	실업율 %
	합 계	취업자	완전실업자		
1965	9,199	8,522	677	92.6	7.4
1966	9,325	8,659	666	92.9	7.1
1967	9,504	8,914	590	93.8	6.2
1968	9,757	9,261	496	94.9	5.1
1969	9,818	9,347	471	95.2	4.8

자료: 경제기획원

이에서 보는 바 실업율은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연연 감소하고 있다. 68년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좀 자세히 보면 68년말 총 취업자 수는 926만명으로 그중 농림, 어업종사자 52.5%, 광공업 14%,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부문

33.5%이다. 이는 67년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55.2%, 12.8%, 32.0%와 비교할 때 농, 림, 어업 부문으로부터 제조부문에 이동하고 있음을 알 것이다.

한편 취업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불안전취업인구의 비중도 68년에는 감소하였다. 비정상 취업자 및 전직 희망자를 불안전 취업 인구로 간주할 때 이들이 총취업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의 21%로부터 17%로 감소 하였다. 이에서 볼 때 실업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다른 직에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것이다.

또한 68년 총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주는 324만명으로 35%가 되며, 가족종사자는 256만명으로 27.7%, 기타 고용 노동자는 37.3%인 346만명이며, 가족종사자중 가족 영농에 따르는 가족 종사자는 44.4%이다. 광업에 있어서 자영업주가 19.8%, 고용노동자는 72.4%이며, 썬비스업 취업자중 고용노동자는 58.2%이다.

이상 우리는 대한민국의 경제사정, 국민소득, 취업 사정등을 살펴 보았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기적적인 성장을 보이고 이에 따라 국민소득은 연연 상승하고 있다. 조세, 물가 양등이 국민생활을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생활은 해를 거듭할 수록 향상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앞 날에 희망을 걸고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여기에 70년대의 우리의 청사진을 그려보고자 한다.

70년대 말에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완수되고, 제4차 5개년계획도 거의 끝나게 된다, 이 때에 우리의 경제는 후진국에서 벗어나 상위 중진국권에 이르게 된다. 이리하여 79년에 가서는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480달러가 되고 총 국민생산은 180억달러(68년 가격으로 4조2530억원)선에 도달한다. 또 70년 상반기 중에는 식량의 자급 자족이 이루어지며, 70년대 말에는 1966년 총주택수 16만 3천호에 비하여 25.3% (130만 7천호)의 주택부족율에서 18%의 율로 감축되어 주택난이 완화될 것이다. 한편 1969년 100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 2대·전화 보유대수 9대로부터, 자동차 10대 전화 13대로 늘어 난다. 연료 및 에너지의 사용량도 증가하여 자유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석유 대신 전력과 원자력까지도 에너지원으로서 비중을 높일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의 4배에 가까운 발전용량을 가지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의·식·주에 대한 근심없이 안정된 생활을 즐기는 동시에 이 기반위에서 80년대의 완전고용의 복지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우리는 이 때부터

선진국의 대열에 끼이게 되는 것이다.

<질 문 26>

대한민국은 북괴의 선전처럼 한국의 민족 문화를 말살하고 있습니까?

<해 설>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는 그들의 식민지정책의 주요한 수단이며 해외 침략의 길잡이라고 공산주의에서는 가르치고 있다. 문화적 침투에 의하여서 다른 나라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부화 타락케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괴는 지금 남한에는 석어빠진 양키문화와 왜색 왜풍이 판을치고 민족문화가 말살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착취사회의 낡은 문화, 자본주의적 부르조아의 반동문화에 반대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의 합법적 요구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누가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있는가?

우선 북괴가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란 어떤 것인가, 이것부터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주장하는 민족문화의 본질을 밝혀 보고자 한다.

북괴는 그들의 문화는 「사회주의적 근로자들을 위하여서 복무하는, 「인민적인 문화」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문화」라고 하였다.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은 혁명과, 투쟁과 인민(공산당이 라는 뜻임은 인민의 개념을 설명하였을 때 밝혀 놓은 바 있다)을 위하여 존재하는 문화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문화개념은 계급성, 혁명적 투쟁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계급적 문화관이 어떻게 민족문화관과 어울릴 수 있겠는가.

북괴는 「문화의 민족적 형식을 특징 짓는 중요한 표징」은 언어라고 하였다. 즉 공산주의에 있어서 언어가 가지는 민족적 특징에 주목하여 자기 나라말로 쓰면 그 내용이야 어떻던 민족문화라고 하는 것이다. 즉 자국어라는 형식에 담으면 모두 민족문화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법대로하면 사회주의를 내용으로하면 사회주의 민족문화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며 자본주의를 내용으로 하면 자본주의 민족문화가 되는 것이요, 「양키즘」을 내용으로 하면 양키즘 민

죽문화가 되는 것이요, 왜색을 내용으로 하면 왜색 민족문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논해 보면 공산주의의 민족문화관은 좀 이상한 것 같다. 우리는 민족문화라고 하면 민족의 얼, 민족의 전통, 민족의 운명, 등을 내용에 담은 문화라고 생각한다. 즉 그것은 민족주의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괴가 대한민국이 한국의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있다고 할 때 어떤 민족문화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사회주의 민족문화라는 말인가? 이는 당연히 말살하여야 한다.

양키즘, 왜색, 왜풍 민족문화라는 말인가? 물론 이것도 당연히 말살되어야 한다.

민족주의 민족문화라는 말인가? 만일 북괴가 이 민족문화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민족주의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주의 민족문화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민족주의 민족문화의 조금만 혼적도 없애고 있는 것은 북괴인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근대화의 과정에 들어서,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개발이 추진되면 추진될 수록 이 소용돌이는 점점더 커져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 과도적인 불안정기를 요란스럽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요소와 새로 나타나는 요소가 서로 자리를 잡고 다투고 있는 것이며, 이 다툼 속에서 신시대에 적응 하지 못하는 그 체제는 사라지고, 새로운 체제가 자리를 잡게 될 때, 우리 사회는 새로운 질서 아래서 안정을 되 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구 체제는 무엇이며, 신 체제란 무엇인가?

구 체제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 받아 오던 전통적 문화, 가치관, 사회구조, 정치체제, 행동 양식등을 말하는 것이며, 신 체제란 이미 유럽에서는 확립을 본 근대 사회의 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구 체제는 근대 과학 이전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농업을 1주 생산업으로 하고 그 토지를 주요 생산수단으로 하는 자연경제의 폐쇄사업의 체제이다. 따라서 사회는 정적 보수적, 퇴영적이며, 신분에 의하여서 사회의 계층 질서가 유지된다. 사람들의 사회 활동의 범위도, 가족, 촌락 공동체의 범위를 벗어 나지 못한다. 따라서 사람들의 의식, 가치구조도 은·의, 인정 등 비합리적 요소에 의하여서 지배된다.

이에 반하여 신 체제는 근대 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근대 산업을 중심으로 발달한 화폐 시장경제의 개방사회이다. 따라서 사회는 동적 진취적, 전진적이다. 사람들은 무한한 변혁, 진보의 가능성을 믿고, 가족, 촌락 공동체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신의 이해, 취미, 의향에 따라서 복잡한 사회관계를 맺으면서 생활을 한다. 따라서 사회는 다원적이 되고, 사람들의 의식구조 가치관도 이해, 합리성 등 이성적 요소에 의하여서 지배된다.

이상과 같이 신·구 체제는 서로 대립되는 요소에 의하여서 성립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 대립되는 체제가 접촉하고 있으며, 이 접촉 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내야하는 사명을 우리 시대는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전통 문화의 뿌리 위에 자란 구 체제에 신 체제를 접목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를 창조하여야 할 사명을 우리는 지고 있는 것이다. 즉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구 체제의 갈등 속에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불화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구체제 속에서 신체제에 맞지않는 퇴역적 낙후적인 요소는 이를 떼어내야 할 것이다. 한편 신체제 속에서 우리가 보수하여야 할 민족의 전통을 파괴할 요소는 배격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민족의 문화전통을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배타적 쇄국 편협민족주의인 것이다. 이것은 외국의 것은 무조건 배척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다. 인류는 지금 하나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가 새로 창설하려는 민족 문화도 이 세계성에 바탕을 둔 그러나 우리 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문화인 것이다. 인류는 하나라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획일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인류를 구성하는 자 민족이 자기 자신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이 특수성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어울리는 인류문화와 민족문화를 창조해야 하는 것이 바로 21세기를 바라 보는 20세기 후반기에 살고 있는 인류의 사명인 것이다.

<질 문 27>

북괴가 주장하고 있듯이 6.25동란을 일으킨 것은 과연 대한민국 입니까?

<해 설>

한국에서의 6.25의 남침을 직접 겪어 본 사람이면 누가 먼저 침략하였는지

의심할 여지 없이 분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직접 6.25를 경험하지 못하고 북괴의 선전만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간혹 대한민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지 않았나 하고 의심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는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있었으며,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성모씨도 1950년 1월 25일의 기자회견 석상에서 「남북 통일」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허세를 부렸다.

이와 반대로 북괴는 침략준비를 비밀리에 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연막전술로 대외적으로는 평화통일을 부르짖고 있었다. 따라서 북진통일을 주장하던 대한민국이 평화통일을 내세우는 북괴에 앞서 공격하였을 것이라고 추리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하겠다.

김일성도 6.25 아침 9시 30분과 하오 1시 30분에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모든 북조선의 제안을 거부한 남조선은 해주지구의 38선에 침략군을 진격시킴으로서 그 죄악을 나타내어 북조선으로 하여금 부득히 전력을 다하여 반격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으며,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남조선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 하였다.

그러면 평화통일을 위한 북괴의 제안은 어떤 것인가?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승인 밑에 수립되자 북괴는 1949년 6월 25일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결성하고 그 이름으로 「평화적 조국통일 방안에 대한 선언서」를 남한 자 기관, 미 주둔군, 「유엔 한국 위원단」에 발송하였다. 여기에서 북괴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천할 것을 남·북 조선의 전체 민주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전체 조선 인민에게 호소하며, 상기의 평화적 통일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1950년 6월 7일 6.25를 눈앞에 두고 「평화적 조국통일 호소문」이라고 하는 다음 요지의 방송을 하였다.

① 남·북통일 최고 입법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선거를 8월 5일~8일안에 실시할 것.

② 해방 5주년 기념일에 최고 입법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

③ 이상 모든 조건과 절차를 토의·결정키 위하여 남·북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를 6월 15일 해주 혹은 개성에서 개최할 것.

이 호소문에서 주목할 것을 해방 5주년 기념일에 최고입법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제안한 점이다. 이미 북괴는 8월 15일에는 서울에 들어 와 있을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북괴는 이 호소문을 반복 방송하면서 6월 10일 조만식 선생과 남로당 지하지도 공작대장으로 체포되었던 이주하, 김삼용의 교환을 제의 하였다. 6월 19일 그들은 다시 「남·북 의회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 제안」을 내놓고 6월 21일 서울이나 평양에서 의회 대표가 만나자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북괴는 「평화적 조국 통일」 선전공세를 6월 달에 집중적으로 폈으니, 6.25침공과 관련시켜 보았을 때, 그것은 무력침공의 음모를 가리기 위한 한 날 연막전술에 불과하였다고 판단 된다.

한편 소련은 6월 중순 북괴 주재 소련 대사, 주미 대사, 주일 이사회 소련 대표를 모스크바에 소환하였다. 여기에서 남한에 대한 무력침공의 국제적 음모는 완성 되었다고 보겠다.

이리하여 괴뢰군 총참모장 강건은 6월 10일 예하 각 사단장 및 여단장을 비상소집하여 비밀회의를 열어 6월 23일까지 배치장소에 이동 완료할 것을 명령하였다. 동년 6월 18일에는 김일성 명의로 언제든지 전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는 훈령을 전 북괴군에 내렸다. 이와 같은 북괴군의 전개 및 공격태세 준비에 관한 명령 및 훈령은 6.25사변 중 우리가 북괴군으로부터 압수한 조선 인민군 작전명령서, 전투명령서 등 증거에 의하여서 낱낱이 알수 있었던 사실들이다.

당시의 북괴의 병력 및 장비는 한국 육군본부에서 판단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괴뢰군 164,380명 보안군 34,000명 계 198,380명

각종 포 2,393문 전차 242대 비행기 211대

경비정 30척 장갑차 54대

이에 대한 아군의 병력 및 장비는 다음과 같았다.

육군 94,808명, 해군 6,145명(해병대포함), 공군 1,865명

국립경찰 48,273명

육군 8개 사단 편제로 차량 2,100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차, 중거리포, 4·2인치 박격포, 무반동총, 전투기, 폭격기는 전연 없었다.

공군 12대의 연락용 비행기, 10대의 AT-1 훈련기가 있었다.

해군 PC 1척, 소송도중의 PC 3척, LST 1척, 소해정 15척, 전 일해군 기획

부설함 10척 기타 소함정 약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상 개전 당시의 피아의 병력 및 장비를 볼 때 아군은 전연 공격용 중무기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북괴는 전적으로 공격용 중화기 및 전차로 장비되어 있었다.

일단 남침이 시작되자 아군은 적 전차를 부술 무기가 없어 적 전차의 차 바퀴 밑에서 분산하고 말았다. 방어용 무기만 가지고 공격하였다는 것은 전술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편 6.25를 전후한 한국군의 전투 태세를 보아도 한국군이 먼저 북침하였다는 주장이 날조임을 알 수 있다.

6월 24일은 토요일이었다. 이 때 일선 7사 부대는 육군본부의 구두지시에 의하여 약 3분의 1의 병력에게 외출 의박을 허가하였다. 또 이날 저녁 18시에는 육군 장교구락부 개관 기념연회가 열렸다. 고급지휘관들은 이 연회에 참석 차 모두 전투대열에서 이탈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결코 수 시간을 앞두고 북침하고자 한 군대의 임전태세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상의 정치적, 군사적 여러 증거는 북괴가 남침을 감행하였다는 것을 역력히 말해주는 재료들인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유엔 한국 위원단」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6월 25일 보고서한을 송부 하였다. 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어떤 면에서라도 북괴의 진술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모든 증거는 이 공격이 비밀리에 준비되었고 비밀 리에 개시된 계획적이고 본격적인 공격이라고 하였다.

<질 문 28>

북괴가 제안하고 있는 소위 「남·북한 군축론」 「무력 불행사 협정」 등이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 설>

북괴가 진심으로 남·북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도 밑에 이런 제안을 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괴가 그 호전성과 침략성을 버리지 않고 남한에 대한 간첩, 무장공비의 남파를 계속하고 있는 이 판국에 어떻게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

화에 관한 어떤 형태의 이야기라도 진행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진심으로 그런 협상을 원한다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0년 8월 15일에 선언하신 바와 같이 우선 행동으로써 침략성을 버렸다는 것을 실증하고 이를 내외에 선언해야 한다.

물론 북괴와 같이 이런 회담을 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들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실력단체로 인정하고 그런 자격으로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또 이런 문제는 남·북 간의 회의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문제이니 만큼, 유엔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북괴가 그 침략성과 도전성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행동으로써 실증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였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북괴의 군축론, 무력 불행사 협상론은 무엇을 노린 제안일까? 물론 북괴는 지금도 이와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괴는 50년대의 한국의 정체의 부패, 그 결과 일어났던 60년 4월의 학생혁명 후의 혼란 등 대한민국의 국가체제가 취약하였던 때를 이용하여 줄곧 평화통일 공세를 취해왔다. 이 군축론도 그 평화공세의 일환으로서, 군축에 의하여서 남·북한의 군사력상 균형이 무너지면 일거에 남침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질문 7, 8)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북괴의 평화통일은 공산혁명, 대한민국 무력 전복을 감추기 위한 위장 선전이라고 하겠다. 김일성 집단은 북한에 발을 들여 놓은 그날부터 북한 사회의 군국체제 확립에 광분하였다. 따라서 5.16군사혁명 이전 대한민국의 국가체제가 튼튼히 확립되지 못하였던 시점에서 군축을 단행한다면, 군국체제가 확립되어 있었던 북괴측이 득을 볼 것은 당연하였다. 예컨대 북괴는 남·북한 병력의 10만 이하의 감축을 주장하였다. 군국체제가 확립되어 있던 북괴로서는 대한민국군이 10만만 있다면 10만의 북괴군으로써도 북한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체제가 취약한 대한민국으로서는 북괴군이 10만이 있다면 10만의 병력만으로는 한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북괴의 군국체제에 해당할만한 병력이 이에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한민국 대 북괴의 병력은 1대 1로서는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 대한민국에는 알파가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이며, 이 알파의 크기는 대한민국의 군사체제와 북괴의 군국체제의 대비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1961년에 5.16군사혁명으로 한국에 강력한 국가체제를 갖춘 정부가 등장하자 북괴는 이때까지의 평화공세를 포기하고, 대남 적화공작의 적극화 강경 군사노선의 채택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그리하여 66년 이후부터는 「결정적 시기의 혁명적 대사업을 주도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전국의 요새화」, 「전 인민의 무장화」, 「군의 간부화」, 「군의 현대화」를 내걸고, 북한 사회의 군국화를 단행하였다. 즉 북괴는 남한에 강력한 국가체제가 나타나자, 군축에 의하여서 노리려고 하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북한사회의 완전 군국화를 단행하여 군사적 균형을 유리하게 유지하려는 안간힘을 썼다고 하겠다.

한편 군축론을 내세운 때에는 북한 경제의 애로를 여기에서 타개해 볼 생각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북괴 경제체제의 가장 큰 약점의 하나는 노동력의 부족이라고 하겠다. 총인구 대 병력의 비율을 대한민국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이 49.2대1인데 비해 북괴는 32.9대1인 것이다. 북괴는 이와 같이 그 인구에 비하여 과중한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심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

북괴는 군축을 주장함으로써 이와 같은 노동력 부족을 타개해보자는 저의도 품고 있었다고 하겠다.

요컨대 북괴는 군축, 무력 불행사 협상에 의하여서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깨뜨리고 재 남침의 기회를 만들고, 북괴 경제의 약점인 노동력 부족도 타개해 보려고 노렸던 것이다.

<질 문 29>

대한민국은 북괴가 생각하듯이 북침을 위한 전쟁 준비를 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시키고 있습니까?

<해 설>

(질문 8)에서 말하였듯이 공산당은 전쟁과 평화를 근본적으로 가르치 않는다. 따라서 공산당과 대치하고 있는 한 긴장은 지속된다. 그리고 북괴의 전략은 북한을 남한 적화혁명의 기지로 하여 남한이 소위 민족해방 전쟁을 유발하여, 결정적 시기가 오면 일거에 남한을 무력침공 점령하여 공산 적화통일을 달성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괴는 전국의 요새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라는 군사노선에 따라 북한의 군국화를 완료하고 1970년 11월의 제 5차 노동당 대회에서 언제라도 남한을 침공할 준비를 다 갖추었다고 호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리하여 이들은 현재 육군 37만명, 해군 1만3천명 각종 함정 약 180척 1만 7천톤 공군 3만3천 약 660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 각종 보조병력으로 보안대 및 국경 경비대 2만5천명, 민병조직으로 노농적위대 120만~130만명이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총 병력 64만5천, 해군 함정 약 70척 약 5만 7천톤, 공군 항공기 약 32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 250만의 향토예비군이 있다.

한편 북괴는 1961년 7월에 각각 소련, 중공과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고, 군사동맹을 하였다. 대한민국은 1953년 10월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미국과 맺었다.

이상 피아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 공군력에 있어서 우리가 열세에 있으나, 미공군의 지원을 받는다는 전제를 두고 볼 때 우리 측의 군사력이 우세하다.

우리 측이 이와 같은 우세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 우세한 군사력으로써 복진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와 같은 군사력을 가지는 것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다. 우선 (질문 28)에서도 논한 바, 남·북한의 군사력을 균형시키자면 국가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프리미엄」을 남한에 얹어 주어야 한다. 남한은 언제나 북한보다 우세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균형이 잡혀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다음은 우리는 억제력으로서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괴군의 창군목적은 남한에 대한 침공에 있다.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남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적에 대하여서는 침공 받았을 때 방위한다는 수세에만 있으면 백전 백패하기 마련이다. 공격을 당할 때 공격 받은 부대가 전투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격받지 않은 부대로서 즉시 보복공격을 가할 만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보복공격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보복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제 아무리 호전적이며 도발적인 북괴라 하더라도 이 보복력이 두려워서 감히 공격해 오지 못하는 것이다.

6·25의 쓰라린 경험을 가진 우리로서는 막강한 군대를 유지하는 데에 아무리 큰 국민의 희생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참아야 할 것이다. 6·25와 같

은 참극을 다시 당하느니보다 이와 같은 희생을 감당하고 다시 6·25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상책인 것이다.

북괴는 소위 민족해방 혁명, 인민 민주주의 혁명을 위하여 남한에 계속 간첩을 남파시키고 있다.

우리로서는 이들을 섬멸할 수 있는 후방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북괴의 전략에 따르면, 이 간첩침투에 의하여서 남한이 혼란에 빠지고 각처에 폭동, 소란이 일어났을 때 남침한다고 한다. 따라서 간첩들이 남한에 발 부치지 못하도록 나타나는 족족 이잡듯이 잡아야만 북괴가 내미는 기회를 봉쇄할 수 있다. 따라서 정규군에 의하여서 북괴를 억제하는 한편 후방태세를 정비하여 북괴가 내미는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괴와 같은 공산군과 대치하고 있는 한 긴장은 해소되지 않는다. 이 긴장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면 그들의 군사력을 억제하는 힘을 가진 그들보다 더 우세한 군사력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병력의 감축이나, 군축이나, 군사조약의 체결, 군사력 불행사 협정 등, 평화를 달성하기보다 오히려 무력 충돌, 전쟁을 유발하게 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질 문 30>

「유엔」군은 과연, 북괴가 주장하듯이 침략군입니까?

<해 설>

1950년 6월25일 북괴가 남침을 개시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즉자 미국 및 유엔에 대하여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즉일로 북괴에, 대하여서 전투행위를 즉자 중지하고, 북괴 무장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철퇴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괴가 계속 남하하자 6월27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진압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필요한 원조를 한국에 제공하도록 유엔 가맹국들에게 권고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어서 28일에는 북괴에 대하여서 군사적으로 제재할 것을 가결 하였다.

여기에서 미국은 한국전에 참여하게 되었고, 뒤 이어 「뉴우질랜드」 「캐나

다」 「오스트렐리아」 등이 병력을 파견하게 되자 1950년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에 병력, 기지원조로 제공하는 가맹국은 이와 같은 병력 기지원조를 미국 주도 하에 연합군 사령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연합군사령관은 미국이 임명하도록 가결하였다.

여기에서 「맥아더」 장군이 유엔 사령관에 임명되고 한국에 참전한 모든 유엔군 부대는 「맥아더」 사령관의 지휘하에 들게 되고 한국은 유엔 가맹국은 아니지만 한국군도 실질적으로 유엔군에 편입되었다.

한국전쟁은 집단 안전보장 전쟁으로서 역사상 그 기능을 발휘한 전쟁이었다. 청백색 유엔기 밑에서, 유엔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단일 연합군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한국에 대한 침략을 저지하기로 결의한 유엔 결의에 찬성한 53개국 중에서 미국을 비롯하여 16개 국이 육·해·공군 전투부대를 제공하였다. 3년간 한국전쟁에 제공된 유엔 우방들의 지상 전투부대는 한 때 최고 30만 이상에 달하였으며 그 밖에 공군, 해군력이 있었다. 특히 미국은 20여만의 지상전투 부대와 막대한 공군 및 해군 전투원과 장비를 유지하였다.

(별표 참조)

한국군이 유엔군에 편입되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었는데 이것은 국군 통수권의 포기가 아니냐, 즉 한국군은 유엔군, 실질적으로는 미군의 피뢰가 아니냐고 복괴는 떠벌리고 있다.

한국군의 지휘권 이양은 1950년 7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수교한 한국군 작전 지휘권 이양에 관한 공한과, 동년 7월 18일의 이를 확인하는 「맥아더」 사령관의 회한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작전지휘권의 이양은 양국간의 합의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그 효력은 오늘까지도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복괴의 침략을 무찌르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부득이 하였다. 한국에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어 모든 부대는 연합사령부의 지휘하에 들게 되었고, 연합군 작전에 있어서 지휘의 일원화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원칙이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취해진 임시적 조치였던 것이다.

휴전 후 1954년 11월에 「한·미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휴전협정 제4조 60항에 따라 1954년 4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네바」에서 한국통일에 관한 정치회담이 19개국 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나, 공산측의 고집과 비타협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하였다. 여기에서 미국은 1954년 7월 이승만 대통령

을 초청하여, 통일문제, 국군의 증강, 군원문제 등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그 후 대통령을 수행하였던 정부각료, 군수비들이 계속 잔류하여 일련의 한·미 회담을 열었는데 그 때 한·미간에서 토의된 의사록이 1954년 11월 17일 양국 정부에서 발표되었다.

동 한·미 의정서 제2항에 「유엔 사령부가 대한민국 방위에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군은 유엔 사령부의 작전 지휘하에 둔다」라고 하였다.

이에서 유엔군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적극적으로 맡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한편, 한국군을 그 작전 지휘하에 두어 한국군의 단독행위를 억제하고자

유엔 16개국의 한국참전 상황

국명	참전약속일	파견병력수	병력착한년월일	병력이한일
미국	1950. 7. 5	보병 7개사단 기타 해·공·해병 1개사단	208,000	해공 1950. 7. 7 지상 1950. 7. 11
영국	1950. 9. 5	2개여단 해·공·군	11,000	해공 1970. 7. 7 지상 1950. 8. 29
오스트랄리아	1950. 11. 5	"	50,000	지상 1950. 9. 27 해공 1950. 7. 8
터키	1950. 11. 10	1개여단	5,400	지상 1950. 9. 27 해공 1951. 10. 17
타일랜드	1950. 11. 23	1개연대 해·공군	4,000	해군 1950. 11. 7 공군 1950. 11. 10
프랑스	1950. 12. 10	1개대대 해군	1,000	지상 1951. 6. 23 해군 1950. 7. 29
네덜란드	1950. 12. 12	"	1,000	1950. 11. 23
뉴질랜드	1951. 1. 12	1개연대	1,100	1950. 12. 31
그리스	1951. 1. 17	1개대대 공군	3,207	공군 1950. 11. 25 지상 1950. 12. 9
캐나다	1951. 2. 15	개여단 해·공군	7,000	공군 1950. 7. 28 해군 1950. 7. 30 지상 1950. 12. 18
필리핀	1951. 3. 6	1개연대	5,000	1950. 7. 19
벨기에	1951. 3. 6	1개대대	750	1951. 1. 3
룩셈부르크	1951. 1. 31	"	50	1951. 1. 31
콜롬비아	1951. 8. 1	1개대대 해군	1,200	해군 1951. 4. 30
에티오피아	1951. 8. 15	1개대대	1,000	지상 1951. 6. 5 1951. 5. 5
남아프리카	1950. 10. 4	참모장교 5 1개전투기중대		공군 1950. 10. 4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한국군이 단독 복진하여 전쟁을 확대시키지나 않을까하는 미국 및 유엔 가맹국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하겠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과 배를 같이하여 한국전에 참가한 16개 유엔 회원국 대표들은 「워싱턴」에서 공동정책을 선언하였다. 여기에서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신의와 한국에 대한 계속적인 책임의 인식 및 한국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선의에 찬 결의를 재 선언」하는 동시에 「유엔의 원칙에 도전하는 무력공격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세계평화를 위하여서 다시 단결하여 조속히 이에 대항할 것을 확인하고 그러한 휴전협정의 위반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행위를 한국 국경 내에 국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휴전협정 이후 17년이 지난 오늘 유엔군은 한국군과 미군 2개 사단을 비롯하여 기타 소수의 참전국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군과 미군을 제외하면 기타 유엔군은 사실상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다. 또한 미군의 철수도 그간 논의되어 이미 미군 1개 사단을 철수하였고, 또한 미군 방어담당 구역이던 서부전선만 우리 한국군이 인계하여 담당하게 되었으니, 전 휴전선은 우리 한국군이 전담하게 되었다. 머지 않아 미군의 주둔도 상징적이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북괴의 도전성과 침략성이 한반도에서 가시지 않는 한 유엔군의 한국 주둔은 우리 한국 안전보장의 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다. 즉 유엔군의 주둔은 공산군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집단안전보장 체제하에서 방위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질 문 31>

한국군의 월남파병은 북괴가 비난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미군의 총알받이입니까?

<해 설>

미군이 우리 나라에 주둔해 있는 것과 대한민국이 월남에 국군을 파병한다는 것은 전연 별개의 문제이다. (질문 1, 2, 3)등에서도 논 하였지만 한국문제의 해결은 첫째 미·소의 책임이며, 이들이 한국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엔에 이 문제가 이관되었던 것이다.

그 후 공산군의 남침으로 이 땅에는 유엔군이 주둔하게 되었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미군의 철수를 반대하고 계속 그 주둔을 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책임을 미군의 주둔으로 증거해 달라는 것이다.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괴의 남침시 미국이 한·미 방위조약의 각 조항을 즉각 이행해줄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군이 철수한 뒤에 우리가 공격을 받았다고 할 때 미군이 다시 우리를 원조하려고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경우와,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비교하여 본다면 그 이해 득실은 명백한 것이다.

그러면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자주 국방과는 모순되는 주장이 아니겠는가?

자주 국방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오로지 스스로의 힘만으로 국방을 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모순이 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군사 테크노로지(기술)가 발달되고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되어가고 있는 20세기 후반기에 있어서 (물론 정치체제나 이데올로기 상에서는 엄연히 세계의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교통, 통신의 발달산업, 무역의 발달등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은 즉석에서 모든 세계를 알게되며, 세계 한구석에서 일어난 물가 변동은 곧 다른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주며, 젯트 초음속 비행기만 타면 하루 사이에 세계 어느곳에든지 다녀올 수 있다) 오로지 스스로의 자주적 힘만으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미·소와 같은 초 강대국에 있어서도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자국은 그 가지는 바 국력에 상응하는 힘을 합쳐서 그 합친 힘을 가지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자주국방을 주장하는 것도 우리의 단독 힘으로써 국방을 자주적으로 담당한다는 것이 아니다. 자주적인 입장에서 누구에게나 예속되지 않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국력에 맞는 힘을 내어서 우리의 모자란 힘에는 미국의 힘을 보태어서 국방태세를 갖추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모자라는 것은 무엇인 것일까?

두말할 것 없이 물자면에서 모자란다. 전쟁이란 사람과 물자를 가지고 싸우는 것인데 우리에게 사람은 있으나 물자가 모자라는 것이다. 물자의 생산은 그 나라의 산업에 달려있는데 우리나라 산업의 생산품 중에서 어느 정도의 생

산품을 군수용으로 돌릴 수 있으며, 산업구조 상으로도 군수산업을 어느정도로 하여야 하겠느냐, 즉 우리의 경제적 방위력을 어떻게 육성하겠느냐는 앞으로 우리 나라를 개발하며 우리의 자주국방력을 키우는데에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우리의 경제적 방위력으로 보아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군, 해군력은 미국의 절대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육군의 중장비, 중무기, 유류, 최신풍기 등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받는다고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그 때문에 우리 국군이 미국의 용병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우리의 국력에 알맞는 몫을 내어서 미국과 대등하며, 자주적 입장에서 우리의 모자란 힘에 미국의 힘을 보태어 복피를 막고 있으며 나아가서 자유세계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미군의 철수를 반대하고 그 주둔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5만의 국군을 파월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그 국내 사정때문에 한반도에서 철수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도 이에 맞장구를 쳐서 어서 미군은 이 땅에서 물러가라고 요구한다면 미군은 얼싸 좋다고 물러날 것이다. 손이 가고 싶어하는데 주인이 빨리 가달라고 한다면 손은 좋다고 갈 것이다. 손이 아무리 가고파도 주인이 말려야 손도 좀처럼 떠나지 못하는 법이다.

위에서 본 바 미군의 한국 주둔은 우리의 안전 보장에 지대한 영향이 있으며, 미군의 주둔은 우리의 방위력의 한 요소이다. 따라서 미군의 한국 주둔이라는 문제와 국군의 파월이라는 문제는 전연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이 두 문제를 결부시켜서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은 국군을 월남에 파견하였는가?

월남전쟁이란 주지하는 바 가장 인기가 없는 전쟁이며, 미국 내에서도 매파와 비둘기파로 여론이 갈라져,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서 이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쟁에 우리가 뛰어 들어서 세계의 여론을 자극하여 대한민국은 호전 국가라고 하는 나쁜 인상을 세계에 주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복피는 한국군은 미국의 총알 받이로 파월되었다고까지 선동하고 있다.

월남전은 공산당이 보는 바로는 반제·반봉건적 인민 민주주의 승리를 위한

어서 반제, 반봉건 세력은 인민 민주주의 전선에 집결한다는 것이다. 월남에서 베트콩은 바로 이 공산당 노선을 답습하고 중국에 가서는 여기에 또 하나의 공산 국가를 세우고자 한다.

현재 월남은 공산당의 침략을 받고, 그 침략을 물리치는 데에 온갖 힘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공산주의의 도움을 받고 있는 베트콩의 힘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그 힘은 월남 단독의 힘으로서로는 도저히 꺾을 수 없을만큼 강한 것이다. 여기에서 자유 우방의 월조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월남이 공산화하여 여기에 소위 공산혁명기지가 섰다고 가정한다면 그 결과는 몹서리치는 것이다. 당장 라오스, 캄보디아가 공산화하고, 말레지아, 타이란드, 버마가 공산 침략을 받고 여기에 소위 인민 해방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한국에도 그 여파가 미쳐 복괴는 간접 침략을 더욱 적극화할 것이다. 한편 국제 공산주의의 기세는 더욱 비등하여 공산당이 제1전략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후진 국가에서는 일대 혁명 소동이 벌어져, 급기야는 이런 사태가 발전하여 인류를 멸망시킬 제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사람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 진영으로서는 기어코 월남에서 공산 침략을 분쇄하여, 6.25사변에서 보여준 바 침략은 반드시 분쇄되며,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는 교훈을 국제 공산주의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유의 대의의 기수로서는 대한민국이야말로 그 적임자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6.25사변에 있어서 자유의 대의에 몽친 자유 진영의 도움을 받아 공산 침략을 물리쳤다. 우리는 이 자유의 대의를 지켜야 할 인류에 대한 부채를 지고 있다.

부채는 갚아야 한다. 월남 파병은 우리에게 대하여서는 이 부채의 상환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또 월남이 적화되었을 때, 그 결과가 우리의 안전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할 때 월남에 파병하여 공산 침략을 막는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복괴 집단의 침략 야욕을 억제한다는 간접적 의미도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겨운 일이다. 우리 단독의 힘으로써는 할 수 없다.

때마침 이미 월남에 참전하고 있던 미국을 위시하여, 뉴우질랜드, 오스트렐

리아, 필리핀, 타이, 한국, 월남등 7개국 사이에서 월남 파병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우리 나라는 1965년 1월 우선 비전투원을 파병하기로 하고 이어서 8월 13일에 전투 사단을 파병하기로 국회에서 결의, 통과하였다.

월남에서의 우리 국군의 용전 분투는 월남 국민 뿐만 아니라 파월 각국 장병의 칭송, 대상으로 되고 있으며, 국위를 만방에 선양하였고, 멀리 월남 땅에 우리의 해외 진출의 발판을 잡아 놓았다.

또한 파월 장병의 송금과 건설 및 용역, 군납, 파월 기술자로부터의 송금 등의 외화 수입은 제2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한 구실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의 국군 파월은 미국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적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또 국가 안전 보장의 필요상 파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IV. 비 교 편

1910

1. 정 치

항 목	한 국	북 피
정치 제도	<p>(1) 한국의 정치체제는 입헌 공화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그 정치이념으로 하고 3권 분립제도에 입각한 대외정책을 하고 있다.</p> <p>(2) 권력구조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임명권, 국군의 총수권을 가지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임기는 4년으로 3회까지 할수 있다.</p> <p>(3) 입법기관인 국회는 단원제에 정원 175명, 임기 4년이며, 그중 131명은 소선거구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44명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p> <p>(4) 행정부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자료는 국무총리의 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1명의 부총리 2명, 13부, 4처, 12청으로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다.</p> <p>(5)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 법</p>	<p>(1) 북피의 정치체제는 소위“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실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인하고 김일성 1인독재나 다름없는 노동당 독재체제이다.</p> <p>(2) 권력구조는 헌법상으로는 최고 인민회의가 최고 주권기관으로 되고 있으나 실제상으로는 공산당 중앙정치위원회가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최고 인민회의는 당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불과하다.</p> <p>(3) 입법기관으로서의 최고인민회의는 임기 4년(실제로는 매4년마다 선거를 하지는 않았음) 인구 3만에 1명의 비율로 선출되고 457명의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있다.</p> <p>(4) 행정기구로서의 내각은 수상 제1부수상 1명 부수상 3명 자 30개성, 6개위원회로 구성하고 있다.</p> <p>(5) 사법기구로서는 최고 재판</p>

항 목	한 국	북 피
정치 제도	<p>원, 지방법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3심제이다.</p> <p>법관은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신분보장이 되어 있어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다.</p> <p>변호인은 판선변호인은 물론 민선변호인 제도도 있어서 피고의 권익을 옹호한다.</p> <p>(6) 정당은 복수 정당제이며 선거에 의하여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된다.</p> <p>(7) 언론 자유로 인한 여론형성이 활발하여 정치는 국민여론을 종합하여 행하여지고 있다.</p>	<p>소와 최고 검찰소가 있으며 2심제이다.</p> <p>법관은 당에서 비밀리에 지명된 자가 임명되므로 재판은 당의 결정이나 김일성의 명령과 발언에 준하여 행하여진다. 변호인은 판선변호인 뿐이어서 피고의 권익 보호는 기대 못한다.</p> <p>(6) 정당은 오직 노동당뿐이며 이 정당자체가 정권기관이 되어 있다. 정권의 교체는 없으며 단지 당내에서의 권력투쟁이 끊임없이 행하여지고 있을 뿐이다. 조선민주당, 청우당이 있으나 도당 이하 조직이 없는 중앙당만 있는 허수아비 정당이다.</p> <p>(7) 언론 자유가 없고 매스·메디아가 당에 독점되어 있어 여론이 형성되지 못하며 정치는 공산당의 자의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p>
선거 제도	<p>(1) 선거권은 20세 이상이며 피선거권은 대통령이 40세 이상, 국회의원 25세 이상의 국민이다.</p> <p>(2) 입후보는 등록된 정당에서 공천하여 자유로히 입후보한다.</p>	<p>(1) 선거권은 18세 이상이며 피선거권은 당에서 조종 및 지명한다.</p> <p>(2) 공산당에서 지명하는 단일 입후보자만 입후보 한다.</p>

항 목	한 국	북 피
선거 제도	<p>다.</p> <p>(3) 선거방식은 평등, 직접, 비밀, 보통선거에 의하여 자유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실시하며 기표방법은 찬성부호자란에 ○표를 기입하며 투표함은 공개개표를 한다.</p> <p>(4) 대통령,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된다.</p>	<p>(3) 단일입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당 감시하에서 하되 반대 의사에만 ×표를 기입하며 투표함 당에서 비밀리에 개표한다.</p> <p>(4) 대의원 임기는 4년이나, 단 한번도 지켜진일은 없으며, 제 2기 대의원 선거(1957.8)는 무려 9년만에 실시 되었다.</p>
통일 방안	<p>(1) 유엔결의에 따라, 유엔감시하에 남북한 토착인구 비례로 자유, 평화, 비밀, 보통선거를 실시한다.</p> <p>(2) 1970. 8. 15 대통령은 “8. 15 선언”에서</p> <p>가) 북괴가 한국에 대한 무력전쟁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소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해온 종래의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라는 점을 행동으로 실증하고,</p> <p>나) 북괴가 한국의 민주, 통일, 독립, 평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인정하고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한다면, 우리는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p>	<p>(1) 의군철수 “언커크”해체, 유엔결의의 무효화를 전제로하여</p> <p>(2) 갖가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위장된 방안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p>

항 목	한 국	북 피
<p>통일 방안</p>	<p>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으며 “북피의 유엔 참석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다) 남북한의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살수 있는 여건을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고 개발과 건설과 창조외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를 물어 “선의의 경쟁”을 촉구했다.</p>	<p>(3) 그러나 북피는 지난 5차당 대회(70.11)에서 소위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남한 공산혁명의 규정에 따라 사회제도의 평화적 이행을 부정하는 기초위에 통일문제를 정립하고 있다.</p> <p>(4) 북피는 8.15선언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현 남한 정권의 타도를 강력히 제시하면서 적화통일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p>
<p>대외 관계</p>	<p>(1) 변동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탄력성 있는 다변외교로 통일과 안보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 한다.</p> <p>(가) 평화, 외교</p> <p>(나) 안보 외교</p>	<p>(1) 대공산권 정책</p> <p>(가) 사회주의 국가 상호간의 유대강화</p> <p>(나) 실리 추구를 위한 외교</p>

항 목	한 국	북 괴
<p>대 외 관 계</p> <p>(다) 경제 외교 (라) 통일 외교</p> <p>(2) 절대 우위의 국력배양으로 북괴의 남침기도를 미연에 분쇄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국토통일의 거족적 기반을 확립한다.</p> <p>(3) 방위동맹으로서 1954. 11. 7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p> <p>(4) 외교 관계 현황 (가)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국 80 (나) 총영사관 (일본 내 8개, 캐나다 1개, 미국 내 6개, 서독내 1개의 총영사관 제외) 7</p>		<p>(다)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 방안 도입.</p> <p>(2) 대중립권 정책 및 대자유권 정책 (가) 중립권에 대해서는 ① 평화공존 포방, 친선유대 강화 × 반제, 반식민지 운동 지지 및 연대성 표시 ③ 정치, 경제, 문화적 침투 공작 (나) 자유권에 대해서는 ①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제국의 비난, 이간 × 사회주의 우월성 강조</p> <p>(3) 방위동맹은 1961. 7. 6 소련과 동년 7. 11 중공과 각각 군사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 1965. 5. 30 소련과 방위력 강화를 위한 군사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p> <p>(4) 외교 관계 현황 (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국 30 (나) 총영사관(중공내 3개, 소련내 1개의, 총영사관 제외)</p>

2. 경 제

항 목	한 국	북 피
경제 체제	(1) 시장 기구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 체제이다.	(1) 일체의 생산수단을 전면적으로 국유화 및 집단화하여 (2) 강력한 중앙 집권적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추진하고 있어서 기업의 자유화와 사유재산제는 인정치 않는다.
경제 정책	(1) 자립 경제의 기반구축 (2) 정책 목표(3차 5개년 계획) (가) 식량증산과 주곡의 자급—정지정리 및 기계화 추진— (나) 농어촌 보전 및 문화시설 확충—전화율 및 도로망 확장— (다) 무역수출에 의한 국제수지의 개선 (라)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공업의 고도화 (마) 과학기술과 인력의 개발 향상 (바) 사회간접자본의 균형된 발전 (사) 4대강 유역개발 및 국토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지역개발의 촉진 (아) 주택과 위생시설 확충에 의한 국민생활의 개선	(1) 북피는 신 6개년계획(71—76)의 주요 노선은 전쟁준비와 소위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물질적 준비를 선차적으로 해야한다”는 적화통일 전략에 따른 중공업 우선정책

항 목	한 국	북 피
경 제	국민총생산액 67년도 총생산액 : 42억 5천8백만불 68년도 총생산액 : 50억 2천만불 69년도 총생산액 : 60억 7천8백만불 70년도 총생산액 : 67억 3천만불 76년도 총생산액(목표) : 136억불 1969년 예산 규모 13억 1천6백만불 국방비 2억 9천4백만불 예산대비 22.5% 1인당 군사비 부담액 9불	국민총생산액 67년도 총생산액 : 26억 2천7백만불 68년도 총생산액 : 27억 8천5백만불 69년도 총생산액 : 29억 5천만불 70년도 총생산액 : 31억 5천만불 76년도총생산액(추정) : 46억 7천만불 1969년 예산 규모 23억 3천2백만불 국방비 6억 9천9백만불 예산대비 30% 1인당 군사 부담액 49.7불

3. 사 회

항 목	한 국	북 피
사회 제도	(1) 지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등 모든 자유가 보장된 개방된 사회이며, 개인의 인권과 가치 제도를 존중한다. (2)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여 자기의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 북한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2) 북한 주민들은 직업의 선택, 자녀교육, 주거의 이전, 그리고 모든 거동을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행할수 없도록 각종 조

항 목	한 국	북 괴
사회 제도	<p>(3) 여론이 중시되어 국민의 동질성을 이룩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이다.</p>	<p>직에 얽매어 있다.</p> <p>(3) 북괴는 불평등 분배의 계급 사회를 고의적으로 형성시키고 있다. 소위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평등을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있을뿐 실제에 있어서는 의식주 생활을 비롯하여 정신 문화 생활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계층을 만들어 놓고 있다.</p> <p>(4) 공산당 독재 사회를 형성하고 있어 당원과 비당원의 상호 불신으로 동질화된 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단절 되어 있다.</p>
인 구	<p>총인구 3천1백3만6천명</p> <p>인구증가율 24%—26%</p> <p>성별인구 남 1천5백65만3천명 여 1천5백38만3천명 남여대비 1 : 0.98</p>	<p>총인구 1천4백6만2천명 (69년말 추계)</p> <p>인구증가율 30%—35% 1천명 단위</p> <p>성별인구 남 6백93만2천명 여 7천13만명 남여대비 1 : 1.03</p>
주민 생활	<p>(1) 식생활</p> <p>사회의 신분의 차이없이 시장에서 자유로히 식량을 구매한다.</p>	<p>(1) 식생활</p> <p>식량배급 제도이며, 중앙공급 대상과 일반(노동)공급 대상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배급될 식량의 질과 양이 각각 상이하다.</p>

항 목	부 과		
복지 식량 배급 기준			
	배급대상 중노동자 800-1,000 일반노동자 700 일반사무원 700 당간부 800-1,000 부양가족 400 인민학교 아동 500 중학교학생 500 기술학교학생 600 대학생 750 군인 700	배급량 800-1,000 700 700 800-1,000 400 아동 500 500 600 750 700	출환산비고 6.6—8.2홉 백미, 잡곡 비는 5.7 4:6내지 5:5이며, 5.7 책임완수의 단서불 6.6—8.2 3.3 전량백미 4.1 백미, 잡곡비는4:6 내지5:5 4.1 5.0 6.1 5.7
	부 과	한 국	
	<p>(2) 의복생활 의복 배급에 있어서도 일반주민에게 배급하는 일반 배급제와 특권층에 배급하는 특배제로 구분하며 배급되는 의복의 질과 수가 상이하다. 의복만으로 사회신분을 알수 있다. 직물 1인당 소비량 18.1</p> <p>3) 주택생활 복합의 주택은 특호에서 1호까지 5개로 구분되어 집단수용생활을 시킨다. 단 특호주택은 독립주택과 정원이 있다. 신분에 따라 배정되는 주택이 결정된다.</p>	<p>(2) 의복 생활 의류는 자유로히 시장 상점에서 구입한다. 직물 1인당 소비량 56.4</p> <p>(3) 주택생활 주택은 자유로히 구입하거나 개인이 건축한다.</p>	

항 목	비 교 피	
북 피 주택 배 정		
입 주 자	구 분	주 택 규 모
일반노동자	1호 주택	방 1칸
사무원		부엌 1/2칸
공장의 과장	2호 주택	방 1칸반
시, 군기관 부장		부엌 1칸
초, 중등학교 교사		방 2칸
중앙기관의 지도원		부엌 1칸
도급기관의 부부장		창고 1/2칸
기업체 부장	3호 주택	
초, 중등학교 교장		
기업체 당 및 행정 책임자		온돌방 2칸 마루방 1칸
고급기관 부장	4호주택	창고 1/2칸 목욕탕, 변소
피뢰내가의 국장급		
대학 교수		
이민배우		
부 상	특호주택	독립주택으로 정원이
상		있다. 직위에 따라 실내
부수상		장식이 상이하다.
한 국	북 피	
(4) 거주지 이동	(4) 거주지 이동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거주이전에 대하여 방해받지 아니한다.	북피는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을 통제하고 있어 자유로히 거주지를 이동 하지 못한다.	
(5) 직업선택	(5) 직업선택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변경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북한에는 사기업이 없으며 모든 직장은 공산당의 통제하에 있어 직업은 공산당에서 배정을 한다.	
(6) 여 행	(6) 여 행	

항 목	한 국	북 피
<p>사회 제도</p>	<p>여행은 자유로히 한다.</p> <p>(7) 증명서 주민등록증 할가지 뿐이던 된다.</p> <p>(8) 관혼상제 결혼은 자유로히 하며 대상자 선택은 개인의 권리이다. 회갑은 60세로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 장례는 각개인이 자유로히 선택하여 실시한다.</p> <p>(9) 노임과 물가 1968년 2월평균 도시 근로자 소득은 2만 3천, 830원이며, 해마다 노임은 상승하고 있다. 월평균 농가소득은 1만 4천, 913원이 된다.</p>	<p>소속장의 허가없이는 사적 여행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여행은 리 인민위원회의 증명서를 휴대해야하며 양권도 휴대해야 한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양권을 제시하고 안전부에 통고한다.</p> <p>(7) 증명서 공민증, 직장신분증, 당원증, 지맹원증, 농업근로자동맹원증, 여맹원증, 군사증, 사로청맹원증, 위생통과증, 기장증 노동수첩, 적십자회원증등, 수많은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호적은 없어졌으며, 공민증이 호적을 대신한다.</p> <p>(8) 관혼 상제 결혼은 당에서 통제하며, 성분조사후 당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회갑은 60세가 아니고 90세 회갑이 권장된다, 장례는 도시에서는 자동차 1대에 여러구의 시체를 운반한다.</p> <p>(9) 노임과 물가 북피는 노동자의 노임을 화폐비율 3급—8급으로 나누어 급수제를 적용시키고 있다. 노동자의 98 : 1명 군노임은 38월(5급)—43월(6급)이다,</p>

항 목	비																						
주민 생활	<p>농민은 5구분의 급수제를 실시하고, 공수로 수첩에 작업량을 표시하며, 평균1농가 월수입은 33원이 된다,</p> <table border="1" data-bbox="279 423 932 674"> <thead> <tr> <th>구 분</th> <th>북 피 화 폐</th> <th>물 가 대 비</th> </tr> </thead> <tbody> <tr> <td>상(장관)</td> <td>230—270원</td> <td>광복 65</td> </tr> <tr> <td>국장</td> <td>120—150</td> <td>학생복 2벌</td> </tr> <tr> <td>과장</td> <td>60—80</td> <td>쇠고기 33근</td> </tr> <tr> <td>일반사무원</td> <td>38—48</td> <td>설탕 40근</td> </tr> <tr> <td>가능공</td> <td>50—70</td> <td>반모직양복 1/3값</td> </tr> <tr> <td>일반노동자</td> <td>38—43</td> <td>유흥 치마 1벌</td> </tr> </tbody> </table>		구 분	북 피 화 폐	물 가 대 비	상(장관)	230—270원	광복 65	국장	120—150	학생복 2벌	과장	60—80	쇠고기 33근	일반사무원	38—48	설탕 40근	가능공	50—70	반모직양복 1/3값	일반노동자	38—43	유흥 치마 1벌
구 분	북 피 화 폐	물 가 대 비																					
상(장관)	230—270원	광복 65																					
국장	120—150	학생복 2벌																					
과장	60—80	쇠고기 33근																					
일반사무원	38—48	설탕 40근																					
가능공	50—70	반모직양복 1/3값																					
일반노동자	38—43	유흥 치마 1벌																					
한	국	북 피																					
		<p>(10) 노력착취 운동</p> <p>노동시간은 일평균 12—16시간을 강요 한다. 노력을 착취하기 위하여 벌이는 운동으로 시간의 노임을 지불치 않는다.</p> <p>농촌에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벽별 보기 운동 허린안퍼기 운동 풀 베기 운동 풀주머니 만들기 운동 천삼뜨기 운동 냉해 방지 운동 한집 너 지기 운동 빈손 퇴치 운동 <p>공장, 기업소에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안먹기 운동 들겨대와 전투 손말리기 운동 벌따기 운동 붉은 주머니차기 운동 건설경기 대회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등이 있다. 																					

4. 교육·언론·문화·예술

항 목	한 국	북 피
<p>교육 목표</p>	<p>(1)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의 인격을 도야한다.</p> <p>(2) 자주적 생활 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비케 한다.</p> <p>(3)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던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케 한다.</p>	<p>(1)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으로 김일성을 숭배하고 공산당에 충실한 공산주의자의 양성이면</p> <p>(2) 공산독재사회에 적합한 공산주의적인 인간성을 조성하고</p> <p>(3)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을 배양한다.</p>
<p>학교 제도 및 현황</p>	<p>학제 6-3-3-4</p> <p>국민학교 6년</p> <p>중학교 3년</p> <p>고등학교 3년</p> <p>대학 4년</p> <p>대학원 2년</p>	<p>학제 4-5-2(3-4)-4</p> <p>인민학교 4년</p> <p>중학교 5년</p> <p>고등학교 2년</p> <p>대학 4-5년</p>
<p>학 자 의 자 율 성</p>	<p>(1) 학원의 자율성이 존중되며, 학원에 대한 외부간섭이 없다.</p> <p>(2) 학생은 학업이 끝난 후 사회생활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p> <p>(3) 상급학교 진학은 자유로우며 사회의 성분에 의하여 제약을 받지 않는다.</p>	<p>(1) 학생은 소련단, 사로청에 망라되어 조직생활을 하며,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다.</p> <p>(2) 학원의 자율성이 없으며 공산당은 당지도 교원을 통하여 학원을 통제 한다.</p> <p>(3) 중학교 졸업후의 상급학교 진학은 공산당의 추천에 의거 한다.</p>

항 목	한 국	북 괴
	<p>(4) 학생의 의무 노동제는 없다.</p>	<p>(4) 과거의 지주, 자본가, 부농 중농, 감리, 종교인, 월남자의 자제는 고등학교 이상 진학은 허용되지 않는다.</p> <p>(5) 학생의무 노동제가 있어 대학생은 년 12주간의 사회노동에 참가해야 한다.</p>
<p>신 문</p>	<p>(1)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p> <p>(2) 자 신문사의 독자적 기사 취급을 한다.</p> <p>(3) 신문은 대부분 민간에서 발행하고 있다.</p> <p>(4) 사설은 자 신문사에서 독자적으로 게재하여 다양하다.</p> <p>(5) 신속 정확한 보도에 치중한다.</p> <p>(6) 매일 기사를 게재, 조판하며 뉴스는 시간성을 다룬다.</p> <p>(7) 신문수는 중앙지(13은 민간신문) 14 지방지(전부 민간신문) 20 통신사(전부 민간통신) 6</p>	<p>(1) 공산당의 통제를 받으며 언론의 자유가 없다.</p> <p>(2) 신문은 모두 공산당, 인민위원회, 사료청등 기관의 기관지에 불과하다.</p> <p>(3) 당의 통일된 기사를 게재한다.</p> <p>(4) 기사는 천편일률적이다.</p> <p>(5) 당사상 교양에 치중하며 김일성 우상화에 집중한다.</p> <p>(6) 발간 수일 또는 1주일전에 50%이상의 조판이 끝나므로 그날 그날의 신문이 아니다.</p> <p>(7) 신문수는 중앙지 7 통신사 1 지방지 10</p>
<p>방 송</p>	<p>(1) 국영, 민영방송이 혼합되어 있으며 민영방송은 외부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방송한다.</p>	<p>(1) 대내방송은 북괴내 각 지역 중앙방송 위원회에서 통제하고 대외방송은 중앙당 대남사업 총국에서 통제하며 공산당에서 독점방송하고 있다.</p>

항 목	한 국	북 괴
방 송	<p>(2) 뉴스보도, 연예오락, 생활 교양강좌 등 대중이 즐기는 다양한 프로이다.</p> <p>라디오 프로중 오락 48%</p> <p>텔레비 프로중 오락 48%</p> <p>(3) 국, 민영 라디오 방송국 49 국, 민영 텔레비 방송국 12 라디오 245만대 텔레비 30만대</p> <p>(4) 트랜지스터, 라디오 압수나 다이알 고정은 없다.</p>	<p>(2) 김일성의 우상화 공산주의 교화, 공산당의 업적찬양, 한국에 대한 악선전등 친편 일울적인 프로이다.</p> <p>라디오프로중 김일성 우상화 69%</p> <p>텔레비프로중 김일성우 상화 23%</p> <p>공산당 찬양 29%</p> <p>(3) 국영 라디오 방송국 12 국영 텔레비 방송국 1 라디오 18만 7천대 텔레비 4천대</p> <p>(4) 1962년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압수하고, 다이알을 고정시켜 남한 방송을 청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p>

5. 군 사

항 목	한 국	북 괴
군사이념	<p>(1) 국군은 대한민국의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을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p> <p>(2) 군은 불편부당,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며 국토방위에 전념한다.</p>	<p>(1) 북괴군은 공산당의 혁명수단이며 인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이다.</p> <p>(2) 전한국의 무력적화 통일을 기하는 공산당의 권위이며 무장력이다.</p>

항 목	한 국	북 피
	(3)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평화 를 애호한다.	(3) 공산주의 세계혁명의 극동 에서의 첨병이다.
군사 제도	<p>(1) 군의 통수권은 대통령에 있 으며 군통솔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을 가진다,</p> <p>(2) 국방장관은 군정을 장악하 는 외에 군령에 관해 대통령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p> <p>(3)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한국통란후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되었다.</p> <p>(4) 육· 해· (해병대포함)공의 3개 군종으로 구분하여 완전히 3군분립주의에 의해 다양한 각 군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구 성되어있다.</p> <p>(5) 3군 구성은 육군 89% 해군 2.7% 공군 4.1% 해병대 4.2 %의 비율로 되어 있다.</p>	<p>(1) 통수권은 형식상 최고인민 회의에 속하나 실질적으로는 내각수상 김일성이 장악하고 있다.</p> <p>(2) 군을 당에 종속시키기 위해 군내부에 강력한 당조직을 가 진다.</p> <p>(3) 전시에는 국가주권을 집중 장악하는 군사위원회 위원 장과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김 일성이 임명되었다.</p> <p>(4) 육· 해· 공의 3개 군종으로 구분되나 민족보위성 부상이 총참모장을 겸직하여 3군을 직 접 관장하는 단일, 통합주의로 서 보병중심의 육군을 해·공 군이 엄호하는 형태로 되어 있 다.</p> <p>(5) 구성은 육군 88.5% 해군 2.4% 공군 9.1%의 비율로 되 어있다.</p>

V. 비 판 편

제 1 절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공산주의란 말은 영어의 Communism을 번역한 말이며 어원은 라틴어의 Communis로서 공동적(共同的) 또는 공동사회적이란 뜻이다. 이 말이 오늘과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랜 옛날은 아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슈타인의 저서 “현대 프랑스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1842년간)에서부터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거기에서 사용된 뜻은 주로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에 대한 공산재산제도(共產財産制度)를 의미하는 말로써 쓰이었다.

그후 마르크스 및 엥겔스가 소수의 동지를 규합하여 1840년대 말에 정치운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활동을 시작하였을 때 그들은 사회주의란 말을 피하고 종래의 전통과는 인연이 없고 또한 그것과는 전연 별개의 이론 및 운동을 의미하며 더불어 알기 쉬운 내용으로서 공산주의란 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공산주의자 동맹”(1847년 창립) 또는 “공산당 선언”(1848년간)이 명칭을 붙이게 된 것이다. 그들은 “공산당 선언”(1888년 영문판 서문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대비하여 ‘사회주의는 부르조아지의 운동이었으며 공산주의는 노동계급의 운동이었다.

이처럼 마르크스 및 엥겔스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계급을 구별하여 자본가 계급이 현존사회를 뜯어고치려는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이고 노동자계급이 현존사회를 개혁하려는 운동은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규정지었다.

도달점으로서의 공산주의는 ‘각자가 능력에 따라 벌고 그 노동에 따라 받는, 낮은 사회주의 단계에 대하여 ‘각자가 그 능력에 따라 벌고 그 필요에 따라 받는’ 높은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재산소유관계로 표시하면 생산재(生産財)는 공유로 하고 소비재(消費財)는 개인의 사유를 인정하는 단계는 사회주의 단계고 생산재나 소비재할 것 없이 공유로 하는 높은 단계를 공산주의 단계로 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마르크스·엥겔스는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주의는 낮은 단계, 공산주의는 높은 단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1840년대로 부터 1872년 사이에는 공산주의란 말은 이와같은 의미에서 사용

되었다. 그후 1872년부터 1917년 사이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란 두 가지 말은 같은 말로 간주되어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공산주의란 말은 소멸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17년의 러시아혁명에서 볼셰비키의 권력장악과 더불어 이 두가지 말 사이의 구별이 부활되고 그것이 더욱 날카롭게 대립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공산주의는 원시(原始)마르크스주의를 부활한 레닌·스탈린에 의하여 수정·발전된 이론, 즉 동구라파형 마르크스주의이다.

마르크스·엥겔스에 의한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 생전에는 그다지 세상에서 인장받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사망한 후 독일에 있어서 카우츠키와 베른슈타인의 두 제자에 의하여 해설됨으로써 마르크스주의가 사상계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지도원리로서 사회주의 운동을 움직인 것은 그들의 공적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른슈타인은 카우츠키와 견해를 달리 함으로써 카우츠키파는 정통파(正統派)마르크스주의로 분열하였지만 양파는 후년에 다같이 마르크스·엥겔스의 만년에 있어서의 의회주의(議會主義)·평화혁명공정 사상을 취하고 폭력혁명주의(暴力革命主義)를 채택치 않았으므로 오늘날의 사회민주주의의 선구자가 되었다.

정통파로부터는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서구공산주의(西歐共產主義)가 출현하여 한 때 세력을 얻어 독일 공산당의 선구인 스파르타쿠스단을 창설하였지만 1919년 1월 봉기에 실패한 후 쇠퇴하였다.

한편 플레하노프등에 의하여 러시아에서 전파되기 시작하여 러시아에서의 마르크스주의 정당인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후년 즉 1918년에 ‘러시아공산당’으로 개칭) 내부에도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파와 폭력혁명주의를 내세우는 두파로 분열되어 전자는 마르토프, 후자는 레닌을 지도자로서 논쟁하였지만 제2차 당대회 때 당원을 소수정예의 직업혁명가로서 구성하느냐 다수의 노·농·지식분자등 일반대중으로 하느냐를 놓고 논쟁끝에 투표로서 결정한 결과 레닌파가 다수를 얻어 마르토프파를 제압하였다. 이 때부터 레닌등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주장하는 파를 볼셰비(키다수파), 의회주의(議會主義)를 취하는 마르토프파를 멘셰비키(소수파)로 부르게 된 것이다. 물론 러시아혁명의 주도권은 볼셰비키의 손에 기착하였으므로 그 사상을 볼셰비즘이라고 부르고 있다. 레닌은 이 러시아혁명의 체험에

따라 마르크스의 추상적인 정치이론에 대하여 러시아의 국정에 맞고 자기의 체험에 의거하여 독자적인 해석과 설명을 가하여 수정하였으므로 이것이 소련 공산당의 이론이 되었으며, 오늘날 소위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그것이다. 그후 레닌의 자칭후계자 스탈린에 의하여 이 이론이 일국사회주의 이론(一國社會主義理論)으로 진정되고 오늘날의 공산주의, 스탈린주의가 형성된 것이다.

현대 공산주의 운동은 1903년에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당이 볼셰비키와 멘셰비키로 분열된 때 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형태를 취한 것은 1917년의 10월 혁명후, 특히 1919년 3월 코민테른(國際共產主義 인터내셔널)이 결성되어서 부터이다.

그 공산주의 운동의 특징은

첫째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전위임을 자칭하는 공산당(노동당·근로자당·인민혁명당·사회통일당으로 호칭할때도 있음)이 소수정예의 직업혁명가를 중심으로 비합법적 조직을 포함한 강력한 조직망을 가지고 운동의 선두에 선다는 점.

둘째 노동자와 농민과의 동맹에 의한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독재가 혁명의 대원칙으로서 강조된다는 점.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조국, 사회주의의 조국으로서의 소련을 옹호하고 방위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공동의무로 된다는 점 등에 있다.

이상 세 가지점을 통하여 공산주의 운동은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 운동과 가장 날카롭게 대립한다.

볼셰비키혁명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50여년 브레즈네프를 제1서기로 하는 약 1,천만명의 당원을 가진 소련공산당에 끌려 가고있는 2억3천만의 소련 국민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오늘날 동·서 양 진영의 한쪽 즉 공산진영의 패자로서 굳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오늘날까지 공산당,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소련공산당을 그 모범으로 삼으며 그것에 따르고 그것과 기맥을 통하는 것, 다시 말해서 볼셰비키계통의 마르크스주의를 의미하며 공산주의라고 하면 볼셰비즘 즉 볼셰비키가 해석한 러시아적 마르크스주의, 즉 레닌·스탈린주의를 말하며 그 의외의 마르크스주의자 및 마르크스주의와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 금일의 통념으로 되어 있다.

사회주의의 실현방법으로서 어디까지나 평화적 방법을 멸시하며 민주주의

특히 의회민주주의를 배격하고 오로지 폭력혁명 일변도를 철저히 주장하던 소련공산당이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이탈리·일본등에서 나치즘, 파시즘, 군국주의 제파란 예기치 않았던 사태에 직면하자 여기에 대한 궁여지책으로서 종전의 공식적 혁명전술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신중한 검토를 가한 후 그 비유난성·독선성·비타협성·편협성을 고치고 나치즘, 파시즘 타도에 소용되는 온갖 수단을 구사하였으며, 심지어 나치즘, 파시즘 타도를 위하여서는 어떤 당파와도 손잡는 인민전선 전술을 채택한 것은 공산주의 전술상 획기적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한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 공산당이 지금까지 경멸하던 민주주의, 특히 의회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관용수단이었던 혁명적 방법의 부족한 점, 불완전한 것을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며 결코 폭력혁명이나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주장하는 근본 정신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민주주의 의회 정치를 사회주의 실현의 유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오로지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 사회주의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려고 하는 소위 사회민주주의, 혹은 민주사회주의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있어서 서구의 제2인태내셔널에 속한 사회주의자는 공산주의에 반대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코 있었지만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는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단지 다른 점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사회주의 운동에서 독일 사회민주당이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관계상 수정마르크스주의를 이데올로기로서 견지하는 공산주의에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휴머니즘을 사회주의의 기초로 하는 점에 있다. 즉 그것은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붕괴에 따라 필연적으로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부당한 경제력 및 정치력의 지배로 부터의 인간성 해방이란 목적의식적인 노력에 의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고 그 실현수단으로서 의회주의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정권을 장악한 후에도 언론·집회·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며 반대당의 비판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계속 유지한다. 그와 같은 의미의 자유 속에서 만이 인간성의 해방이란 사회주의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의 구상으로서도 산업의 국유화를 만능약으로 생각지 않으며 국유화에 흔히 따르게 마련인 권력의 중앙집권화, 비능률화를 경계하고 사회보장의 확충에 의한 국민의 최저 생활을 유지하면서 점차 산업의 사회화 부분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상과 같이 민주사회주의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는 공산당처럼 사회변혁 방법상의 한 편승수단이 아니라 실로 유효적절한 유일 불가결의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각국 사회민주당의 태도는 어느 것이나 적극적·몰입적인데 반하여 공산당은 딱 편승적·소극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영국·북구라파를 위시하여 벨기에·홀란드·서독·프랑스의 사회주의 정당은 어느 것이나 상기의 민주사회주의 권리를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뜻에서 사회주의 실현방법에 대한 공산주의 정당과 민주사회주의 정당의 태도의 근본적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요컨대 마르크스·레닌주의 즉 현대공산주의는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불가결을 움직일 수 없는 철칙으로 삼는다. 어디까지나 전투적, 파괴적이어서 민주주의·개량주의·의회주의의 가치를 조소·매도한다. 자본제사회의 즉각적 그리고 전면적 전복을 기하여 폭력·무력에 의한 직접 행동과 유혈도 사양치 않는다.

이상으로서 대체로 공산주의란 무엇이며, 민주사회주의와의 차이는 무엇이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의의 및 그 상호의 내적관련이 어느 정도 해명되었다고 생각되므로 다음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세계관·경제이론·정치이론·전략전술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설명 비판키로 한다.

2. 공산주의 철학과 그 비판

「변증법적 유물론(辯證法的 唯物論)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세계관이다. 이 세계관을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연현상에 대한 그 태도, 자연현상의 연구방법 그 현상들의 인식방법이 변증법적이며, 자연현상의 해석, 자연현상의 이해 및 이론이 유물론적인 때문이다」라고 스탈린은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따라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유물론을 철저히 규명하던 변증법적으로 되며 변증법을 철저히 심화하면 유물론으로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여기에 우선 변증법적 유물론의 가장 기본적 전체인 유물론부터 설명을 시작하여 그들의 인식론인 반영모사설(反映模寫說), 유물변증법, 사적유물론, 계급 투쟁설까지 포함하여 분석 비판키로 한다.

① 유물론과 그 비판

마르크스·테닌주의의 유물론은 자연, 즉 물질이 근원적이며 정신이나 사유(思惟)는 파생적이라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즉 의식에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물(客觀的實在物)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그들에 의하여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물질세계가 객관적 실재라는 것이 하나의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공리로서 전제되어 있을 따름이다. 이것은 절대이념 이성을 자명한 근원적 실재로 정립해 놓고 그 체계를 수립한 헤겔의 관념론과 그 방법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며, 따라서 왜 물질이 일차적이며 근원적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유물론은 관념론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자연이 의적 세계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인식하는 주관을 떠나서는 그 존재 여하에 대한 유무의 단언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거기에 물질적 객관적 등 정신적에 대립되는 하나의 경험적 규정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에 대한 유라고 규정하고 정신적에 대한 물질적, 객관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또한 결과, 파생적인 물질이라고 규정하는 이상, 그것은 이미 인식을 떠난 인식 이전의 것이 아니라 인식에 따르는 인식 이후의 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의식을 규정한 객관적 실재는 그 자체가 벌써 의식되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그러한 의식된 실재의 그 의식은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 것인가? 여기에 철학이 해결지어야 할 근본 문제가 있다. 이것을 간과하고 문제로 삼지 않은데 온갖 유물론적 철학의 근본 결함이 있는 것이다. 인식은 실재의 영상이라고 한다면 인식은 실재의 후에 성립할 터인데 인식된 실재는 이미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후에 성립하는 인식을 먼저 예정하는 것은 전후전도 어법을 표시하는 것이다. 후에 성립되는 인식을 먼저 예정하지 않으면 유물론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물론자는 설명하기에 고심하는 것이다. 간단히 전후를 전도한다면 처음부터 곤란한 문제를 말살함과 마찬가지로. 이상으로서 물질이 근원적인가 정신이 근원적인가의 문제는 명백히 되었다고 생각 된다.

② 반영모사설과 그 비판

마르크스에 의하면 인식은 실재물의 반영모상이라고 하였다. 이 때에 반영모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확실치 않지만 생각컨대 인식론(認識論)사상에 있어서의 소박한 모사설로서 밖에 볼 수 없다. 추측컨대 그들은 유물론을 취하면 인식론에 있어서 반영모사설이 당연히 귀결되는 것으로 속단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유물론에 대한 오해다. 적어도 칸트 이후에 나온 인식론으로서 칸트의 인식론을 격파하고 칸트의 필요로 하는 인식가능의 조건을 자신의 입장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다. 반영모사설에 따른다면 실재물의 존재만으로서 충족하다고 하든지, 혹은 그것은 불가결의 최소한도의 조건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관념론에 대립하는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전자를 채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의 인식은 외부세계로부터 반영모사된 감각, 경험만으로는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단편적이고 조각한 소재에 불과한 감각(感覺)을 수집, 정리, 통일하여 일정한 목적에 따라 인식의로 구성하는 창조적 지능을 가진 선천적능력(先天的能力), 즉 아프리오리(apriori)의 활동이 없이는 인식은 성립되지 못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모사설적 인식론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 비판은 그들이 인간의 선천적 정신작용을 부인하는 데 있다. 칸트는 인식성립의 기본 조건으로서 감각을 감각하는 지각(知覺)이나 감각을 종합하는 통각(統覺)등 감각으로부터 성립되지 않는 즉 선천적인 것을 논증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외부세계의 실재물, 경험, 감각등은 인식성립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한 조건은 못 된다. 그러므로 칸트는 우리들의 ‘인식은 경험과 더불어 생긴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경험에서 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백히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이다. 사람의 뇌수를 거울처럼 보고 객관적 실재물이 기계적으로 이에 반영된 모상이 인식이라고 본 반영 모사설은 칸트 이전의 소박한 인식론이다.

그런데 만일 반영모사설이 진리라고 한다면 자연은 유사 이래 변증법적 발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천년간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사고방식이 인류를 지배하여 왔고 변증법적 사고방식은 헤겔에 이르러 비로소 반영모사로서 인식이 조직화되었는가? 또한 헤겔이 변증법을 발견한 이후에도 많은

철학자, 과학자들이 아직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의 아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반영모사설은 사실의 문제와 권리의 문제를 혼돈하는데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③ 유물변증법과 그 비판

마르크스의 모사설 즉 인식론에서는 한 인식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설명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물질적인 것이 정신적인 것의 전환은 유물변증법적인 움직임에 의하여 행하여진다고 하므로써 최후의 근거로 하려한다.

특히 유물변증법에 있어서 운동·발전·변화·진화라는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같은 현상은 동일한 주체에 대하여 즉 물체의 동일성(同一性)을 전제로 하는 변화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이것과 비교하므로써 비로소 변화가 있게 되는것이다. 그러면 동일성의 개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주에 있는 모든것은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물질로서 변화하지 않는 것이 만들어질 이가 없다. 운동, 발전의 인식은 운동·발전의 과정에 있지 않는 따라서 그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란 의식을 전제로 함으로서만이 가능하다. 운동·발전의 과정에 있지않고 이것을 객관시할 수 있는 의식이 없이는 일체의 생성·변화·소멸의 인식은 불가능하며 그것은 운동이든지 발전이라고 규정짓지 못한다. 따라서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는' 유물론적 지반위에 선 유물변증법 으로서는 그런 의식이 허용되지 않는다. 유물변증법은 자기의 유물론을 강조 하면 할수록 변증법 성립의 지반은 붕괴케 된다. 그러므로 변증법은 본래 관념론적 기초위에서만이 성립된다. 그리고 유물변증법에 있어서는 사물은 모순의 지양에 의하여 발전한다고 한다. 그러나 모순은 사유에 관하여서 논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헤겔은 모든 사물이 '이데(Idee)의 구현이기 때문에 모순으로 인하여 발전한다고' 함은 지당한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데'를 방기한 유물론자가 모순에 의한 발전을 운운하는 것은 단지 비유적인 말로서 밖에 취하게 되지 않는다. 우리는 엄격한 의미에서 유물변증법이란 술어자체가 과연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의심하는 바이다. 적어도 이 논리는 논자의 편리어 하에 따라 아무렇게도 남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과 증오, 전쟁과 평화등을

제멋대로 긍정과 부정이라고 함으로서 자기들이 좋은대로 결론을 꺼낼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잘 사용하는 '부정의 부정'이라던가 '양으로부터 질에의 전환'이라고 하는것 등의 예도 마찬가지다.

또한 자연변증법에서는 실험(實驗)과 실천(實踐)을 동일시하고 있다. 이것도 사적유물론으로 부터의 비유입에 불과하다. 실험은 동일조건하에서 되풀이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사회적 실천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상으로서 알다싶이 그들의 주장은 어느것이나 아전인수격이며 서로 관련시켜 맞춤지 한때는 변증법의 명목하에 이것을 맞추며, 양으로부터 질에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음직한 곳에는 마찬가지로 변증법의 명목하에 이것을 적용하며, 모순처럼 보이는 곳에는 대립의 통일이란 범주를 내 세우고 있을 따름이다.

요컨대 유물변증법은 단지 사변적으로 구성된 울타리를 억지로 현실에 맞추어 불과하다. 따라서 유물변증법을 현실의 논리라고 생각함은 큰 오류라고 안할 수 없다.

④ 유물사관과 그 비판

유물사관의 기본명제에 의하면 '인간의 의지로부터 독립된 일정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며 인간의 의식이 사회적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존재를 변혁하지 않는 한 의식은 변혁되지 않은 것으로 된다. 또한 의식이 존재를 변혁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물사관에 입각하는 자가 존재를 동일상태에 방임하고 의식을 변혁하려고 선전에 광분하며 의식을 존재로 한 존재의 변혁을 기도하고 있는것은 명백히 유물사관과 모순된다고 하지않으면 안된다.

다음에 유물사관에 입각하면 사회주의 운동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마르크스·엔겔스는 「공산당 선언」 마지막에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고 외치고 있다. 이미 '단결하라'라고 함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치있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당한 수단인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단결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가치없는 것이라면 '단결하라'라고 함은 무의미하다. 여기에 있어서 사회주의자에게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목적에 대한 정당한 수단이 무엇인가에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의 노력하는 그 근거는 윤리적

근거가 아니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배격하는 윤리적핵심에 기초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사회형태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그 사회에 있어서 더 좋은 더 정당한 생활이 보장된다는 핵심 이외에 그것의 정당화는 되지 않는다. 만약 자본주의의 고도발달은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의 단결노력을 환기하여 이 노력이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절대적인 인과의 연쇄로서 가능한 유일의 것이라면 그것은 꼭 일식·월식(日蝕·月蝕)의 출현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장하려고 하나의 조합을 만들고 운동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필연론의 필연적귀결은 속수방관 이외에 있을 수 없다.

비록 자본주의사회가 필연적으로 붕괴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논증되었다 하여도 하나의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의 인식으로부터 곧 인간은 그 현상의 실현을 향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범의 성립이 도출되지 않는 것은 꼭 의사가 이 환자는 오늘중에 사망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였을 때 그 병자의 사망을 목적으로 그것을 촉진 조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유가 성립되지 않음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공산주의자들의 필연의 인식과 규범의 인식과의 관념상의 혼돈이 잠재하고 있다.

⑤ 계급투쟁설과 그 비판

마르크스·엥겔스는 원시 공산시대를 제외한 「종래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라고 하였다. 사실 인류 사상에 계급의 대립과 투쟁이 일어났으며 오늘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한 빈부의 차가 극심하고 대중생활의 안정과 희망이 없는 곳에서는 대립·투쟁을 촉진할 경향이 있으며, 계급투쟁이 큰 역할을 다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종래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다. 동양의 전고대사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게 되는가? 인도의 마누의 법정에 의하면 수드라(奴隸階級)는 브라만(僧侶階級)을 위하여 일신을 희생하며 그가 먹던 나머지와 남은 의복의 혜택을 받으면서 브라만의 명에 따라 그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최량의 직업이었다. 여기에는 명백히 계급착취의 사실은 있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인도인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근년에 있어서 조차 인도의 각처에서 발생한 힌두교도와 모슬렘과의 투쟁

같은 것. 미국에 있어서의 흑·백인 투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아무리 대답한 공산주의자라 할지라도 이 사건들을 생산력과 생산관계와의 모순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고대에 있어서 앗시리아, 바빌로니아, 이집트, 페르시아등의 사이에서의 국민적 투쟁을 읽는다. 오늘날의 아랍과 이스라엘간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다. 또 우리는 위대한 정복자가 도입한 정치적 및 사회적 변혁에 관한 것을 읽는다. 그러나 그 당시의 계급 투쟁에 관해서는 그의 그 혼적 조차 발견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민중은 언제든지 그 질곡(桎梏)을 묵묵히 견디어 가면서 받아들인 피압박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든 국민간에 있어서 문화의 발달은 어떠한 것인가, 그후 사회발전의 주요 동인으로서는 그리이스와 페르시아간, 그리이스와 마케토니아간, 그리이스와 로마간, 로마와 그 주변의 제민족, 특히 카르다고간의 국민적 투쟁에 부딪친다. 그리이스와 로마가 서양의 전 인문발전에 미친 영향은 무한하며 이것은 도저히 계급투쟁으로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계급의 존재는 사회전체로서 협동, 연체를 형성하고 있는 한 필연적으로 계급투쟁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계급조성은 필연적으로 계급투쟁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역사를 해석한다면 꼭 가족의 역사를 아버지과 어머니 형제와 자매와의 때립 혹은 투쟁으로서 설명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부간에 때로는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여 부부싸움이 가족의 본질적 현상은 아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부싸움이 있는 것을 보고 곧 가족의 역사는 부부투쟁의 역사라고 단정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나 그 독단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때때로 계급투쟁은 일어났으며 금일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사회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 사실은 아니며 도리어 사회의 본질에 위배되는 필연적 현상에 불과하다. 사회의 본질은 공동적·심리적·문화적 관계이며 계급은 하나의 국민으로서 전체에 결합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의 본질이며 꼭 건강이 신체에서 정상적 본질적인 것이며 병이 비정상적 비본질적인 것과 마찬가지다.

3. 공산주의 경제학설과 그 비판

마르크스·엥겔스가 현존 자본주의 사회에의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사회주

의였으나 그는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라고 하지않고 그것은 자연필연적(自然必然的)으로 폐지된다고 주장하였다.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사회도 넘어선다고 주장한 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 현존사회의 해부는 그대로 현존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된다. 이것이 과학적 사회주의의 특이한 점이다.

전술한 역사발전의 법칙을 연구한 마르크스에게는 현존 자본주의가 어떤 발전과정에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다음에 남은 과제였다. 사회혁명을 재래케 하는 것은 의식에 있지않고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으로 인한 생산양식에 있다고 하는 유물사관에 입각하는 한 사회 발전과정을 의식에 있어서 보지않고 경제에 있어서 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그는 자본주의 경제의 해부를 기도하였다.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몰락한다고 하는 그는 그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론의 두개지주로서 노동가치설(勞動價値說)과 잉여가치설(剩餘價値說)을 세웠으며 여기에 부가하여 산업예비군설(產業豫備軍說)과 상품과잉론(商品過剩論)을 내세워 가지고 자본주의 몰락설을 구성하였다. 다음에 그 개개의 이론을 해명하고 비판키로 한다.

① 노동가치설과 그 비판

마르크스에 의하면 가치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면 생산에 소비된 노동이며 그 양은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양이며 일정한 조건하에 있어서 그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한다. 즉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으로 가치의 척도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노동가치설에 대한 최초의 비판은 교환되는 상품사이에 공통한 것으로 노동을 깎집어 내어 상품을 노동의 생산물로 보는 점에 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사용가치는 각각 특정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특수 성질의 것이므로 상품으로는 공통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며 이같은 이유에서 상품으로부터 사용가치를 추상하면 그것은 단지 추상적 인간노동의 소산 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교환되는 상품간에 공통한 것은 노동일 수 있음과 더불어 사용가치 또는 효용(效用)일 수도 있다. 사용가치에는 질적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노동에도 질적차이가 있다. 즉 농업노동, 직물노동, 건축노동등이라고 하는 것처럼 각각 질적으로 다른 노동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상품의 가치를 설명하는데 사용가치로서 하는 것이 좋은지, 노동으로서 하는 것이

옳은지 비교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공통의 성능을 가진 효용으로서 개괄하는 편이 옳다. 그 이유는 노동가치론은 공동품, 오래 저장될 포도주, 노동을 전연 가하지 않은 금광, 탄전, 광천, 유전, 수력, 산림상가 또는 택지로서 적당한 토지, 비료로 사용되는 오분등의 상품가치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용가치로서의 가치론은 생산에 의하여 임의로 증가할 수 있는 재화까지 포함하여 일체 재화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은 희소재(稀少財)의 가치를 설명하지 못한다. 노동은 확실히 가치를 만드는 하나의 요소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일정한 노동량이 지출되었다는 이유에만 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유효히 즉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끔 지출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능이 혼란이던지 수업에 지배된다면 힐화아당의 설명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든지 정도가 너무나 많다. 아니 그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노동이질(勞動異質)에 따르는 노동가치설의 곤란은 극복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요컨대 억지로 노동가치설을 성립시키는 최후의 근거는 결국 상품의 가치는 노동자의 피땀의 결정이므로 정당하다는 윤리적 요청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 요청에 입각하는 한 노동가치설은 도처에 모순과 오류가 있더라도 엄연히 유지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정의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감정에 호소하는 바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윤리적 요청에 기준을 둔다면 마르크스 경제이론이 이거하는 사적유물론과 배치된다. 즉 사적유물론은 단지 역사적 필연 그것도 물질적인 것에 규정되는 필연만을 주장하며 정의나, 도덕을 판념적인 것이라고 하여 배격하기 때문이다. 노동가치설은 공평히 말하여 오늘날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국시로 하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경제이론으로서 이미 과학성을 상실하고 매몰된 뒤떨어진 이론에 불과하다. 오늘날에는 단지 어떤 정치적 의의만 가질 뿐이며, 따라서 이 학설을 신봉하는 자는 어떤 정치적 주장과 결부된 일부학자든지, 공산주의자 혹은 충실한 마르크스·레닌주의 동조자들 뿐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② 잉여가치설과 그 비판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에게 노동력을 매자한, 즉 임금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노동자가 그의 생활필수품의 재생산에 필요한 정도를 넣어서 노동시키면

여기에 소비된 의·식·주(衣食住) 용품 및 소모된 생산수단의 보상이므로 새로이 가치가 만들어 진다. 이것이 잉여가치이며 자본가가 생산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이윤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잉여가치설에 대하여 비판함에 있어서 주목되는 점이 두가지 있다. 하나는 노동임금의 결정에 관하여서이며 다른 하나는 착취(搾取)의 관점에 관하여서이다.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참다운 의미에서 노임학설이 결됨되어 있다. 노임은 노동자의 역사적인 생활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고있다. 이것은 노동력의 가치를 소여(所與)의 것으로서 전제할 따름이며 그 자체안에 노임의 변동을 설명하는 원리를 포함한다고는 하기 어렵다. 즉 그는 두가지 사실 내지 대세를 통찰하고 있지 않다.

첫째로 노임은 대세로서 점차 상승을 표시하고 있다. 적어도 생산력의 상승과 거의 보조를 같이하고 상승하였다. 어떤 시기에 있어서는 실업의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이라도 실질적인 상승을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가 대세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경향이기도 하다.

둘째로 이 노임 상승의 대세에 따라 실업이 현저하게 상승하였다. 즉 제1차 세계대전후에 있어서 구조적실업이란 것은 노임이 탄력성을 잃고 적응의 움직임 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란 주장은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움직임은 마르크스의 노임학설이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마르크스학설이 마르크스주의적 노동운동에 의하여 제한되고,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혁명주의는 자본주의 몰락론에 의하여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몰락이론은 노동자계급의 빈곤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요컨대 이것은 마르크스의 노임학설의 원리결됨에 기인한다.

가치가 노동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자체에 있음으로서 사람은 그것을 위하여 노동함을 싫어하지 않는다는데 진실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는 노동을 투입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치의 유무 대소는 물건이 인간에게 쓸모 있느냐, 없느냐, 욕망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그러면 물건의 가치는 이에 대한 수요의 강약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가? 마르크스는 어떤때에는 이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같은 노동의 소산인 상품이라도 이에 대하여 수요의 유무 대소에 따라 그 가치도 여러가지로 되

어야 할 것을 인정하여도 좋은지? 만약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는 상품가치는 그 노동비용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입장을 포기하고, 가치는 수요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상식으로 퇴각한 것으로 될 것이다. 이 이론을 노동자가 노임에 대하여 급부하는 노동의 가치에 적용하면 착취라는 말의 설명이 성립되지 않는다. 대체로 착취는 부등가교환(不等價交換)이 행하는 곳에 성립된다. 즉 노동자가 자본가로부터 받은 노임이 노동자가 급부하는 노동보다도 가치가 적다고 함에 있다. 마르크스가 이윤은 지불하지 않는 노임이라고 말함은 이 의미에서다. 그러나 이 착취이론은 엄격한 노동가치법칙의 성립에 의하여서만이 가능하다. 즉 앞에서 논술한바와 같이 상품의 가치는 생산에 소비되는 노동량이 아니고 이에 대한 수요의 매소·강약 여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인정하여 버리면 부등가교환이란 말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착취라는 말은 있을 수 없게 된다.

③ 자본주의 붕괴론과 그 비판

노동가치설 및 그 개론이라고 할 잉여가치설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기초 이론이며 그 정학적(靜學的)부분을 형성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붕괴론은 그의 기초이론 위에 구축된 것이며 이 이론은 자본주의의 발달 또는 성숙이론의 결론으로서 구성된다. 마르크스는 유물사관에서 역사적 발전은 모두 생산력의 발전에 의하여 일어나며 자본주의에 관하여 말하기를 자본주의를 붕괴시키고 공산주의의 도래를 필연케 하는 것은 생산력의 발전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생산력의 발전이 자본주의를 붕괴케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자본주의적 생산방법의 발달은 고용될 수 없는, 노동자와 판매될 수 없는 상품 즉 자본주의 생산방법 자체에 대하여 과잉 노동자와 과잉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서 스스로 그 존속을 불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잉인구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실업자 즉 산업여비군에 불과함을 지적한 것은 마르크스의 혜안이다. 그러나 이 과잉인구 문제는 과연 실업문제에 시종하는가 하면 물론 그렇지 않다. 마르크스가 실업문제 이외에 인구문제는 없다고 한 것은 탈사스와 정반대 방향에 나간 과장의 논단이다. 탈사스의 인구론이 인기를 얻은 것은 당파적 이해에도 있겠지만 마르크스가 보

편적인 인구법칙은 없다고 한 것도 당파적 이해에 움직인 주장이다. 현존사회에서의 궁핍이 식량 대 인구의 불균형으로부터 일어남을 승인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정치목적으로부터 보아서 불리한 것이다. 물론 인구에 대한 충분한 식량이 있어도 실업상태가 빈곤을 생기게 함은 뻔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설사 실업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하여도 그때에는 언제든지 반드시 인구를 양육할 충분한 식량이 있다고는 하지 못한다.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면 실업자의 유무 대소를 노동수요측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은 소위 가변자본액(可變資本額)이다. 그러나 노동자 취업(就業)의 가부는 단지 가변자본액에만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일면을 결정하는 것은 엄연히 인구다. 가령 가변자본액을 일정한 것으로 하면 취업기회의 대소는 역시 크게 인구증가의 지속에 의하여 좌우된다. 마르크스는 자본축적에 수반하는 가변자본의 상대적 감소를 역설하였지만 이것은 단지 그때문에 실업자가 인구증가보다 빠른 속도로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데 그치며 결단코 인구 대 식량관계가 노동자의 상태에 무관계란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인구증가의 속도 및 인간의 노력에 대한 자연의 반응 여하는 항상 인류의 복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구국문제다.

다음에 자본축적은 그와 거의 비례하여 가변자본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자본성의 변화는 이것을 감소시킨다. 2자의 종합적 성과로서 가변자본, 따라서 고용인구는 약간 증가한다. 그러나 노동인구의 증가는 이것보다도 급속하므로 거기에 과잉인구 즉 실업이 생긴다. 그것은 경기 상승에 의하여 흡수된다고 하여도 공황(恐慌)에 의하여 딱 증가함과 더불어 생산확장에 따라 확대한다. 이 법칙은 과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장래도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직인구의 증가보다도 인구의 증가가 급속하다는 필연성은 논증되어 있지 않다. 금일까지의 현실에 관하여서 말하면 자본주의 제국의 실업율은 저하하였다. 노동자의 생활상황은 서서히 개선되었으며 따라서 빈곤의 강화는 전연 인정되지 않는다. 증산계급은 반드시 몰락한다라고 하지 못하며 기업의 집중이 있어도 주주의 분산이 있으며 새로운 증산계급과 중등계급의 증가를 보이기에 이르렀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의 자본가적 축적법칙처럼 두 계급에만의 분화도 또한 노동자계급의 빈곤증대도 없다. 그리고 인구증가의 속도는 자본주의 자체의 성질에 의하여 딱 제한된다. 자본주의가 딱 진전된 나라에 있어서는 출생율은 저하되고 있다. 물론 사망율도 저하되고 있지만 그것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다. 즉 인간의 생명의 한도는 한정되어 있다. 누구나 80, 90까지 살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망율의 저하에는 한도가 있다. 그러나 출생율의 저하는 한도가 없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상당한 정도로 그 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 오늘날 선진문화국에 있어서 자기 또는 가족의 생활정도를 사회적으로 높이 유지하기 위하여 산아제한을 함으로서 그것이 행하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적 노력을 하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 자체 문명이다. 이같은 현상은 논의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기술의 발달에 의한 자본구성의 변화는 가변자본의 감소율을 띄 적게 한다. 그 위에 더욱 독점의 보급은 생산방법의 개편을 저지한다. 따라서 과잉인구의 형성은 점점 약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자본의 축적 즉 기계의 인간배제는 어떤 곳에서 가장 급속히 행하여지는가하면 그것은 물론 농업에서가 아니라 공업부문에 있어서 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만약 마르크스의 법칙이 정당한 것이라면 상대적 과잉인구는 농촌보다 도시에서 조출되어 그 세력이 더욱 심하게 되던 기압이 낮은 곳에 공기가 흐르는 것처럼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인구가 끼꾸로 흐를 터인데 아무리 우둔한 자의 눈에도 결단코 간파하지 못할 사실은 어느나라에서든지 볼 수 있는 현상은 농민의 도시유입 대세다. 개개의 공업에 있어서 노동자가 기계채용 때문에 배제된다는 사실은 물론 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일방에서 배제된 노동자는 타방에서 다른 직업에 흡수되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전인구의 증가보다 훨씬 급속한 도시인구의 증가가 계속하여 행하여 질 리 만무하다. 이 현저한 사실은 마르크스와 정반대의 결론을 가져오게 된다. 즉 기계의 사용은 노동자를 해고시키지 않고 도리어 흡수한다. 물론 도시노동자의 약간 %가 예비역상태에 있는 것은 논의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방에서 도시에 유입한 막대한 농민수를 본다면 누구나 상기의 약간 %를 기계작용에 적로 가전시킬 용기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요컨대 금일까지의 사실로부터 장래를 추측하면 기계의 채용은 강하게 노동자를 흡수하는 힘을 가질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도 공산주의자인 마르크스는 그가 희망한 것에 평행된 결론을 끄집어 내려고 그의 법칙을 만든 그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리론은 국가의 경제에 관한 작용을 태반 인정하고 있지 않다.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진행에 대하여 단지 기존질서의 유지자로서 아무런 간섭통제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각

국에 있어서 국가의 경제에의 작용, 간섭은 꽤 크며 이것이 자본주의 운동의 중요인자(重要因子)로 되어 있다. 즉 금융을 통한 국가통제는 케인즈정책의 이름으로서 영국, 미국의 공황 및 전쟁시의 대책으로 대규모로 실시되었다. 수급과 가격에 대한 국가통제 즉 직접통제는 전쟁을 중심으로 여러국가에서 실행한 것이다. 노동자의 지위 상승에 기인한 만성적 실업의 배제를 위하여 강력한 금융정책과 수급통제가 경쟁기구에 대한 보강공작으로 행하여 지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자본주의 경제는 변모하여 가고 있다.

요컨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리론은 그들의 예측과는 꽤 거리가 먼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며, 그의 이론이 현실과 유리된 이론임이 명백하다. 우리는 미래사회가 어느 계급에 속한 사회가 아니라 국민전체의 행복의 기반위에 구축되어야 하며 또 전세계는 그런 방향과 경향을 띠고 움직이고 있다.

4. 공산주의 정치이론과 그 비판

마르크스·엥겔스에 의하면 공산주의 운동의 구국 목적은 프롤레타리아의 경제적 해방을 완수하는데 있다. 자본주의 사회를 폐기하고 착취없는 자유로운 풍부한 공산주의 경제를 만드는데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적인 변혁은 결코 단순한 경제적과정 그 자체를 통하여서는 실현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치적 과정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이 말끝마다 말하는 ‘온갖 계급투쟁은 반드시 정치투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경우를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과정의 초점 내지 집중적 표현은 더 말할 것 없이 국가이며 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국가를 통하지 않는 사회변혁 과정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시종 경제투쟁에 호소하는 혁명적 「산디칼리즘」 같은 것은 그 대표적인 것일쎈다. 그러나 스스로 정치투쟁에 의한 사회 혁명을 역설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전혀 이것과 다르다. 국가를 통하지 않는 정치 투쟁은 생각되지 않으며 아니 국가를 통하지 않는 혁명적 실천이 과연 유효 적절한지 아직도 의문시 한다. 정치투쟁이 직결하는 길은 국가이며 계급투쟁의 정치화를 강조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국가가 중대한 관심사이며 나아가서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으로서의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트독재론은 연관성을 지닌 이론으로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에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치이론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비판키로 한다.

① 공산주의 국가론과 그 비판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국가란 한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의 억압기관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며,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계급을 착취하는 것을 옹호하는 기관이라고 단정한다. 따라서 그들은 계급국가 이외에는 국가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자본가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착취가 없어졌을 때에는 국가는 불필요하게 되며 사멸하여 장래 사회에 있어서는 물레(紡車)와 청동제도끼와 나란히 고대 박물관에 진열 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대하여 소련의 공산주의자 스탈린은 ‘마르크스주의의 국가론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명제의 어떤 것은 불완전하게 구성된 것이며 부적당하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레닌도 역시 스탈린의 정정을 받는다. 즉 그의 요지는 착취가 폐지되고 착취자가 없어져도 국가는 국내에 대해서는 경제조직화와 문화적 교육을 위하여, 국외에 대해서는 외적을 방위하기 위하여, 군대·형벌기관 및 첩보기관의 필요 때문에 국가는 남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르크스·엔겔스의 국가론은 그들의 주장 자체내에 내적 모순을 폭로하고 있다. 예컨대 엔겔스는 비스마르크체하의 신독일제국은 자본가와 노동자 어느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제 3자적 성질의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예외적 중간국가를 인정한다면 현대국가의 태반은 제 3자적 성질의 국가이며 따라서 자본가 계급의 착취기관은 아닌 것으로 된다. 또 그들은 생산수단 공유후의 사회에 있어서도 독재적 권력의 필요를 시인하지만 만약 문자 그대로 권력이 착취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면 착취가 없어진 후에 존재하는 권력은 별개의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즉 그들 자신이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권력 의의를 변경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논파한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사회에 살 수 없는 것, 또는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기 때문에 사회에 살 필요가 없는 것은 반드시 야수가 아니면 신이다. 그와 같은 자는 국가의 성원은 아니다. 사실 국가적인 통제질서 없이 자유평등의 평화를 실현하고 공산의 경제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있다면 그와 같은 사회의

구성원은 아마 피와 살을 가진 지상의 인간은 아닐 것이다. 혈육을 가진 지상의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공동생활은 불가결하며, 공동생활이 존재하는 한 국가가 소멸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개개의 국가는 혹은 변화하고 혹은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그 자체가 인간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가령 장래 세계 그 자체가 단일조직화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봐도 그것은 개개의 국가가 국가성을 상실한다는 것 뿐이며 그 대신에 세계 그 자체가 최고 일반적인 통제조직으로서 하나의 국가로 된다는데 불과하다. 그런데 모택동이 '보통의 경우에는 인민내부의 모순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처리가 부적당하다든가 경계심을 잃고 불감증으로 되어 있으면 적대관계가 생기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인민 내부의 모순을 인정한 것이며, 특히 주목되는 점이다. 즉 계급대립만 없�지면 국가는 사멸한다는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이론의 비현실성을 공공연히 지적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산주의자 모택동 자신이 국가사멸론을 완전히 수정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국가들은 국가가 무엇인가의 인식에 있어서 틀렸으며, 또한 강제권력의 필요가 사회주의의 실현과 더불어 소멸된다고 이해할 점에 있어서도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구국목표로서의 국가사멸론을 사회이상으로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의 비과학적 공상에 불과하다고 본다.

② 폭력혁명론과 그 비판

사회주의의 실현방법에 관하여서는 오늘날 두가지 사상이 있다. 하나는 의회주의(Parlimentarism)이며, 다른 하나는 폭력혁명주의(Violent Revolutionism)이다. 이 데립에 부수하여 전자에 언론자유주의가 인정되며 후자에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Dictatorship of Proletariat)가 제창된다. 후자의 폭력혁명주의가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의회주의란 총 선거에 있어서 어떤 주의 정책의 필요성을 민중에게 설득하고 민중을 어떤 주의 정책으로 개종시킴으로서 어떤 주의, 정책을 주장한 정당이 유권자의 대다수를 투표에 의하여 획득함으로써 국회에서 절대 다수당을 형성하여 어떤 법안을 통과시켜, 어떤 주의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폭력혁명주의는 적당한 기회를 포착하여 소수자의 폭력행위에 의하

여 정권을 탈취하고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혁명의 수행 과정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가 독재정치를 실시하여 혁명정부에 반대하는 자는 행동적인 반대는 물론, 언론적인 반대라해도 일체 이것을 억압한다. 이에 반하여 의회민주주의를 취하는 자는 사회주의 실현의 과정에 있어서 행동적인 불법 반대는 국법에 의하여 처벌하지만 언론적인 비판과 반대는 자유를 인정한다. 의회민주주의나, 폭력혁명주의나, 독재주의나, 대립은 단지 사회주의 실현의 방법상 대립에 그치지 않으며, 실로 사회제도의 기초에 관한 근본적 입장의 대립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폭력혁명주의를 비판하는 데는 우선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의회민주주의의 논거는 다음의 세가지 점에 있다.

첫째는, 사회는 전사회 구성원의 소유이며 일부인 혹은 일부집단등 일부 사회 구성원의 사유는 아니다. 온갖 구성원이 누구에게 정권을 부여하는가, 여하한 정치를 집행케 하는가를 결정하는 평등의 권리를 가진 사회다. 이미 사회가 전구성원의 사회라면 사회제도를 어떻게 개혁한다든가, 폐지하는가 하는 데는 전구성원이 참가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의회민주주의는 폭력의 난무를 배격하고 총선거에서 언론을 통해 이론과 정책으로 민중을 설득하고 개종시킴으로써 민중의 동의를 구한다. 그 동의가 다수일 때 비로소 사회개혁을 실시한다. 온갖 성원은 가부를 물어서 자기의 사회개혁에 참가한다. 불행히도 소수파는 다수파의 의사에 따르는 수 밖에 없지만, 오늘의 소수파는 언론을 통해 이론과 정책을 밀고 나갈으로써 미래의 다수파가 될 희망이 있다. 이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첫 논거다.

둘째는, 사회제도의 존속은 그 사회의 구성원의 신념에 의존한다. 그 신념은 의식적인 때도 있을 것이며 무의식적인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에 가서 제도는 다수 성원의 신념위에 존속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제도의 운영은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행하여질 때만이 그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사회제도와 민중의 내적 준비가 합치되어 제도는 본연의 기능을 민중에 대하여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 합치가 없으면 외형적인 제도는 존재하고 있다해도 그것은 제도로서의 본연의 존재목적에 다하지 못한다.

요컨대 의회민주주의는 사회개혁에 있어서 민중의 자각을 절대 필요 요건으로 생각하며, 이 자각을 환기하기 위하여서는 총선거에 있어서의 민중의 교육

과정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선거과정에 있어서 전성원에게 개혁취지를 호소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의회민주주의의 둘째 논거다.

세째는, 의회민주주의에 의하지 않으면 사회주의가 실현된 후에도 항상 반혁명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다대수의 민중이 설득되고 개종되어 사회주의에의 신념을 가진다면 그러한 다수의 신념위에 선 민주사회주의 사회는 견고 확실한 기초를 가지는 것이다. 어떤 반대운동이 일어나도 일단 신념으로 된 것은 쉽사리 변화되리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일부 사람들이 다수를 무시하고 정권을 탈취하였다고 하면 변한 것은 정치의 지배자지 민중의 사상은 아니다. 다대수의 민중은 여전히 원래의 미이라다. 그러므로 소수자만이 행한 혁명은 어떤 반대운동에도 호응할 수 있는 부동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불안정, 동요 속의 다수자 위에 선 사회는 제도의 기능을 정지하며 언제든지 분괴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혁명에 의한 사회가 항상 반혁명의 우려에 위험을 당하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자는 단지 실천운동뿐만 아니라 언론 집회에 이르기까지 자기에게 반대되는 일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폭력혁명으로 개시된 정치에 면할 수 없는 현상은 부단한 무력으로서 반혁명을 탄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 좋은 실례는 공산당독재 치하의 나라들이다. 그들의 허위 기만선전과 선동에 의한 암흑정치에 의한 무자비한 탄압이 이것을 실증하고 있다. 이것이 세째 논거이다.

③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과 그 비판

폭력혁명에 의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면 전술한 이유에 의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행하지 않고는 혁명정부를 유지하기 곤란하므로 폭력혁명주의와 프롤레타리아트독재와는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따라서 그들은 일체의 반대사상을 억압하면 언론의 자유를 배격한다.

이와 같이 반사상을 압박하는 자는 자기를 절대로 옳바르다고 하는 불손한 마음으로서든가, 또는 반대사상을 공포하는 자신의 결핍에서이다. 만약 사회의 진화와 자기성장을 원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든가, 또는 반대사상을 비판하고 반박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진다면 반대사상을 억압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발표를 허용하고 거기서 섭취할 것이 있으면 채택하고 버릴 것을 언론에 의하여 설득하려고 한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트독재주의자들은 여기에 대하

어 변명할는지 모른다. 즉 독재는 연속하는 것이 아니라 신사회의 기초가 안정될 때까지의 과도적 제도에 그친다라고, 그러나 인간은 본시 자기 사상을 긍정하고 자기에 반대하는 것을 혐오하기 쉽다. 한번 반대사상을 억압하는 정책을 채택한다면 그 정책을 개혁 폐지함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의 공산권 제국을 보면 명백하다. 그에서 소련을 보면, 혁명후 50여년을 지난 금일에 있어서 부르조아지는 없은 터임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은 정치의 독점을 견고히 하고져 인민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분위기에 접촉시키지 않기 위하여 철의 장막으로서 밀봉 정책을 쓰고 있으며 공산주의에 관한 이외의 출판물은 물론 영화, 연극등의 흥행으로 부터 지식을 얻는 것조차 기회를 탈취하고 있다. 특히 지배계급에 대하여서도 이 밀봉정책을 쓰고 있으므로 그들의 두뇌는 진부(陳腐) 편협하다.

그리고 그들이 현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부르조아지의 독재라고 함은 독재의 용어 예에 위배된다. 독재란 소수자의 의사에 만 입각하는 정치를 말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프롤레타리아독재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것처럼 민주주의 보다도 진보된 국가형태는 아니며, 전체 정치로부터 민주정치에의 도상에 있는 한 단계에 불과하다.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부르짖는 것은 프롤레타리아의 이기심에 호소하여 그들의 계급의식을 양양할 따름이지 아무 것도 사회에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없다. 또한 이것은 사회를 노동자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 한 도저히 지지하지 못할 독단임에 불과하다. 사회는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의 공동생활체이다. 노동자만이 지배하고 강제하며 독재를 강행할 아무런 이론적 근거도 없다.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결단코 사회전반의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소의는 아니며 노동자 그 자신을 위하여서도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다. 그 실례는 소련을 위시하여 공산권 제국의 노동자들 생활에서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소련을 위시로 공산권제국에서 자유민주혁명이 일어나 공산당에 의한 흉악하고 잔인한 압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고 청신한 공기속에 갱생할 것을 기원한다.

소련 및 그 위성국가가 갱생하느냐 안하느냐는 단지 공산당 일당독재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로 전세계 인류의 행 불행을 결정하는 중대사로 되기 때문이다.

5 공산주의 전략 전술론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철학, 경제, 정치이론에 대한 논의보다 오늘날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전략 전술이다. 그것은 즉 공산당이 집권하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나머지 문제는 아무렇게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자국공산당은 평화와 민족의 독립, 그리고 민주주의의 수호를 끊임 없이 부르짖고 있으며 군국주의, 제국주의, 팻시즘을 저주 악담하는데 여념이 없지만 공산당처럼 군사술어를 애용하며 군사과학을 연구 활용하는데 열중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정당은 없다. 그 에로서 레닌을 위시로 공산주의자들은 프러시아의 군사과학자들은 프러시아의 군사과학의 천재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 1780~1831)의 '전쟁론'을 애독 활용한다. 그것은 혁명을 하나의 전쟁으로서 파악하고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오늘날까지 투쟁 속에서 성장 단련되어 왔으며 표면상의 간판으로는 이데올로기를 내 세우고 있으나 실은 전략전술에 시종하고 있다.

공산국가는 정세에 따라서 전쟁과 평화를 교묘하게 구별하여 사용하며 '평화한 전쟁의 별명'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 즉 공산진영의 지도자들은 현대를 장기계속 투쟁의 시대로 생각하며 세계를 평화시대(공산권내)와 전쟁시대(공산권외)의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며, 공산권외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점차로 공산권을 확대하여 가려고 한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유민주진영의 분열과 약화를 노리는 것이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혁명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여 완전히 성숙한 선진문명 자본주의 국에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에 의하여 일거에 폭발한다고 하였는데, 레닌·스탈린은 자본주의 발전이 불균등함을 주장하고 세계의 자본주의 전선의 취약한 품리에서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며 개개의 국정에 따라 제 1단계의 혁명형은 다르다고 한다. 1928년 제 6차 대회에서 결정된 콤키테른의 강령에 의하면 혁명의 기본형을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 국정에 따라 혁명후에 각국의 정치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행하고 그것을 세계적인 규모로 결합 세계공산혁명을 실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첫째 형은 고도의 자본주의 제국의 혁명이며 프롤레타리아독재로 직접

행,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둘째 형은 자본주의가 중 정도로 발달한 나라들의 혁명이며, 그것은 반봉건 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을 거쳐, 빠르게, 혹은 늦게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로 이행하고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하는 2단혁명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세째 형은, 식민지, 반식민지 및 종족제국의 혁명은 침입하고 있는 외국제국주의 제세력에 대한 국민적독립투쟁, 국내봉건세력의 투쟁, 철저한 농업혁명 즉 반제 반봉건투쟁을 전개하여 민주사회를 실현하고 서서히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어로 이행한다고 하며, 사회주의의 실현은 프롤레타리아독재국의 직접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혁명에는 이상 세 가지 주요한 유형이 있다고 한다. 마르크스는 혁명은 자본주의의 고도발달 결과로서만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레닌은 국내외의 모순이 격심하여지면 언제든지 일어난다고 변경함으로써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식민지 또는 후진국에 까지 적용되는 혁명형을 만들어 낸 것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노동자계급의 투쟁형태는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하는 경제투쟁, 자본주의 사회개량주의 및 사회 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사상투쟁의 세가지 투쟁형태가 있다고 한다. 경제투쟁은 노동자의 일상요구가 임금인상, 노동시간의 단축, 기타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투쟁이다.

노동자가 경제투쟁을 위하여 사용하는 중요한 투쟁수단은 파업이다. 경제투쟁은 노동자의 경제이익을 수호하고 단결을 강화하며, 계급의식을 양양시키는데 전력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서 노동자가 자본가에 대하여 파는 노동력의 판매조건이 어느 정도 개선 될 뿐이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왜 그런가 하면 경제투쟁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제도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착취제도가 계속되는 한, 노동조건 개선에도 한계가 있으며, 불안정하며, 빈곤과 생활불안정, 실업은 끊임없이 노동자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정치투쟁은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에 대한 투쟁으로서 경찰의 탄압에 항의하는 투쟁이다. 반동입법에 반대하여 민주적권리를 수호하는 투쟁등 부분적 투쟁을 위시로 평화독립을 위한 투쟁, 나아가서 자본가계급의 권력을 탈취하고,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투쟁이 있다. 이 노동자계급이

국가권력을 잡는 투쟁이 정치투쟁의 가장 근본적인 중심문제이며, 자본가계급의 국가권력에 대한 각종 정치투쟁은 최종적으로 여기에 집중된다. 정치투쟁을 위하여 노동자가 사용하는 중요한 투쟁수단은 대중집회, 시위, 선거투쟁, 정치적 파업(특히 제네스트) 무장봉기등이다. 노동자가 우선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은 경제투쟁이다. 노동자가 정치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자본가 계급의 정치적 권력과 싸울 결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한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혁명은 계급투쟁의 가장 격심한 형태이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회의 생산관계가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되어있는 것이 근본원인이지만 이와 같은 모순은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형태로써 나타난다고 한다. 혹은 경제가 만성적인 위기상태이든가, 지배계급의 정부가 불안정하며 연이어 교체된다던가, 노동자계급을 위시하여 인민의 생활상태가 궁핍하여 감당하기 곤란하게 된다든가, 공산당지도하에 노동자 계급이 혁명으로 쫓기할 결의를 견고히 하고 그것을 인민의 다대수가 지지하고 있다든가 이와 같은 형태로써 사회의 모순이 나타나는, 것을 공산주의자는 혁명의 조건이라고 한다.

공산주의 운동의 일정단계의 전략전술의 기초는 그 시대의 특징과 성격에 대한 인식에 있다. 그 시대인식은 주로 그 당시의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과의 관계의 평가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한다. 공산주의자에게 있어서 혁명이란 권력의 탈취이며 그것을 장악하는데 총력을 집중한다. 그들은 그 때문에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생각하였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전략전술이 고안된 것이다. 독창적이라기 보다 공식화에 능숙한 스탈린에 의하면 ‘레닌주의의 전략과 전술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계급투쟁을 지도하는데 대한 과학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일정한 투쟁단계와 일정한 정세의 과학적 분석에 따라 당이 만든 정치적 방침 즉 정치노선에 따라 투쟁함으로써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정치방침 내지 노선을 의미하는 정치용어로서 그들은 전술 및 전략이란 개념을 사용한다. 전술이라는 것은 대체로 일정한 구체적 정세에 의하여 규정되며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정치노선이란 의미이다. 이에 반하여 전략이란 하나의 역사적 단계 전체에 대한 정치적 노선이란 의미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처럼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레닌은 그 어느 경우에도 전술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이것을 구별하여 전략은 혁명의 해당(該當) 단계의 토대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주된 공격방향

을 결정하는 것이며 혁명적 역량(주동적 및 제 2의 예비군)을 배치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요, 혁명의 그 단계 전기간을 통하여 그 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전술은 운동의 만조 및 퇴조, 혁명의 양양과 침체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가 행동하는 노선을 규정하는 것이요, 투쟁과 조직의 낡은 형태를 새 형태로 바꾸며 낡은 표어를 새 표어로 바꾸는 방식과 또 그 형태를 연결시키는 방식 등으로 그 노선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전략과 전술과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만일 전략은 가령 짜아리즘과의 또는 부르조아지와의 전쟁에 승리하며 짜아리즘, 또는 부르조아지와의 투쟁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전술은 보다 좀 덜 중요한 목적을 세우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전술은 전쟁을 전국적으로 승리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각개의 교전, 각개의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힘쓰는 것이요, 혁명의 일정한 만조기에나 또는 퇴조기에 있어서 구체적 환경에 적응되는 각개의 감빠니아, 각개의 진출을 성과있게 수행하려고 힘쓰는 것이다.

전술은 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그 전략에 종속되는 것이며 또 그에 복무하여 주는 것이다. 전술은 혁명의 퇴조와 만조에 따라 변화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군사과학의 분야로부터 차용한 말로 정치적 전략과 군사적 전략과 군사적 전략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망각하고 유추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치전략의 대상은 자주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해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행동하는 사회계급 및 세세력이며 군사령관이 명령으로 자유로히 움직일 수 있는 일정하게 편성된 군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전략은 군사전략보다 훨씬 복잡하다, 자본주의의 조건하에서 공산당의 전략방침(노선)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라고 한다.

첫째는, 일정단계의 노동자계급의 주요목표와 이 단계에서 온갖 근로자의 계급적 증오와 타격력을 그것에 향하여 집중시키고 그 저항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계급의 적을 올바르게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가장 중요한 중간층에 대한 당의 태도를 올바르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중간층은 중요한 적에 대하여서는 반대파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그 계급적 이해가 2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정치적 동요를 나타내며 타협하기 쉽고 때에 따라서는 중요한 적과 직접 결탁하기조차 한다.

세째로, 중요한 것은 운동의 일정단계에 있어서의 노동자계급의 동맹자를 올바르게 규정하는 것이다. 이 동맹자와는 끊임없이 연결을 강화하고 행동통일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치상의 전략적지도를 예비군의 이용문제로 귀착시킨다는 것은 자본주의 제국에서 결정적인 계급전을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임무라고 한다.

이처럼 공산당의 전략 전술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과는 다르며 혁명이 성취될 때까지는, 아니 그 후에까지도 전시체제를 요구한다. 지역적으로도 지구전체에 걸쳐서의 전쟁이며, 그 수단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등 온갖 방면에 이른다. 그러므로 단순한 파업을 지명할 경우에도 문제의 분석, 그것에 의한 투쟁발전의 예측, 그 추측되는 각 발전단계에 대응하는 투쟁목표, 투쟁형태, 조직형태, 표어의 선정 등에 이르기까지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실로 공산당으로 하여금 강력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일체화된 전략, 전술적 관점으로부터 온갖 운동을 추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상기의 제점을 관념적으로 공식화하여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복잡다기한, 극히 동적인 역사적 현실을 단순화함으로써 그 강점은 도리어 약점으로 된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전략전술은 그때 그때의 사태에 응변하는 편의주의에 불과한 언어의 유희로 되어버리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평상시라도 자유민주진영과의 끊임없는 투쟁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현대는 제국주의의 공동전선이 공산주의 진영과 대치하는 시대라고 생각한다. 세계평화란 세계전체가 공산주의 사회가 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확신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의 조국 소련은 세계혁명의 기지이며, 요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것을 강화하고 난공불락의 것으로 하는 것은 세계공산주의의 급선무로 생각한다. 여기에 소련이나 중공이 국방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외교, 문화는 일관하여 이점에 집중되는 것이다. 이것이 세계사의 현단계에 있어서의 일국사회주의 소련이나, 중공이 취하는 근본정책이다. 공산진영에서 부르짖는 평화공존, 경제경쟁, 중립화 및 민족해방전쟁론은 세계의 온갖 인류가 자기의 국가 민족의 독립과 생존을 충족시키면서 공존공영을 누린다는 참된 항구 평화, 다시말하여 참다운 평화공존의 이념과는 거리가 꽤 먼 것

이다. 그들이 부르짖는 평화, 중립, 민족해방은 중오와 폭력, 그리고 음흉한 음모에서 출발하는 자유민주 진영 타도의 수단 즉 전술로 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소련 및 중공을 주축으로 하는 국제공산주의 세력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혼란기를 이용하여 명실공히 놀라운 팽창을 하였다. 오늘 모스크바·북경의 두 주축을 핵심으로 세계 육지의 4분의1과 세계인구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공산권 세력을 배경으로 거센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유민주 진영과의 장기계속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국제공산주의 세력에서 최대 최강의 장해와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미국의 강대한 경제력과, 고도의 기술,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군사력과 더욱이 미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유민주 세계의 반공, 방위체제인 것이다. 따라서 국제공산주의의 최대의 노력은 현 단계에 있어서 자유민주 진영의 반공유대를 해이시켜, 분열, 파괴, 약화시키고, 미국을 고립화시키는데 주목표를 두고 있다. 이것을 위하여 그들은 평화공존이니, 중립화등의 슬로건을 내세우고, 자유민주 제국민 대중의 반공경계심을 완화시켜 제국정부 지도자의 반공결속에서의 노력을 견제하고, 가능하면 그 기본정책을 전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 국제공산주의 세력의 이와 같은 노력이 주효하며, 국제적인 힘의 균형을 파괴하는데 성공하자면 그 세계혁명 전략은 또다시 진전을 보게 되어 자유민주 진영의 국가는 드디어 결단이 나게 될는지 모른다. 그들은 좋은 기회로 보이는 때가 오면 언제든지 반공주의 정부의 정복을 기도할 것이다. 그들에 대한 전략도 상기의 세계혁명 전략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으며, 우선 친미적 무장강화의 저지, 반미 중립화를 도모하고 다음에 국제정치상에 있어서 소련, 중공권 세력이 미국을 압도할 단계에 이르면 폭력혁명을 일으켜 전 한국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현 단계에 있어서 표면상 합법적 면에서는 한국의 평화적 통일 및 연구 중립화 운동의 선에 따라 국민적 통일행동의 구체화를 도모하며 비합법적 면에서는 혁명세력으로서의 민족해방, 민주통일전선(인민민주혁명을 지행)의 확충과 계렬라전을 추진한다. 이와같은 제반공작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한국내 온갖 부정, 부패, 모순을 이용하여 교묘히 기회를 포착하여 침투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다각도로 심중히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은 역사의 개관적 정세에 따라 전략 전술을 기동성있게 변화시켜가면서 적응시킨다. 이론편중, 이데올로기 편으로 표시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

한 실패, 근본목적의 일관성과 전략 전술의 임기응변에서 생기는 현실주의적 기동성, 이 양자의 결부가 공산당의 비밀을 푸는 평범한 열쇠인 것이다.

6. 최근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그 전망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의 국제공산주의는 소련이 일국 사회주의 건설에 전념하고 세계혁명에 대한 관심을 딱 등한시하고 있었으므로 이것이 반영되어 운동전체가 부진상태에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소련은 미국·영국등과의 군사적 협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필요상 국제공산주의의 본거지로서의 콤포테른은 1943년 5월 해산되었다. 제3인터내셔널은 제2인터내셔널에 비하면 딱 중앙집권적이며 소련중심주의적이었다. 세계각국의 객관적 제조건을 무시하고 소련공산당의 정책 및 조직이 가맹 자당에 강요된 결고 콤포테른은 전체로서 실패로 끝났던 것이다.

1945년 이후의 자국 공산당은 콤포테른 해체로 인하여 국가간의 공산당에 대한 통제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직접 의존하게 되었다. 그 실제 통제권은 중앙위원회의 국제관계부의 수중에 있었다. 그 책임자는 1943년부터 주다노프였다. 따라서 콤포테른 해체가 자국 공산당에 대한 소련공산당의 통제를 소멸시키지는 않았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의 점령하에 있던 나라들이 독일군의 패망으로 1944년 부터 계속하여 동구에서 독립국으로 되었으나 소련군 점령하에 점차로 공산주의자들 지배하에 들어갔다. 1948년까지는 처음부터 인민공화국이었던 유고슬라비아를 예외로 하고는 전동구가 소련의 공산위성 국가로서 완결 되었다.

동구 위성국을 단단히 결박한 것은 비단 당기관만이 아니고 붉은 군대의 주둔, 국가보위부(M.G.B)의 영향력, 그리고 경제적 유대등에 의해서였다. 이같은 소련의 팽창정책에 대하여 드디어 1947년 3월에 미국의 트루만대통령이 공산주의를 통렬히 비판하고, 그리이스·터어키 원조연설을 행하였다. 이것이 트루만·독트린 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이어 동년 6월 미국의 마아살국무장관의 유럽의 경제부흥계획의 실시로 구체화하였다. 여기에 대항하기 위하여 소련은 1947년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폴란드 공산당을 사주하여 유고슬라비

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및 프랑스의 9개국공산당 대표들이 슈라이버 하우스에 뚫여 「공산당 및 노동자 당 정보국」(Information Bureau of the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의 창설을 결의하였다. 이것을 약칭하여 콤파프름(Cominform)이라고 부른다.

콤파프름은 상기의 9개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지명된 각 2명의 대표로 구성되며 기관지 「항구평화와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를 주간으로 발행하였다. 콤파프름의 임무는 「제당간의 정보교환을 조직화하는 임무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동지의 토대 위에 공산당의 행동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같은 국제공산주의의 운동의 조직을 가지고 소련공산당이 조정하던 중 하나의 전기를 형성하는 사건은 1948년 6월말 유고공산당이 콤파프름에서 이탈한 것과 1953년 3월의 스탈린의 사망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국제공산주의의 운동의 한 덩어리가 깨어지고 다중심주의의 분극화와 각국 공산당의 민족적 자주적 태도 및 사회주의에의 독자노선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소련과 중공도 이테올로기 논쟁으로부터 대립하여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대결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데 소련과 중공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격화되자 세계의 공산제국을 위시로 각국 공산당 노동자당들의 동향은 나날이 미묘하게 변하여 가고 있다. 알바니아, 루마니아를 제외한 유럽의 공산당은 소련 공산당 노선을 지지하고 아시아 지역의 공산당은 처음에는 중립을 지키다가 중공측에 따르는 파와 자주 독자노선을 지향하는 파로 갈라지고 있다. 또 소련파 중공파로 분열하여 갈라진 당도 있다. 인도와 일본의 공산당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그리고 유고, 쿠바 공산당처럼 독자적인 제3노선을 모색하는 공산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폴란드, 루마니아 처럼 이테올로기 때문이 아니라 민족적 국가적 이익 때문에 중립을 취하면서 소련, 중공 양불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받는 동시에 자유진영과의 경제교류를 통하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이와같은 동구공산국가들은 차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련이나 중공일변도의 노선을 지양하고 민족적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는 독자노선을 지향하고 있다.

종래에는 통일과 규율을 자랑하는 하나의 국제공산권이 해체되고 이테올로기적으로 흡사한 두 개의 국가집단, 즉 소련과 중공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의 불안정한 동맹으로 변질된 사태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 동맹에는 아직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어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왜 그

런가 하면 공산주의국인 유고는 이 두개의 국가집단의 어느 편에도 속하고 있지 않으며 독자의 길을 택하고 있는 나라다. 그리고 이 테두리 밖에도 이 분열에 당혹하고 심각한 분열상태에 있는 정권을 장악하지 못한 재야 공산당으로서 공산권내 문제에 관하여 큰 발언권을 가지는 수도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 프랑스 공산당이 그것이다.

요컨대 국제정세에 예상외의 혼란이 일어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같은 사태가 기본적으로 금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사사건건에 대립하면서 소·중의 의견차를 해소하고 종전처럼 재단결을 하려는 노력이 일방에서 추진될 것이다. 여하튼 모스크바나 북경의 지도자가 정질되면 대립 완화에 약간 기여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와같은 움직임은 스스로 한도가 있다. 오늘날 모스크바·북경의 어느 일방을 공산주의 운동의 절대적인 중심으로 획책한다면 그야말로 걸잡을 수 없는 긴장을 초래케 될 것이다. 공산주의는 이제 발전, 불균형등에 의한 자기 다른 혁명적 단계에 있으며 각국의 역사적 전통과 정치 심리적으로도 자기 다른 사정하에 놓여 있는 공산당이나 공산정권의 집결체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것을 억지로 종래와 같은 통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 더욱 큰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오늘날의 중공과 이탈리아 공산당간에는 거의 공통의 지반은 없으며 이것을 무리하게 같은 입장에 서게 하려고 하면 어느 편인가에 큰 해를 미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단결회복은 이미 문제외의 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 완전한 분열, 전면적인 대립으로 인하여 어느 한편이 비공산세계와의 동맹을 맺는다는 사태가 일어난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로서 아직도 동구위성국 정권은 소련과 결부되어 있는 군사동맹을 끊을 수 없다는 것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제이론에 의하여 정당화 되어 있는 권력의 독점에 대한 충성심을 중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을 그만두면 그들의 권력근거인 이론적 기초 그 자체가 전도되며, 사실상 정치적으로 자살하는 것과 같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어느정도 하고 있는 자기 나라의 경제기구와 사회제도를 더욱 자유화 내지 적어도 독자적인 선에 따라 재편성하여 가는 것이다. 또 자국민과 비공산권 제국민과의 각종 접촉이나 교류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을 유고처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움직임은 가장 스탈린 노선을 따르던 루마니아가 현재 취하고 있는 것처럼 자국의 경제발전의 중요 요소로서 비공산제국과의 무역확대를 기도하고 있으며 서독과의 국교정상화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

다. 코메콘내에서 자국입장을 주장하고 전체의 계획에 따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과도 대립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위성제국 정권에 허용된 선택의 범위는 한편에 유고식의 완전독립, 타방에 소련의 노선이나 권위와의 조심성스러운 맹종, 이 양극단의 어느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중 논쟁은 시작될지 이미 오랜 시일이 경과하였으며, 오늘에 있어서는 국가적 대립은 지나 국민적 대결상태에 놓여 있다. 쌍방은 서로 수정주의자, 트로츠키주의자, 민족평행주의자, 교조주의자, 분열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용어로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다. 그 어느 편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충실한가 하면, 마르크스는 원래 폭력혁명주의자였지만 후년에는 미·영·화란 같은 나라에서는 평화혁명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그것이 카우츠키의 날조라고 하는 중공의 주장은 명백히 오류인 것이다. 엥겔스에 이르러서는 폭동보다도 보통선거권의 편이 중요하다고 확실히 말하고 있다. 틀립없는 폭력혁명론자인 레닌조차도 혁명후 최초로 한 것은 의회소집이었다. 이것으로 보아 소련측이 유리한 것 같기는 하다. 그러면 의회적 수단에 의하여 마르크스주의의 소위 사회주의가 달성되는가 하면 이것도 우선 불가능하다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므로 소련이 세계혁명을 위한 노력을 태만히 하고 있다는 중공의 주장도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란 것이 오늘날 고도로 공업화한 사회에 있어서는 펍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어 있다는 것이며, 그런 사회를 폭력혁명에 의하여 공산주의화하려는 중공의 주장이 공상임과 동시에 평화적인 경제경쟁에 의하여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 승리한다는 소련의 주장도 또한 공상적인 것이다. 오늘날의 소·중 논쟁의 의의는 이런 이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주의가 소련이나 중공의 국가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며, 마르크스주의는 그들의 국가정책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쟁이 객관적으로 봐서 아무리 공허하다 해도 그것이 지닌 역사적 의미는 중요하다.

금일의 소련은 아직도 서구사회에 뒤떨어진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상 명령으로 되어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세계혁명보다도 세계평화와 선진공업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훨씬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소련 국내사정 그 자체가 실은 소·중대립의 근본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될

다. 중공이 인민공사의 실패와 악천후에 의한 식량부족으로 3년간이나 허덕이고 있을 때 소련은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원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기술자를 소환하고 중공의 공업화를 저해하였다. 이미 그 이전에도 소련이 만주로부터 철도나 공업시설을 대량 반출하였고 한국동란시에 부여할 원조를 후년에 용서없이 받아낸 것은, 국가이기주의가 소련 본래의 것임을 알려준다. 소·중 양국은 서로 이태올로기에 의한 뒤틀 받침을 구하면서 자기의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공이 폭력혁명을 고취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는 그들이 그와 같은 힘이 있다고 오산하고 부당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오늘날 저개발지역의 공업화에는 많은 곤란이 가로놓여 있으며 무지와 빈곤으로 인한 민중의 불만을 선동하는데 중공방식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것은 예측되나 제1차 세계대전 후 소련이 구식민지의 민족해방운동을 원조하고 그것에 배신 당한 것처럼 중공의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에 대한 제반공작도 어떤 한도내에서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 실례로서 1966년 인도네시아의 9.30사건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당시 350만 당원과 방계(傍系)조직원 700만 군대내 25%의 비밀당원을 가진 잘 조직된 비공산국가에서는 최대의 공산당이였다. 그런데 이것이 중공의 그릇된 사주에 의하여 무장봉기 함으로서 인도네시아육군의 반격을 받고 자멸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요컨대 오늘날의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다원성은 여러가지 형태로서 표면화하고 있다. 인도나·버마·일본등에서는 복수 공산당이 있으며 기타의 나라에서도 공산주의의 분파가 생기고 있다. 이탈리아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의 공산당은 왕년의 로자노선 즉 서구공산주의에 가까운 면이 부활하고 있으며, 동구의 공산당도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사건이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로 자기 독자 길을 찾고 있다 1959년에 쿠바혁명이 성공한 것은 공산주의의 라틴·아메리카적 형태를 산출하였으며, 베트남의 끈덕진 게릴라전은 공산주의의 동남아 형을 대표한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처럼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4분5열 다원화 다채로운 형태를 취하면서 진전하여 변질되어 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공산당대회는 3차에 걸쳐서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즉 1957년 11월의 64개국, 1960년말의 81개국 공산당, 노동자당대회, 1969년 6월의 75개국 공산당이 참가한 대회(세계의 94개 공산당 중에서) 14개 집권당 가운데 6개당이나 불참하고 특히 중공을 비롯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반제투쟁

을 손수 하고 있는 월맹등 아시아의 공산국들이 동대회를 보이코트하는 바람에 결국 주역부재, 아시아 부재의 대회가 되었다. 소련은 중공과의 관계가 대결단계에 이르자 중공을 제외한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소련중심으로 단합하여 보려고 이 대회를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회의는 중공, 알바니아는 물론 월맹, 쿠바, 유고, 북괴등도 대표를 안보냈고 루마니아는 중공을 비난하는 발언이 있자, 도중에 퇴장하는등 소련이 당초 기대했던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대동단결이란 목적은 대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문서에 서명한 공산당은 겨우 66개당, 15개당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이에 서명하길 거부하였다. 이탈리아, 영국공산당등이 체코침공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같은 사태는 57년의 모스크바선언이나 60년의 모스크바성명 같은 강령적 문서 채택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소련이 체코침공을 정당화하려는 브레즈네프·독트린과 중공파문을 기타 형제당들에게 강요할려는 기도도 완전 실패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 대회는 소련의 개최목적 달성에 실패했고, 그 영도력이 현저히 저하됐음을 들어냈다. 분열과 대립, 그리고 영도력의 저하는 공산권의 필연적인 추세다. 중·소의 대립과 공산권내의 분열, 다극화 현상 그리고 체코무력침공 사태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70년말의 폴란드 폭동이 다시 일어남으로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바야흐로 분열과 대립과 방괴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7. 결 론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체계를 간단히 설명하고 비판함에 있어서 허다한 결함, 과장, 편파, 독단, 모순, 자가당착이 포함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현대 공산주의는 레닌에 의하여 형성되고 스탈린에 의하여 러시아국교로 변질되었다. 우리가 적대하고 있는 북괴의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레닌주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산세계에서도 가장 뒤떨어진 개인 우상화에 의한 일인독재 체제인 스탈린주의의 북괴판인 것이다.

이번 제 5차 당대회에서 괴수 김일성의 보고를 살펴보면 현대세계에서 가장 군국주의화된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들의 구호를 보면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 현대화'를 외치고 있다. 또한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단련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만들고 '전체인민이 다 총을 쓸 줄 알며, 총을 매고 있다. 또한 우리는 온 나라의 모든 지역이 철용성 같은 방위시설들을 쌓아 놓았으며, 중요한 생산시설까지도 다 요새화 하였다'고 호언하고 있다. 이처럼 북괴는 시종일관 무력적화통일을 다짐하고 있으며, 세계에게 가장 흉악하고 무자비한 무력지상 폭력지상의 신봉자이다. 따라서 그들은 계속 남한에 대한 침투, 파괴, 무력침공 행위를 계속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는 대비할 것인가?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기로 한다.

첫째로, 사상무장을 수반하는 무력강화에 있다. 북괴는 기회만 좋으면 언제든지 재남침을 감행할 것이다. 우리는 6·25전란의 쓰라린 체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 한국이 북괴보다 충분한 장비로서 전투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다면, 북괴는 결코 그와 같은 모험을 감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방비를 확실히 하고 침략을 유인하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우리의 의무가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적당한 진공지대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침공한다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공산진영과 직접 대치한 전초기지에 있는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그들에게 호기도래의 느낌을 주는 것 같은 파오를 범하여서는 안된다. 도발만 안하면 안심이라는 만심이 무엇보다도 금물이다. 진실로 평가가 중요하고 인명이 귀중함을 생각할 때, 눈앞의 안이한 현실에 도취하여 필요한 처지를 충분히 취하는 것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6·25의 쓰라린 경험을 깊이 명심하여 북괴를 온갖 면에서 압도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럼으로써만이 통일 의 과업은 완수된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둘째로, 정치적 안전과 경제부흥이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공산주의는 대체로 부정, 부패, 불의, 불신의 정치풍토와 경제적 파탄 및 사회적 혼란으로 국민이 생활고에 시달릴 때 성황한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전진하게 실시되게 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국민이 생활고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온 국민이 합심하여 복지국가 건설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로, 온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개몽선전 강화에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산무력혁명의 성공은 무지, 문맹의 농민 노동자가 대부분인 후진국에서였다. 국민 각자가 공산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전진한 판단력을 가지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나라에서는 공산주의는 발판조차

붙이지 못한다. 우리는 이점에 있어서도 더욱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네째로, 간첩 및 용공분자 색출에 있다. 간첩의 역할은 대단히 중대함으로 이것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우리 나라에는 북괴를 위시하여 소련, 중공 간첩들이 침투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등 온갖 면에 걸쳐서 자료수집과 파괴 공작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으니, 이것을 철저히 살피서 색출검거하고 그들의 제반공작을 분쇄하지 않으면 안된다.

끝으로 한국을 국제공산주의의 위협으로 부터 구출하기 위하여서는 온 국민이 대동단결하여 총력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 그런가 하면 소련, 중공, 북괴할 것 없이 국제공산주의는 자유민주진영을 소멸시켜 전세계를 공산화하는 것이 그들의 확고 부동한 신념이며, 또한 결의와 행동의 방침으로 삼고 있기때문이다. 세계적화의 수단으로 시기적으로 소련은 평화공존을 중공은 인민해방전쟁을 내세우고 있을 따름이지 그들의 최종목표는 같다. 따라서 평화공존이니, 협상이니, 중립화니 하는 주장에 현혹되어 그들의 술책에 빠져서는 안된다. 그들의 그때 그때의 전술구호에 휩쓸려서 희망적 관측이나 환상에 사로잡혀 판단을 그르쳐서는 안된다. 북괴, 중공, 소련 할 것 없이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로 개종하기 전에는 모두 우리들의 적이란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VI. 용 어 편

1. 간접 침략(間接侵略 Indirect aggression)

외부의 세력이 타국(他國)내의 반정부 단체등을 조종 또는 조직하여 그나라 정권 전복을 위한 무장 봉기(蜂起)를 조종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을 「직접 침략(Direct aggression)」이라 한다. 각종 공산당의 침략의 전형적인 형태가 바로 이같은 간접침략이며, 침략하려는 대상 국가의 반정부 분자 또는 무지한 노동자, 농민 계급에 침투하여 지하당을 조직하고, 이들을 반정부파괴 운동에 조직 동원한다.

오늘날 북한괴뢰는 이 전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폭력·비폭력, 합법·비합법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을 적절히 배합하여 반미·반일·반정부 투쟁을 선전·선동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사상무장을 철저히 하고 여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2. 강단 사회주의(講壇社會主義)

독일어로서 Kathedersozialismus이며 1870년대를 중심으로서 독일경제학계서 유력하게 된 사회개량주의(社會改良主義)사상을 고취한 젊은 경제학자의 한 무리에 대하여 부여한 명칭이다. 슈몰러(G.V. Schmoller), 바그너(A. Wagner) 브렌타노(L. Brentano), 셸벨그(G. Shönberg)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당시의 경제정책상의 자유주의자 오펜하임(H.B. Oppenheim)은 1871년 12월 17일의 「나찌오날·쓰아이팅」지상에 「만체스타학파와 강단 사회주의」란 한 논문을 게재하고, 그 중에서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젊은 강단학자의 한 무리의 현실우월의 의문을 조소하는 의미에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강단 사회주의자로서 손꼽히는 사람들의 견해에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 경향으로서는 만체스타주의 또는 자유방임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이론에는 반대하고 윤리적인 견지에서 국가의 적극적 간섭과 보호를 역설하는 것이다. 완고한 경제상의 보수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에는 대항하여 점진적인 방법에 의한 사회개량을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여 사회개량주의 학파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1873년에 이

들 학자를 중심으로 「사회정책학회」(Verein für Sozialpolitik)가 결성되었으며, 그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학회는 독일경제학자의 공동연구 기관으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

3. 교조주의(敎條主義, 영어로서는 Dogmatism, 독일어로서는 Dogmatismus)

이 말은 공산주의자들의 상투적 용어로서, 비과학적·비실천적·비현실적인 교의(敎義; dogma)를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들은 주장하길 모든 것은 항상 발전 변화하고 자기들 앞에 제기되는 문제는 언제든지 구체적인 때 이것을 잊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문헌에서, 개개의 명제, 조문, 문구를 증거로서 인용하여 그것으로서 모든 실제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애써서 구체적인 실제문제의 조사연구를 하는것을 포기한다. 이 같은 것을 교조주의라고 하며, 이 경향은 혁명이론과 실천의 발전을 저해하는 해로운 사상경향으로서 그들은 배척한다. 오늘날 소련공산당은 중공의 모택동을 전형적인 교조주의자로서 비난하고 있다. 교조주의를 이같이 해석할 때 북괴의 두목 김일성은 전형적인 스탈린주의의 교조주의자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군국주의(軍國主義; Militarism)

사전에는 군국주의를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법률, 교육등의 조직을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군비력에 의한 대외발전을 중시하고, 전쟁을 국가위력의 발현으로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써 있다. 요컨대 군사적 발전과 군사적 영예를 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군사행동은 국가기능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과도로 중시되면 군국주의가 생긴다. 군국주의 폐해는 호전적 전락적으로 되며, 모든 국가정책을 군사행동에 결부시켜서 생각함에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에 패전할 때까지의 일본은 확실히 군국주의적이었으며, 독일도 그런 경향이 강한 나라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와 판이하다. 강대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인접국을 위협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소련, 중공, 북괴는 초군국주의 표본

국가들이다. 그 에로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공이야말로 대표적 군국주의 국가이며,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사회주의화를 무력침공, 군사력으로서 억압한 소련이야말로 군사력우의 정책을 쓰고있는 군국주의 국가이다. 「전체인민이 다 총을 쓸 줄 알며 총을 메고 있다. 또한 우리는 온 나라의 모든 지역이 철용성 같은 방위시설들을 쌓아 놓았으며, 중요한 생산시설까지도 다 요새화 하였다고 지난 70년 11월 2일 제5차 당대회에서 김 일성이 호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이상 군국주의화 된 나라는 지금까지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이들 국가는 입만 열면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다고 육설을 퍼붓고 있다. 일본의 국력은 세계 3위의 공업력을 가지고 있지만 GNP의 1%밖에 방위비에 충당하고 있지않는 실정이다. 일본은 금일에도 방위면에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일본 공산당을 위시로 신좌익 좌파조차 여기에 대하여서는 「한 나라의 규정으로서는 불충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5. 기회주의(機會主義; Opportunism)

일반적으로 유리한 것을 쫓는 태도를 말한다. 즉 계급투쟁이 심하게 되고 객관정세가 복잡하게 되면 소부르조아적인 초조에 사로잡히거나, 극좌적 행동을 나타내며, 반대로 정세가 불리하게 되면 혁명운동에 대한 핵심을 잃고 동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당과 국가의 제원칙을 저버리고 자기의 지위를 높이고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대중(大衆)의 뜻에 영합(迎合)하는 당원이나 정부 관리들을 비판하는데 공산당에서 쓰는 용어이며 하나의 경향 또는 오류로 인정될 때 사용한다. 기회주의는 출세주의 패배주의와 마찬가지로 숙청할 때의 이유로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6. 네오 파시즘(Neo-fascism)

1921년 이탈리아에 파시스트당을 결성하고 22년 정권을 잡은 뭇소리니의 반혁명운동 및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을 지배한 히틀러운동을 위시로 중·동부와 서반아에서의 일련의 반혁명운동을 총칭하여 팻시즘이라고 한다. 팻쇼

란 고대 로마의 의식용으로 사용된 봉속(捧束)의 의미가 전하여 결속(結束)을 의미한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자본주의의 소위 일반적 위기때에 각국 공산당의 진출과 소련국력의 발전에 위협을 느낀 독점자본, 군부, 관료, 중·소상공업자, 지식계급, 실업자 및 미조직노동자들을 기반으로한 반공, 반소의 반혁명운동이다. 왓시즘은 의회정치를 부인하고, 일당독재의 형태로서 조직노동자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여 자본주의체제를 옹호하지만, 통상의 보수반동주의와 다른 점은 그것이 밀으로 부터의 대중운동의 형태를 취하며 물리적 심리적폭력을 대담하게 사용함으로써 공전의 전체주의적인 지배를 수립한 점에 있다. 왓시즘이 대중을 반소·반공에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반소적인 내셔널리즘의 고취, 국가사회주의적인 선동 등이 이용된다. 하층중산계급 미조직노동자, 실업자들은 경제적 빈곤의 원인이 자본주의체제 그것에 있지 않고, 부자나라, 유대야적 국제금융자본, 고리대금자본, 백화점, 조직노동자 등의 횡포에 있다고 한다. 왓시즘은 정권을 획득하면 극단적인 군비확충등의 수단으로서 완전고용을 실현하면서 이 군비를 배경으로 대외적 팽창운동을 버리고 내우를 외환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이같은 것이 결과적으로 전쟁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 왓시즘은 공산당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반혁명운동으로서 일체의 전통적 권위를 무시한다.

네오파시즘은 제2차대전 후에 다시 대두하고 있는 왓시즘을 가리키는 말로서 서독의 독일 사회주의 국민당(Sozialis-tische Reichs-Partei SRP), 독일 군인협회(VDS), 이탈리아의 사회운동파(Movimento Socisale Italiano-MSI) 등이 이것이다. 일반적으로 오늘 날에는 반미적 중립주의적, 사회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

7. 리베르만의 경제 이론

1962년 9월 9일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에 실린 하리코프 대학 경제학 교수 에프세 리베르만의 논문 「계획·이윤·상여금(計劃·利潤·賞與金)에서 논한 경제이론을 지칭한다. 리베르만은 소련의 경제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담한 제안을 「프라우다」에 게재하였다. ① 중앙 계획당국의 결정한 계획 목표중 생산량, 품종, 계획, 인도, 기일등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종래부터 주워진 모든 계획 목표를 정리한다. 특히 노동자의 수, 노동생산성, 노동임금,

자본 투자, 생산비등은 제외하고, 이러한 계획은 중앙에서가 아니라 각 지방경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계획지표로 한다. 이러한 지표는 주된 각 기업의 계획 과제로서 중속적인 의의를 갖도록 한다. ② 이윤율을 갖고 기업의 경영능율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다. 이윤율이란 지금까지 사용해 온 이윤 대 원가의 관계가 아니라, 이윤 대 기업이 소유한 고정 및 운영기금 총액과의 비율을 말한다. 이것으로서 기업 경영의 성적을 평가하도록 한다면 기업의 경영자는 자본을 절약토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이용능율을 높이려고 할 것이므로 생산 능력의 파소한 신고나 원료자재를 계획 이상으로 보유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이윤율의 실적에 따라 상여기금을 적립하도록 한다. 기업 지배인은 표를 만들어 이윤율을 높이면 높일 수록 상여기금은 그만큼 많이 적립할 것이고, 이 적립금을 기업장의 자유 재량에 의하여 그 기업에 소속한 종업원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상여금을 지불하도록 한다면, 그만큼 각 개인의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리베르만의 이론은 과도한 중앙 집권적 계획 제도를 대단하게 간소화하고 이윤율을 기업 성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며 특히 상여금 제도를 확대하여 생산성을 높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론은 그후 소련 정부가 채택하여 경공업, 특히 국민생활 필수품 생산 부문에 채택하게 되었다. 이 방법은 공업에 도입되어 성과를 거두자 금후는 농업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이윤업을 경제운영이라고 하였지만 이 면에서도 공산주의는 변질되어 가고 있다.

8. 민족 공산주의(民族共產主義; National communism)

제2차 세계대전(1939~1945년)후 동구제국, 중국, 북한, 북베트남 등에 공산당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 중에서 동구 위성국가들은 1945~1946년까지 모스크바의 양해하에 각국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자기나라에 알맞는 사회주의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즉 공산주의 정책을 추진하되 각국의 특징에 맞는 비획일적(非劃一的)인 정책이란 의미에서 민족 공산주의라는 용어가 창조되었다. 그러나 1947년 9월에 콤포트름이 결성된 후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티토투와 소련공산당의 스탈린이 국가이익을 놓고 때릴 서로 갈등이 생기자 콤포트름에서 유고 공산당은 파문당하였다. 콤포트름 결성 이래 각국 공산당은 모스크바에

의 무조건적 복종위에 성립되었던 일석주적(一石柱的) 결속이 티토와 스탈린의 반목이 계기가 되어 붕괴한 것이다. 그 후 중·소 분쟁의 악화에 따라 이 붕괴는 더욱 조장되어 오늘날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공산당간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가 이루어졌다. 즉 사회주의 국가간의 평등관계, 내정불간섭, 사회주의에의 자국의 독자의 길을 인정 하기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공산당의 스탈린주의적 노선을 택하는 자들은 민족공산주의는 반공산주의며 수정주의로 규탄하고 있다. 그들은 민족공산주의의 개념을 공산주의 진영의 이익보다는 자기나라 이익을 앞 세우며 모스크바 지배로부터 독립하려는 모든 경향을 가리키는 것이다. 민족공산주의자로서 대표적 인물은 유고의 티토를 필두로 1956년에 폴란드 노동자당의 제1서기에 복귀한 고물카, 동년 헝가리 폭동에서 당을 장악했던 임페·나지, 중공의 모택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소련공산당은 오늘날에도 이들 민족공산주의자들을 「서방 제국주의 이론가에 의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 공산당들을 분열 매립시키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탄탄 대로(大路)로부터 이탈시켜 제국주의 시공창에 쓸어넣기 위하여 만들어진 염불(念佛)」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1969년 8월 「인간의 얼굴」을 가진 민족사회주의에의 길을 택한 체코 공산당에 대한 무력침공, 두부체크 일파를 숙청한 것으로 구체화 되었다. 그 후 소련이 주장하는 「제한 주권론(制限主權論)」도 민족공산주의 경향을 억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9. 민족 민주주의(民族民主主義; National democracy)

1960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81개국 공산당 및 노동당 대회 성명에서 나온 용어로서, 후진 국가에서의 공산주의 혁명을 추진하는 기본 이론이라기 보다는 전술이라고 함이 타당하다. 이 전술은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제국에서의 공산주의 혁명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군 점령지역에서의 경우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으므로 즉 공산당의 무장력이 없으므로, 인민 민주주의 혁명을 발전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그 전단계인 민족민주주의 혁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서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민주개혁을 제창함으로써 대내적으로 반봉건 투쟁과 반매판 자본 투쟁을 전개하고 외국의 정치적 경제적 간섭하에 있음을 과대선동, 선전하여 반서방적인 민주주의 운동을 동시에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 따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

카 제국의 공산당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 먼저 민족적 민주주의를 승인하고 이를 지원하면서 비공산당파의 반정부, 반미 통일전선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전술을 적용하여 성공한 나라는 쿠바이며, 이 전술의 적용이 성공한 일보전에 실패한 나라는 인도네시아이다. 북피의 대남 선전과 파피공작도 바로 이 전술에 입각하여 전개되고 있다.

10. 민족주의(民族主義: Nationalism)

영어의 내셔널리즘은 국민주의,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로 번역되고 있다. 우선 여기서 민족(Race영어, Volk 독어)이란 무엇인가? 민족이란 혈연적 유사를 기초로, 정치, 경제, 언어, 문화, 역사 등의 공동체를 조건으로서 형성되는 사회집단이다. 따라서 인류학적 개념인 인종과는 구별됨과 더불어 국민(Nation)과도 구별된다. 국민은 근대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형성된 것이며, 국가(State)의 통제하에 한 민족 또는 수개민족을 기초로 형성되는 전체사회이다. 미국국민은 많은 민족으로부터 형성되었으며, 독일민족은 독일국민과 오지리국민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유대민족은 세계에 산재해 있지만 독자의 국민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셔널리즘은 민족에 기초를 둔 국가의 독립을 지상으로 생각하며 이것을 창건하고 유지 확대하려는 민족의 일정한 정신상태 내지 행동원리를 말한다. 또한 때로는 민족이란 자생적, 문화적 공동체가 근대적인 정치적 국민통일로서 자각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역사적 과정 그것을 의미한다. 첫째로 내셔널리즘은 일정한 정신상태라고 함은, 민족국가의 사실 내지 이상에 대한 충성심이 기타의 어떤 집단에 대한 충성심보다도 우월하다는 의식상태를 말하지만, 이것은 자기 민족에 또한 자랑, 영예 민족성이든지 민족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신앙, 따라서 또한 민족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핵심으로하는 애국심 내지 조국애와 깊이 결부되어 있다. 둘째로 내셔널리즘이 민족국가의 행동원리를 의미한다는 것은 처음에 말한 민족국가의 독립을 지상으로 생각하는 정신상태와 결부하여, 국가의 존립, 유지, 확대를 위하여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현실주의적 내지 권력주의적인 자율에 따라 국가가 행동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근대국가가 권력다원성의 세계에서 자기존립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역사적 구조에 유래한다. 근대 내셔널리즘이 권력정치든지 세력균형을 그 내면적인 행동원리로 한 것은 이것에 유래

한다. 셋째로 내셔널리즘은 역사적과정으로서 절대주의적 집권국가로부터 민주주의적 자유국가에로의 성장과정 그것을 의미한다' 즉 내셔널리즘은 16세기로부터 18세기 중엽에 이르는 절대주의의 집권적통일의 과정과, 불란서혁명으로부터 19세기 중엽에 이르는 민주주의의 민주적자유 과정이란 두개의 단계적발전을 걸쳐서 비로서 자기를 완성한 것이다. 원래 내셔널리즘이란것은 특별한 이론이든지 체계를 가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셔널리즘은 지도 여하에 따라 극단으로부터 극단으로 달리며 그 결과 여러가지 내셔널리즘이 생기는 것이다. 어떤 때에는 고상한 건설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며 어떤 때에는 이기적인 파괴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었다. 평화로운 세계사회를 지향하는 인류의 진보를 폐쇄하는 방해물로서 공격당하는가하면 일방에서는 변호되고 영광을 받아 장려되어 왔다. 이처럼 내셔널리즘은 여러가지의 역사적 진개가 있었지만 내셔널리즘이 내포하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의 민족을 형성한다.
- ② 민족은 타민족의 지배에 종속하여서는 안된다.
- ③ 민족은 통일의 의식을 양성하며, 민족의 개성을 자유로히 그리고 적당한 정치적 구조안에서 표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 ④ 하나의 민족은 몇개의 국가에 정치적으로 분리하여서는 안되며, 같은 민족에 소속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정부밑에 통합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만약 민족이 소수로서 분산하여 있으면 이민족(異民族)의 국가내부에서 완전한 문화적, 언어적 가치를 함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 ⑤ 각민족국가는 자연의 국경을 갖이지 않으면 안된다.
- ⑥ 모든국가는 민족국가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 ⑦ 법 앞에는 모든 민족은 평등하다.

이상의 제항목을 고찰하면 그 어느것도 근대국가에 관한 정치원칙이 아닌것이 없다. 이렇게 볼때 내셔널리즘의 내포하는 것의외의 실현과정이 즉 근대세계의 정치 전개과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내셔널리즘이 근대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하게 되는 것이다.

11. 민주 사회주의(民主社會主義 : Democratic socialism)

제2차 세계대전후 공산주의와 다른 서구의 사회주의자의 국제적 조직으로서 코미스코(Committee of International Socialist Conference)가 결성되고 그 제 4차회의에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로 그것이 발전적 해소를 하였을때 채용된 선언이 그 운동을 민주사회주의라고 명칭을 부친 후 부터 이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후에도 서구(西歐)의 제2인턴에 속한 사회주의자는 공산주의에 반대하여 스스로는 사회민주주의라고 하였지만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는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단지 다른 점은 제1차 세계대전후의 국제사회주의 운동에서는 독일사회민주당이 지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관계상, 수정마르크스주의를 이데올로기로서 취하는자가 많았다. 그러나 민주사회주의의 특색은 마르크스주의를 이데올로기로서 취하는 한 공산주의에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휴머니즘을 사회주의의 기초로 하는 점에 있다. 즉 그것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붕괴에 따라 필연적으로 재래되는 것으로 생각지 않고 부당한 경제력 및 정치력의 지배로부터의 인간성의 해방이란 목적의식적인 노력에 의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며, 그 실현 수 단으로서의 회주의(議會主義)를 옹호할뿐 만 아니라, 정권획득 후에도 언론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며, 반대당의 비판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유지한다. 그 같은 의미하의 자유속에서만 인간성의 해방이란 사회주의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사회주의 구상으로서도 산업의 국유화를 만능약으로 생각지 않으며 국유화가 왕왕 수반하기 쉬운 권력의 중앙집권화, 비능율화를 경계하며, 사회보장의 확충에 의한 국민의 최대한 생활을 유지함과 더불어 점차 산업의 사회화 부분을 확대하려고 한다. 오늘날 영국 스칸디나비아, 불란서, 독일, 화란, 벨짐 등의 사회주의 정당은 어느 것이나 민주사회주의 원리를 지지하고 있다.

12. 모택동주의(毛澤東主義 : Maoism)

모택동주의란 말은 중국에서는 일부 홍위병(紅衛兵)이 사용하고 있지만 국

외에서는 Maoism의 역어로서 통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모택동사상」 또는 신민주주의로서 통용되고 있다. 모택동은 1940년 1월 연안에서 창간한 잡지 「중공문화」에 신민주주의론을 발표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사회에 적용, 심화, 발전시켜 중국혁명의 특질을 논한 것이라고 한다. 그에 의하면 중국혁명의 역사적 특질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두 단계로 나눈데 있다. 그 제1단계는 현재 이미 민주주의 일반적인 것은 아니며, 중국적인, 특수한 새로운 형의 민주주의 즉 신민주주의이다. 신민주주의란 세계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점에 있어서 넓은 부르주아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신민주주의 혁명의 지도자는 부르주아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이다.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지도하에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본전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연합독재를 수립하는 것이 신민주주의 혁명의 목표도 된다. 부르주아혁명의 내용을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하에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가 그 근저를 형성하고 있다. 모택동사상은 임표에 의하면 「20세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최고봉」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또한 「제국주의가 전면적으로 붕괴에로 향하고 사회주의가 전세계적인 승리에 향하고 있는 시대의 마르크스·레닌주의다」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 특징으로 생각되는 몇가지 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사상으로서 모택동주의는 현대세계에서 가장 과격하고 호전적인 민족해방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부르짖는 사상이다. 그는 세계의 3분지 2의 인민이 아직 지배 착취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전세계의 프롤레타리아계급과 사회주의국 인민은, 사상적·정치적으로 피압박민족·피압박인민의 투쟁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서 소련의 외교정책이 오로지 경제경쟁과 경제원조로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피압박·후진제민족의 해방을 전취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과 대립한다.

국가론으로서는 모택동사상은 「사회주의 사회를 통하여서 계급과 계급투쟁이 존재」하며 사회주의 사회를 통하여 국가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계급투쟁은 소멸하고 국가는 「전인민의 국가」로 된다는 스탈린, 흐루시초프, 유소기등의 사상과 대립한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온갖 사적권리(私的權利) 즉 부르주아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며, 일방 경제관

리권·문교관리권등 종래 국가가 집중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사회적 힘을 가능한 한 인민의 집단에 돌릴 것을 주장한다.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에서의 탈권은 이같은 국가관에 입각하여 행하여 졌으며, 1958년에 시작한 인민공사와 민병제도도 이같은 국가관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혁명 방법으로서 모택동사상은 「총구로 부터 정권이 생긴다」라고 주장하며 여러가지 형태를 취하는 「무장투쟁」 이외에 부르좌적 내지 본진적인 권력을 타도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혁명의 경험이 그러한 것 처럼 파피·코뮰러시아 10월혁명, 쿠바혁명, 베트남해방전쟁등 종래의 모든 혁명이 무장투쟁이었음을 증명하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서도 서구의 공산주의자들 특히 이탈리아의 토글리앗치등과 의견을 달리한다.

철학사상으로서 모택동주의는 그에 의하면, 교조주의는 실천—인식—재실천—재인식……의 과정을 생략, 내지 너머뛰는데서부터 발생한다. 인식이 실천(계급투쟁, 생산투쟁, 과학실험)으로부터 유리되었을때 일방에서는 현실의 비뚤어진 반영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낳으며(주관주의) 일방에서는 교조주의 작풍을 창출한다고 한다. 따라서 모택동사상은 사상·인식을 그 자체가 완결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교조주의는 사상이 아니라 작풍(作風)이며 사상방법으로 보는 점에서 스탈린의 교조주의적 사상방법이 비판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철학의 또하나의 특색은 「모순론」에 있다. 「모순론」(矛盾論)은 1937년 「인민내부의 모순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1957년에 발표한 논문이지만, 이 논문에서 그는 온갖 사물의 발전의 동력은 모순이라고 하며, 종래의 마르크스주의에서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사회주의 사회의 모순이든지 전쟁과 평화, 실천과 이론처럼 시간적으로 계기하는 양측면을 가진 모순의 존재와 그 구조를 해명하였다.

경제사상으로서의 모택동사상은 「농업기초론」 또는 「공업·농업동시병진론」에 의하여 특색지을 수 있다. 이것은 종래의 공업화가(자본주의 공업화도 소련의 공업화도) 우선 중공업을 건설하고 농업의 발전이 뒤떨어져 있는 것을 비판하고 공업을 인도자로 하지만 농업을 어디까지나 기초로하여 공업을 농업 발전에 봉사시킬려고 한다. 이와 더불어 노농대중의 생산에의 적극성을 물질적 자극에 의하여 높이는 것은 자본주의의 부활에로 인도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는 모택동사상을 학습한 근로자의 자각적 능동성위에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3. 무정부주의(無政府主義 : Anarchism)

일반적으로는 국가권력의 강제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사회로 대체할려는 사회사상을 말한다. 기원적으로는 무정부주의 중국의 노자(老子)든지 희랍의 스토아학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명확한 사상으로서 주장된 것은 영국의 우일람·고도윈 이태이다. 그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사회의 전원이 생산을 위한 노동의 분담을 주장하고 그 실현에 의하여 정부는 불필요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의 최고권력인 정부를 부정함은 즉 국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제없는 상태를 구극의 이상으로 하는 일종의 도덕철학으로서 주장하든가 또는 사회의 악덕의 원인을 강제에 있다고 간주하고 국가의 즉시적폐시를 주장하는가에 따라 그 내용은 딱 다르다. 예컨대 고도윈의 입장은 인위적 제도는 인간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지한다는 입장으로부터 국가를 포함한 강제적 제도의 구극적 폐시를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민주주의 정치를 폐해가 가장 적은 것으로 인정한데 반하여, 공산주의적 무정부주의 실천운동가인 바쿠닌은 우선 국가질서의 파괴가 온갖 사회개혁의 출발점으로 본다. 대체로 근세의 무정부주의는 공산주의와 결부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유재산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스펀나, 불란서의 푸루돈, 러시아의 크로도킨 등의 주장과 행동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무정부주의자로 불리운다. 즉 그들 주장은 법률이든지 국가 혹은 재산에 관한 생각이든지, 또는 이상사회 실현을 위하여 교육을 중시하든가 폭력적 수단에 호소하든가등에 관하여 견해차가 있지만, 유일한 공통점은 인간의 선성(善性)을 믿으며, 개인은 강제가 없을때 스스로 이성애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스스로 조화있는 세계가 탄생된다는 개인주의적 조화관위에 입각하고 있으며, 자유주의 논리를 철저화 한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노동자계급의 대표를 의회에 진출시켜 그 수의 힘으로서 법률을 개정하고 사회를 개조할려는 소위 의회주의의 정책에 의하지 않고 노동자의 실력에 의한 노동자계급 해방을, 즉 사회혁명을 할려고 주장한다. 노동자의 직접행동이란 노동자의 단결력에 의한 철저한 동맹파업의 실행이다. 그러나 무정부주의의 운동이 쇠퇴한 것은 러시아혁명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집권한 것과 의회의 부임, 노동자의 직접행동등의 주장의 이상주의에 빠져서 비현실적이며

너무 과격한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무정부주의가 부활하고 있는 이유는 의회제도에의 불신, 공산당의 중앙집권주의에 따르는 독재적 운영의 비인간성에 의한 국제적인 민주주의 주장에 대한 신망이다. 또한 소련·중공의 공산주의 국가가 세계평화의 추진자일 수 없다는 사실 즉 혁명후인테도 국가권력은 독재적이며 전쟁유발자이런 사실에 있다. 요컨대 무정부주의는 반권력주의, 비중앙집권주의, 반국가주의, 자주자치주의, 반자본주의, 반혁명, 반전주의로서 이해가 증가되고 있다.

14. 사회 민주주의(社會民主主義 : Social democracy)

일반적으로 사회민주주의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치되어 사용된 용어이며, 사회주의를 민주주의 방법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주의이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처럼 명확한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각국의 특수성에 따라 몇 개의 형태가 있으므로, 한마디로 사회민주주의라고 하여도 그것을 인의적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하지만 의회제민주주의를 존중하며, 폭력혁명을 피하여 사회주의를 평화적으로 이행할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명확히 구별된다. 그런데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이후 스탈린주의가 비판되고 의회주의 방식에 의한 혁명도 포함하는 사회주의 혁명의 다양성이 인정됨과 더불어 양자의 차이는 오늘날 현상인식의 다름과 전략 전술론의 틀림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회민주주의란 말은 시대와 더불어 그것이 가진 뉘앙스를 바꾸어가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마르크스주의 총칭이었으며, 혁명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예컨대 1891년의 었플트대회 이래 마르크스주의를 깃발로 내세운 독일사회민주당은, 혁명주의를 제창하였으며, 오지리사회민주당이든 러시아사회민주당의 프롤레타리아정당도 이명칭을 혁명적으로 사용하였다. 사회민주주의란 말에 개량주의 또는 수정주의적인 뉘앙스가 부과되고 기회주의란 비난을 받게 된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반발에 대하여 구라파의 사회주의정당이 분열하여서 부터이다. 즉 그 당시의 국제적인 사회주의 조직인 제2인턴은 1907년의 슛트즈갈트대회와 1912년의 바젤대회에서 제국주의전쟁 반대의 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독일, 불란서, 영

국, 오지리등 태반의 사회주의 정당은 조국방위전쟁의 미명하에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그리고 이들 제정당중에서 제국주의전쟁에 최후까지 반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국에 공산당이 조직되었다. 그후 공산당에서는 자기들이 마르크스주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사회민주주의자는 배신자란 낙인을 찍어 왔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의 총본산인 독일사회민주당이 와이말공화국 시대에 수차 정권을 담당하고 점차로 수정주의 이론과 실천에 기울어졌고, 제2차 세계대전후에는 영국노동당이 수차 정권을 담당하여 중요사업의 국유화, 사회보장의 실현등에 큰 실적을 거두었다. 이 두가지 역사적 사정에 따라 오늘날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졌으며, 마르크스학설은 사회주의사상사의 공동재산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사회민주주의의 본질은 사회주의사회의 실현방법으로서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트독재의 공산당 방식을 배격하고 의회주의에 의한 반대당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설득과 납득을 통하여 전진하려고 함에 있다. 사회민주주의가 폭력행위를 배척하는 것은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폭력의 연쇄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서이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반대당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지 않으면 「공포는 공포를 낳는다」란 공포집의 연쇄반응이 일어나서, 적대계급에 대한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독재이어야 할 것 이프롤레타리아계급에 대한 일부 소수당간부의 독재로 변질하여 최후에는 당간부들 사이의 사투(死鬪)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민주주의가 주장하는 의회주의 방식은 헌법에 의한 인권의 보장과 국회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이 존재가 결핍된 곳에서는 사회민주주의는 그 본래의 특질을 발휘하지 못한다. 오늘날 사회민주주의에는 넓은 의미에서 두가지 조류가 있다. 그 하나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이 강한 좌익사회민주주의이며, 이탈리아사회당, 일본의사회당, 아시아제국의 사회주의정당이 그대표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류는 수정자본주의에 입각한 우익사회(민주주의)이며 영국노동당, 서독사회민주당이 그 대표이다.

15. 사회 제국주의(社會帝國主義 : Social Imperialism)

중공은 1968년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무력침공 이후, 소련을 가리

커 사회주의적 제국주의자들과 공격해 왔다. 이 말이 맨 처음 사용되었던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국가가운데 소위 「노동 계급을 배신한」사회 민주당을 제국주의에 봉사하고 있다고 한 배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면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인도의 독립 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을 가리켜 「사회 제국주의의 무식한 정치 테러」라 할것 등이다. 사회사주의 국가간의 주권의 평등이든지, 내정불간섭을 짓밟고 무력으로 자기의사를 타국에 강요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16. 수정주의(修正主義 : Revisionism)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독일사회민주당 내에 대두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수정주의로서 베른쉬타인을 그 이론면 및 실천면의 대표자로 한다. 1891년 엘플트강령의 채택에 의하여 독일사회민주당은 랏싸레주의와 절연하고 순마르크스주의 정당으로 되었다고 하지만, 실은 이 직후부터, 독일자본주의의 약점을 반영하여, 독일의 노동자계급의 생활수준은 띄 향상되고 또 사회주의자 예외법의 철폐에 의하여 독일제국과 사회민주당 사이의 정치적 긴장도 점차 완화되었으므로, 마르크스의 파국적 혁명론(破局的 革命論) 및 자본주의의 붕괴론은 독일노동자계급의 정치의식과의 사이에 큰 간격이 생겼다. 이때에 영국에 망명중이던 베른쉬타인은 이 새로운 정세에 주목하고 1899년부터 당기판지에 마르크스주의의 재검토를 개시하였다. 그는 마르크스의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 중에 부랑퀴즘(Blanquism)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을 지적하고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궁핍론, 중산계급몰락론, 자본주의 분리의 제 이론을 일일이 반박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회민주당은 입으로는 불랑퀴적 혁명이론을 제창하면서 실천적으로는 개량주의에 만족한다는 모순을 배제하고 대담 솔직하게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적 개량당임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베른쉬타인 수정주의는 당대회때마다 카웃츠키를 이론적대표자로 하는 소위 정통파 마르크스주의자(중양파)에 의하여 심하게 공격되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후 독일사회민주당의 지배적 경향으로 되었다. 또한 폴렌더, 슈타르러, 아드러 등의 신칸트파 사회주의의 마르크스해석은 상기의 수정주의의 철학적 뒷받침을 할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공산당에서는 수정주

의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공산당에서는 수정주의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가장하면서 변증법적 유물론에 반대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적인 요구를 빼 없이 만들어, 공산당을 내부로부터 분리시킬려는 일종의 부르주아사상이며, 혁명이론의 원칙을 비틀어지게 하는 적대적인 위험한 사상이라고 한다. 또한 그들은 수정주의는 공산당을 이론적으로 무장해제 하는 것이며 주동자 계급의 이론적 진지를 적에게 명도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당내 숙청에서 제거 대상으로 지목된 자는 항상 수정주의자라고 규탄받으며, 모든 온건주의자, 급진적 교조주의에 반대하는자, 공산당의 비인도적 만행을 비판하며 자유의 부분적 승인이나 주장하는 자는 으레 수정주의자로 낙인 찍히고 있다. 현재 소련·중공은 모두 유고의 분권적인 정치, 경제 체제를 수정주의의 대표적인 것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오히려 티토는 소련과 중공에 대하여 「관료주의적 반사회주의적 세력의 성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중공은 소련을 위시로 루마니아와, 알바니아를 제외한 동구위성국들을 수정주의 집단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이처럼 수정주의는 이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할 때 사용하는 상투이기도 하다.

17. 인민 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 People's democracy)

제1차 세계대전 후 파시즘, 나치즘에 대항하기 위하여 코민테른은 인민전선 전술을 채용하고 사회민주주의는 물론 부르주아민주주의와도 손을 잡고 민주주의 옹호를 간판으로 내세우고 파시즘, 나치즘을 공격하였다.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종결되었다. 코민테른의 인민전선 전술은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산주의의 강적 나치즘, 파시즘이 패망함으로써 전체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란 뚜렷한 세계조류 앞에서 공산주의자들은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란 주장울 정책상 위장할 필요를 느꼈으며, 여기에 새로히 프롤레타리아 혁명독재전술로서 안출된 것이 소위 동구에서의 인민주주의인 것이다. 파시즘, 나치즘을 타도하기 위하여 인민전선에 집결된것은 공산주의자는 물론 사회민주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들이었다. 이 인민전선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그대로 이용하여, 이번에는 독점대자본, 대지주등에 공격의 화살을 겨누어 노동자, 농민뿐만 아니라 민중자본, 중소상공업자등을 포함한 광대한 사회층을 결집함으로써 혁명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다. 제2차세계

대전직전 또는 전쟁중에 히틀러 독일에 의하여 정복되어 괴뢰정권하에 히틀러의 대소침략전쟁에 협력하였지만 대전말기에 붉은 군대의 반공이 시작됨에 따라 점령하에 있던 자국내에는 지하운동의 형태로서 친소반파시즘적인 민족전선, 통일전선이 형성되었다. 소련군이 패주하는 독일군을 쫓아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등 동구제국에 진공하자 이들 나라의 점령과 더불어 붉은 군대의 무력지원하에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상기의 통일전선, 인민전선정권이 수립되어 히틀러 독일의 점령에 협력한 민족적 배신분자를 탄압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였다. 이들의 토지, 공장등 중요재산은 이와 같이 국유화됨으로써 나치독일로부터의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민족혁명은 동시에 사회주의혁명에의 기반을 닦게 되었다. 또 이것을 반면에서 보면 이들 나라의 소련위성국화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사회주의혁명과 위성국화의 진행에 따라 반파시즘 통일전선중의 중농, 소지주분자, 사회민주주의자,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들은 공산당 및 그배후에 있는 소련점령군에 저항하기에 이르렀다. 인민민주주의군은 심한 대립투쟁장으로 화하였다. 소련점령군의 지원을 받은 공산당이 교통, 통신기관의 사용과 경찰력의 독점에 의하여 다른 당을 압도하고 단일 리스트에 의한 선거제, 무력쿠데타등 온갖 수단에 의하여 사실상의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를 정비하였다. 인민민주주의는 소련의 일당독재와는 달리 다수당 또는 연합독재라고 하지만 예컨대 공산당에 의한 사회민주당의 강제흡수라든가, 다른 군소시민정당의 과도적 존재 허용에 불과한 것은 동구제국에서 실시된바와 같다. 소련에 있어서도 인민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특수형태라고 규정짓고 있다. 요컨대 공산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담당하기까지 인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을때, 외부조건의 압력에 의하여 다른 제정당 계급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볼 때, 이들을 외부로부터 타파하고 지배하는 대신에 이것을 내부적으로 포섭, 소화하여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인민민주주의인 것이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트가 미발달인 경우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지배하는 방식이다. 유고에서도 최초 인민민주주의를 채택하였지만, 1948년 코민포름으로부터 추방된 후 소련의 위성국인 지위로부터 이탈하여, 인민민주주의체제로 수정하였다. 중공의 신민주주의도 인민민주주의의 일종이지만 소련군의 손으로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구의 위성제국과는 사정을 달리 하고 있다.

18. 인민전선(人民戰線 : People's front)

1935년 7, 8월의 코민테른 제7차대회에서 결의된 각국공산당의 반파시즘 통일전선 정책을 말한다. 종래의 통일전선은 공산당과 사회민주주의정당, 노동조합 사이에 한정되어 있지만, 인민전선을 파시즘에 저항하여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일체 세력과 협조하고 그 전제로서 「온갖 부르좌정당이 곧 파시스트인 것은 아니다」라고 까지 인정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 전선은 단지 소극적인 파시즘방위책이 있을뿐 아니라 공산당의 권력투쟁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품고 있는 점에서 극히 중대시해야 할 전술이다. 그 전술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① 반 파시즘 민주인민전선은 노동자 계급의 통일전선을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파시즘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옹호할려는 진보적 부르좌층까지 포함하는 광범한 인민전선이다.

② 널리 대중을 규합하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그대로 내세우는 것을 피하고, 대중의 직접적인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옹호하는 것 같은 현실적인 슬로건을 표방케 한다. 이리하여 정세의 변화에 따라 투쟁형태와 수단을 변화시키면서 방으로부터 공세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파업을 조직하는데 둔다.

③ 반 파시즘인민전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도권은 끝끝내 공산당이 쥐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일방에서는 공산당의 일부에 잔존하는 독선적인 분파주의를 강력히 배격한다는 것이다.

④ 정세가 성숙되면 인민전선 내각을 수립한다. 이 정권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파시즘 및 반동에 대하여서는 단호한 투쟁을 하며, 공산당 기다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운동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란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원한다.

공산당은 인민전선의 명목하에 우선 합법적으로 보이는 방법에 의하여 정권의 일각에 들어붙는다. 그리고 공산당은 자내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정세가 되면, 적극적으로 입각하여 특히 군대, 경찰등과 같은 권력기관을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한다. 이리하여 자외에서 대중파업, 기타의 민중운동과 병행하여 반대당은 물론 정부여당도 점차 탄압하여, 드디어 공산당 일당독재를 확

보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후 동구제국, 중국, 월맹, 북한등지에서 소련의 군사적 위력을 배경으로, 인민민주통일전선이니, 조국통일전선이니, 민주주의민족전선이란 간판아래 이 전술을 공산당은 전면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19. 인민전쟁론(人民戰爭論 : People's war)

전쟁을 계급투쟁이 대외로 발전한 것으로 인식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켜 대내외의 적과 싸우는 것이 전쟁 승리의 가장 튼튼한 담보라고 주장하는 모택동의 전쟁이론이다. 모택동은 무기의 우열이 전쟁 승리의 기본 요소라고 주장하는 유무기(唯武器)주장을 배격하고 정신무장을 강조한다. 그는 전쟁을 하는데 인민 대중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며, 농촌을 혁명의 근거지로 확보하고 농민을 무장시켜 도시를 포위하여 고립화시켜 공격하는 전술을 강조하였다. 모택동은 이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혁명에 적응한다. 즉 선진자본주의국을 도시로 보고 후진농업국을 농촌으로 간주한다. 즉 도시에 해당하는 선진국을 농촌에 해당하는 후진국가를 먼저 공산화 함으로써 포위, 공격, 점령함으로써 세계혁명을 완수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1965년 이후 후진국가 지도자들이 모택동의 세계혁명 이론의 무모함을 이해하여 중공과의 친선 관계를 기피한 관계로 이 이론은 궁지에 빠지고 말았다. 북괴의 무장공비 남파 침투 파괴공작도 모택동의 인민전쟁 이론에 근거를 두고 하는 행위다.

20. 제국주의(帝國主義 : Imperialism)

일반적으로 제국주의란 일개 국가가 군사·경제·정치 및 문화적 수단을 사용하여 타국가 또는 타민족을 자국의 세력권에 편입시키려는 침략적 기도를 의미한다. 특히 1870년부터 1914년에 이르는 시기에 강대 국가가 기도한 영토 팽창주의적 대외 정책을 지칭한 정치 이념이다.

레닌은 홉스손의 『제국주의론(1902년)』 라힐·파당의 『금융자본론(1909년)』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본주의 발전불균형등의 법칙이란 독자의 견지에서, 제국주

의를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 파악하고, 「제국주의는 사회주의혁명의 전야」이며, 「제국주의전쟁을 내란으로 전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실천적 결론을 끄집어 냈다. 즉 레닌이 제국주의의 특징으로서 열거한 것을 보면 첫째로 선진 자본주의 제국에서의 독점의 강화와 여기에 따르는 금융과두 지배의 확립이며, 둘째로는 식민지 및 종속국에 대한 자본수출의 격증과 여기에 따르는 지구의 세력범위의 분할 및 식민지, 종속국 민중의 가혹한 자취이며, 셋째로는 자본주의 열강간의 세계재분할을 위한 사투이며 발전불균형등에 따르는 제국주의 전쟁의 발발이다. 이들 특징중에서 첫째와 둘째는 홉슨과 힐·파딩에 의하여 전개된 이론이지만, 셋째의 발전불균형등 이론은 레닌의 창안이며 이것을 근거로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슈페터에 제국주의의 본질을 국가의 무목적, 무제한 한 팽창성향·충동이라고 보고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모든 계급을 낡은 사상이나 제도로부터 해방시키는 동시에 그들을 민주화하고 개인주의화하고 합리화함으로써 도리어 반제국주의 경향을 가진다고 한다.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적 호전적 경향을 띠는 것은 낡은 전자본주의적 요소의 잔재에 의거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전일에 식민지·종속국을 가지고 있던 자본주의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구식민지를 전부 해방 독립시켰지만 소련이나 중공은 인접국을 무력으로 침범, 영토를 강탈하고 병합함으로써 팽창하고 있다. 이것을 신판 적색제국주의라고 한다. 68년에 같은 공산국가인 체코에 무력침공한 사실은 적색제국주의의 본성을 드러낸 소행임이 명백하다.

21. 제한주권론(制限主權論)

소련의 브레즈네프가 동구 제국의 자주적인 대서구 접근을 저지하기 위하여 안출한 주장이며, 모든 사회주의 진영의 안전 보장을 위해 각 위성국은 자기 나라 뜻대로 서구 제국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을 안출한 직접적인 동기는 68년의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사회주의화 물결이 높이 파도 칠때 진보파의 지도자 두부체크파를 축출하기 위하여 무력침공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억지 이론이다. 그럼으로 중공은 이것을 비판하길 「제한주권론은 소련의 사회주의적 제국주의적 그들의 침략과 확장주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합법화를 가장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이론이다」라고 규

정짓고 있다. 그리고 중공은 소련의 브레즈네프·독트린을 가리켜 「소련의 현대 수정주의 집단은 제한 주권론에 대해서 가일층 강도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바 말하자면 남의 주권은 유한한 것이고 소련 수정주의 집단의 사회주의적 제국주의의 주권은 무한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침략주의적 확장 정책의 소산」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22. 중립화전술(中立化戰術)

공산당은 본래 중립주의(Neutralism)를 기회주의로 규정 철저히 배척한다. 중립주의는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는 일면이 있는 반면에 공산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산진영이 자유민주진영을 점차 분리시키려는 전술에 있어서 첫 단계는 중간층을 중립화시키는데 있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공산권과 자유민주권과의 중간에 있는 많은 식민지민족 및 신흥국가를 중립화시키는데 노력한다. 대서양 및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중심세력 즉 미국을 그 동맹제국 및 우방 제국으로부터 고립화시키려고 기도한다. 한 국가안에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대부분의 국민과 지식분자를 중립화시키고 강력한 반공정책을 수행하려는 주의자들을 고립화시키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립화는 그들의 당 전략·전술·수행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들이 중립주의를 용인하는 경우는 오지리처럼 비핵무장과 군축을 동시에 수행하여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때에 한한다.

23. 통일전선(統一戰線 : Einheitsfront)

일정한 역사적 조건하에서 이해 관계를 같이하는 정당 사회단체 또는 계급들이 동일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전술에서 출발한 것이다. 통일전선 전술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산당이 주도할 수 있거나 그 결과가 공산당에게 유리하게끔 변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전개한다. 만일 통일전선이 형성되어 공산당이 주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불열시키며 상호대립시켜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원칙이다. 다음에 통일전선 전술의 요점을 열거키로 한다.

① 이 전술의 목적은 개량주의적 지도자의 배신행위의 본질을 실천을 통하여 폭로함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개량주의자와의 절연의 필요를 체험케 하여, 대중을 공산당세력하에 오게 하는데 있다.

② 통일전선 전술을 적용시키는 참다운 상대자는 대중이며, 개량주의적 지도자는 아니라고 한다.

③ 통일전선은 공산당과 사회민주당과의 합동 또는 타협이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들은 공산당의 절대 완전한 독립성 유지와 의견발표 및 공산주의의 적에 대한 비판의 완전한 자유를 확보할 것을 주장한다.

④ 통일전선에서 획득한 대중을 조직상으로 공산당의 세력하에 확보하려고 한다.

⑤ 정당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합동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요컨대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술은 대중을 자기들 편에 끌어 넣기 위하여 일시 자기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전술이다.

24. 트로츠키주의(Trotskyism)

트로츠키주의란 러시아혁명의 원흉 레온·트로츠키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1924년에 러시아혁명의 최고지도자 레닌이 사망한 후 사회주의 건설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트로츠키는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의 건설」론에 반대하고, 사회주의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서구의 프롤레타리아혁명에 걸려 있으며 러시아 한나라의 힘으로 그것을 건설함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트로츠키는 조직지방을 가지고 있는 스탈린에 의하여 국외로 추방되었다. 그의 이론적 견해를 요약하면 첫째로, 소련방은 사회주의체제·노동자국가는 아니며 혁명을 배신하고 그 성과를 찬탈한 특권관료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으므로 이 지배를 타도하는 정치혁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둘째로는 평화공존 정책은 이 특권관료층이 자기 나라의 경제건설속에서 그 특권을 방위하기 위하여 세계혁명을 지연시켜 배신하고 있는 숨어사는 우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트로츠키주의를 반인민적, 반계급적, 지배계급의 앞잡이라고 비난하며, 그의 책동은 소부르좌적 극좌기회주의로서 배격한다.

25. 평화공존(平和共存)

공산주의 혁명의 기본원칙은 폭력에 의한 기존 정권의 타도와 정권 탈취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평화공존을 제창한다. 이 주장은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이 성공하자, 레닌이 발표한 「평화에 관한 선언」에서 이미 해명된 것이지만, 그러나 당시의 레닌은 평화를 단순한 전술적 용어로 사용하였을 뿐이며, 그때의 저의는 이제 겨우 출생한 연약한 소비에트 정권을 수호하고 국내의 혼란과 외부의 압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다음 공격을 위한 시간적 여유의 획득 수단으로 평화공존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즉 혁명역량을 구축하는 공작의 하나로서 평화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1954년 2월 소련 공산당 제20차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제창한 평화공존은 혁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평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제시된 것이다. 「핵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폐허 위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였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하는 절실한 인식에서 출발하였고 평화 속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발전시킨다는 광범위하며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다.

레닌이 폭력혁명을 주장하면서 비폭력혁명을 부인하지 않았던 경우처럼 흐루시초프 역시 비폭력혁명을 제시하면서 폭력혁명을 부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화 속에서의 폭력혁명」으로 전략을 다양화시켰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산당의 평화 공세에 현혹되어 공산주의 혁명의 폭력적 측면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자들의 허점을 항상 노리며 은밀하게 간접침략을 노리고 감행한다. 1928년 제6차 코민테른 대회는 평화에 관한 소련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련의 국제 정책은 소련의 지배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하는 동맹자들을 소련의 기치 아래 단합시켜 제국주의 국가간의 반목을 조장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기반을 제공해 준다. 이 정책의 목표는 국제 공산주의 혁명을 수호하는 세계적인 혁명이 뒤따르는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의 부식 작업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가능한 한 장기간 제국주의와의 충돌을 뒤로 미루도록 노력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요컨대 공산당의 평화공존 정책은 세계혁명을 추진하며 공산정권을 수호하는데 있는 것이다.

공산당이 제기한 주장이 형식이나 표현에 있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숨어 있는 흉계를 우리는 언제든지 살피고 경계해야 한다.

<비매품>

<심의필>

1971년 6월 3일 인쇄
1971년 6월 7일 발행

승공교양독본

발행처 국토통일원
인쇄처 대한공론사

